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99-160025-10



201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소 중 안 권 리 공 정 안 관 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동국대학교 이재철, 조선대학교 지병근, 동국대학교 김민수)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CONTENTS | 목차

PART 01 201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 및 발전방안

| | |
|---|----|
| I. 서론 | 3 |
| II. 2015년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현황 | 6 |
| 1. 기본 현황 | 7 |
| 2. 활동 실적 현황 | 19 |
| III. 해외 정당연구소 및 정당 관련 싱크탱크에 대한 검토 | 33 |
| 1. 정당 정책연구소의 전형: 독일 | 40 |
| 2. 정당관련 정책연구소와 초당파적 정책연구소: 미국, 영국, 호주 | 43 |
| 3. 유럽의회와 정책연구소 | 47 |
| IV. 정책연구소의 운용과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 | 49 |
| 1. 재정 자립성 방안 | 50 |
| 2. 연구 전문성 확보 방안 | 57 |
| 3. 보조금 배분의 개선 방안 | 60 |
| V. 결론 | 63 |
| 참고문헌 | 68 |
| 토론문 | 72 |

PART 02 201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 | |
|---|-----|
| ■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 여의도연구원(새누리당) | 97 |
| ■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 민주정책연구원(새정치민주연합) | 265 |
| ■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 미래정치센터(정의당) | 443 |

| | |
|---|----|
| 〈표 1〉 2006년~2015년 정책연구소 변화 | 6 |
| 〈표 2〉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당헌규정 | 9 |
| 〈표 3〉 정당정책연구소 관련당규 | 11 |
| 〈표 4〉 2015년 정책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상황 | 13 |
| 〈표 5〉 2010년~2015년 정책연구소별 지출총액과 정책개발비 | 14 |
| 〈표 6〉 2015년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현황 | 16 |
| 〈표 7〉 2010년~2015년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수 변화 | 17 |
| 〈표 8〉 2015년 정책연구소별 활동방식 | 20 |
| 〈표 9〉 2006년~2015년 활동형태별 실적 비교 | 21 |
| 〈표 10〉 2015년 연구 정책 과제의 추진기간별 분류 | 23 |
| 〈표 11〉 2015년 연구소별 6개월 이상 추진 과제 | 23 |
| 〈표 12〉 2010년~2015년 연구 정책 과제의 추진기간별 분류 | 24 |
| 〈표 13〉 2015년 정책연구소 연구 주체 | 25 |
| 〈표 14〉 2010년~2015년 연구 주체별 추이 | 25 |
| 〈표 15〉 2015년 토론회 등 개최실적 종류 | 26 |
| 〈표 16〉 2010년~2015년 토론회 등 개최실적 종류별 비교 | 27 |
| 〈표 17〉 2015년 교육·연수 대상별 분석 | 28 |
| 〈표 18〉 2010년~2015년 교육·연수 활동 대상별 비교 | 28 |
| 〈표 19〉 2015년 정책홍보 방법 | 29 |
| 〈표 20〉 2010년~2015년 정책홍보 방법 비교 | 30 |
| 〈표 21〉 2015년 연구소별 간행물 등 자료발간 실적 | 31 |
| 〈표 22〉 2010년~2015년 간행물 등 자료발간 실적 | 32 |
| 〈표 23〉 GGTTI Report 싱크탱크 평가지표 | 34 |

| | |
|--|----|
| 〈표 24〉 최근 3년간 동아시아지역 국가별 우수 싱크탱크 수 | 37 |
| 〈표 25〉 국가별 정당관련 싱크탱크 분포, 2013년~2015년 | 38 |
| 〈표 26〉 상위 10개 정당 관련 싱크탱크 | 39 |
| 〈표 27〉 독일 정치재단 설립 현황 | 41 |
| 〈표 28〉 유럽의회 정치그룹 별 연구소 현황 | 48 |
| 〈표 29〉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 정리 | 50 |
| 〈표 30〉 정책연구소의 수입 | 52 |
| 〈표 31〉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 정리 | 57 |
| 〈표 32〉 정책연구소별 경상보조금, 지원금 및 수입 | 61 |

그림목차

201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

| | |
|--|----|
| 〈그림 1〉 2015년 정당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평가 내용 | 5 |
| 〈그림 2〉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의 조직도 | 7 |
| 〈그림 3〉 미래정치센터의 조직도 | 8 |
| 〈그림 4〉 2010년~2015년 정책개발비 비중 변화 | 15 |
| 〈그림 5〉 2010년~2015년 박사급 연구원 수의 변화 | 18 |
| 〈그림 6〉 2015년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형태별 실적 비율 | 19 |
| 〈그림 7〉 2010년~2015년 활동 형태별 실적 변화 | 22 |
| 〈그림 8〉 연도별 신설 정책연구기관 수 | 33 |
| 〈그림 9〉 대륙별 싱크탱크 설립 현황 | 35 |
| 〈그림 10〉 동아시아지역 우수 싱크탱크 | 37 |
| 〈그림 11〉 상위 10개 정당 관련 싱크탱크 | 40 |
| 〈그림 12〉 독일 정치재단 위치별 분포 | 42 |



PART
01

**201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 및
발전방안**



I

서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정당이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이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거나 그럴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유권자의 선호와 거리가 먼 정책만을 제공하면 유권자는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정당일체감이나 지역감정 등 비정책적인 요인들에 의존하여 투표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집권에 성공한 정당은 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 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고 보조금을 지급 받는 정당들이 의무적으로 상설 연구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들이 유권자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황윤원 2008, 388). 물론 각 정당들은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김용호 2001; 김영태 2005; 심지연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들이 설립한 정책연구소들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는 접하기 힘들다. 정책연구소들은 정당들이 수령하는 국고 보조금의 30% 이상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상 정책 개발보다 정책 홍보기능에 치중하고 있다거나, 여론조사기관으로 전락하였다거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성이 없는 인물을 계파안배를 위해 정책연구소장에 임명하였다거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정당의 정책위원회보다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조직 사회는 향후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활동의 과정과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조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직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정

책연구소들 또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다(김형준 2008; 라미경 2008; 김형준·김도중 2011).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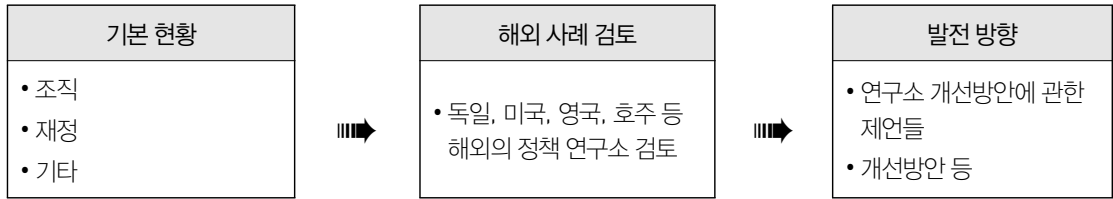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정책연구소들의 연간활동을 재정, 조직, 활동 등의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고 지원을 받는 정책연구소들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연간활동 자료를 이용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평가 보고서들은 정책연구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물론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들 가운데 일부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문제점들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가에서 계속 언급되는 개선사항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문제들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당 정책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처방이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비록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이 쉽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의 해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의 분석 내용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보고서는 최근 평가보고서인 『2014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서현진 외 2015)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제II장에서 2015년 정책연구소의 연간활동실적을 기본 현황과 활동실적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²⁾ 제III장에서는 해외의 정당 정책연구소와 정당관련 싱크탱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그동안 독일과 미국의 정책연구소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던 반면, 그 밖의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에서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의 정책연구소에 대한 사례연구를 포함하였다. 제IV장에서는 재정의 자립성 방안, 전문성 확보, 보조금 배분방식 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소의 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뤄졌던 정책연구소의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분석결과와 사례분석, 그리고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평가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2015년도 정책연구소의 평가 보고서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김형준·김도중(2011, 25)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연구소 평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2) 이 분석 보고서의 활동현황 분석(III장)에 포함된 도표는 『2014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서현진 외 2015)에 사용된 양식을 따랐으며, 2015년 자료를 추가하여 수정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이 분석 보고서의 연구진들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정책연구소의 평가도 같은 분석틀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림 1〉 2015년 정당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평가 내용



II

2015년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현황

아래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5년도에 국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정당 정책연구소는 3개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정책연구소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판결에 의하여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명을 개명(12월 28일)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정의당의 미래정치센터 등 세 개의 정책연구소가 국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표 1> 2006년~2015년 정책연구소 변화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한나라당/ 새누리당 | 여의도연구소 (1995.2.3.) | | | | | | | 여의도연구원 (2013.10.10.) | | |
|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 국가전략 연구소 | | 민주정책연구원(2008.8.27.) | | | | | | | |
|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 | | | | | | | | | |
| 정의당 | | | | | | | | 진보정의연구소 (2012.12.11.) | | 미래정치 센터 (2015. 8.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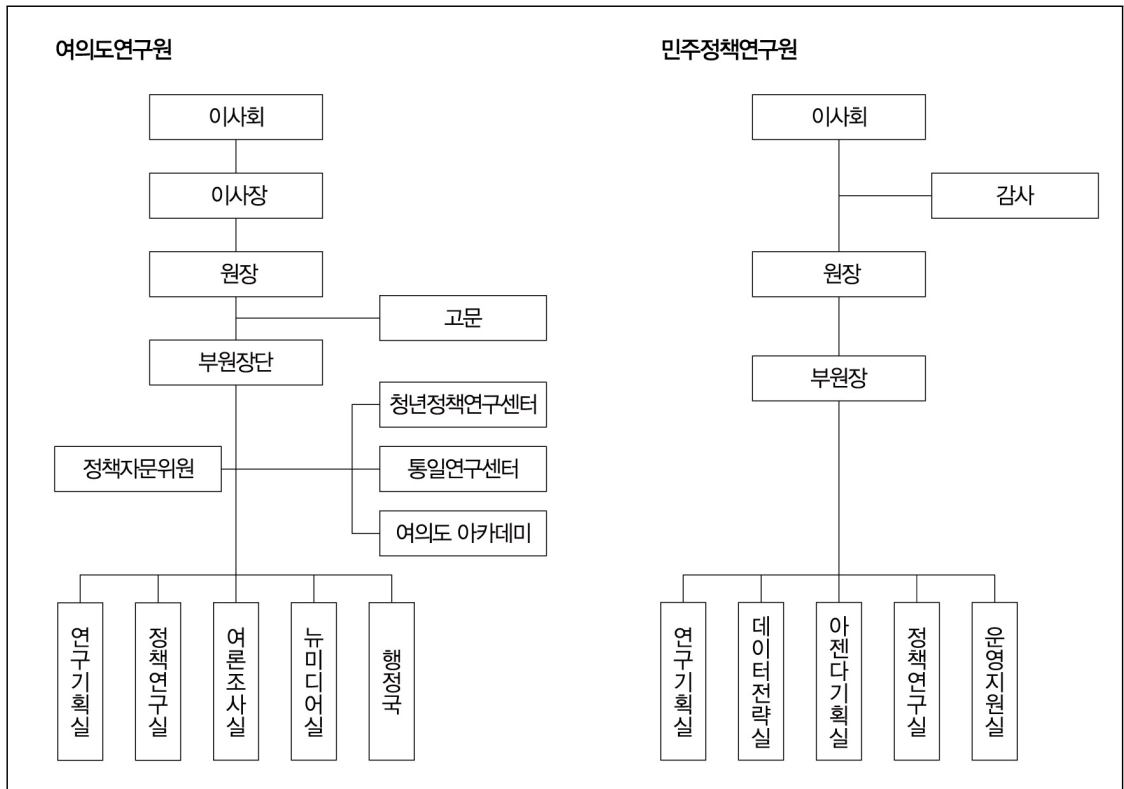
출처: 서현진·임유진 2016, 30, <표 1>을 수정함.

1. 기본 현황

1) 조직

2015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 가운데 일부는 2014년과 상이한 조직 구성이 이루어졌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2012년 4월 4일 이후 주목할 만한 정관의 변화는 없었다(<http://www.ydi.or.kr/ydi/foundation.html>). 아울러 당초 고문과 동격이었던 자문 위원이 부원장단의 하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림 2〉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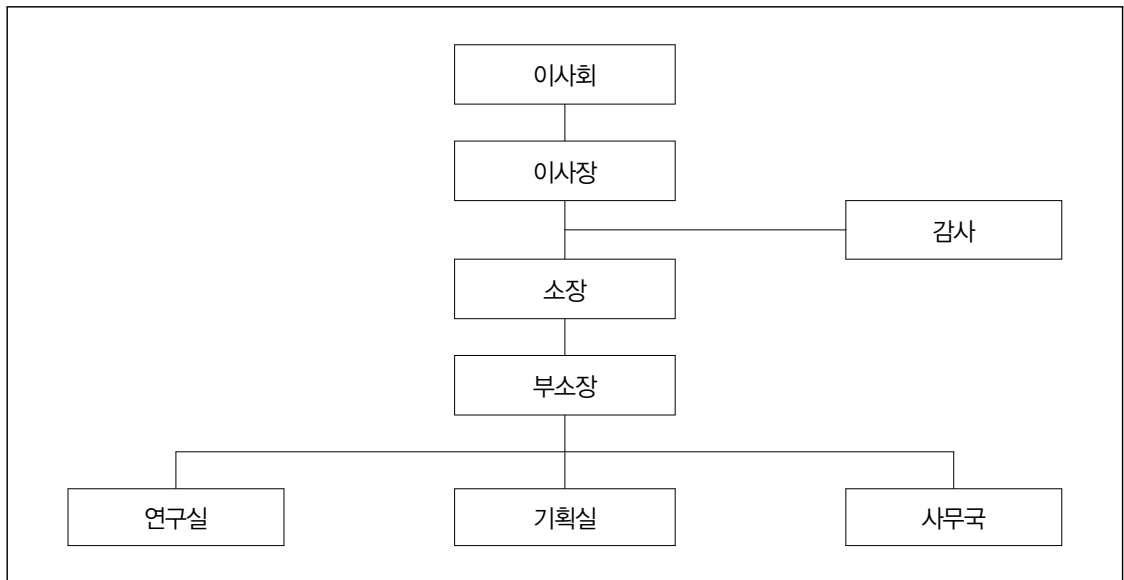
출처: 각 정당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위의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정책연구센터, 통일연구센터, 여의도아카데미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당초 정무기획실이 연구기획실로 대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원표(2016)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무·전략을 담당하던 연구위원들의 축소를 수반하는 이러한 조직구성의 변화는 정무기능 대신에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원 중심의 기존정책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³⁾ 다시 말해 연구기획실을 통해 “장기적·거시적·통합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에는 조직 구성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연구기획실, 데이터전략실, 아젠다기획실, 정책연구실, 운영지원실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3〉 미래정치센터의 조직도



출처: 정의당의 당규와 홈페이지의 “함께하는 사람들” 참조

이들 가운데 2015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경험한 정당정책연구소는 정의당의 미래정치센터였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미래정치센터는 다른 정당정책연구소에 비해 조직규모가

3) 김원표(2016)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정책에 집중하기 위하여 정무·전략 담당 연구위원들을 대폭 감축하고 동기능을 거의 폐지에 가깝게 축소하는 결단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기획실에는 정책연구실의 연구원들이 새로 보임하여 그간의 연구원 개인 중심의 개별화된 연구를 넘어 연구원 차원의 장기적·거시적·통합적 연구를 위한 연구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MD 제도에 기반한 연구원의 성과평가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작으며 연구실, 기획실, 사무국 등 3개의 부서로만 구성되어있다. 미래정치센터는 지난해 8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 따라 진보정의연구소에서 개명하게 되었으며, “시민교육기관”을 표방하는 정책연구소로 변신을 시도하였다. 미래정치센터는 그 외에도 “당원들과 시민들 속에 함께 있는 연구소”, “2세대 진보정치의 내용을 생산하는 연구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고민하는 연구소”, “정치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구소”, “정당 역사상 가장 젊고 활력있는 연구소”를 표방하고 있다(미래정치센터 홈페이지 <http://www.justicei.or.kr>).

각 정당들의 당헌을 살펴보면 정책개발과 연구라는 이들의 활동목적 및 내용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표 2〉 참고).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들은 중앙당과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며 구체적인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은 정관을 통해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새누리당은 당헌 제69조(기타 특별기구)에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82조에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당원 및 차세대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하였다. 정의당 역시 당헌 제45조에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고 활동목적은 밝히고 있다.

〈표 2〉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당헌규정

| 항목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
| 개정시기 | 2014.02.25. | 2016.01.27. | 2015.11.22. |
| 조항 제목 | 제30절 정책연구소 및 특별기구 | 제7장 정책연구소 | 제9장 정책연구소 |
| 조항 | 69조(기타 특별기구) | 제82조(정책연구소) | 제45조 (정책연구소) |
| 내용 | ①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당원 및 차세대정치 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

[계속]

| 항목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
| 내용 | ②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⑤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출처: 각 정당의 당헌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활동범위를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활동까지 포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정당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⁴⁾

위의 <표 2>에 잘 나타나 있듯이 새누리당의 경우 당헌을 통해 그 역할을 정책의 개발과 연구활동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연구소들은 당헌이나 당규에 교육사업도 활동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제82조 1항)에 “당원 및 차세대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를 활동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정의당은 아래의 <표 3>에 있듯이 당규 제11호(정책연구소 규정) 제3조 2항과 3항에 각각 “정책의 교육”과 “교육네트워크의 구축”을 활동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당규, 즉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3조(연구소의 사업)에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이 정책연구소 사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소의 주요 활동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의도연구원 김원표와의 인터뷰, 2016년 5월 11일).

그 외에도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들의 활동방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을 이들과 정당과

4)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 관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들은 일관되게 중앙당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중앙당과 관계를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연구원의 직원에 대한 임면(任免)과 평가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추천하면 이사장이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1조). 아울러 연구원장에게 2년 임기를 보장하고 부원장 추천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임기연장도 가능하게 하였다(제6조(원장 등), 3항, 4항). 하지만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중앙당의 구속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 이후에 중앙당의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제6조 ②항). 임원의 해임도 마찬가지다(제8조).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소는 다른 정당의 정책연구소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상세하게 정책연구소의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당규가 아닌 당헌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구소장의 임면을 당대표가 지명하지만 연구소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연구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당헌에 명시하였다(당헌 제82조).

정의당의 정당정책연구소의 경우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정의당의 당규에는 실증에 의한 공개채용의 원칙뿐만 아니라 연구원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과 계약직 고용에 관한 임용권한을 연구소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 규정 제15조, 제16조).

〈표 3〉 정당정책연구소 관련당규

| 항목 | 새누리당 | 정의당 |
|---------|---|--|
| 개정시기 | 2015.05.26. | 2016.03.11. |
| 조항 제목 |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1호 정책연구소 규정 |
| 사업관련 조항 | 제3조(연구소의 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3조 (사업) 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 내용 | 1. 중장기 국가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 당의 이념과 가치 정립 3. 국가적 이슈 또는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 4.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 ①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② 정책의 교육 및 정책자료의 출판, 정보화 사업 |

[계속]

| 항목 | 새누리당 | 정의당 |
|-----------|--|---|
| 내용 | 5. 청년 정치 지도자 양성 6. 국내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정책·지식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 활동 8. 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및 국회 각 위원회의 활동 지원 9.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활동 10. 뉴미디어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과 정책 활동 11.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 ③ 연구 및 교육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대사업 ④ 진보적 신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⑤ 기타 진보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임면관련 주요조항 | 제6조(원장 등) ②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대표최고 위원이 임면한다. ③ 원장은[중략]....임기를 보장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중략]. | 제15조(임용의 원칙) ①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연구원의 임용은 그 자격, 경력, 연구실적, 시험성적, 근무성적, 특수자격(면허증)과 사회단체 경력을 포함한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개 채용한다. |
| | 제11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연구원에 외부인사와 당내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원 직원 임면, 평가 등을 담당하게 한다. ②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중략.... ④ 연구원의 직원이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제16조 [임용의 특례] ① 소장은 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계약직을 둘 수 있다. 단, 정책연구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에 전문능력을 가진 2년 임기의 전문계약직 2.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촉탁직 |

출처: 각 정당의 당규

2) 재정

2015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 등 3개 정책연구소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총수입이 185.4억여 원이었으며, 총지출은 153.8억여 원

이었다. 총수입의 경우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많은 101.1억여 원, 민주정책연구원이 76.9억여 원, 미래정치센터가 7.4억여 원으로 이들 사이의 차이가 매우 컸다. 총지출 또한 여의도연구원이 88.2억여 원, 민주정책연구원이 59.0억여 원, 미래정치센터가 6.6억여 원으로 이들 사이의 편차가 매우 컸다.

〈표 4〉 2015년 정책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상황

(단위: 백만 원)

| 내역 연구소 | 수입 | | | | 지출 | | | | 잔액 |
|-------------|-----------|-----|------------|--------|-------|-----------|------------|--------|-------|
| | 정당 지원금 | 기타 | 전년도 이월금 | 합계 | 인건비 | 정책 개발비 | 사무실 운영비 | 합계 | |
| 여의도 연구원 | 9,405 | 1 | 705 | 10,110 | 124 | 7,184 | 1,517 | 8,825 | 1,285 |
| 민주정책 연구원 | 6,074 | 247 | 1,368 | 7,689 | 1,850 | 3,308 | 742 | 5,900 | 1,788 |
| 미래정치 센터 | 637 | 5 | 103 | 744 | 83 | 403 | 104 | 659* | 86 |
| 합계 | 16,116 | 252 | 2,175 | 18,543 | 2,057 | 10,895 | 2,363 | 15,385 | 3,159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5). 조직활동비를 포함함.

국고에서 지원되는 정당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에서 절대적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정당지원금은 94.1억여 원으로 이는 여의도연구원의 수입총액의 93.1%에 달하는 것이었다. 전년도이월금인 7.1억여 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수입이 정당지원금에 해당된다. 여의도연구원의 기타수입은 1백만 원에 불과하였다.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에도 정당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았다. 비록 여의도연구원과 달리 기타수입이 2.5억여 원이 있었지만 민주정책연구원 또한 정당지원금 60.7억여 원은 수입의 78.9%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전년도 이월금이 13.7억여 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민주정책연구원의 정당지원금 의존도는 96.1%에 달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미래정치센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미래정치센터의 정당지원금은 6.4억여 원으로 이는 전체수입의 85.6%에 해당한다.

지출의 경우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5년도에 이들이 정책개발비로 지출한 액수는 여의도연구원 71.8억여 원, 민주정책연구원 33.1억여 원, 미래정치센터 4.0억

여 원이었다. 정책개발비가 전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0.8%였으며, 새누리당(81.4%)이 더불어민주당(56.1%)이나 정의당(61.2%)보다 더 많은 비율의 재정을 이 부문에 투입하였다. 하지만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여의도연구원은 불과 1.2억여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이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인건비로 지출한 18.5억여 원의 16.7%에 불과한 것이다. 미래정치센터는 불과 0.8억여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각 정당의 규모로 보았을 때 새누리당이 인건비로 지출한 액수가 매우 적은 것은 여의도연구원이 연구자들에 대한 보상을 인건비가 아니라 정책개발비로 분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래의 <표 5>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정책연구소별 총 지출총액과 정책개발비를 보여준다. 이 표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지출총액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5년에는 2014년과 비교하여 5.3억여 원이 감소하였다.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변화는 2014년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전국단위의 선거가 개최될 경우 정책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이듬해에 다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이듬해 지출총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된 2010년의 이듬해인 2011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 2010년~2015년 정책연구소별 지출총액과 정책개발비

(단위: 백만원)

|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2013년 | | 2014년 | | 2015년 | |
|-------------|----------|---------------|----------|---------------|----------|---------------|----------|---------------|----------|----------------|----------|----------------|
| | 지출 총액 | 정책 개발비 | 지출 총액 | 정책 개발비 | 지출 총액 | 정책 개발비 | 지출 총액 | 정책 개발비 | 지출 총액 | 정책 개발비 | 지출 총액 | 정책 개발비 |
| 합계 (%) | 12,121 | 3,775 (31) | 11,296 | 2,509 (22) | 12,134 | 2,203 (18) | 14,917 | 9,369 (63) | 15,914 | 11,899 (75) | 15,385 | 10,895 (71) |
| 여의도 연구원 | 8,024 | 2,502 (31) | 7,367 | 1,569 (21) | 8,465 | 1,259 (14) | 9,804 | 8,190 (84) | 9,844 | 8,303 (84) | 8,825 | 7,184 (81) |
| 민주정책 연구원 | 4,097 | 1,273 (31) | 3,929 | 940 (24) | 3,572 | 940 (32) | 4,306 | 850 (20) | 5,462 | 3,219 (59) | 5,900 | 3,308 (56) |
| 미래정치 센터 | | - | | - | 97 | 4 (4) | 807 | 329 (41) | 608 | 377 (62) | 659 | 403 (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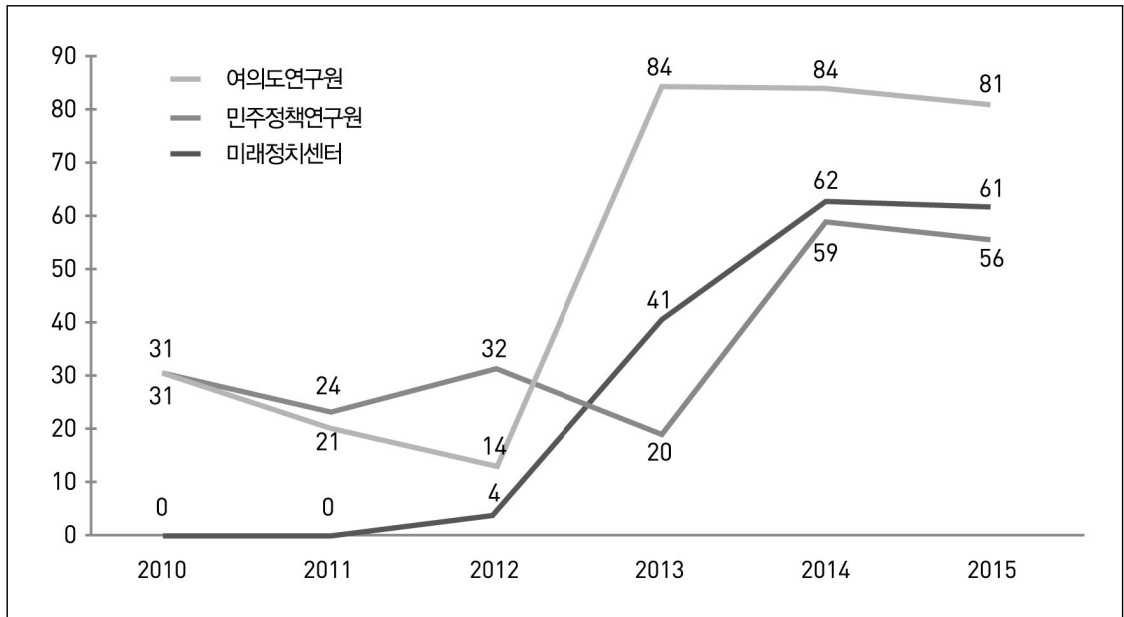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아울러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국선거가 개최된 시기의 지출총액 증가가 주로 정책개발비의 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책개발비의 경우 지출총액이 10억여 원 증가했던 2014년에는 25.3억여 원이 증가했으며, 지출총액이 5.3억여 원 감소한 2015년도에는 약 10억여 원이 감소하였다. 선거가 있는 시기에 발생하는 지출총액의 변화는 정책개발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책개발비의 선거 민감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컸으며, 민주정책연구원과 미래정치센터의 경우에는 최소한 2015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래 <그림 4>에 나타나 있듯이 2015년 지출총액 대비 정책개발비의 감소현상은 모든 정책연구소에서 나타났다. 2015년 지출총액 가운데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의도연구원은 81%, 민주정책연구원은 56%, 미래정치센터는 61%였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간 감소하였다.

<그림 4> 2010년~2015년 정책개발비 비중 변화

(단위: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3) 연구원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총 연구원은 152명이었다. 이 가운데 박사급 연구 인력은 36명, 석사급 연구 인력은 42명, 그리고 학사급 이하 연구 인력은 74명이었다. 국고 지원금을 받는 정당들의 정책연구소에 있는 박사급 연구원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총 36명이었다. 박사급 연구원의 숫자가 대학교의 한개 단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들의 수보다 못하다는 것은 한국 정당들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소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미래정치센터는 불과 1명의 박사급 연구원만이 재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정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은 각각 9명과 15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있다. 그러나 정책연구소가 이 정도의 연구 인력만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표 6> 2015년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현황

(단위: 명)

| 연구소 | 내역 | 연구원 | | | | 직원 | | |
|---------|----|----------|----------|----------|------------|-------|-------|----|
| | | 박사 | 석사 | 기타 | 합계 | 자체 고용 | 외부 파견 | 합계 |
| 합계(%) | | 36(23.7) | 42(27.6) | 74(48.7) | 152(100.0) | 2 | 0 | 2 |
| 여의도연구원 | | 18(25.0) | 22(30.6) | 32(44.4) | 72(100.0) | 1 | 0 | 1 |
| 민주정책연구원 | | 17(25.8) | 12(18.2) | 37(56.1) | 66(100.0) | 0 | 0 | 0 |
| 미래정치센터 | | 1(7.1) | 8(57.1) | 5(35.7) | 14(100.0) | 1 | 0 | 1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5년)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연구소의 연구원들 가운데 박사급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3.7%에 불과한 반면 기타 인력은 53.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이 박사급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⁵⁾ 박사급

5) 이 보고서는 정당 정책연구소에 소속된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정당 정책연구소에서 정당지원금의 지출규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얼마나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연구 인력에 비해 고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석사나 학사급 연구 인력을 선호할 수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연구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된다.

〈표 7〉은 2010년 이후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0년 민주정책연구원이 박사급 연구원을 15명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여의도연구원은 불과 9명을 고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여의도연구원이 지속적으로 20명 내외의 박사급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2011년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정치센터는 최근까지 소수의 박사급 연구원만을 보유하고 있다.

〈표 7〉 2010년~2015년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수 변화

(단위: 명)

| | 2010년 | | | 2011년 | | | 2012년 | | | 2013년 | | | 2014년 | | | 2015년 | | |
|-------------|-------|----|----|--------|----|------------|---------|----|------------|-------|----|----|-------|----|----|-------|----|----|
| | 박사 | 석사 | 기타 | 박사 | 석사 | 기타 | 박사 | 석사 | 기타 | 박사 | 석사 | 기타 | 박사 | 석사 | 기타 | 박사 | 석사 | 기타 |
| 연구원 계 | 78 | | | 72(47) | | | 125(32) | | | 146 | | | 147 | | | 152 | | |
| 소계 | 24 | 22 | 32 | 14 | 17 | 41 (47) | 29 | 29 | 67 (32) | 31 | 40 | 75 | 32 | 36 | 79 | 36 | 42 | 74 |
| 여의도 연구원 | 9 | 8 | 9 | 7 | 4 | 8 (44) | 20 | 19 | 57 (1) | 21 | 23 | 39 | 19 | 19 | 41 | 18 | 22 | 32 |
| 민주정책 연구원 | 15 | 14 | 23 | 7 | 13 | 33 (3) | 5 | 6 | 6 (19) | 8 | 12 | 31 | 11 | 12 | 33 | 17 | 12 | 37 |
| 미래정치 센터 | | | | | | | 4 | 4 | 4 (12) | 2 | 5 | 5 | 2 | 5 | 5 | 1 | 8 |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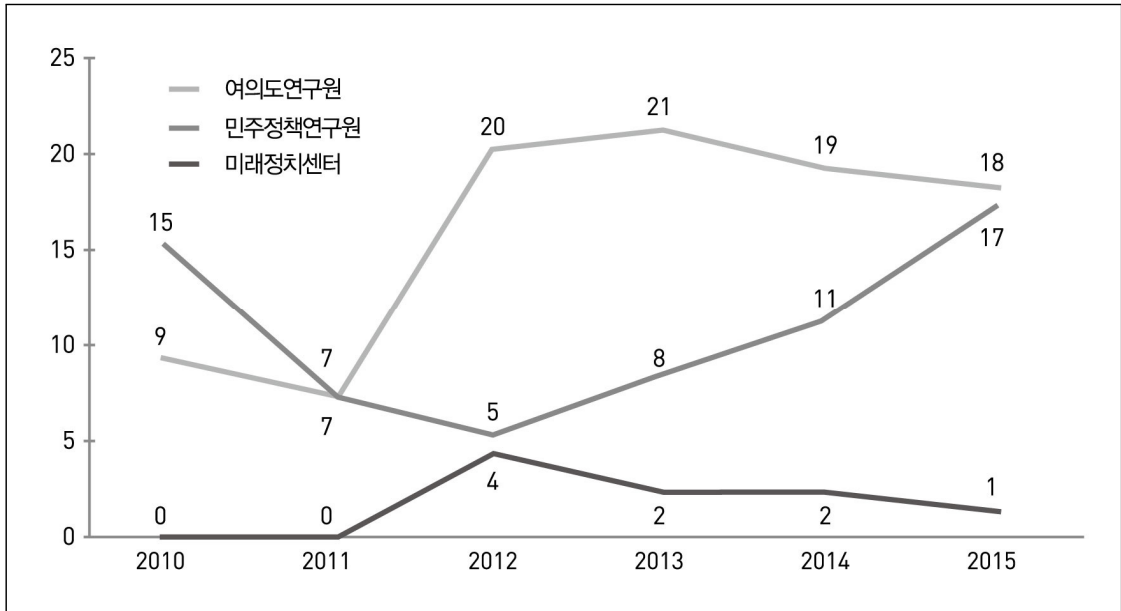
주: 2011년 및 2012년의 괄호 안은 연구원이 아닌 일반 직원 및 국회직 파견자 등임.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2015년 각 정책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여의도 연구원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이 전년도에 비해 2명 감소한 반면, 석사급 연구원은 3명 증가하였다.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에는 박사급 연구원이 6명이나 증가하였고, 석사급 연구원은 그대로였다. 미래정치센터는 박사급 연구원이 1명 감소한 반면, 석사급 연구원은 3명 증가하였다 (〈그림 5〉 참고).

〈그림 5〉 2010년~2015년 박사급 연구원 수의 변화

(단위: 명)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모든 정책연구원이 박사급 연구 인력만으로 연구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아울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박사급 대신 석사급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정당이 요구하는 정책 생산에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박사급 인력의 규모가 연구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단순한 정보의 집약이나 유통만이 아니라 수준 높은 정책의 생산을 위해서는 연구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신두철 2009; 신두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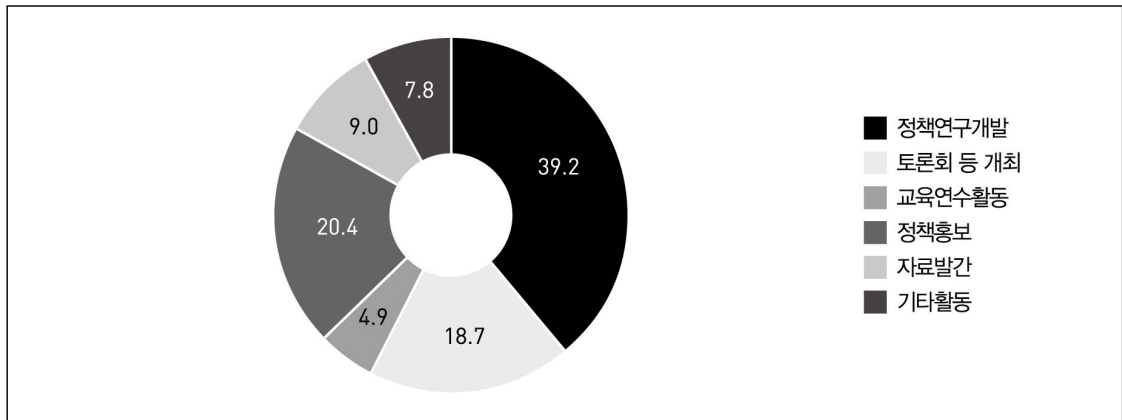
아울러 위의 분석 결과는 정의당과 같은 군소정당의 경우 박사급 인력의 부족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장기간 국회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석수나 득표율을 무시하고 모든 정당들에게 정책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정책 경쟁에서 후발 정당들이 기성 정당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당연구소들의 자구책과 함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서현진 · 임유진 2016).

2. 활동 실적 현황

아래 <그림 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15년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정책연구개발의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토론회 개최, 정책홍보가 각각 20.4%와 18.6%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서 교육연수활동은 별다른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6> 2015년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형태별 실적 비율

(단위: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5년)

아래 <표 8>은 정책연구소별 활동실적을 나타낸다. 이 표에 나타나듯이 정책연구소들 가운데 민주정책연구원이 가장 실적건수가 많았으며, 미래정치센터가 그 다음이었고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적었다. 이들의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미래정치센터가 여의도연구원보다 많은 연구실적을 나타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정치센터는 2015년 수입총액은 불과 7.4억여 원이었으며, 지출총액은 6.6억여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여의도연구원은 수입총액이 101.1억여 원이었으며, 지출총액은 88.3억여 원이었다. 이들 정책연구소의 재정을 비교하면 미래정치센터는 여의도연구원에 비해 수입총액은 7.4%, 지출총액은 7.5%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양적분석결과만을 근거로 미래정치센터가 여의도연구원보다 연구 실적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정의당의 미래정치센터가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정당들에 못지않은 혹은 더 많은 연구실적을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표 8〉 2015년 정책연구소별 활동방식

[단위: 건수]

| | 총계 | 여의도연구원 | 민주정책연구원 | 미래정치센터 |
|------------|-------------|------------|------------|------------|
| 계 | 1238(100.0) | 380(100.0) | 461(100.0) | 397(100.0) |
| 정책·연구 개발 | 485(39.2) | 140(36.6) | 144(31.2) | 201(50.6) |
| 토론회 등 개최 | 231(18.7) | 74(19.4) | 105(22.8) | 52(13.1) |
| 교육·연수활동 | 61(4.9) | 0(0.0) | 11(2.4) | 50(12.6) |
| 정책홍보 | 253(20.4) | 114(29.8) | 76(16.5) | 63(15.9) |
| 간행물 등 자료발간 | 111(9.0) | 37(9.7) | 57(12.4) | 17(4.3) |
| 기타 활동 | 97(7.8) | 15(3.9) | 68(14.8) | 14(3.5)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5년)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정책연구소의 활동 목적에 가장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 정책개발이 전체 활동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정책개발실적은 140건으로 민주정책연구원의 144건에 비해서 실적건수는 약간 적었지만 전체활동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 포인트 높았다. 이는 지난 2014년 여의도연구원의 정책개발 건수가 민주정책연구원의 절반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미래정치센터의 경우 정책개발 실적이 전체활동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6%로 정책연구소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둘째, 정책개발 이외의 분야에서도 정책연구소별 활동실적은 매우 상이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은 정책홍보에서 많은 실적을 보인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토론회 등의 개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실적을 나타냈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정책홍보실적은 114건이었다. 이는 민주정책연구원과 미래정치센터의 정책홍보실적 76건과 63건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았다. 미래정치센터는 교육연수활동실적 건수는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았다. 미래정치센터의 교육연수활동실적은 50건이었다. 이는 여의도연구원의 0건,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우 11건과 비교할 때 현격히 많은 것이다.

〈표 9〉 2006년~2015년 활동형태별 실적 비교

(단위: 건수)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계 | 842 (100%) | 479 (100%) | 667 (100%) | 1,454 (100%) | 3,696 (100%) | 1,148 (100%) | 1,538 (100%) | 1,100 (100%) | 957 (100%) | 1238 (100.0) |
| 정책 연구 개발실적 | 315 (37) | 176 (37) | 207 (31) | 304 (21) | 351 (10) | 230 (20) | 238 (16) | 288 (26) | 345 (36) | 485 (39.2) |
| 토론회 등 개최실적 | 279 (33) | 80 (16) | 115 (17) | 611 (42) | 1340 (36) | 582 (51) | 964 (63) | 400 (36) | 175 (18) | 231 (18.7) |
| 교육 연수활동 | 57 (7) | 65 (14) | 113 (17) | 92 (7) | 84 (2) | 66 (6) | 41 (2) | 43 (4) | 18 (2) | 61 (4.9) |
| 정책홍보 | 71 (9) | 35 (7) | 97 (15) | 196 (13) | 1670 (45) | 163 (14) | 146 (9) | 233 (21) | 220 (23) | 253 (20.4) |
| 간행물 등 자료발간 | 79 (9) | 60 (13) | 65 (10) | 134 (9) | 159 (4) | 66 (6) | 46 (3) | 80 (7) | 136 (14) | 111 (9.0) |
| 기타 활동 | 41 (5) | 63 (13) | 70 (10) | 117 (8) | 92 (3) | 41 (4) | 103 (7) | 56 (5) | 63 (7) | 97 (7.8)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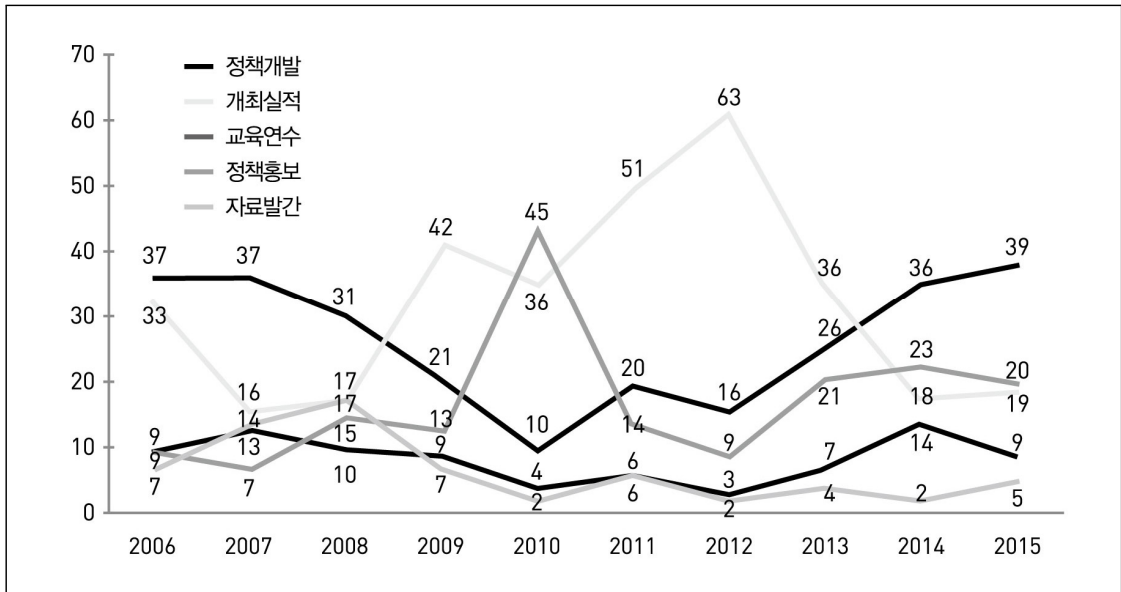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은 2014년과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활동건수만을 보면 자료발간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실적들은 증가하였다. 특히 정책개발실적은 무려 140건(40.6% 포인트)이나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 등 개최실적도 56건(32%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교육연수활동도 43건(239%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정책연구소들이 2014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표 9〉 참고).

각 항목이 전체 활동업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2015년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래 〈그림 7〉이 보여주듯이 무엇보다 정책개발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정책개발실적 이외에도 토론회 등 개최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0.6% 포인트 증가한 반면 정책홍보를 포함하여 교육연수활동과 자료발간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정책연구소의 주된 활동인 정책연구 및 개발에 비해 정책홍보활동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비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7〉 2010년~2015년 활동 행태별 실적 변화

(단위: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1) 정책 연구 및 개발 활동

정책연구소의 연구 및 개발활동은 단기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정당 내부의 정책위원회와 달리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정책연구소들은 단기적인 이슈에 집중해왔다. 아래의 <표 10>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5년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는 다양한 추진기간의 연구 과제를 진행해왔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1개월 이하였다는 점이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2015년 총 140개의 과제들 가운데 69.3%인 97개 과제의 추진기간이 1개월 이하였다. 이러한 단기과제 편향성은 민주정책연구원과 미래정치센터의 경우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정책연구원은 144개 과제 가운데 79.9%인 115개 과제, 미래정치센터는 199개 과제 가운데 89.4%인 178개 과제가 1개월 미만의 과제였다.

이에 비해서 중장기적 정책연구과제의 수는 매우 적었다. <표 10>이 보여주듯이 2015년도 세 정책연구소가 추진한 6개월 이상의 정책과제는 불과 3개에 불과하였으며 12개월 이상의 정책과제는 단 하나도 없었다.

<표 10> 2015년 연구 정책 과제의 추진기간별 분류

(단위: 건수)

| | 계 | 여의도연구원 | 민주정책연구원 | 미래정치센터 |
|----------|------------|-----------|-----------|-----------|
| 계 | 483(100.0) | 140(29.0) | 144(29.8) | 199(41.2) |
| 1개월 이하 | 390(80.7) | 97(69.3) | 115(79.9) | 178(89.4) |
| 2개월 이하 | 50(10.4) | 18(12.9) | 22(15.3) | 10(5.0) |
| 3개월 이하 | 16(3.3) | 7(5.0) | 6(4.2) | 3(1.5) |
| 4개월 이하 | 9(1.9) | 4(2.9) | 0(0.0) | 5(2.5) |
| 5개월 이하 | 14(2.9) | 12(8.6) | 0(0.0) | 2(1.0) |
| 6개월 이하 | 1(0.2) | 1(0.7) | 0(0.0) | 0(0.0) |
| 6개월~12개월 | 3(0.6) | 1(0.7) | 1(0.7) | 1(0.5) |
| 12개월 이상 | 0(0.0) | 0(0.0) | 0(0.0) | 0(0.0)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5년)

<표 11> 2015년 연구소별 6개월 이상 추진 과제

| 연구소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제 |
|---------|-------------------------------------|-----------|-------------------------------------|
| 여의도연구원 | 7개월 (2014.07.1.~2015.01.31.) | 운영, 정무 | 시민사회 균형발전 방안 |
| 민주정책연구원 | 8개월 20일 (2015.6.19.~2015.12.27.) | 기재위 / 복지위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포용경제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연구용역) |
| 미래정치센터 | 9개월 (2014.04.01~2015.01.06) | 외교통일 / 국방 | 진보의 외교·통일·국방 전략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5년)

이러한 단기과제 편향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표 12>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5년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미래정치센터를 제외한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강화되었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2개월 이하의 단기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에는 76.7%(66/86)이었는데, 2015년에는 82.1%(115/140)로 증가하다. 민주정책연구원은 93.3%(140/150)에서 95.1%(137/144)로 약간 증가하였다. 미래정치센터의 경우 이 비율이 2014년 96.3%(105/109)에서 94.5%(188/199)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표 12> 2010년~2015년 연구 정책 과제의 추진기간별 분류

(단위: 건수)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여의도연구원 | 27(27/-) | 65(50/15) | 80(77/3) | 88(79/9) | 86(66/20) | 140(115/25) |
| 민주정책연구원 | 75(63/12) | 68(53/15) | 91(77/14) | 119(112/7) | 150(140/10) | 144(137/7) |
| 미래정치센터 | | | | 38(26/12) | 109(105/4) | 199(188/11) |

주: 단기(1-2개월)/중장기(3개월 이상)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물론 단순히 연구기간이 길어야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연구기간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연구소의 연구가 단기과제에 치중함으로써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한 연구들이 배제되었다는 데에 있다.

정책연구소들의 연구실적을 주체별로 살펴보면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이 자체 연구였으며, 외부 전문가 혹은 외부와의 공동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자체연구의 비중은 80%로 이는 민주정책연구원(87.5%)과 진보정의연구소(92.5%)와 비교하여 적은 것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2015년 외부공동연구를 28건이나 진행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책연구소들이 외부 연구자들을 활용하거나 이들과의 공동연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외부전문가연구 혹은 외부공동연구를 각각 9회 진행하였으며, 미래정치센터는 외부전문가 연구를 14회 진행하였다.

〈표 13〉 2015년 정책연구소 연구 주체

(단위: 건수)

| | 계 | 여의도연구원 | 민주정책연구원 | 미래정치센터 |
|--------|------------|------------|------------|------------|
| 계 | 483(100.0) | 140(100.0) | 144(100.0) | 199(100.0) |
| 자체 | 422(87.4) | 112(80.0) | 126(87.5) | 184(92.5) |
| 외부 전문가 | 23(4.8) | 0(0.0) | 9(6.3) | 14(7.0) |
| 외부공동 | 38(7.9) | 28(20.0) | 9(6.3) | 1(0.5) |

* 학술지게재논문(공동)은 외부공동연구에 포함시킴.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5년)

〈표 14〉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주체별 연구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잘 나타나듯이 자체연구의 비중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2010년~2015년 연구 주체별 추이

(단위: 건수)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계 | 351(100%) | 230(100%) | 238(100%) | 288(100%) | 345(100%) | 483(100.0%) |
| 자체 | 316(90) | 199(86.5) | 197(82.8) | 235(81.6) | 298(86.4) | 422(87.4) |
| 외부 전문가 | 24(6.9) | 12(5.2) | 21(8.8) | 22(7.6) | 23(6.7) | 23(4.8) |
| 외부공동 | 11(3.1) | 19(8.3) | 20(8.4) | 31(10.8) | 24(7) | 38(7.9)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2) 개최실적

아래의 〈표 15〉에 나타나듯이 정책연구소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토론회, 간담회, 포럼, 세미나,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학계 및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정책연구소들의 토론회 등 개최실적은 총 231건이었다. 이들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정책연구원이 74건, 미래정치센터가 52건 순이었다.⁶⁾

각 정책연구소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토론회, 간담회, 포럼을 가장 활발하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여의도연구원은 세미나를 가장 활발하게 개최하였으며 여론조사 또한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의도연구원은 토론회나 간담회, 포럼의 개최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미래정치센터는 특정한 방식에 치우치지 않고, 열악한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5〉 2015년 토론회 등 개최실적 종류

(단위: 건수)

| | 계 | 여의도연구원 | 민주정책연구원 | 미래정치센터 |
|-------|------------|------------|------------|-----------|
| 계 | 384(100.0) | 204(100.0) | 105(100.0) | 52(100.0) |
| 토론회 | 84(21.9) | 3(1.5) | 52(40.6) | 29(55.8) |
| 간담회 | 50(13.0) | 15(7.4) | 28(21.9) | 7(13.5) |
| 포럼 | 27(7.0) | - | 16(12.5) | 11(21.2) |
| 세미나 | 52(13.5) | 43(21.1) | 6(4.7) | 3(5.8) |
| 여론조사 | 169(44.0) | 142(69.6)* | 26(20.3)* | 1(1.9) |
| 토크콘서트 | 1(0.3) | 1(0.5) | - | - |
| 집담회 | 1(0.3) | - | - | 1(1.9) |

* 개별여론조사를 모두 계산함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5년)

아래의 〈표 16〉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토론회 등 개최실적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 나타나듯이 이 실적은 2012년 964건으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6) 새누리당의 당규(“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15조(여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① 연구원에 여론조사실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현안 및 정책개발 조사, 2.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3. 주요 당무관련 여론조사, 4. 여론동향 분석 보고, 5.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 ② 대표최고위원은 연구원에 각종 선거 등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5호의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호, 제3호의 여론조사 결과는 실무책임자가 당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무총장은 결과보고를 받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원회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등을 비롯하여 주요 당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여의도연구원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7) 각 정당의 정기보고서에는 여론조사를 유형화하여 새누리당은 74회, 더불어민주당은 3회 실시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 현상은 여론조사가 2014년 822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2014년과 비교하여 토론회 등 개최실적은 13건이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여론조사와 세미나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토론회, 간담회, 포럼 등은 모두 증가하였다.

〈표 16〉 2010년~2015년 토론회 등 개최실적 종류별 비교

(단위: 건수)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340(%) | 582(%) | 967(%) | 400(%) | 371(%) | 384(100.0) |
| 토론회 | 60(4.5) | 59(10.1) | 39(4.0) | 106(26.5) | 31(8.4) | 84(21.9) |
| 간담회 | 121(9) | 85(14.6) | 36(3.7) | 42(10.5) | 26(7) | 50(13.0) |
| 포럼 | 2(0.2) | 36(6.2) | 55(5.7) | 71(17.7) | 22(5.9) | 27(7.0) |
| 세미나 | 23(1.7) | 12(2.1) | 12(1.2) | 32(8.0) | 62(16.7) | 52(13.5) |
| 여론조사 | 1,122(83.7) | 372(63.9) | 822(85.2) | 135(33.8) | 226(60.9) | 169(44.0) |
| 기타 | 12(0.9) | 18(3.1) | 3(0.3) | 14(3.5) | 4(1.2) | 2(0.6)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3) 교육 연수 활동

〈표 17〉에 나타나 있듯이 2015년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교육·연수활동은 매우 저조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은 단 한건의 교육·연수활동도 없었으며, 민주정책연구원은 11건에 불과하였다.⁸⁾ 이에 비해 미래정치센터는 다른 정당정책연구소보다 훨씬 많은 50건의 교육·연수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미래정치센터의 통신교육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당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 여의도연구원의 정기보고서에는 교육/연수활동이 2회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례들은 연구원관계자의 단순 토론참가로 여기서는 배제하였다.

〈표 17〉 2015년 교육·연수 대상별 분석

(단위: %)

| | 총계 | 여의도연구원 | 민주정책연구원 | 미래정치센터 |
|--------|----|--------|---------|-----------|
| 계 | 61 | 0 | 11 | 50 |
| 당직자 | 9 | 0 | 2 | 7(집합, 현장) |
| 당원연수 | 2 | 0 | 0 | 2(정예당원) |
| 청년/대학생 | 1 | 0 | 1 | |
| 기타 | 51 | 0 | 8 | 41(통신교육)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5년)

교육·연수활동은 그동안 정책연구소들이 비교적 활발히 추진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표 18〉에 나타나듯이 2012년 82건에 달했던 교육·연수활동이 2013년 43건으로 급감하였고, 2014년 다시 18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활동의 빈도가 다시 증가하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미래정치센터를 제외하면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의 교육·연수활동 건수가 지극히 적었다. 이런 사실은 이들이 교육 및 연수 활동에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고 정책 생산과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8〉 2010년~2015년 교육·연수 활동 대상별 비교

(단위: 건수)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합계 | 84(100%) | 66(100%) | 82(100%) | 43(100%) | 18(100%) | 61(100%) |
| 의원 | 10(11.9) | 1(1.5) | - | - | - | - |
| 당직자 | 35(41.7) | 13(19.7) | 14(17.1) | 15(34.9) | 8(44.4) | 9(14.8) |
| 당원 | 14(16.7) | 17(25.8) | 10(12.2) | 22(51.2) | 3(16.7) | 2(3.3) |
| 대학생 | 23(27.4) | 27(40.9) | 6(9.1) | - | 5(27.8) | 1(1.6) |
| 일반시민 | 2(2.3) | 6(9.1) | 11(13.4) | - | - | - |
| 기타 | - | 2(3.0) | 41(50.0) | 6(13.9) | 2(11.1) | 51(83.6)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4) 정책 홍보 실적

정책연구소들의 정책홍보활동은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표 19>에 나타나 있듯이 2015년 정책홍보실적은 총 253건에 달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정책연구원이 76건, 미래정치센터는 63건의 실적이 있었다. 이들의 정책홍보방식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정책홍보가 사이트 게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사이트 게재와 보도자료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보도자료 혹은 책자 배포를 이용한 전통적인 정책홍보방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2015년 정책홍보 방법

(단위: 건수)

| | 총계 | 여의도연구원 | 민주정책연구원 | 미래정치센터 |
|----------------|------------|------------|-----------|-----------|
| 계 | 253(100.0) | 114(100.0) | 76(100.0) | 63(100.0) |
| 사이트게재 | 215(85.0) | 104(91.2) | 70(92.1) | 41(65.1) |
| 사이트게재 +보도자료 | 34(13.4) | 10(8.8) | 2(2.6) | 22(34.9) |
| 보도자료 | 1(0.4) | | 1(1.3) | |
| 책자배포 | 1(0.4) | | 1(1.3) | |
| 기타 | 2(0.8) | | 2(2.6)** | |

* 여의도연구원 뉴스레터는 보도자료에 포함; ** 기타-간행물 투고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표 20>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책연구소들의 정책홍보방식 추이를 보여준다. 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2015년 이들의 정책홍보방식에서 나타난 특징은 갑작스런 현상이 아니라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방송을 이용하거나 보도자료와 책자배포를 이용한 전통적인 정책홍보방법이 거의 사라지고 사이트게재를 이용하는 것이 주된 경향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온라인을 이용한 정책홍보가 갖는 효율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정책홍보가 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다양한 정책홍보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20〉 2010년~2015년 정책홍보 방법 비교

(단위: 건수)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671(100%) | 163(100%) | 146(100%) | 233(100%) | 220(100%) | 253(100.0) |
| 사이트게재 | 1477(88.4) | 99(60.7) | 20(13.7) | 209(89.7) | 160(72.7) | 215(85.0) |
| e-뉴스레터 | 39(2.4) | 45(27.6) | 16(11.0) | 13(5.6) | - | - |
| 인터넷동영상 | - | - | 1(0.7) | 7(3.0) | - | - |
| 사이트 게재 + 보도자료 | 13(0.8) | 7(4.3) | 104(71.2) | - | 54(24.5) | 34(13.4) |
| 보도자료 | 128(7.7) | 5(3.1) | 2(1.4) | - | 3(1.4) | 1(0.4) |
| 방송 | 11(0.6) | 2(1.2) | 1(0.7) | - | - | |
| 책자 배포 | - | - | 2(1.4) | 1(0.4) | 3(1.4) | 1(0.4) |
| 기타 | 2(0.1) | 5(3.1) | - | 3(1.3) | - | 2(0.8)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5) 자료발간 실적

아래 〈표 21〉이 보여주듯 2015년 정책연구소들의 자료발간 실적은 총 111건이며, 이들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이 37건, 민주정책연구원이 57건, 미래정치센터가 17건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민주정책연구소가 여의도연구원보다 많은 자료발간실적을 이뤘다는 점이다. 다만 민주정책연구원의 자료발간실적 가운데 대부분이 토론회 자료에 치우쳐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의도연구원의 자료발간실적은 건수보다 자료발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현안보고, 이슈브리프, 정책보고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자료발간 실적으로 연구 논문이 11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래정치센터는 비교적 자료발간유형이 단편적이나 단행본이 4건으로 다른 정책연구소보다 많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1〉 2015년 연구소별 간행물 등 자료발간 실적

(단위: 건수)

| | 누계 | 여의도연구원 | 민주정책연구원 | 미래정치센터 |
|------------|-----------|----------|----------|----------|
| 계 | 111(100%) | 37(100%) | 57(100%) | 17(100%) |
| 현안 보고 | 5(4.5) | 5(13.5) | | |
| 이슈브리프 | 11(9.9) | 11(29.7) | | |
| 정책보고서 | 8(7.2) | 6(16.2) | 2(3.5) | |
| 연구보고서 | 5(4.5) | | 5(8.8) | |
| 토론회 자료 | 46(41.4) | 1(2.7) | 34(59.6) | 11(64.7) |
| 세미나자료집 | 2(1.8) | 1(2.7) | | 1(5.9) |
| 백서 | 2(1.8) | | 2(3.5) | |
| 계간지 [여연시선] | 4(3.6) | 4(10.8) | | |
| 연구논문 | 11(9.9) | | 11(9.9) | |
| 여연포커스 | 1(0.9) | 1(2.7) | | |
| 자료집 | 3(2.7) | 1(2.7) | 2(3.5) | |
| 현안 분석 | 1(0.9) | 1(2.7) | | |
| 동향과 분석 | 5(4.5) | 5(13.5) | | |
| 보고서 양식 매뉴얼 | 1(0.9) | 1(2.7) | | |
| 단행본 | 5(4.5) | | 1(1.8) | 4(23.5) |
| 간담회자료 | 1(0.9) | | | 1(5.9) |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5년)

정책연구소들의 2015년 자료발간실적은 〈표 22〉에 나타나 있듯이 2014년 실적과 비교하여 일부는 저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안보고, 이슈브리프, 정책보고서 등의 건수가 2014년과 비교하여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론회 자료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연구보고서, 계간지, 연구 논문은 현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2010년~2015년 간행물 등 자료발간 실적

(단위: 건수)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계 | 159(100%) | 66(100%) | 46(100%) | 80(100%) | 131(100%) | 111(100%) |
| 현안보고 | - | - | - | - | 34 | 5 |
| 이슈브리프 | - | - | - | 3 | 12 | 11 |
| 정책보고서 | 2 | - | 5 | 5 | 12 | 8 |
| 연구보고서 | - | - | 1 | 1 | - | 5 |
| 토론회자료 | 32 | 20 | 6 | 37 | 24 | 46 |
| 세미나자료 | 6 | - | 3 | - | 23 | 2 |
| 백서 | 1 | 1 | 1 | 1 | 3 | 2 |
| 계간지 | 2 | 3 | 2 | - | 1 | 4 |
| 연구논문 | 61 | 29 | 15 | 3 | 8 | 11 |
| 기타 | 55 | 13 | 13 | 30 | 14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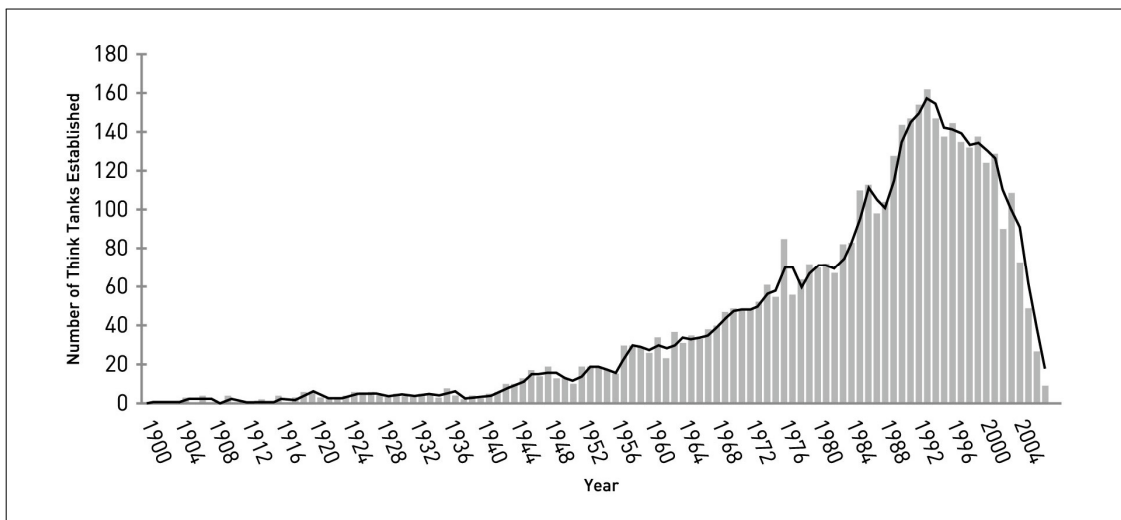
출처: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2010년~2015년)

III

해외 정당연구소 및 정당 관련 싱크 탱크에 대한 검토

복잡하고 다원화 된 현대 사회에서 정책연구소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정광호 2005; 신두철 2011; 이성우 2013; 조진만 2014).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그림 8>과 같은 정책연구기관의 폭발적 증가로 연결되었다. 전 세계 정책연구기관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hink Tank and Civil Societies Program(TTCSP), 이후 TTCSP)”은 20세기 후반부터 정책연구기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을 ‘세계화’와 ‘정보기술 혁명’에서 찾는다(McGann 2016, 8). 즉,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정부의 정보 독점이 무너진 한편,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변화의 폭도 넓어지면서 정부 관료만으로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였고 이런 환경에서 전문정책연구기관이 증가한 것이다.

<그림 8> 연도별 신설 정책연구기관 수



출처: 2008 GGTTI Report [2009, 10].

TTCSP는 2006년 이후 전 세계 싱크탱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평가 과정은 “전문가 패널 구성(Expert Panel Nomination)”, “평가대상 선정(Nomination)”, “평가(Peer/Expert Rankings)”, “최종 순위 결정(Expert Panel Selection)”의 단계를 거쳐 최종 발표 된다. 이들의 평가는 <표 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원지표(resource indicator), 활용지표(utilization index), 성과지표(output indicator), 영향지표(impact indicator) 등 4가지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다. 또한 이런 평가 지표들은 출판물 발행 횟수, 인용 건수, 재무구조 등과 같은 정량적 평가 뿐 아니라 전문가 패널에 의한 설문 결과와 같은 정성적 평가도 포함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3> GGTTI Report 싱크탱크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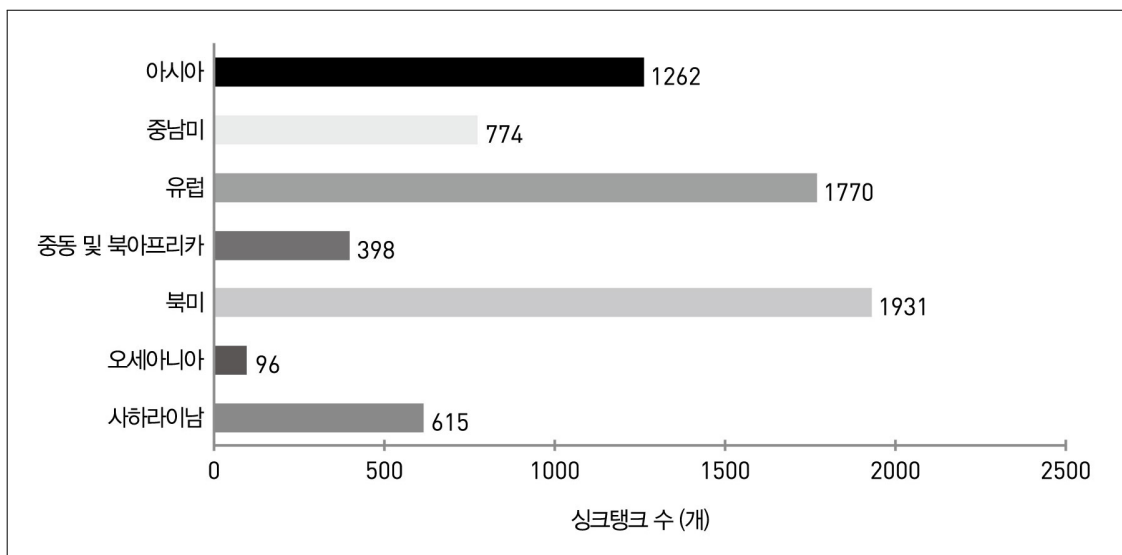
| 평가지표 | 상세내용 |
|--|--|
| 자원지표 (Resource Indicato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능한 연구자의 모집과 유지 • 재정지원의 수준, 질, 그리고 안정성 • 정책결정자 및 정책엘리트에 대한 근접성과 접근도 • 연구자의 역량 • 네트워크의 질과 신뢰도 • 정책연구집단과 미디어에 대한 접촉성 |
| 활용지표 (Utilization Indicato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와 정책엘리트의 평가 • 미디어 노출과 인용, 인터넷 검색수(web hit), 의회 및 행정부의 증언에 대한 질과 양 • 정부기관에 대한 브리핑, 임명, 자문 • 연구도서의 판매부수 및 보고서의 유통 • 학술연구보고서의 인용도와 세미나 참석 건수 |
| 성과지표 (Output Indicato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서 • 출판물(책, 학술논문, 정책브리프 등) • 브리핑, 세미나와 컨퍼런스 주최건수 • 출판물(책, 학술논문, 정책브리프 등) • 뉴스인터뷰 • 정부직 또는 자문직 임명건수 |
| 영향지표 (Impact Indicato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자 또는 시민사회조직이 수용한 정책제안 건수 • 이슈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 • 정당, 후보, 인수위원회에 대한 자문역할 • 용역사업 규모 및 건수 • 관행에서 벗어나는 정책 산출 여부 • 수상여부 • 학술지 인용도 및 등재 횟수 • 웹사이트 지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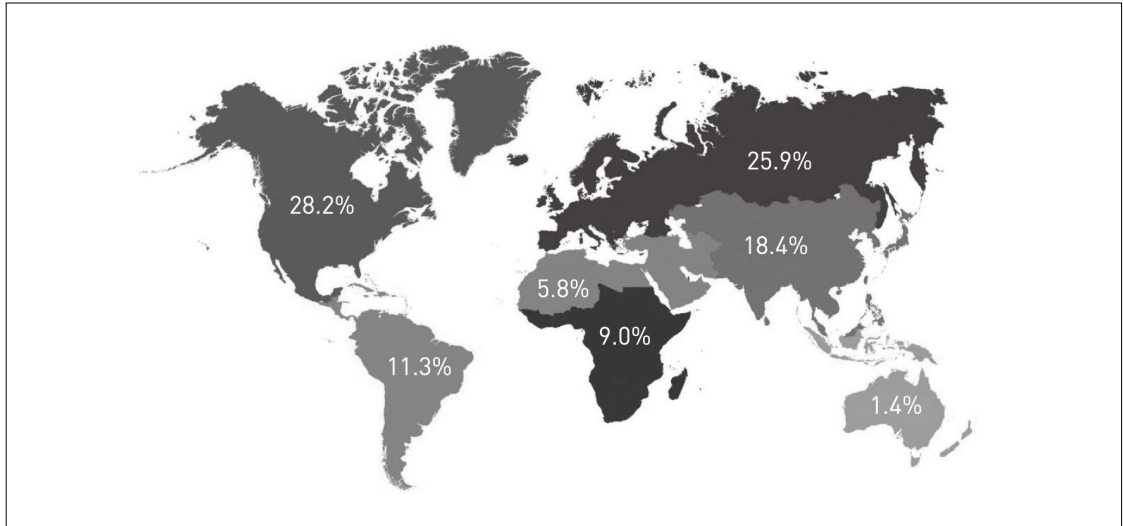
출처: 2015 GGTTI Report (2016, 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물론 이와 같은 평가 절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TTCSP 역시 자신들의 평가 지표의 불완벽성에 대해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평가 지표가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들의 꾸준한 평가 지표 개선 노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가 대상 중 ‘신규 설립 연구기관’을 설립 18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조정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직접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기관, 정부 등의 태도, 관계, 행동이 변화했다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끊임없는 지표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6년 1월에 발간된 2015 GGTTI(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보고서에는 전 세계 194개국 6,846개 싱크탱크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되어있다. <그림 9>는 대륙별 싱크탱크 설립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미와 유럽대륙에 전 세계 연구기관의 약 54%에 해당하는 3,701개의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는 전체의 약 18%에 해당하는 1,262개의 연구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835개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435개), 영국(288개), 인도(280개), 독일(195개) 순으로 많은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 이어 인도(280개), 일본(109개), 대만(52개)에 이어 우리나라가 35개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대륙별 싱크탱크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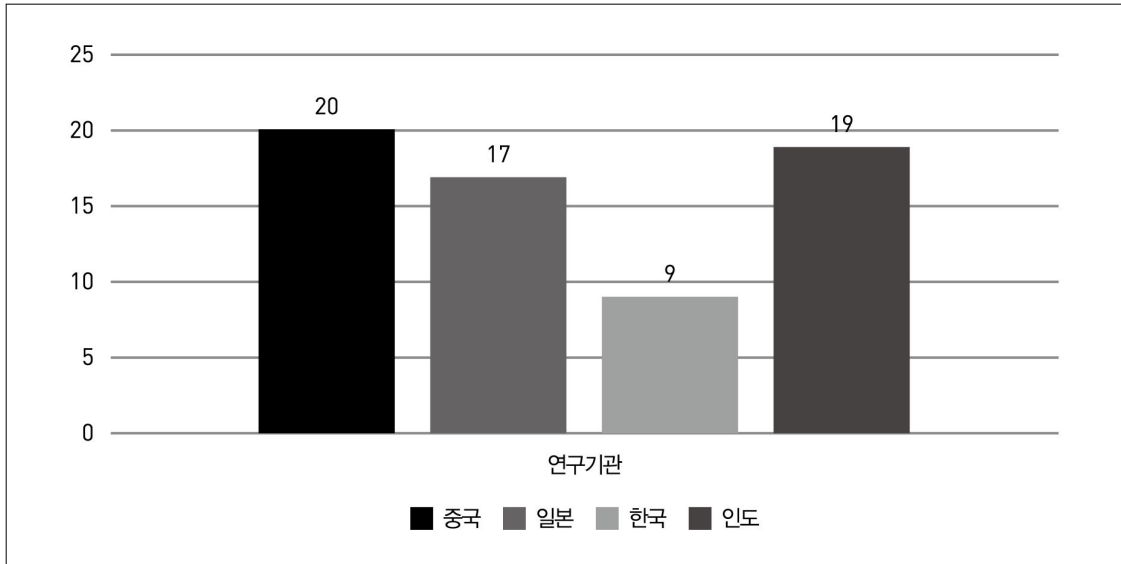




출처: 2015 GGTTI Report(2016, 30)

이들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최우수 싱크탱크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 연구기관 중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3위)과 한국개발연구원(KDI, 48위), 동아시아연구원(EAI, 62위), 국립외교원(IFANS, 68위), 자유경제원(CFE, 107위) 순으로 우수 싱크탱크로 선정되었다. <그림 10>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우수 싱크탱크 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이 20개 우수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도(19개), 일본(17개), 한국(9개) 순으로 우수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4>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일본, 중국, 인도에서는 우수 싱크탱크 수가 최근 3년간 대폭 증가해온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동아시아지역 우수 싱크탱크



출처: 2015 GGTTI Report(2016, 30)를 재구성

〈표 24〉 최근 3년간 동아시아지역 국가별 우수 싱크탱크 수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인도 | 14 | 15 | 19 |
| 일본 | 12 | 12 | 17 |
| 중국 | 10 | 15 | 20 |
| 한국 | 8 | 7 | 9 |
| 계 | 44 | 49 | 65 |

GGTTI 보고서는 정당관련 연구소(Political Party Affiliated Think Tank)들에 대한 순위도 함께 공개한다. 〈표 25〉는 최근 3년간 GGTTI가 발표한 정당 관련 싱크탱크 가운데 우수 싱크탱크로 분류된 기관들의 국가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벨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등 유럽권 국가들과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미주 국가들이 상위권에 분포해있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정당연구소만이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었다.

〈표 25〉 국가별 정당관련 싱크탱크 분포, 2013년~2015년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벨기에 | 6 | 7 | 6 |
| 독일 | 6 | 6 | 6 |
| 프랑스 | 3 | 2 | 3 |
| 스페인 | 2 | 1 | 1 |
| 미국 | 2 | 2 | 4 |
| 영국 | 2 | 2 | 2 |
| 말레이시아 | 2 | 2 | 2 |
| 네덜란드 | 2 | 2 | 2 |
| 이탈리아 | 1 | 1 | 1 |
| 브라질 | 1 | 1 | 2 |
| 아르헨티나 | 1 | 1 | 1 |
| 칠레 | 1 | 1 | 1 |
| 중국 | 1 | 1 | 1 |
| 호주 | - | - | 1 |
| 인도 | - | - | 2 |
| 파키스탄 | - | - | 1 |
| 러시아 | - | - | 1 |
| 스웨덴 | - | - | 1 |
| 터키 | - | - | 1 |
| 합계 | 30 | 29 | 39 |

출처: 2015 GGTTI Report (2016, 104); 2014 GGTTI Report (2015, 129); 2013 GGTTI Report (2014, 87).

〈그림 11〉과 〈표 26〉은 정당 관련 연구기관들 가운데 최근 3년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10개 기관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한국의 정당 연구소들의 지향점으로 지목되어온 독일의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국의 정당 연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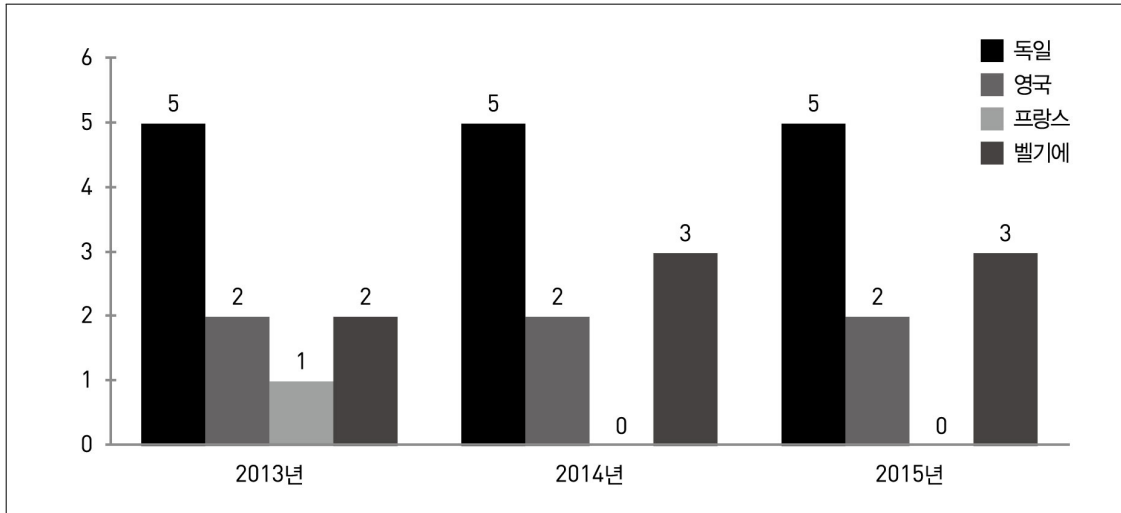
관인 Demos와 Fabian Society는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의 대표 정당 관련 정책연구소들은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⁹⁾

〈표 26〉 상위 10개 정당 관련 싱크탱크

| | 2013년(30개) | | 2014년(29개) | | 2015년(40개) | |
|----|---|-----|--|-----|--|-----|
| 1 | Konrad Adenauer | 독일 | Konrad Adenauer | 독일 | Konrad Adenauer | 독일 |
| 2 | Friedrich Ebert | 독일 | Friedrich Ebert | 독일 | Friedrich Ebert | 독일 |
| 3 | Heinrich Boell | 독일 | Heinrich Boell | 독일 | Heinrich Boell | 독일 |
| 4 | Demos | 영국 | Demos | 영국 | Demos | 영국 |
| 5 | Fabian Society | 영국 | Fabian Society | 영국 | Fabian Society | 영국 |
| 6 | Friedrich Naumann | 독일 | Friedrich Naumann | 독일 | Friedrich Naumann | 독일 |
| 7 |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 벨기에 |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 벨기에 |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 벨기에 |
| 8 | Hanns Seidel | 독일 | Hanns Seidel | 독일 | Hanns Seidel | 독일 |
| 9 | European Ideas Network | 벨기에 | European Ideas Network | 벨기에 | European Ideas Network | 벨기에 |
| 10 | Robert Shuman | 프랑스 |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 벨기에 |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 벨기에 |

9) 벨기에의 경우 3개의 정당관련 연구기관들이 10위 이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싱크탱크들은 벨기에 보다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관련된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이다.

〈그림 11〉 상위 10개 정당 관련 싱크탱크



출처: 2015 GGTTI Report (2016, 104); 2014 GGTTI Report (2015, 129); 2013 GGTTI Report (2014, 87).

이어지는 절에서는 정당 정책 연구소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사례와 정책 연구소 형태의 미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영국과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단일 국가 차원을 넘어선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정당 정책연구소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1. 정당 정책연구소의 전형: 독일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 정책연구소가 존재하는 나라는 독일뿐이다. 현재 독일에는 6개의 정당이 정치재단, 정당과 긴밀한 재단(Parteinahe Stiftung)의 형태로 정책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선거연수원 2015). 이들 재단의 경우 법적으로 정당의 일부이거나 산하기구는 아니지만 이들 재단은 독립적 구조를 갖춰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설립을 인접 정당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신두철 2011; 한의석 2015). 또한 법적으로 이들 정치 재단의 직접적 정치활동이나 모체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6개의 정당이 정책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재단을 가지고 있다. 〈표 27〉은 이들 재단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정치 재단들은 국가 지원금을 기초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비지원은 정당이 연방 의회 선거에서 4번 이상 5% 이상의 의석을 얻는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신두철 2011). 또한 이들 재단은 시민들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등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한 장치 역시 마련되어 있다(신두철 2007). 연방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각 정치재단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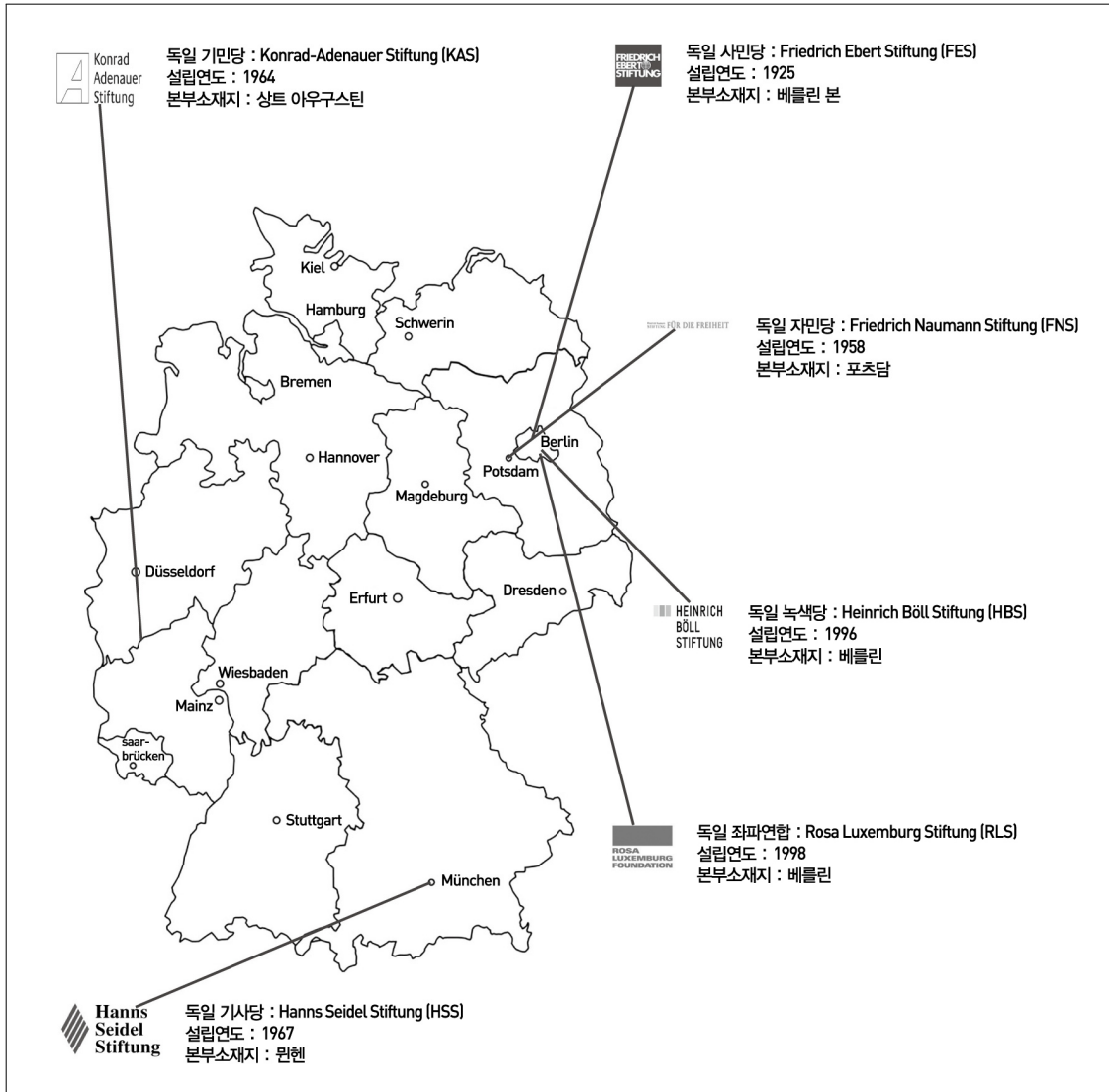
우리나라, 미국 정책 연구기관과 독일의 정치 재단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활동 목표에 있다. 우리나라 정당 정책연구소와 미국의 정책연구재단은 현실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주된 활동인데 반해 독일의 정치재단들은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교육이 주된 목적이다. 실제로 자민당의 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edrich Naumann)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자유주의 이념과 그 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사당의 산하 정치재단인 한스 자이델 재단(Hans Seidel) 역시 자신들의 설립 목적을 기독교적 토대에 독일 국민들을 위한 민주교육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한의석 2015).

이러한 정치재단의 설립 목적은 이들의 실제 활동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정치재단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반시민들에 대한 정치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표 27〉 독일 정치재단 설립 현황

| 정당 | 재단명 | 설립연도 |
|------|-------------------|------|
| 사민당 | Friedrich Ebert | 1925 |
| 자민당 | Friedrich Naumann | 1958 |
| 기민당 | Konrad Adenauer | 1964 |
| 기사당 | Hans Seidel | 1967 |
| 녹색당 | Heinrich Boell | 1996 |
| 좌파연합 | Rosa Luxemburg | 1998 |

〈그림 12〉 독일 정치재단 위치별 분포



출처: 선거연수원 해외연구관 보고서, 2015. 『정책선거 추진실태 및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2014년을 기준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edrich Ebert)은 토론회, 학회, 박람회 등을 2,800여회 진행했으며 약 22만 명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의 경우에는 정치 아카데미 행사를 164회 진행하여 15,596명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사당의 한스 자이델의 경우 정치 및 역사 아카데미를 82회, 정치교육 연구행사 1,324회, 영재교육 연구행사 170회, 국제협력 연구행사 4,447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교

육활동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재단들은 연구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총 2,8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12,000여명 규모의 장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재단의 활동이 정당과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각 재단은 내부적으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기관 및 담당 부서를 별도로 두고 정책 개발 기능을 보다 특화시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활동 분야도 정당의 정책 기조에 따라 특화되어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경우 노사관계에 특화되어 있으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지방자치, 하인리히 뵐 재단은 환경문제에 연구활동을 집중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2. 정당관련 정책연구소와 초당파적 정책연구소: 미국, 영국, 호주

1) 미국

독일과 달리 미국의 경우 정당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법정기구로서 정책연구소가 아닌 민간 비영리단체로서 싱크탱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830여개의 정책연구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의회나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책 연구소는 정부 연계 연구소, 정당 연계 연구소, 민간 기업 연구소, 대학 산하 연구소, 독립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정부 연계 연구소와 정당 연계 연구소는 많지 않다. 정부와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의 경우 미국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미국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하와이의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당과 연계되어 있는 정책 연구소로는 민주당과 연계되어있는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와 신민주네트워크(New Democrat Network), 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국제공화당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를 꼽을 수 있다.

민주당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진보정책연구소는 1989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New

Democrats'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들 중점 연구 분야는 경쟁력과 생산경제, 에너지, 의료혁신, 주택 및 재정서비스 등 4개 분야이며, 민주당의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계 연구기관인 신민주네트워크는 중도 및 진보적 민주당 후보들을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New Policy Institute와 New Politics Institute와 연계되어 있다. 공화당계의 연구기관인 국제공화당연구소는 1983년 설립되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비정파적(non-partisan)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으나, 마크 그린(Mark Green), 존 메케인(John McCain) 등 공화당 인사들이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화당계 싱크탱크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정당연구기관들과 달리 미국의 정당 연계 연구소들은 특정 파벌 및 인물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독립 정책연구기관 중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는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보수성향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진보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들 수 있다. TTCSP에서 선정한 최우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는 1916년 설립되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도좌파 성향의 연구기관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우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특정 정당이 아닌 미국 정부기관의 수행능력을 높이고 공공정책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의 자유, 정부의 제한, 개인의 자유, 미국의 전통적 가치, 강한 국가안보 등 보수적 가치관에 기초한 보수적 공공정책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은 비당파적 싱크탱크로서 이념적 성향이 정당과 밀접할 뿐이지 실제로는 각각의 정당과 독립되어 있는 조직이다. 실제로 정당들 역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정책 연구소와 정책 대안을 채택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미국의 정책 연구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관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어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기관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도 하지만 전체 수입구조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으며, 대부분이 개인 혹은 기업의 기부금과 보조금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수입의 사용처 역시 대부분이 연구와 교육활동에 쓰이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소의 인적 구성은 대부분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소 또한 학술 집단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이들 연구기관과 대학 기

관과의 차이는 대학 기관이 이론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연구기관은 실용적 연구주제를 다룬다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또한 연구내용은 전문가의 견해로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정책이나 법률에 반영되는 형식을 취하며, 연구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받고 있다.

2) 영국

영국과 호주의 정책연구소들의 특징은 초당파적 독립정책연구기관과 정당 연계 정책연구기관이 고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영국의 데모스(Demos)는 초당적 정책연구소(cross-party think-tank)로서 영국 정당관련 싱크탱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1993년 설립된 데모스는 ‘일상의 민주주의(everyday democracy)’ 실현을 통해 현대 정치의 고질적 갈등구조의 진단과 정책결정권자와 유권자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성장과 공정경영(growth and good business), 복지와 공공서비스(welfare and public services), 시민권과 정치참여(citizen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사회매체분석(analysis of social media)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데모스는 다양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정당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이는 2000년 이후 노동당과 블레어 정부의 우경화로 부터 데모스가 스스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으며, 이후 데모스는 재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운영 자금을 해결하고 있다. 2014년 데모스 연간 운영보고서(Trustees'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14)에 따르면 데모스의 연간 수입(1,221,456 파운드)의 약 70%에 해당하는 854,571 파운드가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충당되었다. 최근 수입은 2013년 122만 2천여 파운드에서 122만 1천여 파운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연구 인력도 2012년 기준 16명이었던데 반해 현재는 11명으로 축소되었다.

영국 내 두 번째이자 세계 5위 정당 연구소로 선정된 파비언 소사이어티(Fabian Society)는 1884년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 싱크탱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동당보다 앞서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사회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노동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파비언 소사이어티 세금위원회는 지난 2000년 노동당 정부가 공공 서비스 증진을 위한 세금 인상안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과세제도

와 관련한 담론이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진보적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제담론 형성을 위한 'Tax for Our Times(2015)'를 출간하기도 하는 등 세제관련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영국 정책연구소의 재정투명성을 감독·평가하는 'Who Funds You'에서 최고등급을 받을 만큼 재정투명성도 높은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보수당 계열의 Centre for Policy Studies와 자유민주당 계열의 'Centre Forum', 녹색당 계열의 'Greenhouse' 등도 정당과 연계되어 있는 정책연구소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 연구소 모두 각 정당으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기 보다는 기부, 출판, 연구활동 등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3) 호주

호주의 초당파적 정책연구소로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은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와 로이 국제정책연구소(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를 꼽을 수 있다. 그라탄 연구소는 2008년에 설립되어 정부와 시장을 아우르는 이슈를 비당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정부와 시장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 검증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정확성, 정부가 호주시민의 삶 증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성을 연구소의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다. 로이 국제정책연구소의 경우 2003년 호주의 유명 기업인 프랭크 로이(Frank Lowy)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호주의외교정책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역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주 수입원은 기부금과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주의 주요정당들 역시 연계 정책연구소들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노동당의 치플리 리서치 센터(Chifley Research Centre), 노동당과 제휴관계인 호주 파비언 소사이어티(Australian Fabian Society), 자유당의 멘지스 리서치 센터(Menzies Research Centre), 국민당의 페이지 리서치 센터(Page Research Centre)등이 운영되고 있다. 호주 파비언 소사이어티를 제외한 정당 연계 연구기관들은 주로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정책연구소

유럽의회의 탄생과 범국가적 정당연합체인 정치그룹(Political Group¹⁰)의 형성으로 인해 초국가적 정당 정책연구기관이 나타나게 되었다.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들과 연계된 정책연구기관은 대부분 유럽의회의 위원회들이 위치하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유럽의회 연구소는 다양하다(〈표 28〉 참조). 유럽의회 내 제1당인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 EPP)은 산하에 European Ideas Network(EIN)와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WMCES)이란 두 개의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EIN은 유럽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의 성격이 보다 강한 반면 WMCES는 국민당의 공식 싱크탱크로서 중도보수성향의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2당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민주진보동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에 기초한 유럽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로,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FEPS)란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자유민주동맹(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E)은 산하 정당인 유럽민주당(European Democratic Party)의 연구기관인 Institute of European Democrats(IED)와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유럽연합의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녹색당그룹은 Green European Foundation(GEF)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무당파적 성향의 연구기관인 European Foundation for Democracy는 유럽 내 극단주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유럽 의회로부터 정당정책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기관들은 유럽의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럽의회는 각 연구소별 지출규모의 최대 8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 연구소별 후원이나 학술활동을 통해서 마련하여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의회에 속한 회원국들의 싱크탱크 가운데 성향이 비슷한 기관 뿐 아니라 미국 등 비회원국 연구기관과도 제휴관계를 맺음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연구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0) 유럽의회 내에는 정치그룹(Political Group)은 일종의 정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당으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표 28〉 유럽의회 정치그룹 별 연구소 현황

| 연구소명 | 정치그룹(정당) | 소재지 |
|--|---|-------|
| Center for European Studies | European People's Party | 벨기에 |
| Centrum Maurits Coppetiers | European Free Alliance | 벨기에 |
| European Christian Political Foundation | European Christian Political Movement | 네덜란드 |
| European Foundation for Freedom | European Alliance for Freedom | 몰타 |
| European Liberal Forum |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Party | 벨기에 |
| Foundation for a Europe of Liberties and Democracy | Movement for a Europe of Liberties & Democracy | 프랑스 |
|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 Party of European Socialists | 벨기에 |
| Green European Foundation | European Green Party | 룩셈부르크 |
| Identités & Traditions Européennes | European Alliance of National Movements | 벨기에 |
| Institute of European Democrats | European Democratic Party | 벨기에 |
| New Direction - Foundation for European Reform | Alliance of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 벨기에 |
| Organisation for European Interstate Cooperation | EU Democrats | 스웨덴 |
| Transform Europe | Party of the European Left | 벨기에 |

출처: 유럽의회 (http://www.europarl.europa.eu/pdf/grants/Grant_amounts_foundations_03_2014.pdf).

IV

정책연구소의 운용과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

2004년 개정된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립이 법적으로 규정되었고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정책연구소의 운용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평가한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 및 다양한 학술지의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 내용에 따르면 정책연구소의 연구 전문성 부족, 정치 상황에 따른 연구의 계획성 부족, 연구의 특정 분야 편중, 초단기적 과제의 과다, 재정 자립성 부족, 국고 보조금 배분방식의 비형평성, 회계 보고의 부족, 민주시민교육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기존의 문제점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정책연구소의 문제점은 연구의 전문성, 조직의 효율성, 기관의 개방성, 재정의 자립성, 운용의 자율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2015년 평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정책연구소의 운용과 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정책연구소의 운용에 대해서는 재정의 자립성, 연구의 전문성, 보조금 배분방식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연구소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뤄졌던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정책연구소 평가가 재정의 자립성, 연구의 전문성, 보조금 배분방식, 평가 방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 사안이 중요하며, 다른 문제점보다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과 연구 전문성의 부족은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에서 끊임없이 지적된 문제점이다. 그동안 이들 문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이 꾸준히 제시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정책연구소가 방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평가할 수 있다.

1. 재정 자립성 방안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표 29>에 나타나 있듯이 재정 자립성에 대한 문제점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 이후 거의 매년 예외 없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 연구소의 재정 자립성 강화 문제가 매년 끊임없이 언급되었던 것은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지난 10여 년 동안 재정의 자립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큰 변화와 개선이 정책연구소에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29〉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 정리

| 분석집 연도 | 내용 |
|--------|--|
| 2008년 | “정당 부설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정책연구소들은 기본적으로 연구소 재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배분되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정당에게 보조해주는 국고 보조금의 배분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을 중앙당이 아니라 연구소에 직접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44). |
| 2009년 | “정책연구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55). |
| 2010년 | “정책연구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질적인 재정부족과 특정 수입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간행물 판매, 교육연구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자체 수입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66). |

| 분석집 연도 | 내용 |
|--------|--|
| 2011년 | <p>“정책연구소의 수입에 있어 정당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5년 이후로 소폭의 증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정당정책연구소의 수입은 국고를 통한 정당지원금에 의존하는 추세는 변화가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85].</p> |
| 2012년 | <p>“정책연구소의 재정은 정당이 정부로부터 경상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총당되고 있고, 이 외의 별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금까지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핵심 방안들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중 정책연구소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100분의 30의 금액을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중략] 둘째, 정책연구소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 논의한 정책연구소 경상보조금 직접 지급의 문제와 달리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이다. 왜냐하면 정책연구소가 자생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여당의 정책연구소에 후원금이 집중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3-34].</p> |
| 2013년 | <p>“그동안 자원확보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방안으로는 보조금의 직접 교부제, 정치방전기금제도, 후원금제도, 출연금제도, 회원모집에 따른 회비 징수제도, 간행물 판매 등이 있다. [중략] 여기서는 보조금 직접교부, 별도 기금설치, 후원금, 출연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중략] 정당보조금을 따로 정책연구소에 교부하는 제도를 시급히 채택하고, 이에 대한 통제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통제와 똑같은 방법의 회계보고제도와 공개제도 등으로 투명성과 합법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둘째, ‘정치발전기금(가칭)제도’의 신설방안이다. [중략] 동 방안의 최대의 장점은 자원확보가 쉽고 자원사용의 정당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략] 셋째, 후원금(회)제도이다. 이것은 정당법 등에서 정책연구소 후원회제도를 도입하여야만 가능하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기금제도 외에 후원회제도 등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략] 넷째, 출연금제도이다. 이것은 현행 정책연구소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된다. [중략] 출연 또는 후원금의 상한을 정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독점적 후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57-59].</p> |
| 2014년 | <p>“정당 부설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정책연구소들은 재원을 소속 정당으로부터 배분받는 국고 보조금으로 대부분 총당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략]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략] 한국에서는 국고 보조금 배분 방식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국고 보조금 배분 방식을 중앙당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중략]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면 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간행물 판매 또는 교육연수 사업을 하는 등 수입원을 개발하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63].</p> |

〈표 29〉의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정책연구소의 수입에 있어 정당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국고 보조금의 지급 방식이었다.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이기도 한 정책연구소의 『2015년도 정기회계보고서』를 살펴보면, 정책연구소의 수입에서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도 수입 총액(전년도 이월분 포함)을 기준으로 정부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30〉에 나타나 있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정당지원금은 약 94억 원으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에 이르렀다. 민주정책연구원과 미래정치센터의 정당지원금은 각각 약 60.7억 원과 약 6.4억 원으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와 86%였다. 그러나 정책연구소의 수입 총액에는 2014년도 이월분(여의도연구원 약 7억 원, 민주정책연구원 약 13.7억 원, 미래정치센터 약 1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경우 수입에서 정부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표 30〉 정책연구소의 수입

(단위: 백만 원)

| 연구소 \ 내역 | 수입 | | | |
|----------|--------|-------|---------|--------|
| | 정당 지원금 | 기타 | 전년도 이월금 | 합계 |
| 여의도연구원 | 9,405 | 0.8 | 705 | 10,110 |
| 민주정책연구원 | 6,074 | 246.8 | 1,368 | 7,689 |
| 미래정치센터 | 637 | 4.5 | 103 | 744 |

2015년 정책연구소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책연구소로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을 통하여 충당되었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의 자립성과 독립성이 부족하였다는 과거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기존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에서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꾸준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정책연구소의 수입 구조와 국고 보조금 배분방식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제19대 총선 이후 정책연구소와 국회에서는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2월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

업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2013년 9월 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에서 정책연구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19대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정책연구소의 재정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당법 개정안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련 법규 개정안의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065)

2013년 3월 14일 강기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065)에 의하면 제27조 제4항 신설하여 각 정당에게 지급될 국고 보조금의 총액 가운데 1/3을 정책연구소에 우선 지급하고, 그 나머지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에 신설된 제27조 제6항은 정책연구소의 회계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할 때에는 정책의 개발, 연구 활동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정책연구소가 정당으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소가 정당에 예속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률안(의안번호 4065)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연구소가 현재 정당을 거쳐 지급받고 있는 국고 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은 정당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고, 정책연구소가 전문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연구소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책연구소의 회계 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보고할 때, 정책의 개발과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5a).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900)

2013년 7월 5일 김광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900)에 의하면 제3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정책연구소가 출판물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고, 외부의 연구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 당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 법률안(의안번호 5900)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연구소가 출판물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정치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고, 정책연구소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연구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외부용역을 수주하는 경우 기업이 용역을 의뢰하는 명목으로 정당에게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현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외부용역 수주에 대하여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용역의 세부내역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 정당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로 설치된 비영리 혹은 공익법인으로 「민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의 사업은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5b).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901)

2013년 7월 5일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동일한 의원들에 의하여 발의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901)에 의하면 제6조 제7호, 제12조 제1항 제6호, 제28조 제1항 제6호 및 제28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후원회 지정권자에 정책연구소를 추가하여, 정당이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하여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

책연구소가 정책의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수준의 재원만을 충당할 수 있게 연구소 후원회의 연간 모금액과 기부금의 한도를 당해 정책연구소가 지급받는 국고 보조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정당을 통하여 지급받게 되는 국고 보조금을 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법률안(의안번호 5901)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4년 4월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5년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개정안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책연구소가 국고 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정책연구소의 재정적인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책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연구소 후원회의 연간 모금액과 기부금의 한도를 해당 정책연구소가 지급받는 국고 보조금의 3분의 1로 제한한 것에 대하여 후원회의 과다 모금 등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정책연구소를 후원회의 지정권자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하고 있었다(안전행정위원회 201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5a).

위에서 소개한 개정법률안(의안번호 4065, 의안번호 5900, 의안번호 5901)들은 2013년 3월과 2013년 7월에 제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지났거나 3년에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했다.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19대 국회에서 강기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광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더 일찍 상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안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고 보조금 배분 방식을 중앙당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출판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고 보조금 이외에 다양

한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할 방법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면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은 상당한 부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 확보를 위하여 본 분석집이 제안하는 개선 방안도 과거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에서 언급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국고 보조금이 중앙당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정당에게 지급될 국고 보조금의 총액 가운데 1/3 이상을 우선 정책연구소에 지급한 이후 남은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정책연구소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보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연구소의 재정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소가 출판물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외부용역을 수주하는 경우도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셋째,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하여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 정책연구소가 정책의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수준의 재원만을 충당할 수 있게 금액을 제한하면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소의 회계보고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2011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에서 언급되었듯이, 정책연구소의 회계보고서는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책연구소의 회계보고서 형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보유한 재산 상태에 대한 보고가 부실한 편이다. 특히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항목을 세분화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정책연구소의 회계 투명성과 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회계보고의 형식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정책연구소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13년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여의도연구소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위에서 소개된 정책연구소의 개선 방안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연구 전문성 확보 방안

정책연구소의 연구 전문성 확보 방안도 재정 자립성 확보 방안과 마찬가지로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표 31>는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책연구소가 정책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표 31>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집 정리

| 분석집 연도 | 내용 |
|--------|--|
| 2008년 | “정책연구소가 수십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국민 혈세를 쓰는 것에 걸맞은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력 충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중략] 정당법을 개정해서 연구소가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전문적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략] 둘째, 충원된 연구 인력이 생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책 경쟁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략] 셋째, 연구 결과물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연구소 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중략] 넷째, 해외 정책연구재단과의 국제교류에 주력해야 한다. [중략] 다섯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46-50) |
| 2009년 | “연구진에 대해서도 채용과정, 전문 분야, 경력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정책연구소가 정책개발에 적합한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략] 정책연구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고한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중략] 연구소의 다양한 활동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55-57) |
| 2010년 |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전문적 정보와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5가지 항목으로 실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중간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연구진에 대해서도 채용과정, 전문 분야, 경력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여 정책연구소가 정책개발에 적합한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략] 정책연구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고한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중략] 연구소의 다양한 활동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62, 66-67) |

| 분석집 연도 | 내용 |
|--------|---|
| 2012년 | “정책연구소의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중략] 전문 연구 인력의 확충과 안정성 보장이 요구된다. [중략] 현재 정책연구소의 전문 연구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중략] 정책연구소가 재정상의 이유로 전문 연구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32-33) |
| 2013년 |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인력에 관한 문제이다. [중략] 부족한 전문가는 자문위원, 객원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정책연구소의 연구수행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략] 정책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에 대한 직업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는 정책연구소의 문제는 아니지만, 채용과 인사에 있어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급여와 고용 보장이 요구되는 것이다.”(54-55) |
| 2014년 | “정책연구소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중략] 특히 투자 대비 정책 연구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연구소의 브레인은 전문 연구진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략] 이를 위해 제3의 평가위원회를 설립해야 할지, 연구소 간 경쟁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연구소에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정책연구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지 등 현재 제안된 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71) |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시키는 것이다. 즉 정책연구소는 정당의 정치를 개선시키고, 정책 위주의 정당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구소는 정당정치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연구소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정책연구소의 법제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정당의 정체성이 과도한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은 정당의 민주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당의 바람직한 모습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로 하여금 그 정책을 집행하게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당은 유권자들이 대립하고 있는 수많은 이익과 견해를 통합시키고 집약하여 우선순위를 갖도록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은 대립되는 가치관의 대표자들로 하여 타협점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정당은 관료 조직과 경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당 소속의 정책연구소가 필요한 것이다(신두철 2007; 이재철·이현우·장지호 2007; 김준석·최효재 2012; 서현진 2012). 그렇다면 한국의 정책연구소는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과 관련된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표 31>에 정리된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다.

요약하면 연구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 인력충원 혹은 채용과정 등 인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연구소가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원들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개선되고,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소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었다.

본 보고서는 기존 평가에서 소개된 개선책들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소가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다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연구소가 보다 전문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이 분석집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책연구소 2015년 『연간활동실적』에 의하면 정책연구소의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은 여의도연구원 18명, 민주정책연구원 17명, 미래정치센터 1명이었다. 세 정책연구소의 박사급 전문 인력을 모두 합해도 40명이 되지 않는다. 2013년 당시 여의도연구소는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방안에 의하면 20명 정도인 연구 인력을 5배 정도 늘려 인적 자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또한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야 하며 충원 과정도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한다.

둘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들은 전문적으로 정책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여야 한다. 정당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화가 가능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등 직장의 안정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비현실적인 인건비는 정책연구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당권이 바뀌어도 정책연구소의 구성원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전문 인력의 연구 결과물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정책연구의 목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이 당직자의 인건비로 변칙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연간활동실적』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소의 평가는 정책연구소가 제

출하는 『연간활동실적』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계량적인 수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간활동실적』으로 정책연구소의 연구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존 정책연구소 평가에서 언급된 다양한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활동실적』에 포함되는 보고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현재 『연간활동실적』에서 ‘인력’ 부분은 학력에 따른 연구원 수와 직원 수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우선 정책연구소의 자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직원을 중앙당 소속과 연구소 소속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 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의 경우도 어떤 인력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연구 인력의 경우 전공과 주요 경력을 『연간활동실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전문 인력이 채용되는 경우에 채용 과정에 대한 정보도 일부를 공개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에 대하여서도 평가 받아야 한다. 이밖에 근무연수를 포함시켜 이직률에 대하여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연구소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를 위하여 『연간활동실적』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다.

3. 보조금 배분의 개선 방안

국고 보조금의 배분방식에 대하여서도 개설될 필요가 있다. 2015년 정책연구소의 보조금이 나 총수입을 비교하는 경우 연구소 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에 나타나 있듯이 총 수입의 경우 여의도연구원 약 101.1억 원(54.5%)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정책연구원은 약 76.9억 원(41.5%), 미래정치센터는 약 7.4억 원(4.0%) 순이었다. 특히 미래정치센터의 총수입은 다른 연구소와 비교하여 크게 낮았다. 정당의 국고 보조금 가운데 하나인 경상보조금을 통하여 대부분 지급받는 연구소의 보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세 연구소가 정당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 총액(약 161.2억 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비교하는 경우 여의도연구원은 58.4%, 민주정책연구원은 37.7%, 미래정치센터는 4.0%순이었다.

〈표 32〉 정책연구소별 경상보조금, 지원금 및 수입

(단위: 백만 원)

| | 구분 | 합계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정의당 |
|----------------|----|--------|---------|---------|---------|
| 정당 수령 경상보조금 | 합계 | 39,441 | 19,570 | 17,747 | 2,123.6 |
| | % | 100% | 49.6% | 45.0% | 5.4% |
| 정당 지원금 | 합계 | 16,116 | 9,404.8 | 6,074 | 637 |
| | % | 100% | 58.4% | 37.7% | 4.0% |
| 연구소 총수입 | 합계 | 18,543 | 10,110 | 7,688.6 | 744 |
| | % | 100% | 54.5% | 41.5% | 4.0% |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15. 11. 13) 및 정책연구소별 2015년도 회계보고서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1항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50%를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7조 제2항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으며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각각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같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각각 2%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제27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배분과 지급액이 남은 경우 잔여분 중 50%는 지급 당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래정치센터는 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회법 제34조에 의하면 교섭단체를 갖춘 정당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연구소와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그렇지 못한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책의 개발과 연구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수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책도 필요하다. 예산이 많다고 하여 해당 정책연구소가 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연구,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원내 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 보조금 배분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배분 목적이 정치적 의사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정당 보호와 육성이라면 원내 교섭단체가 특별히 우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원내 교섭단체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당에게 선거 보조금을 배분하는 경우 공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하는 1위대표제의 경우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고 보조금이 보다 공정하게 배분되기 위해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국고 보조금의 배분방식보다는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국고 보조금이 중앙당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우선 30% 이상이 직접 지급되고, 이후 보조금의 정책연구소별 배분방식은 현재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과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50:50의 비율로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차후에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V

결론

정책연구소가 법인으로 등록한 이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소의 운영과 실적에 대하여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모든 조직은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활동과정과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설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조직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가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은, 정책연구소 본연의 임무인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수립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으로서 책임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밖에,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의 분석 내용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평가보고서인 『2014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서현진 외 2015)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2015년 정책연구소의 연간활동 실적을 기본 현황과 활동실적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정책연구소의 연간활동을 재정, 조직, 활동 등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연구소의 수입 가운데 국고에서 지원되는 정당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정당지원금은 94.1억여 원으로 수입총액의 93.1%를 차지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정당지원금은 60.7억여 원으로 전체수입에서 78.9%에 해당하였다. 이런 경향은 미래정치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래정치센터의 정당지원금은 6.4억여 원으로 수입총액에서 85.6%에 해당된다.

둘째, 정책연구소의 지출 가운데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정책연구소의 전체지출에서 정책개발비가 차지한 비중은 평균 70.8%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지출에서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1.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미래정치센터 61.2%, 민주정책연구원 56.1%의 순이었다. 액수로는 여의도연구원 71.8억여 원, 민주정책연구원 33.1억여 원, 미래정치센터 4.0억여 원이었다. 2014년과 비교하는 경우 지출총액 대비 정책개발비는 모든 정책연구소에서 감소하였다. 이밖에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인건비로 지출한 액수와 비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자들에 대한 보상을 인건비가 아닌 정책개발비로 분류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 구조를 살펴보았다.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에는 학력에 따른 연구원의 수와 직원 수가 공개되어 있다.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총 152명으로 이 가운데 박사급 연구 인력은 36명, 석사급 연구 인력은 42명, 학사급 이하 연구 인력은 74명이었다. 정책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 수는 대학교의 한 개 단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들의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연구소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인력 가운데 박사급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3.7%이었고 기타 인력은 53.7%를 차지하였다. 이는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이 박사급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정책연구개발, 토론회 개최, 정책홍보, 교육연수활동 등이 포함된다.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실적 건수로 비교하는 경우 민주정책연구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정치센터, 여의도연구원 순이었다. 정책연구소의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미래정치센터가 여의도연구원보다 많은 연구실적을 나타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책연구소가 설치된 목적에 가장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 활동은 정책개발이다. 그런데 정책개발이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정책개발 비율은 미래정치센터가 50.6%로 가장 높았고, 여의도연구원 36.6%, 민주정책연구원 31.2%의 순서이었다.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은 2014년과 비교하는 경우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활동건수를 보면 자료발간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실적들은 증가하였다. 특히 정책개발실적은 무려 140건(41% 포인트)이나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 등 개최실적은 56건(32% 포인트) 증가하였고, 교육연수활동은 45건(35%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정책연구소들이 2014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2015년도에도 정책연구소의 많은 연구 정책 과제들이 단기간에 이뤄졌다. 예들 들

여 의도연구원의 경우 총 140개의 과제들 가운데 69.3%인 97개 과제의 추진기간이 1개월 이하였다. 민주정책연구원과 미래정치센터의 경우 이런 단기 과제의 편향성은 더 심각하였다. 민주정책연구원은 79.9%, 미래정치센터는 89.4%가 1개월 미만의 과제였다. 정책연구소의 연구가 단기과제에 집중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분석을 필요로 하는 연구들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2015년 정책연구소는 비교적 활발하게 토론회, 간담회, 포럼, 세미나,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정책 홍보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즉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시민들 혹은 학계와 교류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교육·연수활동은 매우 저조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은 단 한건의 교육·연수활동도 없었으며, 민주정책연구원은 11건에 불과하였다. 교육·연수활동을 2014년도와 비교하는 경우 증가하였지만, 2012년 이전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감소하였다.

정책연구소들의 연간활동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그때마다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책연구소의 연구의 전문성 부족, 정치 상황에 따른 연구의 계획성 부족, 연구의 특정 분야 편중, 초단기적 과제의 과다, 재정 자립성, 국고 보조금 배분방식, 민주시민교육의 기능 등 많은 문제점이 논의되었다.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의 문제점은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평가에서 계속 언급되는 개선사항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문제들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당 정책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처방이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2015년 정책연구소 평가는 그동안 정책연구소 평가에서 언급된 다양한 문제점 가운데에서도 재정의 자립성, 연구의 전문성, 보조금 배분방식, 평가 방식에 주목하였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기존 평가를 살펴보면 연구소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연구소가 민주시민교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당 별로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정강, 정책, 이념도 다르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사실도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는 제외하였다.

2015년 평가가 재정의 자립성, 연구의 전문성, 보조금 배분방식 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

사안이 다른 사안보다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사안들은 다른 사안보다도 짧은 시일 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이다.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과 전문성 부족에 대하여서는 기존 평가에서 끊임없이 지적된 문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개선 방안이 꾸준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소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성, 연구 전문성 문제와 관련해 정책연구소 주최로 세미나가 개최되고,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정당 정책연구소의 2015년도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연구소가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선 정책연구소가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지닐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고 보조금은 중앙당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책연구소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보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의 재정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판물의 유상 판매, 후원회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정책연구소의 회계보고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책연구소의 회계 투명성과 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회계보고의 형식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연구소가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충원을 제안했다. 충원 과정은 연구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원들이 정책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연구원들은 전문적으로 정책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도 개별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 『연간활동실적』의 내용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연구소의 평가는 정책연구소가 제출하는 『연간활동실적』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평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를 위하여 『연간활동실적』의 내용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의 배분 방식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5년 『연간활동실적』에 보고된 정책연구소의 경상보조금, 지원금 및 수입을 분석하면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래정치센터는 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정책연구소 평가에서는 국고 보조금이 중앙당이 아닌 정책연구소에 우선 30% 이상이 직접 지급되고, 이후 보조금의 정책연구소별 배분방식은 현재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과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50:50의 비율로 병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정책연구소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와 모형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운영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의제 구체화 단계, 정책형성 단계, 정책집행 단계 등 정책 순환의 여러 단계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지표에 의해 측정되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정책연구소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정책연구소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 및 이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등이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에서 언급된 개선 방안이 정책연구소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이므로 운영의 실태를 분석하여 납세자에게 정책연구소의 현주소를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뤄지는 정책연구소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로 끝날 수 있다.

평가에서 제시되는 개선방안이 쉽게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거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처방이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록 쉽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더라도 정책연구소의 평가를 통해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해법을 강구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자료

- 김영태. 2005. “독일의 정당 친화적 정치 재단과 정치발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 『정당 정책 연구소의 비전과 발전 전략』.
- 김용호. 2001.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나남.
- 김원표. 2016.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분석 및 발전방안’ 토론편”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분석 및 발전방안』. 국회소회의실. 05.11.
- 김준석·최효재. 2012.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를 활용한 정당정책연구소의 평가: 2011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0권 3호.
- 김형준. 2008.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편』 발표 논문.
- 김형준, 김도중. 2011.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현대정치연구』 4권 1호.
-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2016. “2015년도 정기보고(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라미경. 2008. “정책 연구소의 정책 기능 활성화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당 정책 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편』 발표 논문.
-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2016. “2015년도 정기보고(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서현진. 2012. “한국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기능에 대한 연구: 2006~2010년 정치교육 활동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권 1호.
- 서현진·임유진. 2016. “정당 정책연구소의 재정 자립 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정치연구』 6권 1호.
- 선거연수원 해외연구원 보고서. 2015. 『정책선거 추진실태 및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 신두철. 2007.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와 독일 정당재단의 역할과 특징: 2005년 한국정당정책 연구소의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5권 1호.
- 신두철. 2009. “독일 정치재단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9권 3호.

- 신두철. 2011. “지구화 시대의 정당 정책연구소 모델과 전략: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정치재단과의 비교 관점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 21권 3호.
- 심지연. 2009. 『한국정당정치사』 서울: 백산서당.
- 이성우. 2013. “사회과학 관련 싱크탱크의 역할: 무엇이 싱크탱크를 강하게 하는가?” 『JPI 정책포럼』 112권.
- 이재철 · 이현우 · 장지호. 2007. “McGann 지표를 활용한 국내 주요 정당 정책연구소 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권 1호.
- 정광호. 2005. “미국 정책연구소(Think Tank)의 역할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 『정당 정책 연구소의 비전과 발전 전략』.
-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2016. “2015년도 정기보고(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조진만. 2014. “정당 정책연구소의 현실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의정논총』 9권 1호.
- 크라프트, 로타. 2007. “정당기관: 민주시민으로의 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독일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주최 『한국과 독일 정당연구소와 정당민주주의』 2007 정당 민주주의포럼 발표논문.
- 한의석. 2015. “정당 정책연구소 발전방안 모색: 외국의 사례와 한국적 함의” 『미래정치연구』 5권 1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 2010. 『주요 5개국의 싱크탱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 안전행정위원회. 20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안 등 9건.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5a.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노근의원 대표발의안 등 34건.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5b.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박기춘의원 대표발의안 등 27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 『2006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2007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200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2009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2010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2011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2012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2013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2014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황윤원. 2008. “우리나라 정당 싱크탱크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2. 해외자료

McGann, James G. 2009. “2008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TTCSP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s*, Paper 10.
McGann, James G. 2014. “2013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TTCSP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s*, Paper 10.
McGann, James G. 2015. “2014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TTCSP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s*, Paper 10.
McGann, James G. 2016. “2015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TTCSP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s*, Paper 10.

3. 인터넷 자료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ydi.or.kr/ydi/foundation.html>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idp.or.kr/>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홈페이지. <http://www.justicei.or.kr>
DEMOS. <http://www.demos.co.uk/> (검색일: 2016. 04 19.)
European Ideas Network. <http://www.ein.eu/> (검색일: 2016. 04 19.)
European Parliament. <http://www.europarl.europa.eu/> (검색일: 2016. 04. 18.)
Foundation for European Progressive Studies. <http://www.feps-europe.eu/> (검색일: 2016. 04. 21.)

Institute of European Democrats. <http://www.iedonline.eu/> (검색일: 2016. 04. 21.)

The European Foundation for Democracy. <http://europeandemocracy.eu/> (검색일: 2016. 04. 21.)

The Green European Foundation. <http://gef.eu/> (검색일: 2016. 04. 21.)

Wilfried Marten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http://www.martenscentre.eu/> (검색일: 2016. 04. 21.)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분석 및 발전방안

김원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총선에서 3당 체제가 성립된 후 처음으로 국민정책연구원을 포함한 원내 4당의 정당정책연구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새로 참여한 국민정책연구원을 환영하며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정당정책연구소가 협력하여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여망으로 확인된 대화와 타협의 생산적인 정치를 구현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특히 19개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은 3차례에 걸쳐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대 국회에서는 19개 국회에서 수립된 정당정책연구소 간의 교류협력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중앙선관위가 주체가 되어 국고지원을 받는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해 연례적으로 활동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평가는 평가방법 측면에서 다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평가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통계 형식의 양식에 의거, 평가 대상인 정당정책연구소가 작성, 제출한 연간활동 실적 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둘째, 평가 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중앙선관위이나 평가의 독립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질적 평가는 주로 정치학자인 전문가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며, 매년 평가는 새로운 전문가가 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5월 연구자가 발제하고, 각 정당정책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평가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 세미나는 중앙선관위와 정당정책연구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는 유일한 공개 이벤트이다.

선관위가 취합된 연간활동실적을 통해 평가자들이 들여다본 정당정책연구소는 요약하면 변화 발전은 더디고 그래서 혁신의 위한 노력이 크게 요구되는 곳이다. 여의도연구원으로서 외부

학자의 전문성 있는 진단과 처방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혁신하는 등 가일층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다만 매년 다른 평가자가 담당하지만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이 반복되는 평가방식도 변화발전이 요구된다고 본다. 평가를 담당할 전문가 자신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방식에 대해 매년 유사한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평가의 가장 큰 한계는 실사 절차 없이 연구실물조차도 보지 못한 채 숫자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 통계자료에 입각한 평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간접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로는 실제로 정당정책연구소가 무엇을 하는지, 또 현장에서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기 어렵다. 어떤 문제의식과 내재적 요구에 의하여 정당정책연구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심지어 선관위 연간활동실적은 연구원 개인이 작성한 활동실적을 취합한데 지나지 않음으로 통합적인 연구소 단위의 활동상이라는 큰 그림은 보여주지 않는다.

발제자가 보고한 정당정책연구소의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무기획실이 연구기획실로 대체되었고, 정의당의 진보정의연구소는 시민교육기관을 표방하는 미래정치센터로 개편되었다. 또 여의도연구원은 연구기획실, 정책연구실, 청년정책연구센터, 통일연구센터, 여의도아카데미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정당정책연구소에서는 기능상 정책과 정무·전략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비중으로 역량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연구소마다 다른 입장이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임원단 변경 이후 정무기획실이 연구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에 집중하기 위하여 정무·전략 담당 연구위원들을 대폭 감축하고 동기능을 거의 폐지에 가깝게 축소하는 결단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기획실에는 정책연구실의 연구원들이 새로 보임하여 그간의 연구원 개인 중심의 개별화된 연구를 넘어 연구원 차원의 장기적·거시적·통합적 연구를 위한 연구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MD제도에 기반한 연구원의 성과평가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시민정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의도아카데미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다. 정당법상 정당정책연구소는 정책의 연구개발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미 정당정책연구소에 시민정치교육의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을 발

의해 놓고 있다. 여의도아카데미는 독일과 같은 정당정책연구소 중심의 시민정치교육을 향한 여의도연구원의 염원과 의지를 상징하는 미래의 시민정치교육기관이다. 발제자는 2015년 정당정책연구소가 별다른 교육연수활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특히 여의도연구원이 불과 2건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음을 지적했다. 발제자가 지적한 2건은 확인해보니 여의도연구원이 수행한 실적이 아니라 외부 기관이 개최한 교육연수 참여 실적 1건, 기타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할 활동이 잘못 교육연수로 분류된 실적 1건으로 모두 오해의 산물이었으며 정확한 실적은 0이었다.

발제자는 정책개발비 총액의 증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국적인 선거 시기에 정책개발활동이 활발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보다 2015년 정책개발비 총액이 감소했음을 들었다. 또한 매년 평가자들은 외부 연구용역이 활발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연구원의 내부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동족 교배식 연구활동의 한계를 언급했다.

2015년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비전2016위원회였다. 2015년 8월 24일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에 부합한 비전과 정책의 연구개발을 기치로 출범한 비전2016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규명하고 비전을 개발하는 기획위원회와 분야별로 비전과 핵심정책을 개발하는 12개분과위원회(경제, 산업, 일자리/복지, 국민안전, 교육, 여성/가족/청소년, 과학기술 혁신, 문화, 정치개혁/정부혁신, 지방자치/지역발전, 통일/안보/외교, 청년)로 구성되었다. 이 비전위원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105명이 참가했고, 125차례의 세미나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분과별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면 대략 2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 비전위원회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여의도연구원 차원에서 연구진과 분과별로 비전과 정책과제를 완료하고 이후 비전위 분과위원들과 함께 국회 상임위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분과별 조정위원회를 열어 마지막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2016 비전과 정책 총13권을 발간함으로써 활동을 종료했다.

발제자는 정당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을 활동형태별로 분류하여 비교하면서 여의도연구원의 전체 활동에서 정책홍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4%로 다른 연구소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정책홍보에 많은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체 정당정책연구소들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정

책연구소의 주된 활동인 정책연구 및 개발에 비해 정책홍보활동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정책홍보는 행정국 소관의 행정지원업무로 분류되고, 담당직원이 1명으로 홈페이지나 SNS 매체를 관리하면서 연구원의 활동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선관위 보고자료에 수록된 여의도연구원 정책홍보는 실제로 이 담당직원이 세미나나 연구결과물들을 사후적으로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정당정책연구소는 고객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인 경우가 많고 당의 정책기구와 달리 선행·심화·전문적인 연구가 주된 업무로 되어 있어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홍보에는 열의를 가지기 어렵고, 실제 연구원의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연구자도 지적한바와 같이 그동안 여의도연구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는 미국의 정당 친화적 공공정책연구소와 독일의 정당재단을 발전모델로 삼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책정당과 교육정당 간 즉 미국모델과 독일모델간의 상충과 모순에 대해 깊이 논의된 바가 별로 없다. 독일의 정당재단은 시민들의 민주적 품성을 배양하는 시민정치교육에, 미국의 정책연구소는 특정 이념과 정당에 친화적인 정책의 연구개발, 주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정당재단은 다원주의적인 원리에 기반을 두어 시민에 대한 정치교육을 행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에 투신하고 있고 그 반대급부로 당파적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정당 간에 체결된 정치교육의 근본원칙이라고 불리는 보이텔스 바흐 합의는 정당재단의 정치교육이 독일의 헌법적 질서인 자유민주주의에 확고하게 터를 잡으면서 다양성 속의 통합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정당정책연구소가 당원교육을 넘어 시민정치교육의 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 정당정책연구소도 한국적 보이텔스 바흐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연구자는 정당정책연구소의 문제점을 연구의 전문성, 조직의 효율성, 기관의 개방성, 재정의 자립성, 운영의 자율성 5가지로 정리하고, 재정의 자립성, 연구의 전문성 개선,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한 보조금 3가지 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자는 재정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당정책연구소에 보조하는 국고 보조금은 정당을 경유하지 말고 직접 정당정책연구소에 교부하며, 국고 보조금에의 전적인 의존에 탈피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출판

물 판매, 외부의 연구용역 수주, 정당정책연구소 후원회 허용을 주장하되 악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특히 재정의 자립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몇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당정책연구소가 재원의 확충과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개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첫째는 정치 불신의 현실에서 국민의 반감을 살 정치자금 문제를 다루기를 기피하는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정당정책연구소간의 이견과 입장 차이를 해소하여 단합과 공동의 노력을 위한 기초를 세워야 한다. 그동안 야당의 정책연구소는 후원회와 같은 자유경쟁적 재원 확충방식은 여당에 재원이 집중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이었다. 여야 정당정책연구소간에 비교적 이견 없이 수용된 재원확충방식으로는 국고 귀속 공직선거 후보자 기탁금과 정치관계법 위반 과태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신설하여 그 일부를 정당정책연구소를 지원하는 정치발전기금 신설(안)이 있었다. 이 안은 선관위가 법률안 형태로 이미 제안했고 재원규모도 상당하여 실질적인 재원대책이 될 수 있으나 아직 발의되지는 못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로 야권의 입지가 강화되었으므로 그동안 자유경쟁적 재원 확충 방식에 대해 야당의 정당정책연구소가 견지했던 소극적 입장은 변화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아울러 추진 방식도 여야당을 넘어 정당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는 더욱 효율적이라고 본다.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분석 및 발전방안¹¹⁾

이진복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당 정책연구소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고서는 재정 자립성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책연구소가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은 중앙당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책연구소의 재정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판물의 유상 판매, 후원회 운영 등 필요하다. 셋째, 정책연구소의 회계 투명성과 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회계보고의 형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 자립성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 보조금을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숙원 개혁 과제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 연구원장의 임기 보장, 이사회 구성 등에서 정책연구소의 자율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판물의 유상 판매, 후원회 운영 등 자율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필요하다. 단 후원금 모금 등이 여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재벌 등 특정이익집단의 로비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칭) 정책연구기금’으로 선관위에서 공동 관리하고 일부는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비용으로, 그리고 각 정책연구소에는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책연구소별 보조금 지급 방식에 준하여 배분하는 방식 필요하다. 셋째, 회계보고 형식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의 구체화 및 인건비 항목의 세분화 등 필요하다고 본다.

보고서는 연구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문 인

11) 보고서의 편집을 위하여 일부 문장과 내용을 수정함.

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원의 연구 환경 조성, 비현실적인 임금 구조 개선 등 직장의 안정성 개선,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연간활동실적』의 내용 개선, 연구원과 직원을 중앙당 소속과 연구소 소속으로 구분 표기 필요하다.

연구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인력의 충원과 관련하여, 박사급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시, 전체 연구소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원의 연구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연구원의 임금 구조 및 평가 제도를 선관위에 보고, 웹사이트 등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간활동실적』의 내용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중앙당 소속 정책연구소 직원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당 당직자 100명 한도를 정치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하면 정책연구소 인력을 100% 연구소 소속으로 관련 법 개정 필요하다고 본다. 단 연구원과 정책위 전문위원의 경우, 모두 연구직 계열, 순환보직이 가능함으로 전문위원을 연구원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는 국가 보조금 배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을 기존 방식과 비례대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50 : 50의 비율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후에는 100%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득표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보조금 배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비례대표 득표수 도입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국회의원 수에 의하여 입법권이 결정된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유권자들 또한 당선가능성을 감안, 전략적 투표를 하는 실정이다. 국회교섭단체 요건을 독일의 5%를 벤치마킹, 15석으로 완화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당의 이합집산 등 정당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일회적 신생 정당의 경우, 보조금의 규모가 아니라 정책연구소 자체의 부실이 문제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일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연방의회 선거에서 ‘4번 이상’ 5% 이상의 의석을 얻은 경우로 한정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책연구소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서는 실행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우선 정

책연구소의 대국민 위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연구소가 도대체 나에게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이고, 존재감 제로의 상황에서 정책연구소 개선방안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적대적 공생의 격돌 정치 속에서 극심한 정치 불신,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연구소 개선방안이 법규 개정을 전제하는 상황에서 정당 및 국회의원의 개선 필요성 공감에 중요하다. 언론이 정책이 아니라 정무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책연구소에 대한 관심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연구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자체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책연구소 전체의 대국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외부의 촉진제 필요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국민은 시끄러운 소수, 활동가의 문제증폭 정치가 아니라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문제해결 정치 열망한다. 또한 각 정책연구소 자체 개선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후원하는 정책연구소 공동 프로젝트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저출산·고령화 해결, 국가경쟁력 제고 등 대한민국 존망의 이슈, 각 정당의 공통 법안이나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범 사례 발굴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및 토론회가 필요할 것이다. 후원금 모금 등으로 모아진 재원으로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가칭)정책연구기금’을 조성, 정책연구소 공동 프로젝트 지원 및 관련 전문 인력 지원 필요할 것이다. 또는 추후 보조금 지급 방식 개정시, 정책연구소 공동 프로젝트 및 전문 인력 채용 지원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 관심을 갖고 국민이 정책연구소의 활동상에 공감했을 때, 정당 및 국회의원의 추진력을 얻으면서 정책연구소의 개선방안이 실행 가능할 것이다.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분석 및 발전방안¹²⁾

신현호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정당 정책연구소의 위상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사실상 설치 강제 : 「정당법」 제38조 및 「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에 의거해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는 정책개발 및 연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대학 교수진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존재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다음 그림 참조)만 해도 25개 연구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외에도 각 광역시·도에 설치된 시·도 개발 연구원 등 거의 모든 정책 분야별 지역별 공공 싱크탱크가 존재한다.

| | | | |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토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통일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 | |

12) 보고서의 편집을 위하여 일부 문장과 내용을 수정함.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고 정당 정책연구소의 위상설정과 실적평가가 필요하다. 즉 대학 또는 국책연구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박사 연구 인력의 비중, 장기과제의 비중 등의 기준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고 보조금을 정당을 경유하지 않고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연구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연구원의 독립성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 각 당에서 편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 개정만으로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을 본다.

정책연구소의 수익사업 및 후원회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가 연구결과물 판매, 교육비 징수, 외부연구용역 수주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원회 지정권자에 정책연구소를 추가하여,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당 정책연구소의 예산에서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대기업, 특정 계층 또는 대규모 이해관계자 집단 등의 무분별한 정치후원 또는 입법로비가 될 우려도 상당하므로, 규모의 한도,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특정 정당 편중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박사급 연구원 등 고급 연구 인력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정당 정책연구소 결과물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이 박사급 연구 인력이 적어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히 닿아 있고, 유권자의 반응도가 높고, 입법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책과 정치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업무라고 하더라도 정책개발 수요조사와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의 정책개발업무로 인정하고, 이러한 조사전문가도 정책연구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물론 단순한 정치인들의 지지도 조사와 같은 것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인력 처우 개선, 고용안정성 확보, 당직자 인건비 변칙처리 등의 의견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공감한다. 다만 이것은 법제도적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 정당의 문화와 토양에 관한 것이므로, 내부의 노력과 함께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조금 배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교섭단체를 위주로 분배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원내 교섭단체 여부는 국회의 운영에 관한 기준선은 될 수 있지만, 각종 보조금이나 인력의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비교섭단체 또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정당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지원하는 것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발표자가 제안한 최근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득표수 기준으로 보조금을 배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정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초소형 정당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득표수 기준 이상을 지원하는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분석 및 발전방안¹³⁾

박철한 미래정치센터 연구실장

20대 총선은 정당들, 여론 전문가, 방송언론 등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으며 우리사회와 정치권에 일대 충격을 주었다. 사실상 이번 선거의 승리자는 유권자들이었다. 유권자들은 생활세계로부터 선거국면 투표소에서 ‘종이 폭풍’을 통해 정치권을 단호히 심판하고 생활세계로 되돌아갔다.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총선의 유권자 표심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단순하지만, 준엄한 목소리였다.

이번 총선은 정당의 약화와 위기를 보여주는 선거였다. 20대 총선은 정당과 사람, 정책을 중심으로 우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가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경연장처럼 보였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정치 혁신, 기득권의 퇴보를 요구했다. 앞으로 이러한 국민적 요구는 정례적인 선거 과정 속에 더욱 더 큰 영향력과 목소리를 행사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가 보여준 정당의 약화는 각 정당 부설 정책연구소의 지체, 혹은 정체를 반증하는 것이다.

‘링반데룽(ringwanderung)’이라는 말이 있다. 등산 용어로 야간이나 악천후로 인해 목표가 불명료한 경우에 광대한 지형을 곧바로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을 그리며 같은 곳을 돌고 있는 현상을 뜻하는 독일어이다. 즉 방향을 잃고 같은 지점을 맴도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시기 뿐만 아니라,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진행되었던 정책연구소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느낀 점은 연구소 발전 방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반복되지만, 제도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13) 보고서의 편집을 위하여 일부 문장과 내용을 수정함.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토론문은 발표문에 대해 검토와 비판, 정당정책연구소의 발전 방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

발표문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고 보조금 배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이다. 정당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립과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발표자의 지적처럼 정당국고 보조금의 각 정당의 중앙당을 통한 우회 지급이 아니라, 국고 보조금 30%를 정당연구소에 대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국고 보조금이라는 일원화된 재정보화가 아니라 정당정책연구소 독자적인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확충과 자립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국고 보조금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제도화 되었고 여전히 국고 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가 우선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사표에 따른 의석 배분의 불이익을 일차적으로 받고, 다시 의회에서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 보조금 배분으로 이차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인 2%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너무 작아 소수정당은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실제로 연구소의 현실을 보면, 미래정치센터는 2015년 6억 3천 7백만 원의 정당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여의도연구원도 미래정치센터에 비해 14.76배 많은 94억 5백만 원, 민주정책연구원은 미래정치센터에 비해 9.53배 많은 60억 7천 4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양성과 복잡성의 현대사회 특징이 의회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세력이 의회민주주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정당이 최소한의 정치 생존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당국고 보조금의 일정부분 25% 범위에서 원내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균등한 국고 보조금을 배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소 전문성과 대중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발표자는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 인력충원 혹은 채용과정 등 인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전히 정당정책연구소가 한국정치에서 비전과 전문성, 대사회 호소력이 빈곤하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다만, 발표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으로 각 정당정책연구소의 전문성을 평가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

다. 자칫 폐쇄적 학력주의, 전문가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이 연구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연구소 전문성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중장기적 입법 책무를 맡은 정당정책연구소는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습득한 ‘유기적 지식인’의 충원과 집합적 지식화-제도화를 통해 그 역할과 임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정치의 전반적 정책 생태계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몇몇 선거시기(2004년 민주노동당의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 등 정책,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한 정책경쟁)을 제외하면, 정책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유인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는 정당의 지속적 약화, 정치인의 부정부패비리, 방송언론의 악의적인 정치 불신과 무관심 유포 등이 원인으로 자리한다. 정책경쟁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선거시기, 혹은 비선거시기 몇 번 하는 형식적인 정책토론으로 정책경쟁의 대중화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의 정책경쟁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경쟁의 장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정당의 리더그룹들이 주말드라마처럼 방송에 나와 현안에 대해 각 정당의 정책과 대안을 토론하는 ‘주말 정당정책토론회(가칭)’의 정례화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당정책연구소의 경쟁과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치박람회 개최, 분기별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이 평가하는 정책페스티벌, 월별 주요 현안에 대해 각 정당정책프로그램의 공개 등 대중친화적인 방법이 입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소 후원회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의당이 헌법소원을 냈던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다만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현행법은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2017년 12월에 있을 대선에서는 정당후원회가에 합법화될 전망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연구소 후원회 허용은 각 정당의 정치적 결단과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수입 다변화와 확대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연구소 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의안번호 5901). 문제는 발의안의 내용에서 “연구소 후원회의 연간 모금액과 기부금의 한도를 당해 정책연구소가 지급받는 국고 보조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각 정

당정책연구소에 지급된 정당국고 보조금으로 환산하면, 여의도연구원은 31억 3천 5백만 원, 민주정책연구원은 2십억 2천 4백 6십만 원, 미래정치센터는 2억 천 2백 3십만 원이 모금 한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연구소 후원회 모금도 현 선거제도의 의석 배분 및 정당국고 보조금의 배분에서와 같이 교섭단체의 모금 상한선과 비교섭단체의 모금 상한선이 상이하게 되어 역시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의 연구소는 이중, 삼중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의 해법은 간단하다. 정당국고 보조금 배분액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후원회 모금 상한선을 설정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소수정당에게 불합리한 제도인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 교섭단체 제도 등은 다원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발표자는 미래정치센터에 대해 발표문에서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했다. “2015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경험한 정당정책연구소는 정의당의 미래정치센터였다.” “미래정치센터의 경우 정책개발 실적이 전체 활동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6%로 정책연구소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래정치센터는 특정한 방식에 치우치지 않고, 열악한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미래정치센터의 통신교육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당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가 현실과 일맥상통 한다면, 당연히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정치적 성과로 이어져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의당이 목표를 성취하는데 스스로 부족했고 정치조건이 어려웠다. 여전히 한국의 정당체제는 정단간 정책경쟁이 유권자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정당과 정당정책연구소가 협치와 선의의 경쟁 속에 정책 대중화와 국민을 위한 대안 만들기의 공간을 열어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분석 및 발전방안

조영호 서강대학교 교수

지병근 교수는 정책연구소들이 유권자들의 정책적 요구와 정치적 공급의 거래되는 민주적 시장에서 핵심적 고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 정당 정책연구소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현행 정당 정책 연구소들은 “연구 전문성 부족, 정치상황에 따른 연구의 계획성 부족, 연구의 특정분야 편중, 초단기적 과제의 과다, 재정 자립성, 국고 보조금 배분방식, 회계 보고, 민주시민 교육의 기능 등” 다양한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병근 교수는 해외 정당 연구소 및 독립적 연구소들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의 간섭 없는 정당연구소로의 국고 보조금 직접 지급; 연구 개발 인력 충원 및 환경 개선; 보조금 배분의 형평성 강화. 이 세 가지 방안은 우리나라 정당정책 연구소들이 맹아적 수준을 넘어 보다 안정적 발전을 토대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적이다. 이 토론문은 우리나라 정치가 보다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수요와 공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정당정책연구소의 정책 수요 대응 및 공급의 어려움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선거 정치가 보다 정책 중심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구조적 제약요인들이 있다. 먼저 단임제 대통령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정책을 통한 유권자 동원 전략을 채택하기 보다는 정책 이외의 요소들을 통한 동원 전략을 채택하기 어렵게 만든다. 단임제 대통령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정당과 정치인들은 사활을 걸고, 합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대통령에 다음 선거를 통해 심판될 필요가 없다는 점은 후보를 배출한 정당이 정책 공급의 유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가능성 없는 공약들을 남발하게 만든다. 실효성이 없거나 상대

후보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적 및 전술적 공약이 난무하게 됨으로써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을 믿을 수 없는 난관에 처하게 된다. 이는 공약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발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고, 공약의 신뢰성(credibility)을 저하시킨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정당들이 정책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유권자들을 조준하여 이들의 지지를 공고화 시키는 게 방해가 된다. 정당은 사회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해 나가고, 이를 정책을 통해 구체화하여,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균열을 발전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공식적 권한과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에 정치인과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보다는 대통령에 영합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만든다. 지난 수차례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비슷한 정책을 내걸고, 대통령을 핵심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사례를 숏하게 보아 왔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역 주의적 정당체제는 강력한 대통령제와 결합하여 영남과 호남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고정표로 간주하게 만듦으로써 정책 수요에 공급한 유인을 선거에서 상쇄시킨다. 또한 대통령제의 Winner-Take-All 및 강대강 대결 경향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정책적 대응을 통한 개선이 아닌 정권창출의 여부에 집중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을 집단적으로 정책으로부터 망각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선거정치에서 경북과 호남이라는 맹주 지역은 정책과 상관없이 정권창출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정책 위주의 정치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우리나라의 짧은 공식 선거운동의 기간과 과도한 규제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미지, 정당이 공천,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혹은 비판적 평가 등에 호소하게 만든다. 결국, 후보자들은 강력한 후보자들의 경우 공식 토론회에 참석할 유인이 별로 없고, 유권자들은 합동연설회와 같이 후보자들을 비교할 기회가 없기에 정책 개발과 차별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와 같은 구조적 제약 요인들은 정당연구소들이 유권자들의 기호와 가치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인들이 이를 공급하는 정치적 순환의 고리에서 주변적 역할만 하게 만든다. 나아가 정당연구소는 정당 지도부에 종속되어 연구소 자원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략적으로 악용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정당 정책연구소 개선 방안에 대한 추가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정책연구소들이 제 기능을 할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토론자는 지병근 교수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이 합리적이고 정당 정책연구소들이 맹아적 의존적 수준을 넘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데 동의한다. 정당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정당을 거치지 않고 전달 된다는 것은 파벌적 지배가 순환하는 정당지도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정당 강령에 입각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 인력의 강화 및 연구 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정당의 정책 생산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넘어 능력, 지성, 및 야심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파벌이 아닌 정당의 강령을 중심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보조금 배분의 형평성 강화는 기성 정당의 독과점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 또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보다 공익적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정치의 다원화를 촉진함으로써 40%가 넘는 기권자들을 정치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

토론자는 지병근 교수의 방안들에 추가하여 정책선거 활성화 및 정당연구소 강화와 연관된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선거운동의 기간을 보다 정책선거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개선 될 필요가 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선거운동 기간과 공식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후보자 간 토론의 기회는 적고, 공식 선거운동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은 공식선거운동에 임박하여 정당 후보자를 정하고, 일반 후보자들은 예비선거운동 기간에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정책이 만들어 지고, 공론화 되고, 후보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질 여유가 별로 없다. 따라서 공식 선거운동을 보다 길게 허용하고, 유력 후보자 간 토론을 의무화함으로써 후보자들이 단순히 이미지, 소속 정당, 대통령과의 친분 등만으로 승부를 거는 운동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아울러, 조심스럽지만, 지역별 유권자 숙의 기구를 구성하여,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과거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운동이 전문가 위주 혹은 선관위의 관주도로 전개되어 실제성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는데, 유권자들의 숙의 활동 지원은 현행 선거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유권자 투표율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등을 돌린다는 점은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 준다. 결국 60% 미만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당들은 기존의 전략을 활용하여 선거에 임하고 있다. 보다 유권자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입된다면, 이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구 민주주의 발달에서 유권자 확

대는 정책 확대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정당 간 정책 개발 경쟁을 간접적으로나마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연구에서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토론자의 관점으로는 징벌적 유인보다는 긍정적 유인이 좋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당연구소들이 맹아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제적 교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맹아적 수준의 조직 및 제도들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적인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10년 간 정당정책 연구소들이 정착의 기간을 가졌다면, 앞으로 벤치마킹의 모델을 검토하고, 자체의 발전상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분석 및 발전방안

이재명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먼저 소개해 드릴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4·13총선 이후 ‘20대 국회, 이것만은 달라져야 한다’는 주제로 한국정당학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가장 많은 19명은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를 꼽았습니다. 이어 ‘여야의 타협주의 문화 정착(11명)’,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7명)’,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6명)’ 순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발표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가 세 번째로 꼽힌 것입니다.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가 1위에 오른 것은 현 정부에서 나타난 독특한 상황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여야의 타협주의 문화 정착’을 두 번째로 꼽은 이유도 국회선진화법의 첫 실험장이 된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 한국 정치의 독특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동아일보는 같은 설문조사에서 ‘그렇다면 각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바로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시의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응답이 나옵니다. 정당학회 회원 50명 가운데 가장 많은 23명이 ‘정당의 정책연구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그 이유도 물었습니다. △ 단기적 과제가 아닌 중장기적 실행정책 의제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실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각 정당 정책연구소 관계자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듣기 불편한 ‘돌직구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정당학회 회원은 ‘연구소가 많은 자금을 받고 있지만 하는 일이 없어서’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병근 교수님의 발표 자료에는 현재 정당 정책연구소의 문제가 잘 정리돼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재정수입의 80% 안팎(전년도 이월금을 감안하면 90%안팎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이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당지원금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시민단체가, 학계가 정당 정책연구소의 성과물을 감독하고 더 양질의 성과물을 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양질의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 교수님의 표현처럼 3대 정당 정책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을 모두 합해도 36명으로, 일반대학교의 한 개 단과대학 재직 교수 수보다 적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양질의 정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연구 인력 부족이 단기 성과물에 집착하는 결과를 낳고, 정책·연구 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토론회 개최나 간행물 발간 등 부수적 활동에 더 치중하는 현상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렇다고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정당 정책연구소가 당장 고급 인력을 끌어오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과급을 많이 준다 해도 당파성이 짙은 정당 정책연구소를 선호할 고급 인력도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당수 박사급 연구 인력은 잠시 경력을 쌓은 뒤 학교로 옮기는 ‘징검다리 직장’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당 정책연구소가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면 학회나 시민단체 등과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대선에서도 결국 양극화 해소와 재정-복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정책연구소는 지금부터 재정학회나 복지 관련 학회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선거에 앞서 그 결과를 내놓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당 정책연구소에서는 전문가그룹을 초청해 여러 간담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그룹의 산발적인 조언만을 갖고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그룹과의 공동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학회가 특정 정당과 함께 정책을 개발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교수들로 TF 팀을 꾸려 정당 정책연구소와 공동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회나 언론사에 정책선거 연구 및 보도를 지원하는 것처럼 선관위가 정당 정책연구소와 연구팀의 ‘공동 연구’를 공모해 국고 보조금의 일정액을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정당 정책연구소의 수입 대부분이 국고 보조금인 만큼 선관위 산하에 ‘정책연구소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연구 및 개발 성과를 평가한 뒤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중에 정책 마인드가 있는 인사들이 많이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박세일, 윤건영, 박재완, 이주호 의원 등이 입성하면서 보수 정당에도 처음 정책이라는 게 생겼다는 말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대목은 정당 정책연구소의 홍보활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정책은 만드는 것 이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홍보 활동이 오로지 정책연구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당의 정책위원회나 정당의 홍보본부 등이 맡아야 할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곳에서 홍보 포인트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당 정책연구소의 홍보 역량 또한 높아져야 정당의 정책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보면 홍보 방법이 대부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만들고 알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국민에게서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연구소 내에 별도의 홍보 파트를 만들어 홍보 전략도 세우고, 국민에게서 다시 정책의 문제점을 피드백 받아 정책을 개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02

201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여의도연구원 연간 활동실적

201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 소재지 | 설치형태 | | | | 비고 |
|----------------------------------|--------|-----|----|----|----|
| | 연구소 소유 | 당소유 | 임차 | 기타 | |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회관 신관3층 | | | V | | |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 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 연구원 수 | 직원 수 | 비고 |
|----------|----------|----|
| 박사급: 18명 | 자체고용: 1명 | |
| 석사급: 22명 | | |
| 기 타: 32명 | 외부파견: 0명 | |
| 합 계: 72명 | 합 계: 1명 | |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 수입 | | | | 지출 | 잔액 | 비고 |
|---------------|---------|-------------|----------------|---------------|---------------|----|
| 정당지원금 | 기타수입 | 전년도이월금 | 계 | | | |
| 9,404,758,290 | 780,070 | 704,517,235 | 10,110,055,595 | 8,825,304,397 | 1,284,751,198 | |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40건)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14.7.1~ 15.1.31 | 운영, 정부 | 시민사회 균형발전 방안 연구 | 자체 | 135 | |
| 14.10.16~ 15.3.16 | 교육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 다문화 대한민국을 위한 모색 | 자체 | 66 | |
| 14.12.16~ 15.3.16 | 외교통일 | 박근혜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성공을 위한 정책 제언 | 외부공동 | 50 | |
| 1.1~2.6 | 보건복지 | 박근혜정부 2주년 평가 (시간제 보육&맞벌이 지원) | 외부공동 | 15 | |
| 1.1~2.10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 박근혜정부 2년 평가 : 국가혁신 R&D | 외부공동 | 10 | |
| 1.1~2.12 | 기획재정 | 박근혜정부 2년차 평가 : 공공부문 개혁 | 자체 | 14 | |
| 1.1~ 2.12 | 안전행정 | 박근혜정부 2년차 평가 :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 자체 | 14 | |
| 1.1~3.7 | 보건복지, 여성가족 | 저출산 기본계획 개선방향 | 자체 | 88 | |
| 1.1~3.13 | 여성가족 | 싱글패밀리 시대에 따른 정책 개선 | 자체 | 17 | |
| 1.1~ 3.15 | 보건복지 | 건강보험체계 개선방안 | 자체 | 27 | |
| 1.2~2.10 | 교육문화체육관광 | 박근혜정부 2년차 교육부문 평가 | 외부공동 | 10 | |
| 1.6~1.26 | 외교통일 | 2015년 남북 경제협력 추진방향 | 자체 | 9 | |
| 1.12~2.12 | 외교통일 | 박근혜정부 2년차 평가: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 조성 | 외부공동 | 12 | |
| 1.12~2.12 | 외교통일 | 박근혜정부 2년차 평가: 외교 | 외부공동 | 10 | |
| 1.12~2.12 | 안전행정 | 박근혜정부 2주년 평가 국민여론조사 | 외부공동 | 16 | |
| 1.13~4.20 | 국방 | 테러방지법 제정의 시급성 및 입법 포커스 | 자체 | 30 | |
| 2.1~2.20 | 외교통일, 안전행정 | 지금 지구촌은 테러와의 전쟁 중 | 자체 | 8 | |
| 2.9~3.23 | 국토교통, 기획재정 | 전세시장 국민혼란, 바로잡을 묘책은 없나? | 자체 | 18 | |
| 2.17~4.16 | 외교통일 | 한반도 경제, 평화의 비방: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안 | 외부공동 | 37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2.20~3.5 | 정무, 안전행정 |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 자체 | 10 | |
| 2.21~3.2 | 환경노동 |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그 보완방안 | 자체 | 15 | |
| 3.1~4.20 | 환경노동 | 새정연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 | 자체 | 15 | |
| 3.1~5.15 | 안전행정, 정무 | 제19대 총선에 적용해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 주요 정당의 이해 득실 예측 | 자체 | 96 | |
| 3.6~3.17 | 교육문화체육관광, 정무 | 새누리당이 새겨 봐야 할 독일의 시민교육 - 독일의 연방정치시민교육원 현황 | 자체 | 13 | |
| 3.6~3.20 | 보건복지, 기획재정 | 복지·증세 관련 여론 조사 연구 | 자체 | 6 | |
| 3.13~4.13 | 기획재정 | 서민금융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 | 자체 | 20 | |
| 3.23~3.30 | 국방 | 사드(THAAD) 쟁점과 대책 | 자체 | 6 | |
| 3.30~4.5 | 환경노동 |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 진행 상황 | 자체 | 9 | |
| 3.31~5.31 | 여성가족 | 2015년 청년 가치관(성공, 가족, 결혼, 친구, 대학, 취업, 직장) 분석 연구 | 외부공동 | 54 | |
| 4.1~4.13 | 안전행정, 정무 | 세미나 결과보고 : 4.29재보궐선거 전망과 대책 | 자체 | 4 | |
| 4.1~5.15 | 정무 | 판단의 오류-진영 | 자체 | 27 | |
| 4.20~7.10 | 교육문화체육관광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안정화 방안 연구 | 자체 | 30 | |
| 4.24~5.8 | 정무, 안전행정 | 국민공천제 도입의 당위성 | 자체 | 12 | |
| 4.27~5.1 | 교육문화체육관광, 안전행정 |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 자체 | 8 | |
| 4.27~5.15 | 외교통일, 정무 | 英 총선공약 눈여겨 봐야할 6가지 | 자체 | 18 | |
| 4.27~5.18 | 외교통일 | 1세대 이산가족 전원상봉 추진방안 | 자체 | 13 | |
| 4.28~5.4 | 외교통일 | 아베의 성장배경으로 본 역사관과 외교관: 문제점과 대응전략 | 자체 | 17 | |
| 5.1~6.15 | 안전행정, 정무 | 정책연구소 역할강화 및 재정확충방안 :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 자체 | 7 | |
| 5.1~6.30 | 안전행정, 정무 | 독일식 선거법과 그 옹호자들 "그들은 왜 독일식 선거법 도입을 주창하는가?" | 자체 | 45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5.21~5.30 | 보건복지 |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이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자체 | 10 | |
| 5.26~7.31 | 여성가족 | 2015년 청년 사회-경제관 분석 연구 | 외부공동 | 49 | |
| 5.28~6.4 | 외교통일 | 한·중FTA 발효시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제언 | 자체 | 5 | |
| 5.29~6.2 | 안전행정, 정무 | 한겨레신문사 성한용기자 초청 간담회 결과보고 | 자체 | 8 | |
| 6.1~6.5 | 보건복지 | 노인 기준연령 상향, 바람직한가 | 자체 | 5 | |
| 6.1~6.7 | 외교통일 | 6자회담 관련, 한·미·일 vs. 북·중·러 입장 분석 | 자체 | 4 | |
| 6.1~6.15 | 국토교통, 농림축산식품해양 안전행정, 환경노동 | 가뭄재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자체 | 7 | |
| 6.1~6.15 | 외교통일, 보건복지 | 영국과 독일의 복지개혁 | 자체 | 7 | |
| 6.1~6.15 | 외교통일 | '8.15 평화통일선언'(가칭) 추진 및 '5.24조치' 해법 | 자체 | 6 | |
| 6.1~6.15 | 보건복지, 기획재정 |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체 | 5 | |
| 6.1~9.30 | 보건복지, 기획재정 |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조개혁 방안 | 외부공동 | 50 | |
| 6.8~6.12 | 산업통상자원 | '중국제조 2025' 계획과 정책적 시사점 | 자체 | 6 | |
| 6.8~6.14 | 외교통일 | OSJD 정회원 가입 무산 및 향후 대책 | 자체 | 5 | |
| 6.9~6.26 | 보건복지 |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 | 외부공동 | 13 | |
| 6.15~6.17 | 외교통일 | AIIIB, 통일기반 조성에 활용 필요 | 자체 | 5 | |
| 6.15~6.17 | 정무 | 2015 한국인의 삶의 질과 정책적 시사점 | 자체 | 4 | |
| 6.16~6.22 | 외교통일 | '6.15 정부성명'(북)에 대한 남북대화 역제의 검토 필요 | 자체 | 4 | |
| 6.22~6.26 | 외교통일 | 북러관계 긴밀화에 대응한 한러관계 내실화 필요 | 자체 | 5 | |
| 6.22~6.28 | 외교통일 |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대북정책 방향 | 자체 | 4 | |
| 7.1~7.8 | 보건복지 | 사학연금법 개정 불가피 | 자체 | 4 | |
| 7.1~7.31 | 기획재정, 환경노동 | 새정연의 급속 최저임금 인상정책 :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자체 | 10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7.1~7.31 | 기획재정 |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검토 | 자체 | 10 | |
| 7.1~8.10 | 정무, 안전행정 | 19대 총선의 복기 | 자체 | 42 | |
| 7.1~8.26 | 안전행정, 정무 |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약화론'에 대한 반론 | 외부공동 | 20 | |
| 7.1~10.16 | 안전행정, 정무 | 정당투표로 본 제19대 총선 | 자체 | 30 | |
| 7.2~7.8 | 외교통일 | 북 엘리트 탈북러시에 따른 대비책 필요 | 자체 | 5 | |
| 7.2~7.13 | 산업통상자원 | 고리 1호기 해체가 국내 기술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및 조건 | 자체 | 8 | |
| 7.7~7.15 | 정무, 안전행정 | 2016년 총선 대비 부동층 특성 분석 | 자체 | 5 | |
| 7.15~7.22 | 외교통일 | 이란 핵협상 타결의 의미와 시사점 | 자체 | 4 | |
| 7.16~7.22 | 환경노동 |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대응방향 | 자체 | 5 | |
| 7.22~7.29 | 안전행정,정무 | 의원정수 확대 주장의 문제점 | 자체 | 4 | |
| 7.22~7.29 | 외교통일 | 시진핑 주석의 동북3성 방문: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자체 | 4 | |
| 7.30~8.5 | 외교통일 | 광복 70년! 조선족,고려인을 끌어안을 때 | 자체 | 6 | |
| 8.1~8.19 | 안전행정, 정무 |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의 허구성 | 자체 | 7 | |
| 8.1~8.20 | 정무, 기획재정 | 대형마트와 SSM 규제 찬반논쟁과 전망 | 자체 | 5 | |
| 8.1~8.24 | 안전행정, 정무 | 국민공천제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 자체 | 10 | |
| 8.1~9.15 | 기획재정, 국토교통 | 전월세시장 동향과 정책대응 방안 | 자체 | 19 | |
| 8.13~8.20 | 환경노동 | 노동시장 선진화의 핵심과제 | 자체 | 13 | |
| 8.13~8.24 | 교육문화체육관광 | 박근혜정부 교육개혁의 내용과 과제 | 자체 | 16 | |
| 8.15~9.2 | 기획재정 | 최근 세계경제 위험요인 분석 :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 자체 | 5 | |
| 8.15~9.15 | 산업통상자원 | 무역이득공유제 쟁점 검토 | 자체 | 10 | |
| 8.17~9.18 | 교육문화체육관광 | 대חק구조개혁의 현황과 과제 | 자체 | 19 | |
| 8.20~8.26 | 외교통일 | 남북 고위급협상 타결 이후 대북 관리 중요 | 자체 | 3 | |
| 8.20~8.26 | 보건복지 | 노인빈곤을 축소 시급 | 자체 | 4 | |
| 8.20~9.10 | 안전행정, 정무 | 새누리당 국민공천제와 야당 공천 혁신안의 비교 분석 | 자체 | 11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8.20~12.31 | 정무 | 〈비전2016위원회〉 시대정신과 비전 연구 | 공동연구 | 33 | |
| 8.20~12.31 | 여성가족, 보건복지 | 비전2016위원회 여성·가족 청소년 분과 정책개발 | 외부공동 | 40 | |
| 8.20~12.31 | 교육문화체육관광 | 비전2016위원회 문화분과 정책개발 | 외부공동 | 40 | |
| 8.20~12.31 | 교육문화체육관광 | 비전2016위원회 교육분과 정책개발 | 외부공동 | 90 | |
| 8.20~12.31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 비전2016위원회 과학기술·혁신분과 정책개발 | 외부공동 | 38 | |
| 8.20~12.31 | 안전행정 | 비전2016위원회 사회안전분과 | 외부공동 | 39 | |
| 8.20~12.31 | 외교통일, 국방 | 비전2016위원회: 통일·안보·외교 분야 정책 개발 | 외부공동 | 50 | |
| 8.21~8.31 | 환경노동 | 재개된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협상방안 | 자체 | 15 | |
| 8.24~12.31 | 운영, 정무, 안전행정 | 비전2016위원회: 정치개혁 | 외부공동 | 13 | |
| 8.24~12.31 | 안전행정, 정무 | 비전2016위원회: 정부혁신 | 외부공동 | 25 | |
| 8.24~12.31 | 안전행정, 기획재정 | 비전2016위원회: 지방자치 | 외부공동 | 23 | |
| 8.24~12.31 | 국토교통, 안전행정 | 비전2016위원회: 지역발전 | 외부공동 | 37 | |
| 8.25~9.10 | 기획재정 | 가속되는 위안화의 국제화: 동향과 시사점 | 자체 | 4 | |
| 8.27~9.2 | 외교통일 | 안보관련법안에 대한 일본내 여론 및 정계 동향 | 자체 | 4 | |
| 8.28~9.3 | 환경노동 | 임금피크제의 명과 암 | 자체 | 5 | |
| 9.1~9.10 | 외교통일 | 미국의 對북한 외교: CRS Report 분석 | 자체 | 4 | |
| 9.1~9.25 | 산업통상자원 | 무역피해지원제도 정책대안 검토 : 피해보전직불제 중심으로 | 자체 | 10 | |
| 9.1~16.1.15 | 외교통일 | 격동기 미국의 선택 : 어게인 팩스아메리카나 | 자체 | 7 | |
| 9.1~9.17 | 산업자원통상 | 말(馬)산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 | 자체 | 3 | |
| 9.2~9.9 | 환경노동 | “재벌개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주장의 허구 | 자체 | 5 | |
| 9.3~9.9 | 보건복지 | OECD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추이와 시사점 | 자체 | 4 | |
| 9.8~9.23 | 외교통일 | ‘8.25합의’ 이후 남북한 전략환경 및 하반기 정세 전망 | 자체 | 12 | |
| 9.10~9.16 | 정무, 안전행정 | 미 공화당 지지자들의 도널드 트럼프 지지요인 분석 | 자체 | 4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9.10~9.16 | 외교통일 | 중국 '뉴노멀'시대 대응수단으로서 남북경협 활성화 | 자체 | 4 | |
| 9.10~9.30 | 산업자원통상 | TPP 협상 타결 후 대응방향 | 자체 | 5 | |
| 9.10~9.30 | 정무 | 부패방지 제도개혁 | 자체 | 5 | |
| 9.22~12.3 | 정무 | 2016년 총선 대비 시대정신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 자체 | 16 | 〈당 정책위원회 워크숍 발표자료〉 〈현안보고〉 |
| 9.24~9.30 | 환경노동 | 공정한 업무평가기준이 노사협회의 성패 좌우 | 자체 | 4 | |
| 10.1~10.8 | 외교통일 | 美 차기정부 외교안보정책 전망: Rand Report | 자체 | 3 | |
| 10.1~10.14 | 안전행정, 기획재정 | 선관위 제안 '가칭'정치발전기금법'에 대한 검토 의견 | 자체 | 3 | |
| 10.1~11.4 | 정무 | 비급여 의료비, 국민부담 급증 | 자체 | 5 | |
| 10.1~10.15 | 산업자원통상 | 노령화 직면한 중국의 미래성장동력은 개혁보너스 | 자체 | 5 | |
| 10.1~10.6 | 교육문화체육관광 | 새도서정가제 시행 1년 평가 및 부작용 방지책 | 자체 | 5p | |
| 10.1~10.30 | 정무, 안전행정 | 총청권 선거 결과의 시사점 및 과제 | 자체 | 24 | |
| 10.9~10.16 | 외교통일 | 북중관계 경색 완화 가능성 및 우리의 대응 | 자체 | 5 | |
| 10.15~10.21 | 환경노동 | 취업 이후 경력형성 초점 청년고용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 자체 | 4 | |
| 10.15~10.21 | 외교통일 |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 자체 | 5 | |
| 10.15~10.21 | 정무 | 미 공화당 지지율 하락 요인 | 자체 | 5 | |
| 10.22~10.28 | 외교통일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관련 중·일 협력 가능성 | 자체 | 7 | |
| 10.22~10.28 | 산업자원통상 | FTA 및 TPP 관련 美 유권자 인식 | 자체 | 4 | |
| 10.22~12.6 | 여성가족 | 2015년 대한민국 청년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 외부공동 | 37 | |
| 10.29~11.4 | 외교통일 | 중국공산당 <제13차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 자체 | 8 | |
| 11.1~11.19 | 산업자원통상 | 독일 'Industrie 4.0' 전략과 창조경제에의 시사점 | 자체 | 5 | |
| 11.1~11.20 | 안전행정, 정무 | 여의도연구원-아데나워재단 교류협력 현황 | 자체 | 10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11.2~12.2 | 정무 | 중국 위안화 국제화 전략 | 자체 | 5 | |
| 11.5~11.11 | 정무, 기획재정 | 1인당 GDP 증가에도 늘지 않는 개인소득 | 자체 | 4 | |
| 11.12~11.18 | 외교통일 | 南중국해 미중 갈등과 전망 | 자체 | 4 | |
| 11.12~11.18 | 외교통일 | TPP 타결 중국측 평가 | 자체 | 4 | |
| 11.15~12.3 | 환경노동 | 좌파기득권 담론과 노동개혁 | 자체 | 5 | |
| 11.22~11.24 | 보건복지 | 서울시 청년수당의 문제점 및 대책 | 외부공동 | 9 | |
| 12.1~12.8 | 기획재정 | 가계소득 둔화의 주요 배경과 향후 과제 | 자체 | 3 | |
| 12.3~12.9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벨트(Hope-Belt) 구축 | 외부공동 | 5 | |
| 12.1~12.16 | 안전행정,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정무 | 주요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법 | 자체 | 8 | |
| 12.13~12.16 | 기획재정 | 한국경제 긴급진단: 현황과 대책 | 외부공동 | 14 | |
| 12.17~12.23 | 외교통일 | 2015 북한경제 평가 및 2016 전망 | 자체 | 5 | |
| 12.17~12.28 | 교육문화체육관광 |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 자체 | 10 | |

별첨 : 연구 · 개발실적 주요내용 140부.

나. 토론회 등 개최(74회)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토론회 | 1.5~ 2.5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 | - 북한궤 안보위협상 상존, 병영문화의 혁신,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비리의 척결 등 당 면한 국방현안의 점검 - 국방태세의 발전방향을 모색 및 對국민 국 방안보태세의 강화 | 자료집 |
| 세미나 | 1.27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 공공부문개혁 | 박근혜정부 공공부문개혁의 성과 평가 및 개 선점 제시 | |
| 세미나 | 1.27~ 2.13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박근혜정부 2년차 평가 및 향후 과제 총 6회 | 박근혜정부 2년차 평가를 위해 경제, 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통일외교, 여성가족 등 분야별로 6회의 세미나를 개최 | |
| 세미나 | 1.28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박근혜정부 2년 평가 : 재난관리 | 박근혜정부의 재난안전관리정책 평가 및 개 선점 제시 | |
| 세미나 | 1.29~ 2.6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정치개혁과 2015년 보수여당의 과제 | 정치개혁 및 정당체제 변화와 관련해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응방안과 과제 모색 | |
| 세미나 | 2.3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박근혜정부 2주년 평가 세미나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주년 평가 과제수행의 일환으로 규제개혁 분야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에 관한 논의 | |
| 세미나 | 3.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전세대란, 근본대책은 없는가? | - 전세가격 급등과 품귀현상 등 임대차주택 문제가 핵심 경제·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 전세난 해법과 더불어, 전세 제도 가 과연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제도 인지 에 대한 진단과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대 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미나 개최 -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월)세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전세대란 대응책 마련 |
| 세미나 | 4.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정책자문위원회 정세분석분과 주최 '4.29재보궐선거 전망과 대책' | 4.29재보궐선거 현황분석 및 대책 제시 | |
| 세미나 | 4.29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사회적경제기본법 |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쟁점과 주요 이슈 점검 | |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세미나 | 5.4~ 5.20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 -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소상공인 연합회의 입장 청취 -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 책 모색 | |
| 세미나 | 5.15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원전산업 활성화 방안 |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개발현황과 활성화 방 안에 대한 논의 및 의견 교류 | |
| 세미나 | 5.27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해외사모투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모투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사모 투자의 특성을 검토사모투자에 대한 국내 감 독규제 관련 정책 시사점을 도출 | |
| 간담회 | 5.29 | 여의도연구원 | 정책자문위원회 정세분석분과 주최 한겨레신문사 성한용기자 초청 간담회 | 한겨레신문사 성한용기자 초청, 정국전망과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와 권고 청취 | |
| 세미나 | 6.1 | 여의도연구원 | “가뭄재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당면한 가뭄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제시 | |
| 세미나 | 6.24~ 6.30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18/19대 국회의원 이념성향 변화 | 18·19대 국회의원 이념성향 변화 분석 및 여 야 의원 이념성향이 향후 입법활동에 미칠 영향 분석 | |
| 세미나 | 6.25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방안 | 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과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2.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3. 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전략 4.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과제 | |
| 세미나 | 7.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원전 해체기술 자립화 방안 | 원전 폐로 및 해체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논 의 진행 | |
| 세미나 | 7.7 |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 센터 회의실 | 2015년 대한민국 청년 가치관 조사 결과 타운미팅 | 2015년 청년 가치관 조사 결과 발표 및 질의 응답, 정책제언 발표 | |
| 간담회 | 7.9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과제 | “주거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관한 발 표 및 토의 | 경제2분과 정책자문 위원회 정책간담회 |
| 세미나 | 7.3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 |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선진화 방안 마련 시급 | |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세미나 | 8.11~ 8.19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다당제 하에서의 정당연합 및 정책노선 | 다당제 하에서 가능한 정당연합과 한국 사회 의 주요 정치경제 의제 및 정책노선의 변화 예측 | |
| 간담회 | 8.13 | 여의도연구원 | 채진원교수 초청 간담회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을 약화시키는가?” |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약화론에 대한 반론 및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전략 제시 | |
| 세미나 | 8.19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의 국내외 경제적 파 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 |
| 세미나 | 8.20~ 12.3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2016위원회〉 통일안보외교분과 토론회 총 7회 | 통일안보외교 관련 당의 정책과제 개발 및 해법 모색 | |
| 간담회 | 8.20~ 12.3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2016위원회 산업분과 | 산업분과 연구성과 및 당의 정책개발 | |
| 간담회 | 8.20~ 12.3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2016위원회 비전소위원회 | 2016 비전 개발 | |
| 간담회 | 8.24~ 12.3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 2016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 경제성장, 조세재정 (지방재정 포함), 거시 금융 관련 비전과 정책 수립 | |
| 세미나 | 8.25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금융안정성과 가계부채 | 1. 금융안정성과 거시건전성 감독 개념을 구분 2.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을 비교 3. 금융안정성 관점에서 가계대출의 해법 모색 | |
| 세미나 | 8.26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말(馬)산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 말산업 선진화를 통한 선진화 창조경제와 일 자리창출방안에 관해 다양한 토의 | |
| 세미나 | 9.1~ 9.8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8.25 합의〉가 주는 교훈 및 남북관계 전망 | -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 색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고위 당국 자 사이에 열린 2+2회의의 과정과 결과를 복기 - 특히 〈8.25 합의〉의 내용 분석을 통해 향 후 남북관계에서의 유사상황 재발時 교훈 및 시사점 도출 | |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세미나 | 9.4~ 9.15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새누리당 지지연합 분석 및 2016년 총선 선거환경 예측 | 2016년 총선의 정책공약 수립을 위해 당의 지지기반과 target 집단을 파악하고 선거 환경을 예측 | |
| 간담회 | 9.8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8.25 합의가 주는 교훈 및 향후 전망 | 이번 남북 당국간 도출된 '8.25 합의'는 남북 관계의 흐름을 경색국면에서 협력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주요 기제로 작용한 바, 일련의 과정을 복귀 및 평가해 보고, 향후 남북관계 에서의 유사 상황의 재발, 즉 대결 국면의 대 화국면으로의 전환, 또는 대화 국면의 대결국 면으로의 회귀시 교훈 및 시사점 도출에 활용 | |
| 세미나 | 9.9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심화되는 전·월세난, 근본대책은 없나? | 급등한 전·월세가격과 전세품귀 등 임대차 주택 문제에 대응한 긴급 전문가세미나를 개 최하여, 전·월세 시장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하고, 정책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
| 간담회 | 9.1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2016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회 1차회의 |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회 정책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설정 및 과제 작업 방향 논의 | |
| 간담회 | 9.18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2016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회 2차회의 |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회 20대 총선 정세 전망, 비전 및 목표, 과제 선정 작업 | |
| 토론회 | 9.22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한국 정당정치의 선진화 | 한국 정당정치의 패러다임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정당정치의 문제점 진단 및 선진화방안 모색 | |
| 세미나 | 9.25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미래방향(II): 교육의 미래 방향 조명 |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 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 지 그 향방을 모색하고자 함 | 발제자: 이주호 전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
| 세미나 | 9.30~ 10.7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성공한 정강정책 실패한 정각정책 | 유럽선거에서 정강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 를 분석하여 그러한 성패를 가른 배경 전략 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한국 보수 정당에 대한 시사점을 찾음 | |
| 세미나 | 9.30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으 며, 미래세대에게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가 점차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향방을 모색하고자 함 | |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세미나 | 10.3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공적연금 구조개혁 | 공적연금 구조개혁 관련 용역보고서 발표 및 토론 | |
| 간담회 | 10.6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2016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회 3차회의 | 채택된 정책과제 중 1, 2, 3대 과제 집중 논의 | |
| 세미나 | 10.7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미래방향(III): 교육정책의 미래 조명 |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 향방을 모색하고자 함 | |
| 간담회 | 10.13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2016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회 4차회의 | 채택된 과제 중 4, 5, 6, 7, 8대 과제 집중 검토 | |
| 세미나 | 10.2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 1. 비급여 의료비 추세와 관리 현황 2. 비급여 의료비 분석 요약(문제점) 3. 비급여 의료비 부담 적정화방안 | |
| 세미나 | 10.22~ 11.29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8.25 합의〉 이후 남북관계 평가 및 전망 | - 〈8.25 합의〉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점검 - 특히 2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온풍을 기대 | |
| 간담회 | 10.27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2016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회 5차회의 | 채택된 과제 중 9, 10, 11대 과제 집중 검토 | |
| 세미나 | 10.27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저성장-저고용-양극화 한국경제: 동반성장에서 해법을 | 성과공유제, 상생결제시스템 등 이른바 동반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진행 | 동반성장 해법 관련 특별 정책세미나 |
| 세미나 | 10.27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제2차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저성장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 여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성장시대의 해법 모색 | |
| 토크 콘서트 | 11.1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나눔은 기쁨입니다” 기부문화를 위한 토크콘서트 |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공동 주관 | |
| 세미나 | 11.2 | 국회 | 정책자문위원회 정세분석분과 세미나 “민심 2016” |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여론동향 분석 및 신년 정국 전망 | |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간담회 | 11.4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2016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회 6차회의 | 검토된 11대 과제들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최종 재검토 진행 | |
| 간담회 | 11.1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2016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회 7차회의 | 정세전망, 비전 및 3대 목표, 11대 정책과제 의 최종 점검 회의 진행 | |
| 세미나 | 11.11~ 11.19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2015 한국사회 시대정신은 무엇인가?(1)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정책공약 및 선 거 캠페인 전략수립을 위해 사회분야에서의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를 파악 | |
| 세미나 | 11.20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운영방안 [I] | 1. 팩토링 국내 현황과 문제점 2. 잠재적 수요의 충족 필요성 | |
| 세미나 | 11.23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제3차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여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 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사회적 대타협 발전 방 안 모색 | |
| 세미나 | 11.24~ 12.3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2015 한국사회 시대정신은 무엇인가(2) 경제 및 정치 분야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정책공약 및 선 거 캠페인 전략수립을 위해 경제 및 정치 분 야에서의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를 파악 | |
| 세미나 | 11.30~ 12.8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2015 한국사회 시대정신은 무엇인가?(3) 언론인 간담회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정책공약 및 선 거 캠페인 전략수립을 위해 언론인들이 생각 하는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를 파악 | |
| 토론회 | 12.1 |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 및 기반확립을 위한 정책협약의 장 |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관해 토론 |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
| 세미나 | 12.4 |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 센터 회의실 | 2015년 대한민국 청년 실태백서 결과 타운미팅 | 2015년 청년 실태백서 결과를 바탕으로 FGI 및 자유로운 토론 진행 | |
| 세미나 | 12.7~ 12.9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과학기술 혁신과 신산업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정책공약 및 선 거 캠페인 전략수립을 위해 한국 과학기술의 혁신 방향과 신산업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파악 | |
| 간담회 | 12.23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비전2016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 통일외교안보 분과 여의도연구원과 당정책 위원회의 조정회의 | |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세미나 | 12.24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매출채권제도 팩토링 도입 운영방안 [III] | 효율적 도입 방안 : - 운용규모 및 방식, 리스크 관리, 소요 인력조치 필요 사안 : - 법령 개정, 재원조성 등 | |
| 여론조사 | 1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 대통령 취임 2주년 평가 등 | 5회 |
| 여론조사 | 2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 임시국회 이슈 등 | 6회 |
| 여론조사 | 3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 국정운영 평가 등 | 26회 |
| 여론조사 | 4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CATI 조사 | 재보궐선거 관련 이슈 등 | 40회 |
| 여론조사 | 5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 대북정책 등 | 6회 |
| 여론조사 | 6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 임시국회 이슈 등 | 7회 |
| 여론조사 | 7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 오픈프라이머리 등 | 8회 |
| 여론조사 | 8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 선거제도 등 | 8회 |
| 여론조사 | 9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 국정감사 이슈 등 | 8회 |
| 여론조사 | 10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 재보궐선거 관련 이슈 등 | 10회 |
| 여론조사 | 11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 노동개혁 등 | 8회 |
| 여론조사 | 12월 | 여의도연구원 | ARS 조사 | 정당 구도 변화 등 | 10회 |

다. 교육 · 연수활동(2회)

| 교육·연수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요내용 | 비고 |
|-----------------|-------------|--------|--|----|
| 에너지 대책 콘퍼런스 | 7.8 | 글래드호텔 | 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 | |
|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 11.12~11.13 | 강원도 강릉 | 선관위 주최 정당 및 정책연구소 관계자 워크숍 여의도연구원원에서 3명 참여 | |

라. 정책홍보(114회)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1.2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2015년 여의도연구원 시무식 | 대외홍보 |
| 2.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연브리프] 대통령 지지도와 국정운영: 역대 대통령 지지도 변동의 시사점 및 제언 | 보고서 발간 |
| 2.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공동토론회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 | 공동 세미나 |
| 2.6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정책간담회 '정치개혁과 2015년 보수여당의 과제' | 간담회 |
| 2.12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연브리프] 2014년 전국 2030 직장인 실태조사: 직장, 생활, 사회, 통일, 남북관계 의식조사 | 보고서 발간 |
| 2.26 | 인터넷 | 뉴스레터 배포/홈페이지 게재 | 여의도연구원 웹진 '정책플러스' 발행 (2월호) | 뉴스레터 |
| 3.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간담회 '전세대란, 근본대책은 없는가' | 간담회 |
| 3.16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연정책보고서] 시대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방안 | 보고서 발간 |
| 3.16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연정책보고서] 다문화 대한민국을 위한 모색 | 보고서 발간 |
| 3.18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현안보고] 새누리당이 새겨 봐야 할 독일의 시민교육: 독일의 연방정치시민교육원 현황 | 보고서 발간 |
| 3.19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몽골 지방의원 및 정치인 대표단 여의도연구원 방문 | 국제교류 |
| 3.23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여연브리프] 전세시장, 국민혼란! 바로잡을 묘책은 없나? | 보고서 발간 |
| 3.24~ 3.2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2015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 자문활동 |
| 4.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현안보고] 1인 가구 급증, 국민 25% 정책지형을 바꿔야 한다 | 보고서 발간 |
| 4.2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현안보고] 새정연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 :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및 법제화 여부를 중심으로 | 보고서 발간 |
| 4.6 | 인터넷 | 뉴스레터 배포/홈페이지 게재 | 여의도연구원 웹진 '정책플러스' 발행 (3월호) | 뉴스레터 |
| 4.7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계간지] 여연시선 2015년 vol.3 봄호 | 계간지 발간 |
| 4.8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여연정책보고서] 한반도 경제, 평화의 빅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안 | 보고서 발간 |
| 4.29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사회적경제기본법 간담회 | 간담회 |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5.1 | 인터넷 | 뉴스레터 배포/홈페이지 게재 | 여의도연구원 웹진 '정책플러스' 발행 (4월호) | 뉴스레터 |
| 5.2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 간담회 |
| 5.1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원전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 | 간담회 |
| 5.1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중국 차하얼 평화포럼단 여의도연구원 방문 | 국제교류 |
| 5.1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김원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중앙선관위·한국정당 학회 공동 주최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 | 토론회 |
| 5.17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청년정책연구센터 4기 정책자문연구원 수료식 및 타운 미팅 | 교육 · 연수 |
| 5.18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조사보고] 2015 청년가치관 조사: 대한민국 청년이 말하는 성공, 가족, 결혼, 친구, 대학, 취업, 직장 | 보고서 발간 |
| 5.19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당발전기획위원회, 국방정책위원회 | 자문활동 |
| 5.26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대만 민진당 정책자문그룹 TBT(Taiwan Brain Trust) 여의도연구원 방문 | 국제교류 |
| 5.27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베트남 공산당 대표단 여의도연구원 방문 | 국제교류 |
| 5.29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정책간담회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간담회 |
| 6.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현안보고]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이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보고서 발간 |
| 6.1 | 인터넷 | 뉴스레터 배포/홈페이지 게재 | 여의도연구원 웹진 '정책플러스' 발행 (5월호) | 뉴스레터 |
| 6.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정책간담회 '가뭄재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간담회 |
| 6.3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정책조사분석분과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국회의원 이념성향 변화와 2016년 총선 대비 부동산 특성 파악' | 자문활동 |
| 6.4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현안보고] 한 중 FTA 발효시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제언 | 보고서 발간 |
| 6.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화 방안 간담회 | 간담회 |
| 6.1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몽골 인민당 대표단 여의도연구원 방문 | 국제교류 |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6.1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조사보고] 청년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란? | 보고서 발간 |
| 6.15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결과보고] 가뭄재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보고서 발간 |
| 6.16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김종석 홍익대 교수, 여의도연구원 선임 원장으로 선임 | 대외홍보 |
| 6.17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위원회 2차 총회 | 자문활동 |
| 6.17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18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 | 대외홍보 |
| 6.22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현안보고]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 | 보고서 발간 |
| 6.24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중소기업분과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모임 | 자문활동 |
| 6.24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 및 여의도연구원 임직원 상견례 | 대외홍보 |
| 6.25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현안보고] 새정연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보고서 발간 |
| 6.2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자치개혁분과 정책자문회의 개최 | 자문활동 |
| 7.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원전해체 기술자립화 방안 간담회 | 간담회 |
| 7.1 | 인터넷 | 뉴스레터 배포/홈페이지 게재 | 여의도연구원 웹진 '정책플러스' 발행 (6월호) | 뉴스레터 |
| 7.1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에너지정보과학통신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회의 | 자문활동 |
| 7.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한미관계 현안점검 전문가 간담회 | 간담회 |
| 7.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YDI정책플라자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 자문활동 |
| 7.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보건복지분과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메르스로 본 국제보건안보' | 자문활동 |
| 7.6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연정책보고서] 그들은 왜 독일식 선거법 도입을 주창하는가? | 보고서 발간 |
| 7.9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정책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간담회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 자문활동 |
| 7.9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통일분과·외교안보분과 정책자문위원회,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초청 특강 | 자문활동 |
| 7.1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현안보고] 고리 1호기 해체가 국내 기술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및 조건 | 보고서 발간 |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7.16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부산행복연구원 MOU체결 | 국제교류 |
| 7.2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연브리프]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새로운 주거정책 추진의 의의와 과제 | 보고서 발간 |
| 7.3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노동시장 선진화 방안 세미나 | 세미나 |
| 8.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정문건 前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여의도연구원 고문 임명 | 대외홍보 |
| 8.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현안보고]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검토 | 보고서 발간 |
| 8.4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YDI정책플라자위원회 간담회 | 자문활동 |
| 8.11 | 인터넷 | 뉴스레터 배포/홈페이지 게재 | 여의도연구원 웹진 '정책플러스' 발행 (7월호) | 뉴스레터 |
| 8.1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정책토론회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을 약화시키는가' | 토론회 |
| 8.19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정책토론회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토론회 |
| 8.19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정책간담회 '현 정치지형 하의 정당체계 및 정책노선 변화 가능성' | 간담회 |
| 8.19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세미나자료집)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보고서 발간 |
| 8.2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경제1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세미나 '외환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 강화와 가계부채 대응방안' | 자문활동 |
| 8.26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말 산업 선진화를 통한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세미나 | 토론회 |
| 8.3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연포커스]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약화론에 대한 반론: 의원의 자율성 회복으로 민생정당을 강화한다 | 보고서 발간 |
| 8.3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심윤조 여의도연구원 제 1부원장 이임식 | 대외홍보 |
| 9.1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국토교통부와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의 성과와 과제' | 자문활동 |
| 9.2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 이종혁 상근 부원장 이임식 | 대외홍보 |
| 9.4 | 인터넷 | 뉴스레터 배포/홈페이지 게재 | 여의도연구원 웹진 '정책플러스' 발행 (8월호) | 뉴스레터 |
| 9.8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6개국 의회 고위급 인사 8인 여의도연구원 방문 | 국제교류 |
| 9.8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8.25합의가 주는 교훈 및 남북관계 전망 간담회 | 간담회 |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9.9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심화되는 전·월세난, 근본대책은 없나' 세미나 | 세미나 |
| 9.1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새누리당 지지연합 분석 및 2016년 총선 선거환경 예측 세미나 | 토론회 |
| 9.16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이재영 의원실 공동 주최 '포털 뉴스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 | 토론회 |
| 9.22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정책자문위원회·정책플라자위원회 합동토론회 '한국 정당정치의 선진화' | 자문활동 |
| 9.24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현안보고] 심화되는 전월세난 : 최근동향과 정책대응 과제 | 보고서 발간 |
| 10.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행정개혁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선진 집회·시위 문화정착 방안 및 집회시위 안전관리제도' 간담회 | 자문활동 |
| 10.2 | 인터넷 | 뉴스레터 배포/홈페이지 게재 | 여의도연구원 웹진 '정책플러스' 발행 (9월호) | 뉴스레터 |
| 10.7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세미나 '성공한 정강정책, 실패한 정강정책' | 세미나 |
| 10.12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이재영 의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선임 | 대외홍보 |
| 10.22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간담회 '올바른 역사교육, 원로에게 듣는다' | 간담회 |
| 10.2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중국 차하얼학회 여의도연구원 방문 | 국제교류 |
| 10.2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 단합대회 '하늘공원 둘레길 산책' | 대외홍보 |
| 10.27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세미나 '저성장·저고용·양극화 한국경제: 동반성장에서 해법을' | 세미나 |
| 10.27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민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 세미나 |
| 10.28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경제1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세미나 '비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 자문활동 |
| 10.29~ 10.30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 <2015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 연수> 참여 | 대외홍보 |
| 11.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민주정책연구원 공동 주관 '기부천사들과 함께하는 나눔토크콘서트' | 대외홍보 |
| 11.1 | 인터넷 | 뉴스레터 배포/홈페이지 게재 | 여의도연구원 웹진 '정책플러스' 발행 (10월호) | 뉴스레터 |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11.2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정세분석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세미나 '민심 2016' | 자문활동 |
| 11.2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인사 여의도연구원 방문 | 국제교류 |
| 11.3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언론 배포 | [실태백서] 전국 3,312명의 청년들이 말하는 '2015년 우리들의 삶' | 보고서 발간 |
| 11.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 비전2016위원회 전체회의 | 토론회 |
| 11.19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2015 한국사회 시대정신 릴레이 세미나: 사회정책 분야 | 토론회 |
| 11.23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세미나 보고서] 여의도연구원-민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보고서 발간 |
| 11.2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민주정책연구원 공동 세미나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공동 세미나 |
| 11.26~ 11.28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 중국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위해 방중 | 국제교류 |
| 11.28~ 12.5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청년정책연구센터 전국 6대 권역 2015 대한민국 청년 실태백서 결과보고대회 | 교육 · 연수 |
| 12.1 | 인터넷 | 뉴스레터 배포/홈페이지 게재 | 여의도연구원 웹진 '정책플러스' 발행 (11월호) | 뉴스레터 |
| 12.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정책 대토론회' 공동 개최 | 토론회 |
| 12.3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2015 한국사회 시대정신 릴레이 세미나: 경제 및 정치분야 | 토론회 |
| 12.4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 신임 이·감사 8인 선임, 전임 이사단에 감사패 수여 | 대외홍보 |
| 12.8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2015 한국사회 시대정신 언론인 간담회 | 간담회 |
| 12.8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여의도연구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총선 공약 개발 위한 워크숍 개최 | 대외홍보 |
| 12.17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현안보고] 한국경제 긴급진단: 현황과 대책 | 보고서 발간 |
| 12.21 | 인터넷 | 홈페이지 게재 | 여의도연구원 미술 전시회 관람 | 대외홍보 |
| 12.24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 세미나 |
| 12.31 | 인터넷 | 홈페이지/SNS 게재 | 2015년도 여의도연구원 종무식 | 대외홍보 |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37건)

| 발간 일자 | 종 류 | 제 목 | 발간 방법 | 발간부수 및 활용 | 비고 |
|----------|------------------|---|-------|---|----|
| 1.5~2.5 | 토론회 자료 |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 | 자체 발간 | 500부, 당과 정부의 정책입안 참고자료 | |
| 1.15 | 여연정책보고서 | 시민사회 균형발전 방안 연구 | 자체 발간 | 23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1.15~4.1 | 계간지 [여연시선] | 여의도연구원 계간지 [여연시선] 3호 발간 | 자체 발간 | 1000부, 새누리당 의원, 행정부처, 청와대 및 연구기관 등 배포 | |
| 2.13 | 자료집 | 박근혜정부 2년차 평가: 2014년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자체 발간 | 100부, 당 최고회의의 보고 및 참고자료 | |
| 3.19 | 현안보고서 (이슈브리프) | 전세시장 국민혼란, 바로잡을 묘책은 없나? | 자체 발간 | 200부, 당소속 국회의원실 및 유관기관 배포 | |
| 3.30 | 보고서 양식 매뉴얼 (내부용) | 여의도연구원 신규보고서 양식안 | 자체 발간 | 40부, 내부자료 활용 | |
| 4.15~7.1 | 계간지 [여연시선] | 여의도연구원 계간지 [여연시선] 4호 발간 | 자체 발간 | 1000부, 새누리당 의원, 행정부처, 청와대 및 연구기관 등 배포 | |
| 4.20 | 현안보고 | 새정연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 :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및 법제화 여부를 중심으로 | 자체 발간 | 200부, 국회 배포 | |
| 5.16 | 여연정책보고서 | 제19대 총선에 적용해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 주요 정당의 이해 득실 예측 | 자체 발간 | 23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5.17 | 정책보고서 | 2015년 청년 가치관 조사 1 : 대한민국 청년이 말하는 성공, 가족, 결혼, 친구, 대학, 취업, 직장 | 자체 발간 | 10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6.3 | 여연정책보고서 | 그들은 왜 독일식 선거법 도입을 주장하는가? | 자체 발간 | 23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6.8 | 동향과 분석 | 6자회담 관련, 한·미·일 vs. 북·중·러 입장 분석 | 자체 발간 | 2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발간 일자 | 종 류 | 제 목 | 발간 방법 | 발간부수 및 활용 | 비고 |
|------------------|----------------------|---|----------|---|----|
| 6.11 | 정책보고서 | 2015년 청년 가치관 조사 2 : 청년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란? | 자체 발간 | 10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6.15 | 동향과 분석 | OSJD 정회원 가입 무산과 향후 대책 | 자체 발간 | 2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6.22 | 동향과 분석 | 6.15정부 성명에 대한 남북대화 역제의 검토 | 자체 발간 | 2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6.25~ 16.1.25 | 현안보고 | 새정연의 급속한 임금 인상 정책 :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자체 발간 | 200부, 국회 배포 | |
| 6.29 | 동향과 분석 |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대북정책 방향 | 자체 발간 | 2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7.9 | 동향과 분석 | 북, 엘리트의 탈북 러시에 따른 대비책 필요 | 자체 발간 | 2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7.15~ 10.1 | 계간지 [여연시선] | 여의도연구원 계간지 [여연시선] 5호 발간 | 자체 발간 | 1000부, 새누리당 의원, 행정부처, 청와대 및 연구기관 등 배포 | |
| 7.23 | 여연브리프 (YDI Brief) |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새로운 주거정책 추진의 의의와 과제 | 자체 발간 | 200부, 당소속 국회의원실 및 유관기관 배포 | |
| 7.31 | 현안 보고 |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검토 | 자체 발간 | 200부, 국회 배포 | |
| 8.26 | 여연포커스 |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약화론’에 대한 반론 : “의원의 자율성 회복 으로 민생정당을 강화한다” | 자체 발간 | 200부, 국회 배포 | |
| 8.27 | 이슈브리프 |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이후 대북 관리 중요 | 자체 발간 | 2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9.2 | 이슈브리프 | 세계경제 위협요인 분석 | 자체 발간 | 200부, 국회 배포 | |

| 발간 일자 | 종 류 | 제 목 | 발간 방법 | 발간부수 및 활용 | 비고 |
|------------------|------------|---|-------|---|----|
| 9.14 | 현안 분석 | 8.25합의 이후 남북한 전략환경과 하반기 정세전망 | 자체 발간 | 2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9.16 | 현안 보고 | 무역이득공유제 : 쟁점 검토 | 자체 발간 | 20부, 당 정책결정 참고자료 | |
| 9.23 | 현안 보고 | 무역피해지원제도 정책대안 검토 : 피해보전직불제를 중심으로 | 자체 발간 | 20부, 당 정책결정 참고자료 | |
| 9.30 | 이슈브리프 | 부패방지 제도개혁 | 자체 발간 | 200부, 국회 배포 | |
| 10.7 | 이슈브리프 | TPP 타결 대응방향 | 자체 발간 | 200부, 국회 배포 | |
| 10.15~ 16.1.4 | 계간지 [여연시선] | 여의도연구원 계간지 [여연시선] 6호 발간 | 자체 발간 | 1000부, 새누리당 의원, 행정부처, 청와대 및 연구기관 등 배포 | |
| 10.15 | 이슈브리프 | 북중관계 경색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 자체 발간 | 2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10.22 | 이슈브리프 |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 자체 발간 | 2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11.4 | 이슈브리프 | 비급여 의료비 국민부담 급증 | 자체 발간 | 200부, 국회 배포 | |
| 11.12 | 이슈브리프 | 최룡해 실각설 확산 및 북한 권력구도 재편 조짐 | 자체 발간 | 2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11.3 | 정책보고서 | 2015년 대한민국 청년 실태백서 | 자체 발간 | 1000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의원실 배포 | |
| 11.23 | 세미나자료집 | 제3차 여의도연구원-민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자체 발간 | 200부, 국회 배포 | |
| 12.2 | 이슈브리프 | 위안화 국제화 전략 | 자체 발간 | 200부, 국회 배포 | |

바. 그 밖의 주요활동(15건)

| 일자 (기간) | 장 소 | 활동명 | 주요내용 | 비 고 |
|-----------------|-----------------|--|--|----------------------------|
| 1.1~ 12.3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경제1분과 정책자문회의 |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정책 자문, 각계의 의견 청취 후 정책에 반영 | 2015년 총 4회 개최 (분기별 1회) |
| 1.1~ 12.31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정책조사분석분과 정책자문회의 | 정책조사 및 현안 이슈 관련 전문가 자문 요청, 정책에 반영 | |
| 1.7~ 12.31 | 통일준비위원회 |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회의 |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전문위원 활동 |
| 3.1 | 서울 여의도 | 중앙선관위 정당정책연구소 업무협의회 | 중앙선관위 주최의 정당정책연구소 업무협의회, 여의도연구원 대표 2명 참여 | |
| 5.15 | 국회 | 중앙선관위·정당학회 공동주최 토론회 | 중앙선관위가 정당정책연구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토론회, 여의도연구원 토론회 패널 참여 | |
| 9.8 | 국회 | 제10차 국가전략포럼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선거개혁 핵심과제' | 국가전략포럼이 선거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여의도연구원 토론회 패널로 참여 | |
| 10.1~ 11.30 | 국회 본관 회의실 | 당 금융개혁 TF 실무추진단 | 금융개혁 안건 준비 (현황과 문제점 조사, 법안 수립) | |
| 10.23~ 10.23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중국 차하얼학회 여의도연구원 예방기념 간담회 | 중국 차하얼 학회 방문단 6명이 예방하여 여의도연구원과의 연구 협력 및 MOU관련 논의 진행 | |
| 11.7 |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 2015 대한민국 정책컨벤션 & 페스티벌 싱크탱크 라운드토론회/정책지식상대개 활성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 거버넌스센터가 연례 개최하는 정책컨벤션, 여의도연구원 토론회 패널로 참여 | |
| 11.12~ 11.15 | 중국 상해 푸단대학교 | 상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강연 및 토론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및 남북 관계 전망 분석 | 푸단대 초청 |
| 11.16~ 11.16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유럽의회 방한단 면담 | 한국의 국회활동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유럽 의회와 협력 모색 | |

| 일자 (기간) | 장 소 | 활동명 | 주요내용 | 비 고 |
|-------------------|----------------|-----------------------------------|---|--------|
| 11.26~ 11.28 | 중국 북경 차하얼학회 | 차하얼 학회 초청 방중 출장 | 차하얼학회의 초청으로 방중을 통해 MOU 체결 | |
| 11.26~ 16.1.28 | 중국 베이징 | 중국 차하얼학회 정책토론회 및 MOU 체결 | 중국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차하얼 학회와 정책 교류 및 MOU 체결 | 연구원 출장 |
| 12.2 |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 | 아데나워재단 카르스텐 그라보 전문위원 여의도연구원 방문 |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프로젝트 현황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여의도 연구원 방문 | |
| 12.10~ 12.12 | 일본 동경 | 통일준비위원회 일본지역 공공외교 활동 | 일본 정부, 대학, 언론계 등 북한문제 관련 의견수렴 활동 및 교민과의 대화 | 통준위 출장 |

주제 : 시민사회 균형 발전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4년 7월 1일 ~ 2015년 1월 31일(7개월)
- 연구분야 : 운영, 정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의 심각한 불균형 비대칭 발전의 원인 규명과 극복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보수주의 운동의 역사, 주요 보수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비교, 보수와 진보 시민 단체의 불균형 발전 극복방안

☑ 연구성과

- 당·정의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 제고

주제 : 다문화 대한민국을 위한 모색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6일 ~ 2015년 3월 16일(5개월)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 연구내용

- 다문화지원책의 개선을 위해 결혼이주자에서 한국정착(주)자로의 정책대상의 전환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의 자녀정책에 대한 정책역량 강화
- 다문화정책의 일원화
- 이주자의 노동력 및 경제력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여연정책보고서> 2015-07 발간

주제 : 박근혜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성공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기간 : 2014년 12월 16일 ~ 2015년 3월 16일(3개월)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의 통일경제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성공을 위한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순향을 위해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의 호응 유도
- 同 구상의 핵심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내야 하고, 중앙아시아 등에 대한 교역과 투자 수요의 파악이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여연정책보고서〉 2015-05 발간

주제 : 박근혜정부 2주년 평가 (시간제보육&맞벌이지원)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2월 6일(1개월 6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단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욕구로부터 출발한 시간제 보육제가 현재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 왔는지 짚어보고, 제도를 재조명해봄으로써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사항을 점검해보고자 함

☑ 연구내용

- 시간제 보육교사 수급전망과 직무 재정립을 위한 시간제 보육사업 인력체계 마련
- 시간제 보육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지원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시간제 보육 운영기관 대상 정기교육 실시 및 별도의 공간 마련 검토
- 맞춤형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과 단기간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박근혜정부 2년 평가 국가혁신 R&D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2월 10일(1개월 10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공연구개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가능성을 검토

☑ 연구내용

- 정부 R&D 투자 대비 부진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 ①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 점진적 개선보다는 파괴적 혁신
 - ② (국가연구개발의 역할을 재정립) 시장실패의 보완에 집중
 - ③ (계획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제고) 위계 및 연계성을 강화
 - ④ (한계를 인식 ⇒ 선택과 집중) 통·폐합, 혁신형 중소기업
 - ⑤ (국가R&D 거버넌스 정립) 미래부 배분·관리·평가 집중
 - ⑥ (R&D 기획 및 평가체계 개선) 신중한 기획, 평가 표준화
 - ⑦ (심각성 관련 국민공감대 확보) IMF 시절 수준의 개혁동력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박근혜정부 2년차 평가 - 공공부문 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2월 12일(1개월 12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제시

☑ 연구내용

-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추진경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성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추진 계획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참고 자료로 활용

주제 : 박근혜정부 2년차 평가 -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2월 12일(1개월 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제시

☑ 연구내용

- 박근혜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 조직 및 법제 정비 내용과 평가,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 향후 과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참고 자료로 제공

주제 : 저출산 기본계획 개선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3월 7일(2개월 7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여성가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저출산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총 67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 현재 효과 없이 지나치게 다양한 사업추진 구조에서, 향후 저출산의 주요 원인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환해야 함
- 현재 예산·재정 투입 중심의 대책에서, 향후 예산·재정 이외의 다양한 방법, 입법·홍보·새로운 대안모색 등의 방법에 의한 저출산 대책을 모색해야 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싱글패밀리 시대에 따른 정책 개선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3월 13일(2개월 13일)
- 연구분야 : 여성가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나라 1인 가구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부+자녀 가족을 전제로 구축된 현행 대한민국의 경제, 주택 등 각종 제도와 정책전반의 기초변화가 요구됨

☑ 연구내용

-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정책의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재점검이 요구되며,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가족정책 개입대상으로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
- 1인 가구가 사회에 통합되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며,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적 포용성을 높여가야 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건강보험체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3월 15일(2개월 15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00년 국민건강보험 통합시 설계된 현행 부과체계는 무임승차자 양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

☑ 연구내용

- 세대원 수나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부과기준을 신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 연간 소득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형제·자매, 방계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을 연 1,000만원 이상 소득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00% 적용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박근혜정부 2년차 교육부문 평가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일 ~ 2015년 2월 10일(1개월 10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교육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책 검토
- ☑ 연구내용
 - 박근혜정부 2년차 교육정책 분야 현황 점검
 - 박근혜정부 2년차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
 - 박근혜정부 2년차 교육정책 분야 향후 과제 도출
-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2015년 남북 경제협력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6일 ~ 2015년 1월 26일(21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 3년차를 접어들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하고, 이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방향 설정 및 경험의 주요 아이템 개발이 필요

☑ 연구내용

- 남북경협 및 북한의 대외경협 현황
- 남북경협 관련 쟁점에 대한 기본입장
- 주요 남북경협 현안에 대한 대책
- 향후 검토할 만한 새로운 남북협력 아이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박근혜정부 2년차 평가 - 남북관계와 통일환경 조성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2일 ~ 2015년 2월 12일(32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4년 박근혜정부 2년차 통일분야 정책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박근혜정부의 효율적인 국정운영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박근혜정부는 대북 억지력 확보를 통한 안보태세 공고화 및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하였으며, 남북관계의 정상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남북한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여전히 미흡함에도, 북한동포의 삶의 질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음
- 한미관계, 한중관계의 돈독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불협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또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통일외교가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박근혜정부 2년차 평가 - 외교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2일 ~ 2015년 2월 12일(32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4년 박근혜정부 2년차 외교분야 정책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박근혜정부의 효율적인 국정운영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박근혜정부는 외교분야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나, 201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시적인 외교성과가 미흡한 점은 부정적인 면
- 드레스덴 구상을 통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확산
- 한미, 한중관계의 결속 강화 및 북핵불용의 원칙 확인
- 한미원자력협정 타결과 2년 연장 교환에 성공
- 일본의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체제 마련 등
- 반면, 부정적 측면은 한미관계, 한중관계 사이의 균형외교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한일관계의 냉담으로 인한 일본내 반한감정의 확산과 한일간 외교 냉각기 지속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박근혜 정부 2주년 평가 국민여론조사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2일 ~ 2015년 2월 12일(30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2주년을 맞아 제반 국정운영 관련 국민여론을 조사함으로써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 과제를 점검하고 우선 추진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함

☑ 연구내용

- 전반적인 국정운영 평가
- 국정운영 우수분야 및 미흡분야
- 향후 국정운영 역점 희망 분야
- 국가 경제상황 평가
-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평가

☑ 연구성과

- 정책참고자료로 최고위원회에 보고

주제 : 테러방지법 제정의 시급성 및 입법 포커스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3일 ~ 2015년 4월 20일(90일)
- 연구분야 : 국방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IS에 의한 무차별 테러공격의 확산 및 친북인사에 의한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습, 상시적 위협에 놓인 북한궤 테러 등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논의 및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대두

☑ 연구내용

- 우리의 기존 법제만으로는 테러대응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부터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국회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인권침해 문제 등 테러방지법안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 우선 영구법이 아닌 한시법으로 제정
- 분단현실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 국정원내 '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안전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및 대응시스템 구축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지금 지구촌은 ‘테러와의 전쟁’ 中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일 ~ 2015년 2월 20일(20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전세계적으로 IS 등 테러 위협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의 테러대응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미국의 군사개입 현황 분석
- 영국의 자국민 IS 참여에 대한 대응 분석
- 독일의 신나치즘-IS 결합 현황 분석
- 프랑스의 테러 대응법 입법 현황 분석
- 일본의 정보기관 확대 동향 분석
- 한국에 주는 시사점 분석

☑ 연구성과

- 여의도연구원 계간지 <여연시선>에 게재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전세시장 국민혼란, 바로잡을 묘책은 없나?

- 연구기간 : 2015년 2월 9일 ~ 2015년 3월 23일(43일)
- 연구분야 : 국토교통,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의 전세시장 행보는 주택시장의 일반 공식을 벗어난 현상
-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세의 수급 불균형이며, 따라서 그 해법은 전세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는 것임
- 단기적 전세난의 진정 및 중장기적 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연구내용

- 단기적 대책: 서민층의 주거불안 진정을 위해 급속한 월세전환 정책은 지양하되, 부분 전세(부분월세)로 유도(전세의 (보증부)월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흐름). 정부에서 표명한 금년 중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세수요를 제때 흡수
- 중·장기적 대책: 전세제도의 쇠락을 용인하되, 점진적으로 월세 전환을 유도하여 현재의 전세난을 월세로의 정착률을 위한 계기로 활용.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타게팅 정책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주택바우처 제도 안착 등의 임대주택정책 지속. 임대차시장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육성이 최우선 과제

☑ 연구성과

- 당·정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한반도 경제, 평화의 빅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7일 ~ 2015년 4월 16일(2개월)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의 통일경제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단기 활성화 방안으로 한류문화를 통한 평화통일 확산, 중장기 방안으로 창조적 국가 미래전략 제시
- 유라시아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한류 문화행사를 진행,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유라시아 및 글로벌의 평화번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초석 마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여연정책보고서〉 2015-08 발간

주제 :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 연구기간 : 2015년 2월 20일 ~ 2015년 3월 5일(15일)
- 연구분야 : 정무,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 목적

- '기울어진 운동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구 내용

- 역대 선거결과와 국민의식 조사 등 각종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

☑ 연구 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그 보완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2월 21일 ~ 2015년 3월 2일(9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가 그 목적이고,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와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의 목적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동 가능성 제고라는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
- 기간제 근로자, 곧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새정연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일 ~ 2015년 4월 20일(1개월 20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면서 그 실행방안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재보선 공약으로 제시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고,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속도 및 법제화 여부인 바, 실증분석과 해외사례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

☑ 연구내용

- [최저임금 급속 인상] 청년실업과 영세기업 경영의 악화
 - * 청년실업과 영세기업 경영악화 등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급속인상 시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 매우 높음
- 최저임금 결정의 법제화] 예외적인 방법으로 폐단 우려
 - * 해외 주요국가 중 최저임금결정의 법제화는 미국이 유일
 - * 전 세계적으로 '노사협상에 따라 정부가 결정함'이 대세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주제 : 제19대 총선에 적용해 본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일 ~ 2015년 5월 15일(2개월 15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도입시 우리나라 정당정치에 미칠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연구내용

-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해설,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결과, 결과 분석 및 시사점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주제 : 새누리당이 새겨 봐야 할 독일의 시민교육

- 연구기간 : 2015년 3월 6일 ~ 2015년 3월 17일(12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정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독일의 연방정치시민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 대한 현황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방향성 도출

☑ 연구내용

- 독일의 정치시민교육의 개념, 목적, 원칙
- 독일의 연방정치시민교육원의 설립목적, 연혁, 행정, 주요사업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복지·증세 관련 여론 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3월 6일 ~ 2015년 3월 20일(14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기획재정,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증세·복지 관련 일반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당의 stance를 정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현재 우리나라 복지 부담 및 복지 수준, 향후 우리나라 복지정책 방향, 무상복지 구조조정, 복지 증세, 부자증세 및 법인세 인상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분석
- 복지·증세 관련 향후 새누리당 로드맵 제시

☑ 연구성과

- 정책참고자료로 최고위원회에 보고

주제 : 서민금융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3일 ~ 2015년 4월 13일(1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안심전환대출 정책으로 재 점화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논란이 정치적 부담으로 나타날 우려
-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전제 아래, 새누리당이 현행 서민 금융서비스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적정성과, 인하 필요시 그 근거와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의 소폭 인하를 추진할 필요
- 현행 금리 상한(연 34.9%)을 30~25% 수준으로 5~9.9%p 인하
- 판단의 근거
 - 첫째, 법상 규제대상인 대부업체의 상대적 수익률이 높은 편임
 - 둘째, 세계적인 초저금리 추세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셋째, 시장금리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상태임
 - 넷째, 사실상 대부분의 미등록대부업체(사채)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상 금리 상한(현행 25%)과 조화 내지 일치되어야 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사드(THAAD) 쟁점과 대책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3일 ~ 2015년 3월 30일(8일)
- 연구분야 : 국방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對北 미사일 방어 차원에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국내정치적, 외교적, 안보적 파급영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입장 정리가 필요

☑ 연구내용

- 대북 미사일 방어 차원에서 사드 도입은 필요하나, 사드 도입이 군사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함
- 사드 배치는 긴 호흡을 갖고 검토 필요
- 향후 한국은 미·중간 갈등과 중국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보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우리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최우선순위로 하면서 이웃안보 차원에서 호혜적 대중관계를 유지할 것이 바람직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 진행 상황

- 연구기간 : 2015년 3월 30일 ~ 2015년 4월 5일(7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타협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향후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정규직(저성과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는 정규직 채용기피로 이어지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2년 이후 재계약시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기간제법은, 그 법의 취지와 다르게, 2년 이내 해고를 양산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가 제기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두 핵심 과제는, 현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의 어려움(노동시장 이중구조)을 향후 전환 가능성 제고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향임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2015년 청년 가치관 (성공·가족·결혼·친구·대학·취업·직장)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3월 31일 ~ 2015년 5월 31일(2개월)
- 연구분야 : 여성가족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각 분야별(성공, 가족, 결혼, 친구, 대학, 취업, 직장) 정량적 설문 조사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을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음

☑ 연구내용

- 성공의 가장 주된 기준으로 전체 4명 중 1명(25.8%)이 사회적 시선을 중시하는 경제적 성공(19.0%)과 명예·권력 등에 대한 인정(6.8%)을 꼽음
- 청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에게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지하며, 44.6%는 부모님과 고민을 공유하며, 54.5%는 의사 결정 시 부모님에게 영향 받음
- 청년 10명 중 7명(71.3%)은 삶의 성공에 '배우자 선택'이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으며, 여성(71.5%)과 남성(71.3%)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청년 10명 중 4명(41.7%)는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고민으로 '취업·스펙'(82.6%)을 꼽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세미나 결과 “4.29 재보궐선거 전망과 대책”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일 ~ 2015년 4월 13일(1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책자문위원회 정세분석분과 차원에서 4.29 재보궐선거 현황과 대책 제시

☑ 연구내용

- 4.29재보궐선거의 의미와 목표, 여론동향 분석, 선거전략 및 대책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 자료로 제출

주제 : 판단의 오류 - 진영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일 ~ 2015년 5월 15일(45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 목적

- 한국 사회의 이념지향 분석을 통해 진영논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유권자의 인식은 중도수렴하거나 상충적 태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정치권의 이념적 양극화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과 함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생활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

☑ 연구 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안정화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0일 ~ 2015년 7월 10일(82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영유아기의 공보육·공교육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제공·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추진배경, 경과, 현황 점검
- 영유아 공보육·공교육 체제 안정화의 방향과 목표
- 정책과제 도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국민공천제 도입의 당위성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4일 ~ 2015년 5월 8일(15일)
- 연구분야 : 정무,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민공천제 도입과 정치혁신 상관관계 분석

☑ 연구내용

- 국민공천제 도입 취지
- 국민공천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야당안 평가
- 국민공천제와 정치 혁신

☑ 연구성과

- 당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7일 ~ 2015년 5월 1일(12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연구내용

- 현재 운영되는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 분석
- 현재 운영되는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英 총선공약 눈여겨 봐야 할 6가지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7일 ~ 2015년 5월 15일(18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해외 보수정당 공약의 모니터링 필요성은 원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온 사항
- 영국 보수당의 정책트렌드를 분석하여 당의 정책개발 방향을 선도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내용

- 英 보수당의 최신공약 리스트업
- 분야별(경제, 복지, 일자리, 안보, 외교, 문화 등) 핵심공약 분석
- 한국 벤치마킹 포인트 분석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1세대 이산가족 전원상봉 추진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7일 ~ 2015년 5월 18일(21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재 생존 1세대 이산가족 대다수는 한국인 평균기대수명 감안시 20년 사이에 사망할 가능성,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 54,000여 명(81.8%)은 10년 사이에 사망 가능성 높음
- 따라서 정부는 이산가족 1세대 6만여 명 중 70세 이상 54,000여 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1회 이상 상봉을 비롯하여 고향방문 및 고향정착까지 가능한 파격적인 정책 필요

☑ 연구내용

- 이산가족문제를 전적으로 인도주의 사안으로 접근, 특히 1세대 이산가족의 10년 이내 전원 상봉 및 희망자에 한해 부양자나 배우자 쪽으로의 귀환 또는 정착(재결합) 추진
-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특수이산가족문제는 국가의 기본책무인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전면적 생사 확인, 상봉, 송환 등 단계적으로 해결 추진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아베의 성장배경으로 본 역사관과 외교관 - 문제점과 대응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8일 ~ 2015년 5월 4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아베총리의 연설 및 발언을 일회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뿌리 깊은 역사관과 외교관에 있음을 인지, 이의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 필요

☑ 연구내용

- 아베의 역사퇴행적 발언의 근원은 그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출신 요시다 쇼원에서 기인
- 아베의 정치적 롤모델은 요시다 쇼원과 그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 일본 국내여론 및 한국과 중국, 미국의 여론이 악화될 경우 아베는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등 이중적 태도 견지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정당정책연구소 역할강화와 재정확충 방안 -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일 ~ 2015년 6월 15일(1개월 15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여의도연구원의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정책연구소 역량강화와 재정확충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여의도연구원 혁신 경과와 성과, 문제점과 과제, 정당정책연구소 재정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및 추진경과

☑ 연구성과

- 중앙선관위·정당학회 공동토론회 “정당정책연구소 역할강화 및 재정확충 방안”(5.15, 국회)에서 발표

주제 : 그들은 왜 독일식 선거법 도입을 주장하는가?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일 ~ 2015년 6월 30일(2개월)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 논의 공론화에 발맞춰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들의 동기와 논거 분석 및 타당성 검증

☑ 연구내용

- 비교적, 역사적, 실증적 관점에서의 독일식 선거법 이해, 독일식 선거법 옹호자들의 논거와 문체점, 시사점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독일식 선거법에 대한 이해 증진

주제 :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이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1일 ~ 2015년 5월 30일(9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

☑ 연구내용

- 우리 당에서는 근로빈곤층이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에 주도권을 잡고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2015년 청년 가치관(사회·경제)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6일 ~ 2015년 7월 31일(2개월 6일)
- 연구분야 : 여성가족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사회·경제관에 대한 정량적 설문 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정부와 사회 등 기성체제를 불신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청년이 바라는 정부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2명 중 1명(54.9%)이 '완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가장 변화를 바라는 분야로 정치와 정부를 꼽았음
- 청년들은 실업(73.6%)과 빈곤(63.5%), 자살(33.9%)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음
- 절반 이상의 청년들(54.3%)이 누구에게나 수혜가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선별적 복지'를 바란다고 응답함. 이와 마찬가지로 초중등 무상급식(56%)과 영유아 무상보육(49.5%)도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한·중 FTA 발효시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8일 ~ 2015년 6월 4일(8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중 FTA 발효 이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한·중 양국의 특혜관세 혜택 부여에 따라 남북경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비책 및 활용방안 강구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연구내용

- 5·24조치 해제의 전향적 검토
- 중국산 농산물 점유율의 급속 확대 대비
- 나진선봉 역외가공지역 설치 적극 검토
- 북한내 경제개발구에 대한 선택·집중 방식의 투자협력
- 두만강유역 한·중 다자간 공동무역특구 개발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한겨레신문사 성한용 기자 초청 간담회 결과보고 “새누리당에 바란다!”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9일 ~ 2015년 6월 2일(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겨레신문 성한용기자 초청, 진보적 시각에서의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와 비판 수렴

☑ 연구내용

- 정국동향과 차기 선거 전망,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 일본 정치가 주는 교훈, 새누리당에 대한 권고적 의견 청취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노인 기준연령 상향, 바람직한가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5년 6월 5일(5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인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환영과 우려 등 균형 잡힌 논의가 요구됨

☑ 연구내용

-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축소할수 있다는 찬성의견과 노인빈곤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함
-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노인빈곤 해소문제와 동반되어야 하며, 노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 은퇴자 협동조합 활성화 등 노인빈곤을 해소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6자회담 관련, 한·미·일 vs. 북·중·러 입장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5년 6월 7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5.27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의 서울 회동에 이어 한·미 수석대표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측 수석대표와 연쇄 양자협의를 통해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한 입장 조율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분석 필요

☑ 연구내용

-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6자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 그러나 6자회담 관련 한·미·일과 북·중·러의 온도차가 뚜렷하고, 중·러는 대북 압박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
- 따라서 북핵문제는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맞춤형 대응책' 강구가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01 발간

주제 : “가뭄재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5년 6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국토교통, 농림축산식품, 안전행정,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면한 가뭄재해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전망 및 대책 제시

☑ 연구내용

- 가뭄현황, 피해지역, 한강수역 현황 등 가뭄실태, 가뭄의 원인과 향후 전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피해극복 방안, 해외 사례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영국과 독일의 복지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5년 6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영국총선 및 독일 슈뢰더 총리 방한의 영향으로 2015년 5월에 유럽의 복지정책모델, 개혁정책 모델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유럽의 복지개혁 사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축적하려는 목적

☑ 연구내용

- 과거 독일병과 영국병의 원인 진단
- 양국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
- 한국형 복지의 방향(시사점)

☑ 연구성과

- 여의도연구원 계간지 <여연시선>에 게재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8.15 평화통일선언’ 추진 및 ‘5.24조치’의 해법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5년 6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5.24조치’를 둘러싼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同 조치의 진취적 해법 모색

☑ 연구내용

- 안보와 남북관계 개선 간 균형을 취하되, peace-keeping(평화유지)을 넘어 peace-making (평화창출) 기초에서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접근방법 채택
- 남북대화과 관계개선을 바라는 압도적 여론(약 90%)과 총선을 10개월 앞둔 정치현실을 고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공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黨의 대북·통일정책(공약) 입안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5년 6월 15일(0.5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메르스사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급감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 심화 우려
- 국민 소비심리의 급속한 위축 등에 따른 GDP손실이 현실화
- 유통업, 관광레저업, 요식업 등 서비스산업에 직격탄

☑ 연구내용

- 금번 메르스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 黨에서 는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극감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일사불란한 컨터롤타워 확립을 위해 협력
-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제반 대책을 정부에 촉구

☑ 연구성과

- 당·정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한국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2015년 9월 30일(4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연금개혁의 동향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화
- 한국 공적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쟁점 분석
- 한국 공적 연금체계의 구조개혁 방안

☑ 연구내용

- 국민연금 이원화 논의: 소득비례부분과 균등부분의 분리 여부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문제: 연계 폐지 (기초연금에의 기여 전제) 혹은 재조정
- 기초연금의 최저연금으로의 전환: 장기적 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적 연금(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합리적 관계 설정
- 퇴직연금의 활성화 방안
- 이종 공적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임

☑ 연구성과

- 정책세미나 진행, 원내 용역보고 및 추후 연구목표 설정

주제 : ‘중국제조 2025’ 계획과 정책적 시사점

- 연구기간 : 2015년 6월 8일 ~ 2015년 6월 12일(5일)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국 국무원이 5월 ‘중국제조 2025’로 칭한 국가경제전략은 향후 중국이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전환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경제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연구내용

- 同 계획의 추진으로 중국 주요 제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최첨단 산업의 고속성장으로 이어져, 한국에게는 위기와 기회의 요소 병존
- 향후 시행 예정인 특혜정책들은 협력에 참여하는 양국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중국시장 수요 업그레이드는 한국 제조상품 및 핵심부품의 수요 증가를 견인할 수 있음
- 13.5 및 14.5 계획에서 중국의 주요 제조업 및 최첨단 산업분야의 세제혜택과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주목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02

주제 : OSJD 정회원 가입 무산 및 향후 대책

- 연구기간 : 2015년 6월 8일 ~ 2015년 6월 14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4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OSJD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정회원 가입이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무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동력 확보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연구내용

- OSJD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됨에 따라 북한의 반복적인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한국의 유라시아 철도협력에 차질이 생김
- 북한이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OSJD 가입으로 TKR, TSR, TCR 등의 연계가 활발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대외 개방의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에게 경제적 유인책 및 3자협력을 제시하여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으로 회원국들에게는 OSJD의 의결구조를 2/3 찬성제로 변경하도록 설득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02 발간

주제 :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6월 9일 ~ 2015년 6월 26일(18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신종 감염병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개선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메르스 정보 부족으로 유입가능성 간과 및 전파인식 미흡, 방역관리 매뉴얼 부재 등으로 인한 초기방역 실패
- 컨트롤타워 산재 및 예방역량 부족으로 인한 확산예방 실패
- 실무 전문조직 위상·역량 강화 및 유행단계에 따른 신속한 컨트롤타워 전환체계 구축
- 공공의료기관 및 감염전문인력 강화 등 보건의료시스템 정비 및 확충
- 역학·바이러스학에 근거한 대국민 감염예방 역량 강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AIIB, 통일기반 조성에 활용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5일 ~ 2015년 6월 17일(3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범으로 우리경제의 돌파구 및 통일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해 이의 적극적 활용 필요

☑ 연구내용

- AIIB는 북한 재건을 비롯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자원 마련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
- 특히, 동북아 개발 및 통일기반 조성에 AIIB의 적극적 활용 필요
- AIIB 투자 유치를 통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연결 및 중국의 一帶一路와 연계 모색
- GTI 개발과 AIIB 참여 연계를 통해 GTI를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추진기관(PIU)으로 발전시켜 향후 동북아 개발과 통일자원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03

주제 : 2015 한국인의 삶의 질과 정책적 시사점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5일 ~ 2015년 6월 17일(3일)
- 연구분야 : 정부/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 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토대로 한국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알아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봄

☑ 연구내용

- '2015 더 나은 삶 지수(BLI)' 한국 결과 분석
- 국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탈물질적 영역의 정책 대안에 관심 기울일 필요
- 대기오염, 식수, 먹거리 등에서 국민 불안요소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근로시간 대비 근로 생산성 향상 방안/직장 일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근로자 업무여건 개선 방안/국민 여가활용 개선 방안 마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03

주제 : ‘6. 15 정부성명’(北)에 대한 남북대화 역제의 검토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6일 ~ 2015년 6월 22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15 북한의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 이에 대한 의도 분석 필요

☑ 연구내용

- 북한이 최근 온건한 對南 공세를 취하면서 우리의 호응을 압박
- 이는 대남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한 대화 공세 차원으로 봉보이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전가를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분석됨
- 정부는 우선 각종 공식·비공식 채널을 동원해 북한의 진위 파악에 주력해야 함
- 아울러 북한이 우리국민의 송환 명분을 ‘인도주의’를 내건 점에 주목, 북한의 가뭄대책 마련 및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 현안에 대한 남북대화 역제의 검토가 필요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03 발간

주제 : 북러관계 긴밀화에 대응한 한러관계 내실화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2일 ~ 2015년 6월 26일(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러간 방산협력을 비롯한 북러 군사활동 방지협정 체결, 러시아의 對북한 부채 당감 등 양국관계의 긴밀화가 예상롭지 않으므로, 한·러간 안보와 경제 부문의 협력을 통한 양국관계의 내실화가 시급

☑ 연구내용

- 러·중·북 북방 3각 연대의 복원 가능성 우려
- 러·북 군사협력의 확대 및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로 인한 동북아·한반도 안보위기 심화 가능성
- 반면, 경제, 에너지, 물류 등 남·북·러 3각 협력 촉진은 긍정적 측면
- 이에 따라, 한·러, 한·중 전략대화의 내실화 및 장관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의 차단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04

주제 :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대북정책 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2일 ~ 2015년 6월 28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

☑ 연구내용

- 6.23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 북한은 인권사무소 설치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 통보 및 우리국민에 대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하였음
-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인권과 남북관계 개선의 분리 대응 및 특히 북한의 가뭄피해 지원을 고리로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04 발간

주제 : 사학연금법 개정 불가피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일 ~ 2015년 7월 8일(7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5.5)에 따라 사학연금의 개정 또한 필요한 바, 그에 대한 당론 필요

☑ 연구내용

- 사학연금의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유지가 전례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형평성 유지 문제 발생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새정연의 급속 최저임금 인상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일 ~ 2015년 7월 30일 (1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월 재보선 이후 엔저·메르스·가뭄 등 부정적 요인으로 경제 위축 ⇒ 최저임금 인상時 고용감소 가능성 대폭 증대
- 그러나 새정연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오히려 강화 추세
 - * 최저임금 하한선 8,100원, 최저임금 1만원 서명 캠페인
- 새정연의 최저임금 급속인상 정책을 현 상황에서 재검토

☑ 연구내용

-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경영계는 물론이고, 최저임금 근로자 다수도 과도한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보다는 단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고, 추경편성을 통한 노동 수요 감소의 확충,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적용 (업종별, 지역별) 등 충격완화 정책을 병행 추진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주제 :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검토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일 ~ 2015년 7월 31일(1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정연은 추경처리 협력조건으로 법인세율 인상 명시화 요구
 - * 법인세율 인상은 재정건전성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기여
- 새정연이 제시한 추경처리 협력 요구조건의 예상효과 분석

☑ 연구내용

- 새정치연합이 추경협력 조건으로 내세운 법인세율 인상은 특히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환경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저성장, 자본유출, 불안정화 등 추경효과가 상쇄될 우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법인세 인하 경쟁
 - * 최근 우리와 경합관계에 있는 주요국들의 법인세 인하 추세
-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전세계적 추세에 역행
 - * 美 금리 인상이 압박,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국제자본의 이탈 등 불안정성 급증 우려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주제 : 19대 총선의 복기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일 ~ 2015년 8월 10일(41일)
- 연구분야 : 정무,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 목적

-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참고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19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각종 연구 결과들을 참조하여 총선의 구도, 공천, 정책, 전략 등 전반에 대한 재평가
- 선거 결과가 지니는 함의와 시사점 모색

☑ 연구 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약화론’에 대한 반론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일 ~ 2015년 8월 2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중정당모델에 입각한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약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구내용

- 오픈프라이머리 찬반론, 대중정당모델 비판,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약화론 비판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이해 증진

주제 : 정당투표로 본 제19대 총선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일 ~ 2015년 10월 16일(3개월 1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제19대 총선 정당투표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정당요인이 지역구 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 연구내용

- 정당요인의 영향력, 정당·진영간 득표경쟁력, 새누리당의 정당득표율 분포,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선거의 관련성, 시사점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北엘리트 탈북러시에 따른 대비책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일 ~ 2015년 7월 8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엘리트의 동요 및 탈북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 불안정의 핵심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연구내용

- 최근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탈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권력의 핵심인 군부실세와 국가안전보위부 간부 등의 탈북은 매우 심각한 문제
- 북한 당국이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간부들의 동요는 일시 소강될 전망이나, 사상 검증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증폭될 것임
- 그러나, 한국행을 택한 엘리트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05 발간

주제 : 고리 1호기 해체가 국내 기술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및 조건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일 ~ 2015년 7월 13일(11일)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내 기술로 해체를 이루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 제시하여 정책적 방향 수립

☑ 연구내용

- 해체종합연구센터의 설립: ▲ 개발된 해체기술은 '센터'에서 공학검증이 필요, ▲ 공학검증 과정에 상용화의 주체인 기업체에게 해체기술 이전
- 해체전문연구인력의 확보: ▲ 현재 확보된 해체전문연구인력은 약 48명, ▲ 원전 해체에는 연평균 최소 150명이 필요
-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해체기술 자립화에 남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2016년 총선 대비 부동층 특성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7월 7일 ~ 2015년 7월 15일(9일)
- 연구분야 : 정무/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 유권자 및 유권자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부동층의 특성 분석

☑ 연구내용

- 부동층 정의
- 선거별 부동층 규모
- 부동층 투표 성향
- 부동층 공약을 위한 시사점

☑ 연구성과

- 당·정 활동의 참고자료로 최고위원회 보고
- 〈현안보고〉 2015-25

주제 : 이란 핵협상 타결의 의미와 시사점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5일 ~ 2015년 7월 22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란 핵협상의 최종 타결이 갖는 의미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주는 시사점 탐구

☑ 연구내용

- 이란 핵협상의 최종 타결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 핵문제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
- 북한 비핵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 특히 정부는 북한에게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가 김정은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임을 강조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촉구해야 함
- 또한 우리 주도 아래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핵협상 타결 이후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혜택이 핵을 유지하려는 현 상황보다 크다는 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6 발간

주제 :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6일 ~ 2015년 7월 22일(7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장년 고용안정 및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임금피크제는 장년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능토록 해 청년·중장년의 상생고용 실현에 기여
- 무엇보다 노사정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중이 필요
-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노동계가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로 전환하도록 참여 독려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의원정수 확대 주장의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2일 ~ 2015년 7월 29일(8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구내용

- 비례대표 증원을 통한 의원정수 확대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새누리당의 대응방향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시진핑 주석의 동북3성 방문 -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2일 ~ 2015년 7월 29일(8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시진핑 주석의 동북 3성 방문은 북중관계 정상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에 유의, 특히 연변자치주를 비롯한 북한의 나선 지역 등 접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진출을 위한 정책 입안이 필요함

☑ 연구내용

- 시진핑 주석의 연변자치주 방문은 소수민족 안정화에 목적을 둔 것으로 분석되며, 중북관계의 개선 또한 시사하고 있음
- 특히 동북 3성 접경지역 도시 방문은 낙후된 지역인 동북지방의 '동북진흥'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음
- 이와 함께 북한 나선을 중심으로 중북 경험 또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
- 중북관계의 정상화에 대비하여 한중관계 및 남북관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07

주제 : 광복 70년! 조선족·고려인을 끌어안을 때

- 연구기간 : 2015년 7월 30일 ~ 2015년 8월 5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들을 민족공동체 틀 속으로 끌어들이고 통일과 국가발전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연구내용

-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의 空洞化가 빠르게 진행
- 국내 체류 고려인의 생활상태 또한 열악
- 우리가 이들에게 적극적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조선족과 고려인은 글로벌시대 중국과 舊 소련 지역 진출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귀중한 자산
-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동포정책, 특히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입안과 추진 시급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08

주제 :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의 허구성”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2015년 8월 19일(19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오픈프라이머리 4대 불가론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구내용

- 오픈프라이머리 4대 불가론의 내용, 정치권의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에 대한 반박논리 정리,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론의 허구성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대형마트와 SSM 규제 찬반논쟁과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2015년 8월 20일(0.7개월)
- 연구분야 : 정무,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 소매유통업에 대한 규제 문제는 향후 정치권의 핫이슈가 될 것임
- 대형마트와 SSM 규제의 사회경제적 목적과 소비자후생의 관점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바탕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연구내용

- 대형 소매유통업 규제 관련 현황 분석
- 전망과 제언: 국내 최대 유통기업군인 롯데의 경영권 분쟁과 정부의 메르스 이후 경기활성화 추진 등으로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규제의 사회경제적 목적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 필요하며, 대형마트·SSM 규제에 대한 소비자후생 변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소비자의 관점과 인식 반영 필요, 또한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

☑ 연구성과

- 당·정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국민공천제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2015년 8월 24일(2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민공천제의 성공적 도입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국민공천제 도입을 위한 조건과 전략,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책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전월세시장 동향과 정책대응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2015년 9월 15일(1.5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국토교통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의 전세시장 행보는 주택시장의 일반 공식을 벗어난 현상
-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세의 수급 불균형이며, 따라서 그 해법은 전세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는 것임
- 단기적 전세난의 진정 및 중장기적 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연구내용

- 시장정상화(활성화)에서 '주거안정'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 서민층의 주거불안 진정을 위해 급속한 월세전환 정책은 지양하되, 부분 전세(부분월세)로 유도
-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전세제도의 쇠락을 용인하되, 점진적으로 월세 전환을 유도하여 현재의 전세난을 월세로의 정착률을 위한 계기로 활용
-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타게팅 정책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주택바우처 제도 안착 등의 임대주택정책 지속
- 임대차시장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육성이 최우선 과제

☑ 연구성과

- 당·정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노동시장 선진화의 핵심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3일 ~ 2015년 8월 20일(7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개별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동시장 선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과제를 제시함

☑ 연구내용

- 노사간 이견을 보이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제도가 사측에 의해 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노측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제도 남용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노측의 신뢰를 획득하도록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대타협의 관건임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박근혜정부 교육개혁의 내용과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3일 ~ 2015년 8월 24일(12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 교육개혁의 경과, 주요 내용, 문제점 및 해결과제를 검토하여 성공적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박근혜정부 교육개혁의 추진 배경 및 경과
-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 문제점과 해결과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최근 세계경제 위험요인 분석 -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5일 ~ 2015년 9월 2일(15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 '세계경제 9월 위기설'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대안을 제시

☑ 연구내용

- 중국 발 통화전쟁 : (데자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유사
- 중국 경제의 경착륙 : 자산거품 붕괴시 복합불황 장기화 우려
-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I : 경제 회복 ⇒ 금리 인상 가능성
-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II : 미중 패권경쟁 차원 금리 인상
복합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위험관리수단 개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한국 경제의 충격흡수 능력과 경쟁력 제고
- 개혁 추진과 수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주제 : 무역이득공유제 쟁점 검토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5일 ~ 2015년 9월 15일(1개월)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중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무역이득공유제가 쟁점 부상

☑ 연구내용

-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찬반 논리를 검토
 - * 경제이론, 헌법과 법리적 검토, 국내외 실행 가능성 등
- 무역이득공유제와 유사한 국내외 무역피해지원제도 검토
 - *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별도의 피해구제제도는 없고(미국, 대만 제외), 포괄적인 농어업소득안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원은 정부 재정으로 조달
- 무역이득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정책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FTA 기본 정신에 입각할 필요
- 기존 FTA 지원법 간의 상호연계 및 통합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우선되어야 함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주제 : 대학구조개혁의 현황과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7일 ~ 2015년 9월 18일(12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학구조개혁을 둘러싼 여러 논쟁을 검토하여 대학구조개혁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

☑ 연구내용

- 대학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경과
-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 문제점과 해결과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남북 고위급협상 타결 이후 對北 관리 중요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2015년 8월 26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의 DMZ내 목함지뢰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했으나, 양측은 '8.25 합의'를 극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을 연구

☑ 연구내용

- 이번 고위급협상은 박근혜정부의 대북 원칙에 대한 대내외적지지 확보의 계기로 작용
-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랭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특히 남북간 대화국면의 지속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함
- 동시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국제적 공론화 및 한·미·중 대북 협조체제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화는 여전히 유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11 발간

주제 : 노인빈곤을 축소 시급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2015년 8월 26일(7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이며,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에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

☑ 연구내용

-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적합 일자리 지정
- 2015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49%로, 국민연금 미가입자 51%가 향후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12

주제 : 새누리당 국민공천제와 야당 공천혁신안의 비교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2015년 9월 10일(2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누리당 국민공천제와 야당의 공천혁신안 비교 분석

☑ 연구내용

- 야당 공천혁신안의 내용, 새누리당 국민공천제와 야당 공천혁신안의 비교, 시사점

☑ 연구성과

- 새누리당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비전2016위원회> 시대정신 및 비전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2015년 12월 31일(4개월 11일)
- 연구분야 : 정무/정치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총선을 대비하여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및 시대적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비전을 도출

☑ 연구내용

-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문제점들과 해법 모색
-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시대정신 파악
- 향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정책공약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2016비전위원회 - 여성, 가족, 청소년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2015년 12월 31일(4개월 11일)
- 연구분야 : 여성가족,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의 정책개발을 통해 각각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함
- 사회 구석구석 여성의 자리를 넓히고 청소년을 위한 디딤돌을 더 놓아 가족 모두를 위해 행복한 자리가 마련된 조화로운 양성평등 국가를 향해 한 발짝 꺾춤 뛰어오르자는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연구내용

〈여성정책〉

-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 여성들이 70세까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족정책 목표〉

- 불만제로 안심 보육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취약 가족들의 고른 생활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연구성과

- 정책세미나 진행, 정책참고자료로 최고위원회 보고, 자료집 배포

주제 : 비전2016위원회 - 문화분과 정책개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2015년 12월 31일(4개월 11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정책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1차적으로 총선을 대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선도적 정책개발을 목표로 연구 진행

☑ 연구내용

- 관련 전문가인 분과위원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체육관광분야 니즈 점검
-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참여 세미나 총 12회 진행
- 3대 목표, 11대 전략과제, 그리고 수십 가지의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는 정책제안서 발간

☑ 연구성과

- (비전2016위원회) 분과연구성과 및 당의 정책개발에 활용

주제 : 비전2016위원회 - 교육분과 정책개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2015년 12월 31일(4개월 11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총선을 대비하여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교육 분야의 선도적 정책개발을 목표로 연구 수행

☑ 연구내용

- 관련 전문가인 분과위원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분야 정책 필요성 검토
- 관련 전문가 참여 세미나 총 7회 진행
- 교육분야 비전, 목표, 세부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 연구성과

- (비전2016위원회) 교육분과 연구성과 및 당의 정책개발

주제 : 비전2016위원회 - 과학기술분과 혁신분과 정책개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2015년 12월 31일(4개월 11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총선을 대비하여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선도적 정책개발을 목표로 연구 수행

☑ 연구내용

- 관련 전문가인 분과위원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분야 정책 필요성 검토
- 관련 전문가 참여 세미나 총 7회 진행
- 과학기술혁신분야 비전, 목표, 세부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 연구성과

- (비전2016위원회) 과학기술혁신분과 연구성과 및 당의 정책개발

주제 : 비전2016위원회 - 사회안전분과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2015년 12월 31일(4개월 1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한민국의 국가비전 및 새누리당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정비와 함께 중·단기적으로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대비한 당의 정책·공약 연구 개발

☑ 연구내용

- 실질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조정·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과 경제의 상생 도모
- 사회안전의 지속적 성장 추진과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화
- 안전문화와 안전복지의 구현

☑ 연구성과

- (비전2016위원회) 사회안전분과 연구성과 및 당의 정책개발

주제 : 비전2016위원회 - 통일안보외교분야 정책개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2015년 12월 31일(4개월 11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국방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총선을 대비하여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통일·안보·외교 분야의 선도적 정책개발을 목표로 연구 수행

☑ 연구내용

- 관련 전문가인 분과위원과의 협업을 통한 통일·안보·외교 분야 정책 현황 진단 및 필요성 검토
- 관련 전문가 참여 세미나 총 7회 진행
- 통일·안보·외교분야 비전, 목표, 세부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 연구성과

- 통일·안보·외교 분야 당의 정책과제 발굴
- 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

주제 : 재개된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협상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1일 ~ 2015년 8월 31일(10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개별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동시장 선진화의 핵심과제(5대 수용불가 사안)에 대한 설득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

☑ 연구내용

- 노동시장 선진화의 목적과 대상을 뚜렷이 하는 것과 그 목적과 대상을 벗어나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시장 선진화에 대한 노동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비전2016위원회 - 정치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4일 ~ 2015년 12월 31일(4개월 7일)
- 연구분야 : 운영, 정무,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개혁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정치개혁을 위한 비전과 목표, 정치 현실의 진단과 문제점 도출, 정치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비전2016위원회 - 정부혁신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4일 ~ 2015년 12월 31일(4개월 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무, 정보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직사회 개혁과 정부혁신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공직사회 개혁과 정부혁신을 위한 비전과 목표, 공직사회의 현황 진단과 문제점 도출, 공직사회 개혁과 정부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비전2016위원회 - 지방자치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4일 ~ 2015년 12월 31일(4개월 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지방자치 현황과 문제점 도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비전2016위원회 - 지역발전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4일 ~ 2015년 12월 31일(4개월 7일)
- 연구분야 : 국토교통,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역발전 전략 및 정책 연구

☑ 연구내용

-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 및 평가, 지역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 과제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가속되는 위안화의 국제화 - 동향과 시사점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5일 ~ 2015년 9월 10일(0.5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국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아래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음
- 역내 및 국제 금융·무역시장의 변화와 리스크가 예상됨. 이러한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기회로서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 현황 분석: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되는 추세를 보임. 이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위안화 국제화 정책 추진의 결과임
- 향후 위안화의 투자 및 보유통화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중화경제권 및 아시아권에서의 중국의 무역과 금융시스템의 영향력 확대가 불가피한 점 등의 전망 아래
- 우리나라 금융계와 무역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점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안보관련법안에 대한 일본 내 여론 및 정계동향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7일 ~ 2015년 9월 2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일본 아베정권의 안보관련법안 통과를 두고 이에 반대하는 일본 야당간 협력 움직임 및 일본국민의 반대시위가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일정책 관련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안보관련법안 통과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본내 여론 또한 찬반으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음
- 아베정권이 안보법안을 법제화 하려는 의도는 적극적 평화주의로 대표되는 “군대를 갖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외조부 기시 前수상으로부터 이어오는 안보개념을 법제화하려는 의도
- 이러한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안보관련법안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아베정권 퇴진 및 항의데모 또한 확산 움직임을 보임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12

주제 : 임금피크제의 명과 암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8일 ~ 2015년 9월 3일(7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개별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임금피크제 도입 없는' 정년연장에 의한 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은 특히 호봉·연공 임금체계 하에서는 과도한 수준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어려움을 축소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함. 이에 관련 정책 제언 필요

☑ 연구내용

- 정년은 연장되고 임금피크제는 도입되지 않으면 기업은 총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어 청년 고용절벽은 더 높아지게 되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조치임
- 따라서 청년 신규채용 범위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의한 인건비 절감 부분을 넘어설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매칭 펀드로 기업측에서도 '신규채용 지원금'(예시) 등을 마련하도록 촉구·독려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미국의 對북한 외교 - CRS Report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5년 9월 10일(10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美 의회조사국 CRS 최신 보고서 중 미국의 대북외교 전략에 관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 소개 및 현황보고 차원의 연구보고서 작성

☑ 연구내용

- 북한 경제 동향
- 미국의 대북전략 변화 예상(6자회담 회의적, 인권제제 강화 등)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무역피해지원제도 정책대안 검토 - 피해보전직불제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5년 9월 25일(25일)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

☑ 연구내용

- FTA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기존 무역피해지원제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 무역이득공유제는 개별기업 이득에서 FTA로 인한 이득의 별도산출이 어렵고, 특히 수출에만 부담금 부과 시 FTA 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 기존 무역피해지원 제도 중 우선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직접피해보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사업의 예산과 집행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 수혜자가 광범위하므로 재원은 일반회계로 조달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주제 : 격동기 미국의 선택 - 어게인 팍스아메리카나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5년 9월 15일(1개월 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의 대선후보 예비선거 시즌을 맞아 미국 내 외교안보정책의 논쟁들과 싱크탱크들의 추천 전략 분석

☑ 연구내용

- 미국의 외교안보전략 방향 3가지
- 격동기 국제질서의 쟁점 6가지(러시아, 중국, IS, 기후변화, 사이버전쟁, 새로운 전염병)
- 한국 벤치마킹 포인트 분석

☑ 연구성과

- 여의도연구원 계간지 [여연시선] 게재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말(馬)산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5년 9월 17일(0.5개월)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말산업은 교육, 레저·스포츠, 상품,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와의 접목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므로, 향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말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할 필요

☑ 연구내용

- 선진국의 경우 말(馬) 관련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의 중요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세계 10위 경제권인 한국의 말산업은 후진국 수준이며 말산업 선진화 노력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인 점 등 우리나라 말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
- 말(馬)산업 선진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함. 첫째,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덩어리규제부터 완화하고 풀어야 하며 둘째, 말산업의 추진주체를 범부처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NCS 기반의 교육체계가 필요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재벌개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주장의 허구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일 ~ 2015년 9월 9일(7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개별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재벌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벌개혁은 경제력 집중완화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내용임. 이에 정책 개발 필요 존재

☑ 연구내용

- 재벌개혁은 필요한 과제
- 재벌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 노동 시장 선진화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과제임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OECD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추이와 시사점

- 연구기간 : 2015년 9월 3일 ~ 2015년 9월 9일(7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 현황 및 자원 구성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의 급증 및 높은 민간자원 비중으로 인해 국민 체감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1인당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8.25합의’ 이후 남북한 전략환경 및 하반기 정세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9월 8일 ~ 2015년 9월 23일(16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하는 가운데 ‘8.25합의’ 이후 남북한 전략환경 및 하반기 정세 전망

☑ 연구내용

-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 조짐이 기대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의 대응방안으로 우선, 북한의 10월 미사일 발사 유예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전방위적 공조를 통한 ‘대북 관리’ 필요
- 미사일 발사時,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 동참, △대북 심리전 재개, △한·미 군사 공조를 통한 새로운 대안(확장 억지 등) 고려 등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美 공화당 지지자들의 도널드 트럼프 지지요인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0일 ~ 2015년 9월 16일(7일)
- 연구분야 : 정무/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미 대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봄

☑ 연구내용

-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미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과 트럼프의 리더적 자질에 대한 호감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됨
- 미국 유권자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회 불평등, 소득수준 저하 등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사회적 이슈임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나 여당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유권자의 불만이 누적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정치권 밖의 인물이나 새로 창당되는 신당으로 유권자의 지지가 쏠릴 가능성 있음

☑ 연구성과

- 당·정 활동의 참고자료로 최고위원회 및 소속의원 배포
- <이슈브리프> 2015-14

주제 : 중국 ‘뉴노멀’ 시대 대응수단으로서 남북경협 활성화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0일 ~ 2015년 9월 16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7%대 중속성장기에 접어든 중국 ‘뉴노멀’ 시대의 영향으로 북중경협의 둔화 가능성과 함께 한국 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대응수단의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 경협 활성화가 필요

☑ 연구내용

- 중국의 뉴노멀시대 진입으로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함께 생산설비 과잉투자, 환경오염, 높은 에너지 소모 산업구조와 자원의 높은 의존도, 중국내 요소공급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음
- 뉴노멀시대에 북중경협의 변화양상: 2012년 이후 북중무역의 증가세 둔화, 중국 파견 북한노동력 증가, 접경 중소도시 중심으로 북중 교류협력 활성화 추세 등
- 우리는 남북경협 활성화, 한중 및 다자협력 강화, 남북경협의 새로운 틀 구축, 복합농촌단지과 경제개발구의 조율 모색 등을 고려해 볼 만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14

주제 : TPP협상 타결 후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0일 ~ 2015년 9월 30일(20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TPP 협상의 타결로 한국의 불참에 대한 비판이 급등
 - * 한국의 TPP 참여 유인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

☑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TPP 참여 유인 분석(타결 이전 vs 타결 이후)
 - * 한국은 이미 양자 간 FTA 강국으로서 다자 간 FTA가 타결될 경우 혜택이 적고, 기존 경쟁력 우위 기반이 침식될 우려
 - * 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참여시 對中 관계 악화
 - * TPP 신규 가입 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대가로 추가개방 요구 예상 ⇒ TPP 참여유인 축소
- TPP 신규가입을 통한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간재 수출경쟁력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가입 추진 검토
 - * 미·중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므로 장기 통상전략을 재수립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부패방지 제도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0일 ~ 2015년 9월 30일(20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 진행,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저성장기조 및 대외불안정성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 연구내용

- 혁신과 투자 유인 부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제도의 정착이 장기성장을 위한 핵심 요건
 - * 인위적 부의 재분배가 중시되면 생산적 활동보다는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 만연으로 경제의 역동성 저하
 - * 특히 부패는 경제유인의 왜곡, 정치 불안정성 등 다양한 경로로 안정적 투자자본의 유입 억제 등 부정적인 효과
- 우리나라 제도의 질적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로 구조 개혁 추진 시 장기성장률 및 대외안정성 제고 효과 클 것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2016년 총선 대비 시대정신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2일 ~ 2015년 12월 3일(73일)
- 연구분야 : 정무/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 및 시대정신에 대한 유권자 인식을 조사, 2016년 총선 대비 새누리당 정책공약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내용

- 우리사회의 화두는 공정, 복지, 사회격차로 요약됨
- 여론조사결과에 나타난 현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사회격차가 해소되고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복지국가'임
- 사회격차 해소와 경제성장 대책으로 대부분의 유권자가 '일자리 창출'을 꼽아 세대별 맞춤 일자리 공약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임

☑ 연구성과

- 당·정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최고위원회 보고
- 당 정책위원회 워크숍 발표자료
- <현안보고> 2015-14

주제 : 공정한 업무평가기준이 노사협회의 성패 좌우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4일 ~ 2015년 9월 30일(7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9.15 협약' 이후 노동시장 선진화의 핵심적인 두 과제인 '정규직 저성과자 과잉보호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사 협회의 과제로 넘겨진 가운데, 향후 전망 필요

☑ 연구내용

- 업무평가기준을 비정규직이나 외주근로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노사 협회의 대상이 되어야 할(이미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업무평가기준의 필요조건은 수치화·계량화, 공정성·객관성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美 차기정부 외교안보정책 전망 - RAND Report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0월 8일(8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격동기 국제환경속에서 미국 차기 대권주자들이 직면한 6가지 도전과 6가지 선택지에 대한 랜드 최신 리포트 분석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변화방향 예측

☑ 연구내용

- 미국이 직면한 국제적 도전 및 현정부의 외교적 실패
- 차기정부의 선택과제와 보수싱크탱크 RAND의 추천 내용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선관위 제안 ‘(가칭)정치발전기금법’에 대한 검토 의견”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0월 14일(1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가칭) 정치발전기금법’에 대한 검토

☑ 연구내용

-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가칭) 정치발전기금’의 주요 내용, 주요 정당의 반응과 입장, 검토 의견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비급여 의료비, 국민부담 급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1월 4일(1개월 3일)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비급여 부문의 과잉 진료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남발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증가
- *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급여 진료 현황을 확인하고 해법 모색

☑ 연구내용

- 감사원은 최근 감사 결과, 비급여 의료비 관리 시정을 요구
-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및 원가 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고 있어, 의료 수요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됨
-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 원가·진료 정보의 수집 및 공개는 예산정책처도 건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계획에도 명시된 사항으로 알 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
- * 신속한 보험금 지급, 알기 쉬운 보험 약관 등 보험업계에 대한 민원 해소 또한 동시에 추진할 필요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노령화 직면한 중국의 미래성장동력은 개혁보너스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0월 15일(0.5개월)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령화에 따른 인구보너스 소실이 중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의 관건은 시진핑 주도의 전면적 개혁조치를 통한 이른바 '개혁보너스' 실현임. 이에 대한 내용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연구내용

- 노령화 진행으로 노동인구가 3년 연속 하락하는 등 중국의 노령화 및 인구보너스 소실 현황에 관해 분석함
- 중국은 미래성장동력을 개혁보너스에서 찾으려 하고 있으며, 안정적 경제발전의 실현 여부는 개혁조치의 성패가 관건인 점 등 향후 방향에 관해 전망해 봄. 예컨대 중국당국이 추진 중인 경제 개혁조치의 성패가 향후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강조

☑ 연구성과

- 당·정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새 도서정가제 시행 1년 평가 및 부작용 방지책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0월 6일(5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 도서정가제 시행 1년 평가
- 제도 시행 기대효과 분석 및 부작용 최소화 방지책 마련

☑ 연구내용

- 새 도서정가제 시행 배경 및 평가
- 온, 오프라인 서점 정책 체감도 분석 및 공정경쟁 촉진 방안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충청권 선거 결과의 시사점 및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2015년 10월 30일(30일)
- 연구분야 : 정무,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 목적

- 충청권의 역대 선거결과를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선거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

☑ 연구 내용

- 관련 자료의 분석과 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해 충청권에서의 선거 결과를 분석함
- 선거구와 시·도별 선거결과와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연구 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북중관계 경색 완화 가능성 및 우리의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9일 ~ 2015년 10월 16일(8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중국공산당 서열 5위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으로 북중관계 경색이 완화될 경우 우리의 대책 마련

☑ 연구내용

- 중국이 예상과 달리 최고위급을 북한에 파견한 이유는 양국간 이해관계가 일치된 때문
- 북중관계 복원의 핵심변수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달려 있음
- 중국의 실용적 예방외교로 소원했던 북중관계에 변화의 모멘텀이 마련되었으므로, 당분간 김정은은 주변정세를 고려한 탄력적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10.16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17 발간

주제 : 취업 이후 경력형성 초점 청년고용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5일 ~ 2015년 10월 21일(7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향은 노동시장 진입촉진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청년층 일자리의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접근이 요구됨

☑ 연구내용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청년 일자리의 생애안정성 제고를 위한 청년층 경력형성 지원, 청년층 목표집단별 정책방향 정립 등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접근방안이 바람직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일자리 경험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디딤돌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5일 ~ 2015년 10월 21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0.16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평가

☑ 연구내용

- 양국간 처음으로 '북핵 및 북한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
- 향후 TPP 가입을 비롯하여 미중간 첨예하게 갈등 중인 남중국해 현안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를 요하는 난제가 남겨졌음
- 한·미·일 대북 공조 및 한·미·중 대북 협조를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 유인이 필요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18 발간

주제 : 미 공화당 지지율 하락 요인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5일 ~ 2015년 10월 21일(7일)
- 연구분야 : 정무/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들어 공화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봄

☑ 연구내용

- 2015년 들어 미 공화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은 민주당보다 정당 이미지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우세 이슈영역에서도 유권자들의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 경쟁정당보다 높은 지지율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투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당의 정책성과와 주요 이슈를 연결시키는 담론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
- 당 정책에 대한 유권자 선호가 하락할 경우 이것이 정당 지지율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당 이미지가 미리 형성되어 있어야 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중국의 一帶一路 구상 관련 중·일 협력 가능성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2일 ~ 2015년 10월 28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국 상무부 산하 연구원이 밝힌 一帶一路 구상의 내용 분석과 함께 同 구상에 대한 중국의 목적과 중일간 협력관계 구축 가능성 및 방향에 대해 일본측의 시각을 분석

☑ 연구내용

- 일대일로 추진시 중·일 양국은 인프라 건설협력, 기술협력, 금융협력, 환경보전협력 등 4가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중국측은 일본에게 일대일로 경제협력협정의 조기 검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실무적 협력의 적극적 모색, 중·일 양국간 일대일로 산업발전여맹의 설립 등 3가지 제안을 하고 있음
- 중·일 양국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제협력을 통한 실리를 추구하고자 함에 주목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참여방안 마련이 시급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19

주제 : FTA 및 TPP 관련 美 유권자 인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2일 ~ 2015년 10월 28일(7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FTA 및 TPP 관련 미국 유권자들의 인식과 여론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한국 유권자들의 반응을 예측해 보고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연구내용

- 미국 유권자들은 FTA 및 TPP가 국가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韓·中 FTA 비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기대수출효과 등과 같은 거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나 일자리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구체적 효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향후 TPP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 유권자들의 TPP 관련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국이 TPP 가입 전에 주목해서 살펴볼 요소임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2015년 대한민국 청년 실태 분석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2일 ~ 2015년 12월 6일(1개월 16일)
- 연구분야 : 여성가족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생활을 파악하고, 청년의 삶과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고자 함. 이를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

☑ 연구내용

- 청년 2명 중 1명은 대학 재입학 시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이유로는 다른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어서(44.1%), 전공이 맞지 않아서(30.4%), 전공 취업률이 저조해서(18.6%) 등을 꼽음
- 청년 10명 중 8명은 교수·지인, 민간 취업 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정부 주관 취업 사이트와 채용 설명회·박람회를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이용률은 단 4%에 그침
- 청년 5명 중 1명(19.1%)은 본인 명의의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8.7%는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중국공산당 <제13차 5개년 계획> 주요내용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9일 ~ 2015년 11월 4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0.26~29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20년 전면 소강사회 건설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결정된 <제13차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의 국가발전계획을 담고 있어, 이의 철저한 분석과 함께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

☑ 연구내용

- 정치분야: 시진핑의 지도력 강화, 시진핑 지도사상 등장
- 경제분야: 2020년까지 도시주민소득 2010년 대비 2배 증가 목표달성, 산업구조조정, 지역발전전략, 혁신발전, 조화로운 발전 추진, 녹색·저탄소 순환발전의 산업체계 구축, 현대적 에너지 체계 확립 등
- 사회분야: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 호적인구 도시화, 절대빈곤층 지원, 자원절약형·친환경 양형 사회 건설 가속화, 환경 거버넌스 역량 확대
- 외교분야: 中國夢 실현을 위한 대외적 기초 구축, 一帶一路의 지속적 추진, 미·중 협력과 경쟁 지속 등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20

주제 : 독일 ‘Industrie 4.0’ 전략과 창조경제에의 시사점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일 ~ 2015년 11월 19일(0.6개월)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독일의 제조업 중심의 신산업정책인 ‘Industrie 4.0’ 전략 등 선진 제조업 강국들의 산업정책과 전략들을 참고하여, 제조업의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명확한 비전 제시와 함께 혁신적인 산업융합체계 구성 및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한 산업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필요

☑ 연구내용

- 독일의 ‘Industrie 4.0’ 전략과 독일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고찰
- 우리도 경쟁 우위가 있는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 등 우리의 창조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여의도연구원-아데나워재단 교류협력 현황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일 ~ 2015년 11월 20일(2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여의도연구원과 아데나워재단의 교류협력 역사와 현황 정리

☑ 연구내용

- 연도별 여의도연구원과 아데나워재단의 교류협력 내용,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와 아데나워재단 교류협력 프로그램

☑ 연구성과

- 여의도연구원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중국 위안화 국제화 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일 ~ 2015년 12월 2일(1개월)
- 연구분야 : 정무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11월30일 IMF는 위안화가 SDR 구성통화에 편입되었음을 공식 발표. 중국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도출

☑ 연구내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美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이 부각되면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 ① 무역결제통화 → ② 투자통화 → ③ 준비자산통화
- 위안화의 국제화는달러 중심 국제금융 등 미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의미하므로, 미·중 패권경쟁 격화 예상
- 자본시장에서도 한국의 對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 변동에 따른 자본의 급속 유출 등 위기 가능성에 대비 필요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1인당 GDP 증가에도 늘지 않는 개인 소득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5일 ~ 2015년 11월 11일(7일)
- 연구분야 : 정부,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민의 개인 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1인당 GDP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고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1인당 GDP 증가에 비해 개인소득 증가폭이 적은 이유는 GDP에서 개인 몫이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커졌다는 데 있음
- 잘 사는 정도에 대한 측정은 양이 아니라 질, 총소득보다는 가계소득, 평균소득보다는 중위소득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은 1인당 GDP를 높이는 것 못지않게 국민생활에 부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南 중국해 미중 갈등과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2일 ~ 2015년 11월 18일(6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 대립양상으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국제분쟁에 관한 의견 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변국 분쟁에 관한 우리 외교의 원칙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 연구내용

- 남중국해 분쟁 현황
- 주요 국제사회의 반응
- 추후 남중국해 전망 및 제언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TPP 타결 중국측 평가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2일 ~ 2015년 11월 18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0월 초 타결된 TPP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과 중국언론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국측의 대책에 대한 전망과 함께 우리의 대응책 마련

☑ 연구내용

- 중국정부는 TPP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방적 자세를 보이거나, 중국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의 對중국 견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경계
-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은 RCEP, 일대일로, AIIB 등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국제무역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한·중·일 FTA와 중·ASEAN FTA 협정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TPP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22

주제 : “좌파기득권 담론과 노동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5년 12월 3일(19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동개혁을 지향하는 청년우파의 '좌파기득권 담론' 내용 분석

☑ 연구내용

- 좌파기득권 담론의 주요 내용, 좌파기득권과 노동개혁, 좌파기득권과 야권 선거연합의 관계, 시사점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서울시 청년수당의 문제점 및 대책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2일 ~ 2015년 11월 24일(3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의도 분석과 함께 대응책 모색

☑ 연구내용

- 청년수당 정책은 정책 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상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형평성 측면에 서도 부작용 우려
-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 지연 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가계소득 둔화의 주요 배경과 향후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일 ~ 2015년 12월 8일(8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수년간 지속된 저성장 등에 기인한 가계소득 둔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지식집약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임

☑ 연구내용

- 최근 가계부채 급증, 민간소비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현주소에 관해 분석
- 이러한 가계소득 둔화의 주요 원인에 대해 고찰한 후
- 수익성 낮은 부문의 자영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 등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들을 제시함

☑ 연구성과

- 당·정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벨트(Hope-Belt)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3일 ~ 2015년 12월 9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연구방법 : 외부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분산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시켜 지역 간 균형 잡힌 성장, 지역혁신 생태계의 자생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연구내용

- 지역혁신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 주요 방안
- 기대 효과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주요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법”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일 ~ 2015년 12월 16일(1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주요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분석

☑ 연구내용

- 주요 정당의 소셜미디어 채널,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과 특징, 평가와 시사점

☑ 연구성과

- 새누리당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출

주제 : 한국경제 긴급진단 - 현황과 대책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3일 ~ 2015년 12월 16일(4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공동연구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법 모색

☑ 연구내용

- 지금의 위기는 서서히 다가오는 장기불황의 위기로서, 민간소비의 침체, 내수부족, 부채증가, 구조적 수출 부진, 기술적 우위 축소 등의 대내적 취약성
- 미국 금리 인상, 중국경제 불안, 엔저 등외적 취약성 노출
-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구조개혁정책이 시급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2015 북한경제 평가 및 2016년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7일 ~ 2015년 12월 23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북한경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2016년 북한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 및 협정책 수립에 기여

☑ 연구내용

- 2015년 북한경제는 겉으로는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실제로는 비생산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또 평양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한 실정
- 2016년 북한경제는 5월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경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쌍방간에 관계개선을 위한 양보가 없는 한 큰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임

☑ 연구성과

- 당·정의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이슈브리프〉 2015-26

주제 :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7일 ~ 2015년 12월 28일(12일)
- 연구분야 : 여성가족,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를 비롯,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서비스이자 학무보 사교육 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줌
- 맞벌이와 저소득층·한부모·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 필요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증가로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 공적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연구내용

- 정책변화 : 2013년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정책에 의해 2014년부터 확대 운영
- 현황 분석
- 개선방안 : 교사처우개선, 방학초등돌봄 교실 내실화, 초등돌봄교실 이용범위 확대, 건강한 식 단제공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연구성과

- 최고위원회 정책참고자료



민주정책연구원 연간 활동실적

201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민주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 소재지 | 설치형태 | | | | 비고 |
|---------------------------------------|--------|-----|----|----|----|
| | 연구소 소유 | 당소유 | 임차 | 기타 | |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국제빌딩 3,7층) | | | √ | |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 연구원 수 | 직원 수 | 비고 |
|----------|----------|----|
| 박사급: 17명 | 자체고용: 0명 | |
| 석사급: 12명 | | |
| 기 타: 37명 | 외부파견: 0명 | |
| 합 계: 66명 | 합 계: 0명 | |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 수입 | | | | 지출 | 잔액 | 비고 |
|---------------|-------------|---------------|---------------|---------------|---------------|----|
| 정당지원금 | 기타수입 | 전년도이월금 | 계 | | | |
| 6,074,103,066 | 246,823,131 | 1,367,670,881 | 7,688,597,078 | 5,900,332,333 | 1,788,264,745 | |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기간: 2015. 1. 1. ~ 12. 31.).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44건)

| 순번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1 | 141201~150102 | 정치 | 수권정당을 위하여 - 중산층 정치 | 자체 | 31p | 별첨1 |
| 2 | 150101~150123 | 기재 | 연말정산 논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 자체 | 7p | 별첨2 |
| 3 | 150101~150203 | 보건복지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촉구하며 -연금총당부채론을 넘어- | 자체연구 | 18p | 별첨3 |
| 4 | 150102~150116 | 정치/기재/ 산자/복지/환노 | 2·8 전당대회 이후 핵심 아젠다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37p | 별첨4 |
| 5 | 150103~150112 | 정치 | 윤리규범 초안 | 자체 | 5p | 별첨5 |
| 6 | 150103~150115 | 정치 | 교섭단체 대표연설 초안 | 자체 | 6p | 별첨6 |
| 7 | 150105~150120 | 기재위/환노위 | 중산층 살리기 희망플랜 : 전략과 정책-중위로위원회 | 자체 | 17p | 별첨7 |
| 8 | 150105~150130 | 산자 | 혁신경제 활성화 방향 | 자체 | 13p | 별첨8 |
| 9 | 150105~150130 | 산자 | 새정치민주연합 산업별 지지세력 구축 방안 | 자체 | 7p | 별첨9 |
| 10 | 150105~150223 | 기재위/정무위 |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 만들기 종합대책 | 자체 | 34p | 별첨10 |
| 11 | 150105~150401 | 산자 | 생계형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자체 | 44p | 별첨11 |
| 12 | 150108~150118 | 정치 | 정당혁신방향 | 자체 | 4p | 별첨12 |
| 13 | 150109~150112 | 보건복지 |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자체 | 5p | 별첨13 |
| 14 | 150110~150123 | 기재위/정무위 | 오바마 정부의 중산층 경제의 함의와 시사점 | 자체 | 4p | 별첨14 |
| 15 | 150110~150130 | 기재/복지/환노 |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19p | 별첨15 |
| 16 | 150110~150216 | 행안위 | 대통령선거와 캠페인 슬로건 -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 | 외부전문가 | 16p | 별첨16 |
| 17 | 150110~150320 | 정치 | 정형데이터에 기반한 전국 정치지형 분석 | 자체 | 71p | 별첨17 |
| 18 | 150112~150208 | 사회학 | 새로운 대중의 출현과 진보의 대응 | 문헌연구 | 32p | 별첨18 |

| 순번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19 | 150115~150130 | 기재 | 부의불평등과 중산층 강화를 위한 조세 정책적 재분배 방안 | 내부 | 5p | 별첨19 |
| 20 | 150115~150209 | 기재/보건복지 | 최대고용을 위한 중부담·중복지 복지국가 상(象)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26p | 별첨20 |
| 21 | 150115~150309 | 행안위/기재위 |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원장악보고서-지역·이념·계층세대의 중원장악을 위하여 | 외부전문가와 공동 | 19p | 2017 위원회 별첨21 |
| 22 | 150115~150323 | 기재위/복지위환 노위 등 |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정책보고서-소득보장 강화와 고용 | 외부전문가 | 31p | 2017 위원회 별첨22 |
| 23 | 150119~150125 | 정치 | 신지도부의 정치분야 정책의제와 대응전략 | 자체 | 19p | 별첨23 |
| 24 | 150120~150202 | 환노 | 은퇴시기 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자체 | 4p | 별첨24 |
| 25 | 150120~150203 | 정치 | 그리스 총선과 포퓰리즘 | 자체 | 14p | 별첨25 |
| 26 | 150120~150213 | 기재/복지/ 산자/환노 |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 전략과 정책& 액션플랜 | 자체(연구 기획실 공동) | 32p | 별첨26 |
| 27 | 150201~150216 | 보건복지 | (IDP 보고서)초저출산 시대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 자체 | 38p | 별첨27 |
| 28 | 150201~150228 | 기재위/정무위 복지위/환노위 | 포용적 번영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 번역문 | 국회도서관 공동 | 186p | 별첨28 |
| 29 | 150201~150306 | 환노위/복지위 | 영국의 사회개혁 전략(영국의 조건-IPPR종합) | 자체 | 197p | 별첨29 |
| 30 | 150201~150428 | 행안위/운영위 미방위 등 |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전·행정보고서 - 책임과 안전 그리고 인권 | 외부전문가 | 20p | 2017 위원회 별첨30 |
| 31 | 150203~150216 | 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활성화 방향 | 자체 | 5p | 별첨31 |
| 32 | 150204~150305 | 정치 | 세금의 정치 | 자체 | 14p | 별첨32 |
| 33 | 150208~150224 | 행안위 | 변화와 신뢰-당 혁신, 정치혁신 & 정책혁신 | 자체 | 16p | 별첨33 |
| 34 | 150210~150225 | 행자 | 한국에서 책임총리란 무엇인가(II) | 자체 | 4p | 별첨34 |
| 35 | 150211~150304 | 행자 | 권역별정당명부비례제 시뮬레이션 | 자체 | 5p | 별첨35 |

| 순번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36 | 150212~150227 | 기재 | 조세정의 구현과 새정치 민주연합의 조세개혁 방안 | 내부 | 10p | 별첨36 |
| 37 | 150215~150228 | 기재위/정무위 | 미국 민주당과 영국노동당의 변영보고서 (요약문) | 자체 | 7p | 별첨37 |
| 38 | 150223~150225 | 행자 | 2.23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검토 | 자체 | 8p | 별첨38 |
| 39 | 150226~150303 | 행자 | 한국에서 책임총리란 무엇인가(II) | 자체 | 4p | 별첨39 |
| 40 | 150301~150326 | 기재 | 국회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 | 자체 | 7p | 별첨40 |
| 41 | 150301~150330 | 기재/복지/ 산자/환노 | 포용적 성장으로 선진복지를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24p | 별첨41 |
| 42 | 150305~150308 | 행자 | 선거제도 개편안-현실적 장벽과 제언 | 자체 | 4p | 별첨42 |
| 43 | 150305~150313 | 기재/복지/ 환노/산자/통외 | 영수회담 의제와 대응방안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20p | 별첨43 |
| 44 | 150306~150402 | 정치 | 이기는 혁신의 길 - 온 국민 정치 | 자체 | 24p | 별첨44 |
| 45 | 150310~150325 | 정치 | 경선제도개혁방안 | 자체 | 11p | 별첨45 |
| 46 | 150310~150317 | 환노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 자체 | 5p | 별첨46 |
| 47 | 150313~150328 | 국방 | 사드(THAAD)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 자체 | 19p | 별첨47 |
| 48 | 150320~150324 | 보건복지 | 100세 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 2 | 자체 | 14p | 별첨48 |
| 49 | 150329~150331 | 보건복지 | 흔들림 없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제언 | 자체 | 5p | 별첨49 |
| 50 | 150330~150408 | 통일외교 |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동향과 시사점 | 자체 | 5p | 별첨50 |
| 51 | 150403~150514 | 정치 | 온 국민 성장 정책 | 자체 | 11p | 별첨51 |
| 52 | 150410~150413 | 전 상임위 |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언론보고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다함께' 정책엑스포의 성과와 과제 | 자체 | 12p | 정책 엑스포 별첨52 |
| 53 | 150410~150427 | 전 상임위 |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종합보고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3일간의 기록 | 자체 | 54p | 정책 엑스포 별첨53 |
| 54 | 150410~150427 | 전 상임위 |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정책보고서] 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말하다 | 자체 | 201p | 정책 엑스포 별첨54 |

| 순번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55 | 150411~150507 | 보건복지 | 명목소득대체율 50%의 거짓과 진실 | 자체 | 12p | 별첨55 |
| 56 | 150501~150515 | 행안위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제언 | 자체 | 4p | 별첨56 |
| 57 | 150501~150522 | 행안위 |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의 갈등과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자체 | 24p | 별첨57 |
| 58 | 150501~150630 | 보건복지 | 사회복지사의 임금결정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 공동 | 22p | 별첨58 |
| 59 | 150506~150512 | 정치 | 병립형+연동형 설계검토 | 자체 | 3p | 별첨59 |
| 60 | 150515~150603 | 행안위 | [교육자료]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과 정책 | 자체 | 25p | 별첨60 |
| 61 | 150515~150608 | 정치 | 2015년 영국총선 분석 | 자체 | 28p | 별첨61 |
| 62 | 150516~150531 | 행자 | 선거여론조사개선방안 | 자체 | 5p | 별첨62 |
| 63 | 150601~150615 | 정치 | 지역정당_정당분권화 방안과 효과 | 자체 | 10p | 별첨63 |
| 64 | 150601~150617 | 기재위 | OECD, '2015 경제정책개혁: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요약문 번역 보고서 | 자체 | 8p | 별첨64 |
| 65 | 150604~150620 | 기재위/정무위 복지위/ 환노위 등 |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의 '미국 경제 규칙 새로 쓰기: 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젠다' 요약문 번역 보고서 | 자체 | 10p | 별첨65 |
| 66 | 150607~150609 | 보건복지 |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제언 | 자체 | 5p | 별첨66 |
| 67 | 150608~150617 | 통일외교 | 김정은시대 북한의 시장화 동향: 평가와 전망 | 자체 | 6p | 별첨67 |
| 68 | 150610~150615 | 보건복지 |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 자체 | 22p | 별첨68 |
| 69 | 150610~150622 | 행안위 | 사무직당직자 공개채용 전형 시행세칙(안) 제안서 | 자체 | 8p | 별첨69 |
| 70 | 150610~150623 | 산자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자체 | 5p | 별첨70 |
| 71 | 150615~150806 | 행안위 | 2015년 유권자 지형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연구용역) | 외부 전문가와 공동 | 79p | 별첨71 |
| 72 | 150618~150625 | 정치 |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 자체 | 3p | 별첨72 |
| 73 | 150619~151227 | 기재위/복지위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포용경제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연구용역) | 외부전문가 | 135p | 별첨73 |
| 74 | 150621~150701 | 정치 | 여권 파워게임 상황인식 및 대응 | 자체 | 5p | 별첨74 |

| 순번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75 | 150625~150715 | 기재 |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 자체 | 7p | 별첨75 |
| 76 | 150630~150707 | 환노 | 최근 최저임금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 | 자체 | 5p | 별첨76 |
| 77 | 150701~150706 | 행안위 |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혁신위원회 : 성과와 과제 | 자체 | 8p | 별첨77 |
| 78 | 150701~150728 | 기재 |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세제 3법" 검토 | 자체 | 20p | 별첨78 |
| 79 | 150702~150825 | 정치 | 정형데이터에 기반한 부산 정치지형 분석 | 자체 | 63p | 별첨79 |
| 80 | 150703~150718 | 기재 | 국제적 관점에서 본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 자체 | 5p | 별첨80 |
| 81 | 150710~150727 | 산자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직접판매 활성화 방안 | 자체 | 5p | 별첨81 |
| 82 | 150714~150727 | 통일외교 | 새정치민주연합의 '신남북경협' 추진방향 | 자체 | 13p | 별첨82 (비공개) |
| 83 | 150715~150723 | 정치 |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와 혁신방향 | 자체 | 6p | 별첨83 |
| 84 | 150716~150815 | 통일, 외교, 안보 | 한반도 신경제지도 | 자체 | 15p | 별첨84 |
| 85 | 150721~150731 | 환노 | 노동시장 개혁방안과 정책방향 검토 | 자체 | 11p | 별첨85 |
| 86 | 150725~150802 | 정치 | 오픈프라이머리의 명암 | 자체 | 8p | 별첨86 |
| 87 | 150725~150813 | 기재위/환노위 | 청년희망보고서 - 절망의 청년 Zero Generation, 그들에게 권력은 있다 | 자체 | 25p | 별첨87 |
| 88 | 150727~150925 | 산자 | 동대문도매시장 주5일제 시행에 관한조사 | 외부전문가 | 56p | 별첨88 |
| 89 | 150731~150801 | 환노 | 노동시장 개혁의 전략 | 자체공동 | 13p | 별첨89 |
| 90 | 150801~150807 | 기재 |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세수확충 방안 | 자체 | 7p | 별첨90 |
| 91 | 150801~150826 | 기재위/환노위/ 산자위/정무위/ 복지위 등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보고서(1) - 2015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전략과 의제: 2016총선의회 선도를 시작하며 | 외부전문가 와 공동 | 64p | 별첨91 |
| 92 | 150801~150826 | 정치 | 산토끼는 있다 - 집권을 위한 길 | 자체 | 18p | 별첨92 |
| 93 | 150801~150829 | 보건복지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산후조리 서비스 개선방안 | 자체 | 33 | 별첨93 |

| 순번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94 | 150801~150830 | 기재위/환노위 복지위/정무위 | 2016총선 국가 비전과 발전 모델 | 자체 | 15p | 별첨94 |
| 95 | 150801~150930 | 보건복지 | 보육시설 이용부모가 인식한 보육교사 이미지 | 공동 | 24p | 별첨95 |
| 96 | 150810~150821 | 기재/복지/ 산자/환노 |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3p | 별첨96 |
| 97 | 150817~150819 | 통일외교 |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 | 자체 | 8p | 별첨97 (비공개) |
| 98 | 150818~150825 | 보건복지/환노 | 정부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 자체공동 | 6p | 별첨98 |
| 99 | 150820~150907 | 산자 |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자체 | 5p | 별첨99 |
| 100 | 150824~150828 | 통일외교 | 당대표 4대 제안 구체화방안: 이산가족 상봉문제 | 자체 | 6p | 별첨100 |
| 101 | 150828~151113 | 안행위 외 | 2016 총선 대비 당 전력 조사·분석 (연구용역) | 외부전문가 와 공동 | 320p | 별첨101 |
| 102 | 150901~150909 | 기재 | 2016 정부예산안 평가와 국가재정 건전화 방안 | 자체 | 7p | 별첨102 |
| 103 | 150901~150922 | 산자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자체 | 6p | 별첨103 |
| 104 | 150901~151009 | 기재위/환노위 복지위/정무위 |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4 + 민생4대 개혁 제안서 | 외부전문가 | 16p | 별첨104 |
| 105 | 150901~151011 | 정무, 기재 | 청년경제대책 : 청년에 투자해야 모두가 산다 | 자체 | 12p | 별첨105 |
| 106 | 150901~151111 | 기재/복지/ 산자/환노/통외 | 2016 총선공약(안)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62p | 별첨106 (비공개) |
| 107 | 150905~151004 | 기재 | 진보 성장을 고민하다: 소득주도 성장 | 자체 | 18p | 별첨107 |
| 108 | 150905~151004 | 정치 | 미국의 새로운 진보도 근본을 바꾸었다 | 자체 | 18p | 별첨108 |
| 109 | 150905~151004 | 통일외교 | 경제통일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 자체 | 18p | 별첨109 |
| 110 | 150905~151004 | 보건복지 | 백세사회론 | 자체 | 30p | 별첨110 |
| 111 | 150905~151004 | 보건복지 | 노동과 복지의 전략적 조합 | 자체 | 18p | 별첨111 |
| 112 | 150910~151002 | 기재/복지/산자 | 4대 부문 개혁방안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19p | 별첨112 |

| 순번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113 | 150910~151106 | 정치 | 정형데이터에 기반한 경남 정치지형 분석 | 자체 | 87p | 별첨113 |
| 114 | 150913~150915 | 보건복지 |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개편안에 대한 평가 | 자체 | 4p | 별첨114 |
| 115 | 150914~151005 | 언론 | 언론의 보도 논조 분석과 비판 기능 연구 | 외부용역 | 73p | 별첨115 |
| 116 | 150915~150921 | 정치 | 정치적 대안과 정치학적 대안 | 자체 | 4p | 별첨116 |
| 117 | 151001~151029 | 보건복지 | '보육전쟁'을 넘어 -영유아보육보험을 제안한다!- | 자체 | 6p | 별첨117 |
| 118 | 151001~151118 | 기재위/환노위/ 산자위/정무위/ 복지위 등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보고서(2)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 우리 사회 우선 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 외부 전문가와 공동 | 93p | 별첨118 |
| 119 | 151002~151022 | 국방 | 강한 군대, 보람찬 병영을 위한 7대 정책제안 | 자체 | 11p | 별첨119 (비공개) |
| 120 | 151005~151025 | 행안위 | 프레임과 2016 총선 & 대응전략 | 자체 | 16p | 별첨120 |
| 121 | 151006~151008 | 산자 | TPP 타결과 대응방안 | 자체 | 6p | 별첨121 |
| 122 | 151006~151110 | 정무위/방송위 | 4대 재벌의 언론사 광고 지배력 분석(연구용역) | 외부전문가 | 42p | 별첨122 |
| 123 | 151010~151020 | 환노 | 비정규직제도 개혁 방향 | 자체 | 10p | 별첨123 |
| 124 | 151014~151123 | 안행위 외 | 2016년 유권자 정책수요 조사(연구용역) | 외부 전문가와 공동 | 185p | 별첨124 |
| 125 | 151015~151102 | 기재/복지/ 산자/환노 |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 통계를 중심으로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22p | 별첨125 |
| 126 | 151020~151103 | 보건복지 | 최대고용을 위한 일자리복지 전략 | 자체공동 | 13p | 별첨126 |
| 127 | 151026~151028 | 보건복지 | 유족연금 선진화 방안 | 자체 | 4p | 별첨127 |
| 128 | 151101~151109 | 보건복지 |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청년포퓰리즘'인가? | 자체 | 6p | 별첨128 |
| 129 | 151101~151113 | 행안위 | 2015 총선 - 유권자 지형조사를 통해서 본 유권자 인식과 정책지형 | 자체 | 14p | 별첨129 |
| 130 | 151101~151206 | 노동 |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 | 자체 | 15p | 별첨130 |
| 131 | 151101~151223 | 기재,산업 |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업 살리기 종합 대책 | 자체 | 18p | 별첨131 |

| 순번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132 | 151101~151230 | 보건복지 | 광주광역시 민간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태도 | 공동 | 30p | 별첨132 |
| 133 | 151102~151105 | 통일외교 | 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 자체 | 5p | 별첨133 |
| 134 | 151103~151120 | 환노 |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 제안 | 자체 | 12p | 별첨134 |
| 135 | 151110~151123 | 보건복지 |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 자체 | 10p | 별첨135 |
| 136 | 151110~151127 | 산자 |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제언 | 자체 | 6p | 별첨136 |
| 137 | 151115~151217 | 정치 | 정형데이터에 기반한 총북 정치지형 분석 | 자체 | 64p | 별첨137 |
| 138 | 151120~151215 | 환노위 | 2016 총선 - 생명우선,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 | 자체 | 24p | 별첨138 |
| 139 | 151201~151203 | 보건복지 | 새누리당의 사회적 거래소 설립에 대한 평가 및 대안 | 자체 | 6p | 별첨139 |
| 140 | 151201~151217 | 보건복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신화 | 자체 | 10p | 별첨140 |
| 141 | 151201~160115 | 기재 | 거시경제정책 | 자체 | 15p | 별첨141 |
| 142 | 151215~151229 | 행안위 | 제20대 총선 지형변화와 총선전략 | 자체 | 17p | 별첨142 |
| 143 | 151217~151224 | 환노 | 노사정위 '2대 지침' 논의의 주요 쟁점과 제언 | 자체 | 6p | 별첨143 |
| 144 | 151218~151227 | 국방 |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자체 | 5p | 별첨144 |

별첨 : 연구 · 개발실적 주요내용 144부.

나. 토론회 등 개최(105회)

| 순번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 고 |
|----|------|-------------------|------------------|--|---|-------------|
| 1 | 간담회 | 150107 | 민주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미래비전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과 미래예측 | 국가미래비전, 전략 등 모색 | 2017 위원회 |
| 2 | 여론조사 | 150110~ 151131 | 자체/외주 | ARS 여론조사 |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 점검 및 분석 | 21회 |
| 3 | 간담회 | 150121 | 민주정책연구원 | 새지도부의 정책방향과 핵심의제 제안서 마련(사회정책분야) | 사회정책분야 핵심의제 모색 | 2017 위원회 |
| 4 | 간담회 | 150122 | 민주정책연구원 | 새지도부의 정책방향과 핵심의제 제안서 마련 (행정안전분야) | 행정안전분야 핵심의제 모색 | 2017 위원회 |
| 5 | 토론회 | 150122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당의 정책방향 | |
| 6 | 간담회 | 150126 | 민주정책연구원 | 새지도부의 정책방향과 핵심의제 제안서 마련 (경제노동분야) | 경제노동분야 핵심의제 모색 | 2017 위원회 |
| 7 | 간담회 | 150126 | 민주정책연구원 | 새지도부의 정책방향과 핵심의제 제안서 마련 (총론정치분야) | 정치분야 핵심의제 모색 | 2017 위원회 |
| 8 | 토론회 | 150126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경쟁촉진3법 토론회 |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 촉진 3법에 대한 정책토론회 | |
| 9 | 간담회 | 150127 | 의원회관 의원식당 |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활동 보고 및 평가와 계획 | 2014년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의 1년 활동에 대한 평가 및 2015년 활동 계획 수립 | |
| 10 | 간담회 | 150203 | 민주정책연구원 | 시대담론의 흐름과 전망 | 시대담론, 가치, 정책의제 모색 | 2017 위원회 |
| 11 | 포럼 | 150225 |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한국경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구하기 위한 대안 모색 | 민주정책 포럼 |
| 12 | 토론회 | 150226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 자영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 |

| 순번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 고 |
|----|-----|------------|-----------------|-------------------------------------|---|---------|
| 13 | 포럼 | 150304 | 민주정책연구원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21세기를 규정하는 5대 이슈와 한국형 국가 발전모델 모색 | 민주정책 포럼 |
| 14 | 포럼 | 150311 | 민주정책연구원 | 뇌, 현실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대한민국 | '뇌, 나 그리고 현실' 등 뇌과학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예측과 방향 모색 | 민주정책 포럼 |
| 15 | 포럼 | 150318 | 민주정책연구원 | 다시 부상하는 미국, 한반도의 미래 전략은? | 미국의 셰일가스의 영향, 국제 정세의 전망과 한반도의 미래 전략 모색 | 민주정책 포럼 |
| 16 | 간담회 | 150403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경제생태계를 바꾸는 신산업전략 간담회 | 신산업 전략에 대한 논의 및 토론 | |
| 17 | 토론회 | 150406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사회책임조달과 경제민주화 |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조달 방안(특별법 제정 등) 모색 | 정책 엑스포 |
| 18 | 토론회 | 150406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조세와 복지 방식식, 어떻게 풀 것인가? |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관계, 증세전략의 정치적 접근 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19 | 토론회 | 150406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한국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평생교육의 과제, 공교육 체제의 운영원리를 비롯한 학교교육의 문제와 해법 모색 | 정책 엑스포 |
| 20 | 토론회 | 150406 |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여성 'JOB & LIFE' - '일과 삶의 조화를 찾다'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족 양립 제도화 방안, 질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21 | 토론회 | 150406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공무직제 법제화와 처우개선 방안 | 중앙정부 차원의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및 지위 안정화 법적근거 마련 모색 | 정책 엑스포 |
| 22 | 토론회 | 150406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사람중심경제 : 소득주도성장을 통하여 | 수출대기업 주도 성장 전략의 한계와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실현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23 | 토론회 | 150406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소상공인 생존가격 관련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 |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존가격 개념 법제화 필요성과 근거 논의 | 정책 엑스포 |
| 24 | 토론회 | 150406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한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 상(像) | 복지지출-조세부담-성장률 지표를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모델 구축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순번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 고 |
|----|-----|------------|----------------|------------------------------------|--|-----------|
| 25 | 토론회 | 150406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기초자치단체 우수 정책사례 발표회[1] | 서울시 종로구, 경기 성남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 정책 엑스포 |
| 26 | 토론회 | 150406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개혁 방안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 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27 | 토론회 | 150406 |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소비자생협의 경영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28 | 토론회 | 150407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20대의 정책, 20대가 주도하자 | 군대전역자 지원금 및 서울시 교통비 할인정책 등 청년정책 마련 및 확대 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29 | 토론회 | 150407 | 국회도서관 대강당 | 기초자치단체 우수 정책사례 발표회[2] | 충남 논산시, 전북 정읍시 등 14개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 정책 엑스포 |
| 30 | 토론회 | 150407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복지국가시대 지방재정구조 개선방안 | 중앙-지방간 세원 배분 조정 등 지방의 재정 자율성 및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31 | 토론회 | 150407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볼 것인가? |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론 대한 보수와 진보 싱크탱크 간의 쟁점 도출 및 합의점 모색 | 정책 엑스포 |
| 32 | 토론회 | 150407 |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사회적 경제 소셜 비즈니스의 경험과 교훈 | 사회적경제의 사업방식으로서 소셜비즈니스 사례 발표와 과제 모색 | 정책 엑스포 |
| 33 | 토론회 | 150407 |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옥외광고물 등록업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자연재해, 바람으로 인한 옥외 광고물 사고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배상책임 실현 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34 | 토론회 | 150407 | 의원회관 대회의실 |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만들기 |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표준보육 비용 현실화, 누리과정 예산논란 현실화 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35 | 토론회 | 150407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정거래위원회 한계와 대안 점검 | 공정위의 능력행정, 팔짱행정, 나홀로 행정의 한계 극복과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36 | 토론회 | 150407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지속가능한 경제와 한국경제 | 생태경제 분야의 신산업 발전 전략 모색 | 정책 엑스포 |

| 순번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 고 |
|----|-----|------------|----------------|--|---|-----------|
| 37 | 토론회 | 150407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체계(누진세제 구축)을 포함하는 공정성장론 소개 | 정책 엑스포 |
| 38 | 토론회 | 150408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일자리 창출과 임금체계 개편 | 사회연대형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체계의 역할과 통합적 설계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39 | 토론회 | 150408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지방자치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역주의 정치구조 해체, 분권화와 로컬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등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40 | 토론회 | 150408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한국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 : 비정규직, 최저 임금과 임금체계 개선 | 비정규직 문제 등 한국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원인 진단 및 임금체계 개선 등 해법 모색 | 정책 엑스포 |
| 41 | 토론회 | 150408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제조업 활성화 및 현장 중심의 지원센터 운영방안 | 도시형소공인의 제조업 활성화와 사업생태계 보존 및 육성 관련 중장기정책개발과 발전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42 | 토론회 | 150408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진보교육 차기이제를 제안한다! | 교사의 자율적 권한 강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이제 제안 및 실현 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43 | 토론회 | 150408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전환, 어떻게 갈 것인가 | 도·농간 에너지 격차 해소방안 및 지방의 성공사례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44 | 토론회 | 150408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 | 협상력이 취약한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45 | 토론회 | 150408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한국형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독일, 네덜란드, 인천대 등의 청년고용 정책 사례 분석과 한국에서의 청년실업 및 고용 창출방안 모색 | 정책 엑스포 |
| 46 | 토론회 | 150408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일자리와 노동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 일자리 양극화와 임금불평등 해소 등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보완적인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실천전략 모색 | 정책 엑스포 |

| 순번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 고 |
|----|------|-------------------|------------------|--|---|----------------------|
| 47 | 토론회 | 150409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토론회 |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입법관련 토론회 | |
| 48 | 여론조사 | 150501~ 150530 | 외주 | ARS 여론조사 | 4.29 재보궐 선거 결과에 나타난 여론 분석 | 4회 |
| 49 | 간담회 | 150512 | 무등실사기획 |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 간담회 | 호남지역 여론 동향 및 의견 수렴 | |
| 50 | 간담회 | 150512 | 연구원 7층 대회의실 | 빅데이터로 본 4.29 재보선 평가와 총선대응의 시사점 |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보궐 평가 | |
| 51 | 간담회 | 150526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간담회 | 기존 창업환경에 대한 평가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 |
| 52 | 세미나 | 150529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중부담/중복지 국가를 향한 복지재정 확충방안 | 2016년 총선공약개발을 위한 복지재정의 종합적 검토 | 발제 |
| 53 | 간담회 | 150611 | 민주정책 연구원 | 조세·복지 총선공약 마련 간담회 | 조세·복지 총선공약 마련 | |
| 54 | 세미나 | 150611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19대 총선 복지재정관련 공약 재검토 | 19대 총선 복지공약 관련 검토 및 메가공약 개발 | 발제 |
| 55 | 포럼 | 150617 | 민주정책연구원 | 산업구조의 전환과 생태계 구축방안(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재편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 방안 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56 | 간담회 | 150623 | 민주정책연구원 | 조세·복지 총선공약 마련 간담회 | 조세·복지 총선공약 마련 | |
| 57 | 세미나 | 150623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50대/여성/보육 공약 | 보육분야 및 50대를 위한 공약 토론 | 발제 |
| 58 | 포럼 | 150624 | 민주정책연구원 | 중앙-지방정부 재원배분구조 개선방안 (지방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세입구조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불합리한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59 | 포럼 | 150701 | 민주정책연구원 | 경제민주화 성과와 과제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경제민주화의 평가와 중소기업 단체의 집단교섭력 강화,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등 향후 과제 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순번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 고 |
|----|-----|------------|-----------------|--|--|----------------------|
| 60 | 간담회 | 150707 |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현황, 필요성 및 정책 방향 | |
| 61 | 포럼 | 150708 | 민주정책연구원 | 가계부채 해결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가계부채 위기 진단과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 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62 | 토론회 | 150714 | 민주정책연구원 소회의실 |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방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 '유능한 안보정당'을 지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방정책 추진방향 제시 | |
| 63 | 포럼 | 150715 | 민주정책연구원 |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방안 (비정규직 일자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포괄적인 사용사유제한 등 비정규직 규모 축소와 처우개선 방안 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64 | 토론회 | 150721 | 인천시당 강당 | 상가임대차 보호법 인천시당 토론회 |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보완입법을 위한 대응 토론 | |
| 65 | 포럼 | 150722 | 민주정책연구원 | 최저임금제와 임금체계 개선 방안 (임금체계 개편 논의 체대로 되고 있는가?) | 최저임금제 결정 구조 개선 및 실효성 강화와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대책 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66 | 세미나 | 150723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50대/여성/보육 공약 | 대표공약에 대한 집중토론 | 발제 |
| 67 | 토론회 | 150728 | 민주정책연구원 소회의실 | 새정치민주연합의 남북 경협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남북 경협정책 방향 제시 | |
| 68 | 토론회 | 150803 | 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상가권리금 보완입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의 보완방향에 대한 토론회 | |
| 69 | 간담회 | 150810 | 민주정책연구원 |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의 대안인가? | 점진적 퇴직제도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검토 | |
| 70 | 간담회 | 150810 | 민주정책연구원 | 대학생 인문비평공동체 (IRIS) 간담회-정책결정 과정과 연구원의 역할 | 정책과정과 입법과정에서의 연구원의 역할 발표 및 토론 | |
| 71 | 포럼 | 150812 | 민주정책연구원 |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일자리 대책 체대로 되고 있는가?) | 정년연장과 시간제근로,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창출방안 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순번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 고 |
|----|-----|------------|-----------------|---|--|----------------|
| 72 | 포럼 | 150819 | 민주정책연구원 | 공적연금체계 재구조화 방안 (노후소득보장체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체계의 재설계방안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73 | 토론회 | 150824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 | 부모부양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토론회 | |
| 74 | 포럼 | 150826 | 민주정책연구원 | 공공의료의 역할과 강화 방안 (한국 의료시스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 메르스사태와 진주의료원 폐원사태로 본 공공의료정책의 개혁 방향 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75 | 토론회 | 150826 | 국회의원회관 | 산토끼는 없다. 집권을 위한 길 | 새정치민주연합 집권전략 | 더미래 연구소 |
| 76 | 토론회 | 150826 | 국회 제1소회의실 | 박근혜정부 전반기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토론회 | 박근혜정부 전반기의 통일외교 안보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대안 제시 | |
| 77 | 토론회 | 150827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산후조리서비스 개선방안 |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를 통한 산후조리서비스 개선방안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한 산후조리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발제자 |
| 78 | 토론회 | 150827 |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근혜정부 경제정책평가 토론회 |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
| 79 | 포럼 | 150902 | 민주정책연구원 |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개혁 (확충) 방안 (조세정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점검, 과세공평성 실현과 복지재정 확충 방안 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80 | 토론회 | 150903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3법 토론회 | 기부세제3법 검토 | |
| 81 | 토론회 | 150908 | 청년허브 | 청년일자리 대안을 말하다 정책토론회 | 청년일자리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듣는 공청회 형식의 토론회 | |
| 82 | 포럼 | 150909 |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이동성 복원과 공교육 강화 방안 (한국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소득불평등의 세대간 계층대물림의 진단과 과제, 공교육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성공경로 전략 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순번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 고 |
|----|------|-------------------|------------------|---|--|---------------------------|
| 83 | 포럼 | 150916 | 민주정책연구원 | 주택·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서민 주거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료 안정화제도 도입방안 모색 | 2015 사회경제 정책포럼 |
| 84 | 여론조사 | 150916~ 150918 | 자체/외주 | ARS여론조사 | 청년들의 정책수요조사 |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
| 85 | 간담회 | 150923 |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정책간담회(1차) | 사회서비스 일자리 실태조사 및 일자리 창출방안 기획 | |
| 86 | 간담회 | 151007 |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정책간담회(2차)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확충 및 추계방안 | |
| 87 | 토론회 | 151014 | 국회의원회관제 2세미나실 | 불효자식 방지법 민법권위자에게 듣는다. | 부모부양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 |
| 88 | 간담회 | 151021 |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정책간담회(3차) |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추계방안 | |
| 89 | 간담회 | 151021~ 151030 | 민주정책연구원 | 전문가 간담회 | 총선전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3회 |
| 90 | 세미나 | 151027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 연구원 공동세미나(2차)] 저성장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 | 저성장 시대, 위기의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진보와 보수가 함께 경제적, 정치적 해법 모색 | 여의도 연구원과 공동 |
| 91 | 간담회 | 151104 |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정책간담회(4차) | 보육, 복지 및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확충 및 추계방안 | |
| 92 | 토론회 | 151111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기부나눔 토크콘서트 토론회 | 기부법과 관련 정책홍보를 위한 토론회 | |
| 93 | 토론회 | 151118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 사회 우선 해결과제를 제안한다. | 경제민주화, 금융, 조세/재정, 노동/고용, 연금/의료 분야 우선 개혁과제 제안, 2016 총선 정책수요조사결과 발표 등 | 한겨레 경제사회 연구원과 공동 |
| 94 | 간담회 | 151123 | 부산 스타트업카페 | 부산지역 청년간담회 | 우리당의 정책 발표 및 공유, 청년 목소리 청취 |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

| 순번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 고 |
|-----|-----|------------|------------------|--|---|--------------------|
| 95 | 세미나 | 151123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 연구원 공동세미나(3차)]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 한국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의 걸림돌을 진단하고 진보와 보수가 함께 경제적, 정치적 해법 모색 | 여의도 연구원과 공동 |
| 96 | 간담회 | 151123 | 부산 | 부산지역 금융공기업인 간담회 | 금융공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 |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
| 97 | 간담회 | 151125 | 강원 춘천 세종호텔 | 강원지역 청년간담회 | 우리당의 정책 발표 및 공유, 청년 목소리 청취 |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
| 98 | 토론회 | 151125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민간복지기본법 검토 | |
| 99 | 간담회 | 151127 | 성균관대학교 | 서울지역 청년간담회 | 우리당의 정책 발표 및 공유, 청년 목소리 청취 |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
| 100 | 간담회 | 151207 | 상명대학교 | 서울지역 청년간담회 | 우리당의 정책 발표 및 공유, 청년 목소리 청취 |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
| 101 | 토론회 | 151208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협동조합형 소셜프랜차이즈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및 정책개선 방향 토론회 |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상생형 프랜차이즈인 협동조합형 소셜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 |
| 102 | 토론회 | 151208 |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토론회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현황과 필요성 |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
| 103 | 토론회 | 151214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소상공인 정책한마당 | 소상공인 정책 관련 토론회 | |
| 104 | 간담회 | 151215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생활임금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전국 지자체 확산방안 | 연구용역 중간보고 |
| 105 | 간담회 | 151221 | 민주정책연구원 | 총선 선거구도와 대응 전략 보고서 관련 | 2016총선 선거구도 및 유권자 지형 등 논의 | |

다. 교육·연수활동(11회)

| 순번 | 교육·연수명 | 일시 (기간) | 장소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신입당직자 교육 | 150706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신입당직자 연수 교육]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과 정책 강연 | |
| 2 | 대학생당원 교육 | 150714 | 서울시당 대회의실 |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교육] '강령과 정책으로 본 새정치민주연합' 강연 | |
| 3 | 세종시당 당직자 워크숍 | 150810 | 세종시당 | 2016 총선을 대비하는 시도당 당직자의 자세 | |
| 4 | 경제정책 심화과정 II | 150901~ 151027 (매주 화)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1강. 중국의 경제전략, 전망, 한국 (지만수) |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지도부, 국회의원대상 특강 |
| 5 | | | | 2강. 청년경제기본법 등 청년경제 패키지법(장하나) | |
| 6 | | | | 3강. 청년 문제는 무엇인가(김민수) | |
| 7 | | | | 4강. 최근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 과제(황성현) | |
| 8 | | | | 5강. 미국의 동아시아 경제·외교 정책(마크 내퍼) | |
| 9 | | | | 6강. 금융 세제 개편 방향(김유찬) | |
| 10 | | | | 7강. 주택임대소득세 및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선대인) | |
| 11 |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 151112~ 151113 | 강릉 썬크루즈 리조트 | [중앙선관위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정책연구소연구개발 사례 발표_ 2015정책엑스포 개최를 중심으로 | |

라. 정책홍보(76회)

| 순번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1 | 150112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이슈브리핑 1호 |
| 2 | 150119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정당 혁신의 방향 | 이슈브리핑 2호 |
| 3 | 150123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연말정산 논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슈브리핑 3호 |
| 4 | 150202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은퇴시기 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이슈브리핑 4호 |
| 5 | 150216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활성화 방향 | 이슈브리핑 5호 |
| 6 | 150226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한국에서 책임총리란 무엇인가 (I) | 이슈브리핑 6호 |
| 7 | 150304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한국에서 책임총리란 무엇인가 (II) | 이슈브리핑 7호 |
| 8 | 150317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 이슈브리핑 8호 |
| 9 | 150324 | on-line |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등록 | 100세 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 2 | 보도자료 |
| 10 | 150326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국회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 | 이슈브리핑 9호 |
| 11 | 150331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흔들림 없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제언 | 이슈브리핑 10호 |
| 12 | 150409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동향과 시사점 | 이슈브리핑 11호 |
| 13 | 150602 | 노사저널 | 정기간행물(잡지) |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평가 및 공적연금 강화 방안 | 잡지사의 원고의뢰 |
| 14 | 150602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와 개선 방안 | 이슈브리핑 12호 |
| 15 | 150609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제언 | 이슈브리핑 13호 |

| 순번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16 | 150615 | on-line |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등록 |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 언론보도 |
| 17 | 150618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김정은시대 북한의 시장화 동향 | 이슈브리핑 14호 |
| 18 | 150623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이슈브리핑 15호 |
| 19 | 150707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최근 최저임금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슈브리핑 16호 |
| 20 | 150713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1호]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적 문제 | 경제이슈분석 |
| 21 | 150715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 이슈브리핑 17호 |
| 22 | 150727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직접판매 활성화 방안 | 이슈브리핑 18호 |
| 23 | 150728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2호]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방향 | 경제이슈분석 |
| 24 | 150730 | 인쇄물 | 시도당 배포 | 상가임대차보호법 홍보 | |
| 25-45 | 150730~ 151224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Weekly Economy Briefing 1~21호 발간 | W.E.B |
| 46 | 150804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3호] 한국 주력 제조업 현황과 과제 | 경제이슈분석 |
| 47 | 150806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오픈프라이머리의 명암 | 이슈브리핑 19호 |
| 48 | 150807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세수확충 방안 | 이슈브리핑 20호 |
| 49 | 150811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4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방향 | 경제이슈분석 |
| 50 | 150818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5호]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 경제이슈분석 |
| 51 | 150825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정부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 이슈브리핑 21호 |

| 순번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52 | 150901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6호] 노동시장 현황과 청년고용 | 경제이슈분석 |
| 53 | 150907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이슈브리핑 22호 |
| 54 | 150910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2016 정부예산안 평가와 국가재정 건전화 방안 | 이슈브리핑 23호 |
| 55 | 150915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7호] 지방지자체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전략 | 경제이슈분석 |
| 56 | 150915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개편안에 대한 평가 | 이슈브리핑 24호 |
| 57 | 150922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이슈브리핑 25호 |
| 58 | 150922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8호] 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대책 검토 | 경제이슈분석 |
| 59 | 150925 | 방송/ 언론사 | 보도자료 및 기자간담회 | '2015유권자 지형 분석 결과' 브리핑 | 민병두 원장 |
| 60 | 150930 | 인쇄물 | 시도당 배포 | 노인 7대 정책 홍보 | |
| 61 | 151008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TPP 타결과 대응방안 | 이슈브리핑 26호 |
| 62 | 151013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9호] 국민이 원하는 우리당의 청년희망 종합대책 | 경제이슈분석 |
| 63 | 151028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유족연금 선진화 방안 | 이슈브리핑 27호 |
| 64 | 151029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영유아보육보험' 제안 | 이슈브리핑 28호 |
| 65 | 151104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10호] 비정규직 제도 개혁 과제 | 경제이슈분석 |
| 66 | 151105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 이슈브리핑 29호 |
| 67 | 151109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청년포퓰리즘 인가? | 이슈브리핑 30호 |

| 순번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68 | 151123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 이슈브리핑 31호 |
| 69 | 151124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11호] 반지하 주거개선 방안검토 | 경제이슈분석 |
| 70 | 151127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제언 | 이슈브리핑 32호 |
| 71 | 151203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새누리당의 사회적 거래소 설립에 대한 평가 및 대안 | 이슈브리핑 33호 |
| 72 | 151203 | 노사저널 | 정기간행물(잡지) |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에 관한 논거 | 월간 노사저널 12월호 |
| 73 | 151217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신화 | 이슈브리핑 34호 |
| 74 | 151222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12호] 저출산 대책과 일자리 대책 | 경제이슈분석 |
| 75 | 151224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노사정위 '2대 지침' 논의의 주요 쟁점과 제언 | 이슈브리핑 35호 |
| 76 | 151228 | on-line | 당원, 기자 등 e-mail/ 연구원 홈페이지 |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이슈브리핑 36호 |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57건)

| 순번 | 발간일자 | 종류 | 제 목 | 발간방법 | 발간부수 및 활용 | 비고 |
|----|--------|-------|---|------|---------------------------------|----|
| 1 | 150102 | 연구논문 | 수권정당을 위하여 - 중산층정치 | 자체발간 | 400부 대외배포 | |
| 2 | 150203 | 연구논문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촉구하며 - 연금총당부채론을 넘어 | 자체발간 | 300부 의원회관 배포 및 정론관 브리핑 자료 | |
| 3 | 150216 | 연구보고서 | 초저출산 시대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 자체발간 | 대외배포 | |
| 4 | 150305 | 연구보고서 | 세금의 정치 - 세계개혁의 기본방향 | 자체발간 | 대외배포 | |
| 5 | 150401 | 연구보고서 | 생계형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자체발간 | 정책개발에 활용 | |

| 순번 | 발간일자 | 종류 | 제 목 | 발간방법 | 발간부수 및 활용 | 비 고 |
|----|--------|-------|-------------------------------------|------|-----------|-------|
| 6 | 150402 | 연구논문 | 이기는 혁신의 길 - 온 국민 정치 | 자체발간 | 400부 대외배포 | |
| 7 | 150406 | 토론회자료 | 소상공인 생존가격 관련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8 | 150406 | 토론회자료 | 한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 상(像)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9 | 150406 | 토론회자료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공무직제 법제화와 처우개선 방안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10 | 150406 | 토론회자료 | 기초자치단체 우수 정책사례 발표회 1 | 자체발간 | 20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11 | 150406 | 토론회자료 | 한국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12 | 150406 | 토론회자료 |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개혁 방안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13 | 150406 | 토론회자료 | 사람중심경제 : 소득주도성장을 통하여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14 | 150406 | 토론회자료 |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15 | 150406 | 토론회자료 | 여성 'JOB & LIFE' - '일과 삶의 조화를 찾다'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16 | 150406 | 토론회자료 | 조세와 복지 방정식, 어떻게 풀 것인가?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17 | 150406 | 토론회자료 | 사회책임조달과 경제민주화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18 | 150407 | 토론회자료 | 지속가능한 경제와 한국경제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19 | 150407 | 토론회자료 | 복지국가시대 지방재정구조 개선방안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20 | 150407 | 토론회자료 |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볼 것인가?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21 | 150407 | 토론회자료 | 사회적 경제 소셜 비즈니스의 경험과 교훈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22 | 150407 | 토론회자료 | 옥외광고물 등록업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23 | 150407 | 토론회자료 |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만들기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24 | 150407 | 토론회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한계와 대안 점검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25 | 150407 | 토론회자료 | 기초자치단체 우수 정책사례 발표회 2 | 자체발간 | 20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26 | 150408 | 토론회자료 | 진보교육 차기의제를 제안한다!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27 | 150408 | 토론회자료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순번 | 발간일자 | 종류 | 제 목 | 발간방법 | 발간부수 및 활용 | 비 고 |
|----|--------|-------|--|------------|--|-------|
| 28 | 150408 | 토론회자료 | 일자리 창출과 임금체계 개편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29 | 150408 | 토론회자료 | 지방자치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30 | 150408 | 토론회자료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제조업 활성화 및 현장중심의 지원센터 운영방안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31 | 150408 | 토론회자료 | 일자리와 노동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32 | 150408 | 토론회자료 | 한국형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33 | 150408 | 토론회자료 | 한국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 : 비정규직,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개선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34 | 150408 | 토론회자료 |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전환, 어떻게 갈 것인가 | 자체발간 | 150부 현장배포 | 정책엑스포 |
| 35 | 150427 | 백서 |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정책보고서] 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말하다" | 자체발간 | 500부-지도부, 국회의원,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정책위원회 및 연구원 등 배포 | 정책엑스포 |
| 36 | 150427 | 백서 |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종합보고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3일간의 기록 | 자체발간 | 500부 - 지도부, 국회의원,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정책위원회 및 연구원 등 배포 | 정책엑스포 |
| 37 | 150507 | 연구논문 | 명목소득대체율 50%의 거짓과 진실 | 자체발간 | 100부 의원총회 배포 및 홈페이지 개재 | |
| 38 | 150601 | 연구논문 | 사회복지사의 임금결정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 공동연구 | 학술지 게재 | |
| 39 | 150608 | 연구논문 | 2015년 영국총선 분석 | 자체발간 | 400부 대외배포 | |
| 40 | 150728 | 연구보고서 |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세제3법 검토 | 자체발간 | 대외배포 | |
| 41 | 150806 | 연구논문 | 2015년 유권자 지형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연구용역) | 외부용역 | 10부 연구원 보관 | |
| 42 | 150826 | 토론회자료 | 산토끼는 있다 - 집권을 위한 길 | 더미래 연구소 발간 | - | |

| 순번 | 발간일자 | 종류 | 제 목 | 발간방법 | 발간부수 및 활용 | 비 고 |
|----|--------|--------|--|----------------------|---|-------------------|
| 43 | 150826 | 정책보고서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보고서(1) -2015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입법 및 국감 전략과 의제 | 자체발간 | 520부 - 지도부,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시도당, 연구원 등 배포 | |
| 44 | 150827 | 토론회자료 | 박근혜정부 경제정책평가토론회 | 자체발간 | 300부 - 토론회 및 의원실 배포 | |
| 45 | 150903 | 토론회자료 |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3법 토론회 | 의원실 및 연구원 공동 | 100부 및 토론회 참고용 | |
| 46 | 150925 | 용역 보고서 | 동대문도매시장 주5일제 시행에 관한 조사 | 외부용역 | 10부 - 정책 및 총선 공약개발에 활용 | |
| 47 | 151023 | 토론회자료 |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저성장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2차) | 자체발간 | 200부 현장배포 | 여의도 연구원과 공동 |
| 48 | 151030 | 단행본 | 새로운 진보정치 | 민주정책 연구원 8인 공저 | 1,000부 | |
| 49 | 151110 | 연구논문 | 4대 재벌의 언론사 광고 지배력 분석 (연구용역) | 외부용역 | 10부 연구원 보관 | |
| 50 | 151113 | 연구논문 | 2016 총선 대비 당 전력 조사·분석 (연구용역) | 외부용역 | 10부 연구원 보관 | |
| 51 | 151118 | 토론회자료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사회 우선 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 자체발간 | 200부 현장배포 | |
| 52 | 151118 | 정책보고서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보고서(2) -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 : 우리 사회 우선 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 자체발간 | 600부 - 지도부,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시도당, 연구원 등 배포 | |
| 53 | 151123 | 연구논문 | 2016년 유권자 정책수요 조사 (연구용역) | 외부용역 | 10부 연구원 보관 | |
| 54 | 151123 | 토론회자료 |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3차) | 여의도 연구원 발간 | 200부 현장배포 | 여의도 연구원과 공동 |

| 순번 | 발간일자 | 종류 | 제 목 | 발간방법 | 발간부수 및 활용 | 비 고 |
|----|--------|-------|-------------------------------------|--------------|----------------|-----|
| 55 | 151125 | 토론회자료 |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의원실 및 연구원 공동 | 100부 및 토론회 참고용 | |
| 56 | 151208 | 토론회자료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토론회 | 자체발간 | 200부 토론회 배포 | |
| 57 | 151227 | 연구논문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포용경제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연구용역) | 외부용역 | 10부 연구원 보관 | |

바. 그 밖의 주요활동(68건)

| 순번 | 일 자 (기간) | 장 소 | 활동명 | 주요내용 | 비 고 |
|----|-------------------|----------------|---------------------------|---------------------------------|--------|
| 1 | 150101~ 현재 | 민주정책연구원 | 시니어연구소 실무위원 | 부설연구소 조사, 연구, 개발사업 기획 및 집행 | 부설 연구소 |
| 2 | 150101~ 현재 | 민주정책연구원 | 소상공인연구소 실무위원 | 부설연구소 조사, 연구, 개발사업 기획 및 집행 | 부설연구소 |
| 3 | 150101~ 현재 | 민주정책연구원 | 청년정책연구소 실무위원 | 부설연구소 조사·연구·개발 사업기획 및 집행 등 실무지원 | |
| 4 | 150103~ 150112 | 민주정책연구원 | 윤리규범 초안 작성 | 초안 작성 및 자문 | |
| 5 | 150103~ 150115 | 민주정책연구원 | 교섭단체대표연설작성 | 초안 작성 및 자문 | |
| 6 | 150108~ 150328 | 국회 본관 |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 공무원연금제도개혁분과 국민대타협기구 전문위원으로 활동 | |
| 7 | 150120 | 국회의원회관 | 다문화 위원회 지원 | 회의 및 토론회 자료 참석 | 토론자 참석 |
| 8 | 150130~ 151221 | 연구원 내부 | 외부여론조사분석 | 여론조사 동향 및 시사점 분석 | 19회 |
| 9 | 150201~ 150408 | 국회, 민주정책연구원 | 분야별 토론회 패널 섭외 및 행사진행 | 정책엑스포 실무위원 | |
| 10 | 150205~ 151007 | 연구원 내부 |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검토 | 휴대폰 안심번호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 장단점 비교 | |

| 순번 | 일자 (기간) | 장 소 | 활동명 | 주요내용 | 비 고 |
|----|-------------------|-------------------------|-----------------------------|--|----------------------|
| 11 | 150225~ 150728 | 연구원 내부 | 데이터 활용 분석 |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의석변화 시뮬레이션 | 5회 |
| 12 | 150226 | 경실련회관 |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방안 토론회 | 토론 | |
| 13 | 150317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427호) | 복지재원확보논의를 위한 제1차 전문가 간담회 | 복지재원 확보논의(1) 복지지출과 조세정의 | 토론자 |
| 14 | 150322~ 150430 | 관악구(을) | 보궐선거지원 | 4.29 보궐선거 기획 및 정책 지원 | |
| 15 | 150401 | 경기도 성남시 | 재보궐 선거 파견 | 정책공약 개발 | |
| 16 | 150403 | 국회도서관 406호 | 복지재원확보논의를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 | 복지재원 확보논의(2)복지증세와 사회복지세 | 토론자 |
| 17 | 150406 | 국회의원회관 | 정책엑스포 | 복지분야 발제, 토론자 섭외 | |
| 18 | 150406 | 국회의원회관 | 정책엑스포 | 경제분야 발제 및 토론자 섭외 | |
| 19 | 150406~ 150408 | 국회 앞마당, 의원회관 등 |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개최 | 토론회, 정책부스 전시, 정책우수 사례 발표회, 이벤트 등 진행 | 중앙당, 시도당, 지자체와 공동 |
| 20 | 150410~ 150429 | 성남시 중원구 | 후보 정책지원 | 성남시 중원구 보궐선거 후보 정책 지원 | |
| 21 | 150422 | 국회의원회관 | 국회 출입기자 스터디 모임 발제 | 100세 사회 관련 발제 및 질의 응답 | 발제자 참석 |
| 22 | 150501 | 국회도서관 427호 | 복지재원확보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 | 해외 복지국가 사례분석(1) 독일, 스웨덴 | 토론자 |
| 23 | 150519 | 국회도서관 427호 | 복지재원확보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 | 해외 복지국가 사례분석(2) 일본, 프랑스 | 토론자 |
| 24 | 150604 | 국회의원회관 | 홍익표 의원실 토론회 사회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택 근무 활성화 방안 사회 | 사회자 참석 |
| 25 | 150605 | 홍익대학교 | 한국재정법학회·조세 재정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발제 | |
| 26 | 150607 | 민주정책연구원 | 최저임금 언론 인터뷰 | 언론 인터뷰(CBSi - The Scoop) | |
| 27 | 150630 | 국회 본청 245호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출범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순번 | 일자 (기간) | 장 소 | 활동명 | 주요내용 | 비 고 |
|----|-------------------|----------------------|-----------------------------|-----------------------------|----------------|
| 28 | 150707 | 국회 본청 당대표실 (205호)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제 1차 전체회의 | 분과별 정책 발표 및 토론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29 | 150708~ 150715 | 연구원 내부 | 정당 지지도 추이 분석 | 역대 야권신당, 창당 전후 지지도 추이 점검 | |
| 30 | 150718 | 상명대학교 | 한국 행정학회 연합학술대회 | 토론 | |
| 31 | 150721 | 충북도당 | 충북도당 당보 지원 | 노인관련 정책 당보 | |
| 32 | 150722 | 국회도서관 427호 | 복지재원확보논의를 위한 제6차 전문가 간담회 | 복지재원 확보방안 분석 및 평가 | 발표자 |
| 33 | 150731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 | 분과별 정책 발표 및 토론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34 | 150818~ 150917 | 중앙당 |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60년 심포지움 지원 | 심포지움 기획 및 진행 | |
| 35 | 150821~ 현재 | 국회 | 특별위원회위원 |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 |
| 36 | 150824 | 충북도당 | 충북도당 당보 지원 | 노인관련 정책 당보 | |
| 37 | 150828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 | 분과별 정책 발표 및 토론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38 | 150903 | 국회 의원회관 |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3법 토론회 | 발제 | |
| 39 | 150904 | 민주정책연구원 소회의실 | 지역경제포럼 | 조동기 SH 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 특강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40 | 150909 | 부산 YMCA 강당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부산의 미래 토론회 | 우석훈 국민경제연구센터장 토론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41 | 15091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에서의 권력분립 토론회 | 토론 | |
| 42 | 150918 | 용산역 토투 비즈니스센터 | 지역경제포럼 | 강봉용 목포대학교 교수 특강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43 | 150925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제 4차 전체회의 | 분과별 정책 발표 및 토론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44 | 150930 | 충북도당 | 충북도당 당보 지원 | 노인관련정책당보 | |

| 순번 | 일자 (기간) | 장 소 | 활동명 | 주요내용 | 비 고 |
|----|-------------------|-------------------------|--------------------------------------|---|----------------|
| 45 | 151002~ 151110 | 연구원 내부 | 현안관련 여론 추이 분석 |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한 여론 추이 분석 | |
| 46 | 151005~ | 연구원 내부 | 주요 정치지표 분석 | 최근 3년간 주요 정치지표 종합 분석 | |
| 47 | 151007 |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제3회 대한민국정책컨벤션 & 페스티벌' 기획 및 참여 | 연구원장 기조연설- 정책중심의 정당과 정책지식생태계, 그리고 안전과 거버넌스"/ 정책지식 생태계 라운드 테이블 세션 토론 참여-정책지식생태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
| 48 | 151008~ 현재 | 민주정책연구원 | 연구용역 관리 |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이남신 외] |
| 49 | 151013~ 151019 | 국회, 민주정책연구원 | 국민예산마켓 멘토단 | 국민예산마켓 정책예산 선정 | |
| 50 | 151014 | 민주정책연구원 |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응 자료 작성 | 경제전반에 대한 지표 및 관련 자료 작성 및 제공 | |
| 51 | 151014~ 151020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국민예산마켓 정책예산 심사 | 국민들이 제안한 100대 예산 및 10대 예산 후보 선정 | |
| 52 | 151015 | 민주정책연구원 | 국민예산마켓 멘토단 활동 | 100대 및 10대 국민예산 선정 | 멘토 참석 |
| 53 | 151016 | 민주정책연구원 소회의실 | 5차 조세재정 분과회의 특강 | 조영철 국회예산처 사업평가국장 특강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54 | 151020 | 서울시 시민청 이벤트홀 | 한국자활협회 자활제도화 15주년 기념 포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활사업 의평가토론회 | 토론자 |
| 55 | 151023 | 민주정책연구원 소회의실 | 8차 지역경제 분과회의 특강 |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교수) 특강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56 | 151026 | 충북도당 | 충북도당 당보 지원 | 노인관련 정책 당보 | |
| 57 | 151030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 | 분과별 정책 발표 및 토론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58 | 151109 | 종로 체험관 | 국정교과서 반대 홍보 | 한국사교과서체험관운영 | |
| 59 | 151119 | 국회 의원회관 |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토론 | |
| 60 | 151120 | 민주정책연구원 소회의실 | 10차 지역경제 분과회의 특강 |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교수) 특강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순번 | 일자 (기간) | 장 소 | 활동명 | 주요내용 | 비 고 |
|----|-------------------|-----------------|------------------------------|------------------------------------|----------------|
| 61 | 151125 | 국회 의원회관 | 민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발제 | |
| 62 | 151127 |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제 6차 전체회의 | 분과별 정책 발표 및 토론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63 | 151201 | 국회본청 | 2016 총선거획단 | 정책공약개발 | |
| 64 | 151201~ 현재 | 국회 | 분야별 정책개발 | 국회의원선거 공약개발 TF | |
| 65 | 151211 | 민주정책연구원 소회의실 | 6차 조세재정 분과회의 특강 | 정창률 단국대 교수 특강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66 | 151214 | 민주정책연구원 소회의실 | 6차 산업분과회의 특강 | 최안용 경영고문 특강 | 유능한경제정당 위원회 |
| 67 | 151215 | 국회 본관 정책위의장실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 |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한 질좋은 청년 일자리 확충방안 제시 | 토론자 |
| 68 | 151230~ 151230 | 용산구 동자동 | 자원봉사 | 주거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활동 | |

[별첨 1]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수권정당을 위하여 – 중산층 정치

- 연구기간 : 2014년 12월 1일 ~ 2015년 1월 2일(1개월 1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부자 대 서민의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중산층 중심의 국민통합 정치를 통한 수권정당 전환 탐색

☑ 연구내용

- 현재 대한민국의 중산층 현실을 분석, 중산층 패러독스와 함께 중산층 정치 프레임 및 중산층 정책방향 제안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소책자 발간

[별첨 2]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연말정산 논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1월 23일(23일)
- 연구분야 : 기재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연말정산 파동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
- ☑ 연구내용
 - 연말정산 관련 문제점 검토
 - 의료비, 교육비 공제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촉구하며 - 연금총당부채론을 넘어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2월 3일(1개월 3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든 다양한 허상과 착시로 인해 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연금총당부채론을 분석,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연금총당부채의 허상을 파헤쳐 공무원개혁의 본질논쟁을 촉구하는 것

☑ 연구내용

- '연금총당부채 = 빚' 프레임 분석
- 양립 불가능한 부과방식연금과 연금총당부채의 모순 분석
- 일본과 스웨덴의 연금재정방식과 총당부채 계상방법 비교

☑ 연구성과

- 공무원연금개혁논의대상 중 총당부채와 수지적자를 구분하여 개혁대상을 명확히 하여 논의의 우선순서를 제공

주제 : 2·8 전당대회 이후 핵심 아젠다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일 ~ 1월 16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 기재, 산자, 복지, 환노
- 연구방법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8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당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비전과 정책,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연구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시

☑ 연구내용

- 비전으로 희망, 유능을 제시하고, 당의 그릇된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담대한 아젠다를 제시
- 민생은 담대하고 분명한 경제성장의 비전에 근거해야 함
- 정책방향으로 중산층 복원을 위한 핵심정책 제시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에 보고

[별첨 5]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윤리규범 초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3일 ~ 1월 12일(10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윤리규범 조문화
- ☑ 연구내용
 - 윤리규범의 목적 및 윤리기강 확립을 위한 세부항목 제안
- ☑ 연구성과
 - 윤리규범 작성 TF 보고

주제 : 교섭단체 대표연설 초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3일 ~ 1월 15일(13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작성 기본 자료
- ☑ 연구내용
 - 교섭단체 대표연설 프레임과 핵심 키워드
- ☑ 연구성과
 - 교섭단체 대표연설 TF 보고

주제 : 중산층 살리기 희망플랜 - 전략과 정책

- 연구기간 : 2015년 1월 5일 ~ 1월 20일(16일)
- 연구분야 : 기재위, 환노위, 복지위 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가 및 골목경제의 전반적 위기상황에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산층 회복을 위한 전략과 정책 연구

☑ 연구내용

- 중산층의 현실인식 평가 및 분석
- 중산층의 서민화/빈고노화 요인 분석 : 저성장 장기화와 고용없는 성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제·사회적 불안감
- 중산층 살리기 위한 정책비저노가 전략 : 성장과 복지 그리고 고용의 선순환 모델을 통한 실행 정책 의제 및 그 실행을 위한 전략적 방안 제시
- 중산층 살리기 위한 핵심정책의제

☑ 연구성과

- 새 지도부의 정책비전과 의제로 활용
- 당의 중산층 대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별첨 8]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혁신경제 활성화 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5일 ~ 1월 30일(26일)
- 연구분야 : 산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정책 모색
- ☑ 연구내용
 - 혁신경제 활성화 정책 대안제시
- ☑ 연구성과
 - 보고서 발간

[별첨 9]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새정치민주연합의 산업별 지지세력 구축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5일 ~ 1월 30일(26일)
- 연구분야 : 산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사례를 통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산업별 지지세력 구축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미국의 개인별, 산업별 정당지지 현황 분석
-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책 방향 및 지지계층 분석을 통한 산업별 정당지지 방안 모색

☑ 연구성과

- 보고서 발간

주제 :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 만들기 종합대책 - 전략과 정책 그리고 액션플랜

- 연구기간 : 2015년 1월 5일 ~ 2월 23일(1개월 18일)
- 연구분야 : 기재위, 정무위, 환노위, 복지위 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총선 및 2017년 대선을 대비한 국가비전과 정책 프레임으로서의 소득주도성장과 중부담 중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의제로서 중산층 종합대책 연구

☑ 연구내용

- 당이 지향해야 할 국가발전상으로서의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 최대고용을 이루는 중부담중복지 국가, 성장-고용-복지 선순환모델
- 중산층이 추락하게 된 요인 분석 :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
-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의제
- 핵심정책과제로서, 혁신경제와 신산업전략, 조세·재정 그리고 복지대타협, 노동·일자리 그리고 소득안정성 등과 관련한 실천정책과제

☑ 연구성과

- 새 지도부의 정책비전과 의제로 활용
- 국회의원 및 당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생계형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1월 5일 ~ 4월 1일(2개월 26일)
- 연구분야 : 산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생계형 서비스업 가운데 대표적인 업종인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그리고 개인서비스업 현황 분석
- 생계형 서비스업의 매출액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제시

☑ 연구성과

- IDP 보고서 발간

[별첨 12]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정당혁신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8일 ~ 1월 18일(11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당 혁신 방향 제안
- ☑ 연구내용
 - 정당 혁신 방향 및 구체 과제들을 제안함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연구기간 : 2015년 1월 9일 ~ 1월 12일(4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고령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언급

☑ 연구내용

-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 파악
- 의존적 관점을 넘어 활동적, 생산적 관점에서의 이동이 필요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오바마 정부의 중산층 경제 - 함의와 시사점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0일 ~ 1월 23일(14일)
- 연구분야 : 기재위, 정무위 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나타난 중산층 경제의 함의와 시사점을 통하여 당의 정책방향 연구

☑ 연구내용

-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경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
- 중산층 살리기 위한 정책방향과 그 실행전략으로서 자원조달방안인 부자증세 제안
- 중산층 경제에 대한 미국 내·외의 평가와 시사점 :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와 오바마 정부 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뚜렷하고 지속적인 추진

☑ 연구성과

- 새 지도부의 정책비전과 의제로 활용
- 당 중산층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주제 :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0일 ~ 1월 30일(20일)
- 연구분야 : 기재, 산자, 복지, 환노
- 연구방법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중산층 70% 달성을 내걸었지만, 이는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 내 중산층이 감소하면 내수 기반이 취약해져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사회 불안과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또한 사회조정 비용의 급증을 가져오게 됨
- 따라서 중산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내용

- 조세정책을 통한 중산층 지원 대책
- 보육불안 해소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노동정책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및 당 지도부에 보고

주제 : 대통령선거와 캠페인 슬로건 -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0일 ~ 2월 16일(1개월 7일)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총선 및 2017년 대선을 대비한 당의 국가비전 연구를 위하여 미국과 프랑스의 선거캠페인과정에서 제시된 슬로건 연구

☑ 연구내용

- 선거캠페인의 슬로건이 담고 있는 의미와 영향 분석 : '한 줄의 카피'
- 미국 대선 후보자의 캠페인 슬로건 : 1916년 이후 오바마 대통령 후보자의 슬로건을 실제 사례를 분석 : 주제별 빈도, 용어별 빈도분석을 통한 의미와 시사점 도출
- 프랑스 대선 후보자의 캠페인 슬로건 : 1965년 이후 올랑드와 사르코지 대통령 후보자의 슬로건을 실제 사례를 분석 : 주제별 빈도, 용어별 빈도분석을 통한 의미와 시사점 도출
- 대선 슬로건에서 나타난 미국과 프랑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슬로건 예시

☑ 연구성과

- 새 지도부의 정책비전과 의제로 활용
- 2016 총선 정책 및 전략결정과정에서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정형데이터에 기반한 전국 정치지형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0일 ~ 3월 20일(2개월 10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20대 총선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
- ☑ 연구내용
 - 선거 통계를 활용한 선거구별 특성 분석
- ☑ 연구성과
 - 당대표 보고

주제 : 새로운 대중의 출현과 진보의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2일 ~ 2월 8일(4주간)
- 연구분야 : 사회학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990년대 이후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로 인해 한국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세대의 이해와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전략을 구축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새로운 세대의 이해와 정체성, 새롭게 나타난 정치적 갈등구조, 새로운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진보정치 전략 등

☑ 연구성과

- 정책입안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선거 전략구성의 기초자료로 사용

주제 : 부의 불평등과 중산층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적 재분배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5일 ~ 1월 30일(15일)
- 연구분야 : 기재
- 연구방법 : 내부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부의 불평등의 원인과 중산층 강화할 수 있는 조세 정책방향
- ☑ 연구내용
 - 부의 불평등 현황 정리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임대소득 과세 등 방안제시)
- ☑ 연구성과
 - 내부보고서로 제출

주제 : 최대고용을 위한 중부담·중복지 복지국가象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5일 ~ 2월 9일(25일)
- 연구분야 : 기재,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에서 보듯이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꿈수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다양한 '증세 없는 복지'의 출구 전략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증세논의를 위한 국가象과 '제3의 길' 제시

☑ 연구내용

- 최대고용을 위한 '중부담·중복지' 진로
- '중부담·중복지'는 어떤 복지 국가인가?
- 중부담의 방향과 세부적 증세방안

☑ 연구성과

- 원장단 회의에 보고

주제 :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원장악보고서 - 지역·이념·계층세대의 중원장악을 위하여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5일 ~ 3월 9일(2개월)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와 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의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2016총선 및 2017 대선 승리를 위한 중원전략 목표 설정
- 2012년 총선 이래 2017 대선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새누리당의 보수 정당화 전략에 대한 맞춤형 대안 전략 모색
- 2010년대 한국 사회의 이념성향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조응하는 맞춤형 대안 전략 마련

☑ 연구내용

- 중원전략의 목표와 방향 : 경제에 있어서 포용적 성장, 복지에 있어서 유연한 복지전략 추구,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있어서 국민적 통합수준의 대안 제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획득 전략 추구
- 중원전략의 핵심의제 : 신뢰의 정당, 포괄정당, 당 지도부 이미지 개선, 경제정당의 비전과 대안, 이념적 공간의 확대, 지리적 중원(수도권, 충청) 장악, 저출산·고령화 적극 대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 계파의 이익 대신 정책과 대안을 중심의 선의의 경쟁 등
- 중원장악 의제의 실천방안 :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승리의 관건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정권을 맡기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국민들로부터의 '높은 신뢰(high Trust)'를 얻는 것임. 국민들로부터의 '무한 신뢰'를 얻는 방법은 ① 경제를 크게 성장(high Economic performance)시키고, ② 스스로 크게 변화(highly Changed)하며, ③ 서로를 많이 존중(high Honor)하고 품격을 갖춤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능력을 보여주고 미래에도 계속 스스로 혁신할 것이라는데 확신을 주는 것임

☑ 연구성과

- 새 지도부의 정책 비전과 의제로 채택됨

주제 :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정책보고서 - 소득보장 강화와 고용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5일 ~ 3월 23일(2개월 8일)
- 연구분야 : 복지위, 환노위, 기재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의 사회정책 분야에 있어서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한 국 사회의 중요한 복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정책 의제 제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로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민주적 가치의 실현과 포용적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소득주도형 성장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 소득주도형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액을 인상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 누구나 실직과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상실기에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함
 - * 근로자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보험 강화, 최저임금액 인상, 노동소득분배율 인상, 은퇴자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 등
- 적정인구규모와 노동력의 유지 : 적정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이 필요함
 - *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잠재성장을 저하를 막기 위해서 기존의 비활성화된 근로가능 인구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 모색
 - * 일-가정 양립정책,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이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 연구성과

- 새 지도부의 포용적 번영, 유능한 경제정당,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비전과 의제로 채택됨

주제 : 신지도부의 정치분야 정책의제와 대응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9일 ~ 1월 25일(6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로 구성될 지도부의 참고자료 작성

☑ 연구내용

- 2015년 예상되는 정치분야 정책 의제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제안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제출
- 새로운 당 지도부 참고자료

주제 : 은퇴시기 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0일 ~ 2월 2일(14일)
- 연구분야 : 환노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은퇴시기 인력의 평균정년퇴직연령과 실질은퇴연령과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 연구내용

-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방향 모색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발간

주제 : 그리스 총선과 포퓰리즘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0일 ~ 2월 3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1.25 그리스 총선 분석 및 유럽의 진보 정치 동향 정리

☑ 연구내용

- 그리스 총선 이후 유럽의 포퓰리즘 강화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 도출, 정치 정상화의 대응 방향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주제 :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 - 전략과 정책&액션플랜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0일 ~ 2월 13일(23일)
- 연구분야 : 기재, 복지, 산자, 환노
- 연구방법 : 자체(연구기획실 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국가비전, 즉 지향하는 '국가발전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방향을 제시할 필요

☑ 연구내용

- 어떤 국가를 지향하는가?
- 중산층의 추락요인과 현실인식
- 정책목표와 전략: 어떻게 중산층을 잘 살게 할 것인가?
- 핵심 정책과제
 - 혁신경제와 신산업전략
 - 조세·재정, 복지대타협
 - 노동·일자리, 소득안정성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및 지도부에 보고

주제 : 초저출산 시대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일 ~ 2월 16일(15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제시

☑ 연구내용

- 한국의 인구변동 및 정책 현황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시장 지위 유지 및 돌봄의 탈가족화를 위한 제도, 돌봄노동의 역할분담을 위한 유인 강화

☑ 연구성과

- IDP 보고서 발간

주제 : 포용적 번영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 번역문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일 ~ 2월 28일(1개월)
- 연구분야 : 기재위, 정무위, 환노위, 복지위 등
- 연구방법 : 국회도서관 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총선 및 2017년 대선을 대비한 국가비전, 정책 프레임 및 아젠다 연구

☑ 연구내용

- 미국 진보센터(CAP)와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IPPR) 서머스(L. Summers)와 볼스(E. Balls)를 공동대표로 하는 '포용적번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국 1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1년 6개월의 연구 작업의 결과물인 '포용적번영위원회보고서'를 발간함
- 1980년대 초 신자유주의 열풍의 진원지였던 영국과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포용적 번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함
- 보고서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전후에서 최근까지 서구 사회의 불평등이 확대되어 간다고 진단하고 '포용적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5가지의 주요 정책분야의 대응 방식을 제안함
 - * 임금의 상승 : 일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경제에서 완전고용 달성
 - * 모두에게 제공되는 교육 기회의 확대
 - * 혁신과 지역 클러스터 지원방안 마련
 - * 장기관점주의 확대 : 장기적 지속가능 구조 정착
 - * 세계적 수요, 무역, 금융 안정성, 법인세 회피 관련 국제적 협력강화

☑ 연구성과

- 새 지도부의 정책비전과 의제로 포용적 번영과 포용경제 제안
- 2012년 대선 당시 당이 내세웠던 '사람이 먼저다' 가치지향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은 '포용적번영위원회'의 주장과 일맥상통함

주제 : 영국의 사회개혁전략 [IPPR보고서]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일 ~ 3월 6일(1개월 6일)
- 연구분야 : 기재위, 정무위, 환노위, 복지위 등
- 연구방법 : 국회도서관 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총선 및 2017년 대선을 대비한 국가비전, 정책 프레임 및 아젠다 연구

☑ 연구내용

-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PPR) 발간 정책보고서 번역
- 주요 내용
 - * 영국의 더 견고한 사회를 위한 세 기둥 : 권한과 책임의 분선, 기여와 상호주의의 촉진, 공유되는 기관의 강화
 - * 사회개혁전략 : 가정(아동양육과 관계 정립), 젊은이(성년기로의 안정된 이행 보장), 일하는 삶(근로촉진 및 기여에 대한 보상), 주거(주택건설 증대를 위한 지역 리더십 동원), 범죄와 소외(사람과 장소에 대한 관리), 노년층(고령화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법) 등

☑ 연구성과

- 새 지도부의 정책비전과 의제로 활용

주제 :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전·행정 정책보고서 - 책임과 안전 그리고 인권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5일 ~ 3월 23일(2개월 8일)
- 연구분야 : 복지위, 환노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부의 안전 행정분야에 있어서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한 국정관리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정책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국민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적 이슈의 관리, 총선과 대선을 관통하는 정책이슈의 지속적 관리, 정책과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 등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 연구내용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통한 인사권 남용 방지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검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국회, 인사검증 검증기구, 청와대 간 인사검증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엄정하게 검증된 인사를 청와대가 임명 또는 국회청문회에 추천함
- 국회 결산강화를 통한 정부예산 낭비 방지 및 책임성 확보 : 결산관련 상임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충실한 결산을 위한 심사기간의 연장, 상시적 회계검사 및 사업 효율성 평가의 강화, 결산심사 결과의 정부 수용성 확보 강화
-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 국무총리 소속에서 분리하여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위상 재정립, 재정적 독립성 확보, 원자력 산업계 등 이익단체로부터 보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 개선(원자력발전의 건설과 운영연장 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아닌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강화)
- 국민옴부즈만 도입을 통한 국민권리의 적극적 구제 : 독립적 국민옴부즈만기구 국회내 설치, 옴부즈만에 대한 국회 청문회 적용, 옴부즈만의 권고결정에 대한 기관의 수용 의무화, 옴부즈만의 임기 등 신분보장의 강화
- 국가 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인권 보장 강화 : 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지위의 강화(헌법에 규정),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 연구성과

- 새 지도부의 정책 비전과 의제로 채택됨

주제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활성화 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2월 3일 ~ 2월 16일(14일)
- 연구분야 : 산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 연구내용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기동인 역동적 성장, 포용적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발간

주제 : 세금의 정치

- 연구기간 : 2013년 2월 4일 ~ 3월 5일(1개월 2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조세 정책의 정치적 함의 분석 및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정리

☑ 연구내용

- 세제개혁의 원칙, 목적, 기본 방향
-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 조세개혁과 오바마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주제 : 변화와 신뢰 - 당 혁신, 정치혁신, 그리고 정책혁신

- 연구기간 : 2015년 2월 8일 ~ 2월 24일(17일)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2·8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이 제안한 당과 정치 그리고 정책혁신을 위해 제시한 선거공약 연구

☑ 연구내용

- 당 대표 후보자의 공약 분석
 - * 당 체제의 성격과 조직개편 및 운영
 - * 계파 청산과 공천개혁, 그리고 당원 역할 강화
 - * 지역분권과 지역역할 강화를 위한 정치혁신
 - * 경제와 민생정책 혁신
- 최고위원 후보자 공약 분석
 - * 당 체제의 성격과 조직개편 및 운영
 - * 계파 청산과 공천개혁, 그리고 당원 역할 강화
 - * 지역분권과 지역역할 강화를 위한 정치혁신
 - * 경제와 민생정책 혁신
- 변화와 신뢰를 위한 5대 혁신방향과 액션플랜

☑ 연구성과

- 새 지도부의 정치활동 및 당 혁신의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한국에서 책임총리란 무엇인가 (I)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0일 ~ 2월 25일(15일)
- 연구분야 : 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무총리 사임에 따른 새로운 국무총리의 역할 조명
- ☑ 연구내용
 - 책임총리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구성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권역별정당명부비례제 시뮬레이션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1일 ~ 3월 4일(23일)
- 연구분야 : 행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권역별정당명부비례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 연구내용

- 17대~19대 총선에 권역별정당명부비례제를 적용한 경우 의석 분포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제출
- 정치개혁특위에 제출

주제 : 조세정의 구현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세 개혁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2일 ~ 2월 27일(15일)
- 연구분야 : 기재
- 연구방법 : 내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새정치 민주연합의 조세정책 제시

☑ 연구내용

- 증세의 필요성과 방향
- 조세개혁 방안 (사회복지세, 금융소득 과세 방안 등)

☑ 연구성과

- 내부보고서로 제출

주제 :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번영보고서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5일 ~ 2월 28일(13일)
- 연구분야 : 기재위, 정무위, 환노위, 복지위 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저성장과 경제위기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미국과 민주당의 포용적 번영, 그리고 번영이라는 영국 노동당의 정책장향 연구

☑ 연구내용

- 미국과 민주당의 포용적 경제
 - * 현대경제의 상황으로서의 저성장과 불평등의 요인 분석
 - * 역동적 시장경제와 공정한 사회의 조화를 꾀하는 포용적 경제의 개념
 - * 포용적 번영을 위한 진보정치역할 등
- 영국 노동당의 과제로서의 번영 분석
 - * 더 나은 사회보다는 더 강한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서, 권한과 책임의 전사회적 확산, 사회개조를 위한 전략,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정책 의제

☑ 연구성과

- 새 지도부의 정책비전과 의제로 활용
- 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2.23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검토

- 연구기간 : 2015년 2월 23일 ~ 2월 25일(3일)
- 연구분야 : 행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23 발표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검토

☑ 연구내용

-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대해 분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추가 검토할 부분을 구분함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제출
- 추후 구성된 정치개혁 특위에 제출

주제 : 한국에서 책임총리란 무엇인가 (II)

- 연구기간 : 2015년 2월 26일 ~ 3월 3일(6일)
- 연구분야 : 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무총리 사임에 따른 새로운 국무총리의 역할 조명
- ☑ 연구내용
 - 책임총리 출현의 권력구조적, 헌법적 토대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국회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일 ~ 3월 26일(26일)
- 연구분야 : 기재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부담·중복지 논의가 촉발된 이후 증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발생
- 따라서 신설예정인 조세개혁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검토

☑ 연구내용

- 중부담·중복지 개념정의
- 증세방안 정리(대상별, 목표별)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포용적 성장으로 선진복지국가를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일 ~ 3월 30일(30일)
- 연구분야 : 기재, 복지, 산자, 환노
- 연구방법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총선을 대비해 당의 경제·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총선 공약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함

☑ 연구내용

-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중산층 재건
- 신산업전략을 통한 경제생태계 전환 및 경제체질 개선
- 일자리 복지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 및 일과 복지의 선순환

☑ 연구성과

- 지도부에 보고

주제 : 선거제도 개편안 - 현실적 장벽과 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3월 5일 ~ 3월 8일(4일)
- 연구분야 : 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분석 및 발표

☑ 연구내용

- 중선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분석 및 현실적 고려 사항 제언

☑ 연구성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 토론회(정청래 의원실 주최) 발표

주제 : 영수회담 의제와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3월 5일 ~ 3월 13일(9일)
- 연구분야 : 기재, 복지, 산자, 환노, 통외
- 연구방법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영수회담이 예정된 바, 대통령이 제안할 의제를 분석하고 당대표가 제시할 의제와 대응방안을 제시

☑ 연구내용

- 영수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 대통령 의제와 대응: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공무원연금 관련, 통일외교안보 분야
- 당대표 의제와 대응: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정책 기조 전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전월세 및 가계부채 문제, 조세정의와 세제 문제 등

☑ 연구성과

- 연구원장 및 지도부에 보고

주제 : 이기는 혁신의 길 - 온 국민 정치

- 연구기간 : 2015년 3월 6일 ~ 4월 2일(28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문재인 신임 대표가 제안한 '이기는 혁신'의 기본 방향 탐색

☑ 연구내용

- '우리 안의 근본주의'에 대한 자기성찰 및 온 국민 정치의 과제
- 공감의 정치, 공동운명의 정치, 청의 정치 구체화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소책자 발간

주제 : 경선제도 개혁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0일 ~ 3월 25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제도 개혁 방안 검토

☑ 연구내용

- 2016년 총선을 대비한 경선제도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제언함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에게 제출
- 당 지도부 참고자료

주제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0일 ~ 3월 17일(7일)
- 연구분야 : 환노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저임금 수준의 추이와 국제비교
-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최저임금 논의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검토
-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연구
-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전·현직 의원, 당원 및 전문가 그룹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당의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제고에 기여

주제 :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3일 ~ 3월 28일(15일)
- 연구분야 : 국방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사드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사드의 주요 개요를 살펴보고 미국 MD체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KAMD(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추진 현황을 분석
- 사드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사드 관련 미·중·일·러 주변국의 입장을 분석
- 사드 한국 배치가 갖는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당 차원의 대응방향 제시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보고서를 배포함으로써 사드 관련 당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정책자료로 활용

주제 : 100세 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구상 2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0일 ~ 3월 24일(5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방향 제시

☑ 연구내용

-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정년제도, 점진적 퇴직제도, 이모작 일자리 제시

☑ 연구성과

- 보고서 발간

주제 : 흔들림 없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9일 ~ 3월 31일(3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제언 제시

☑ 연구내용

-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무상급식은 indicator-targeting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동향과 시사점

- 연구기간 : 2015년 3월 30일 ~ 4월 8일(9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문헌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김정은정권 출범이후 북한은 기존의 중앙급 경제특구 외에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는 등 경제특구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김정은체제의 경제특구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큰 틀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김정은 체제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제정책인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의 주요 특징을 분석
-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전망한 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대북정책 제시

☑ 연구성과

- 당내 국회의원, 시도당 등에 배포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주제 : 온 국민 성장 정책

- 연구기간 : 2015년 4월 3일 ~ 5월 14일(1개월 13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유능한 경제정당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제안

☑ 연구내용

- 유능한 경제정당의 국가비전 및 정책의 혁신 원칙
- 경제정책과 관련, 기존 메시지의 방향 전환 및 새누리당과의 차별성

☑ 연구성과

- 정책연구실 보고

주제 :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언론보고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다함께 정책엑스포의 성과와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0일 ~ 4월 13일(3일)
- 연구분야 : 전 상임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정치민주연합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행사의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각계각층의 평가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정당 및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과제를 모색

☑ 연구내용

- 언론보도의 키워드를 통해서 본 정책엑스포 : 최초 그리고 변화, 정책경쟁과 경제정당, 대안야당, 정책야당, 대선유력주자간의 첫 대결-진검승부
- 언론이 주목한 활동과 프로그램 : 정책엑스포 홍보동영상, 문재인(소득주도성장론)·안철수(공정성장론)·박원순(복지성장론)·안희정(선순환복지성장론)빅4의 개막연설 및 기조연설, 청년 대학생의 미래세대 이야기 등
- 새누리당의 반응과 대응 : 상반된 평가공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엑스포에 대응하는 행사진행(중소기업 성공버스 전국투어에 나섬, 당 정책위주동의 정책워크숍 개최, 새줌마 현장투어 등), 새누리당과의 정책프로그램 비교보도 증가
- 언론보도에 나타난 긍정성 : 정당 사상 첫 정책엑스포 개최, 당내 리더의 출연과 리더들의 비전과 정책지향성을 제시하는 정책대결의 장으로서 정책엑스포 긍정평가
- 언론 보도에 나타난 부정성 : 개별프로그램의 낮은 주목도, 축제와 토론 경계의 설정 부족(지방특산물판매 정책 관련성에 대한 문제제기, 겉모습만 변화하는 일회성 이벤트 등
- 향후 과제 : 정책정당 및 대안정당(정책으로 다투고 갈등하는 정당)으로서의 위상강화. 정치적 스펙트럼의 확장성 강화, 정책엑스포의 정책에 대한 구체화 및 현실화. 정책엑스포의 정례화 등 지속성 강화

☑ 연구성과

- 당과 지도부에 보고하고 국회의원, 정책위원회 등에 배포

주제 :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종합보고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3일간의 기록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0일 ~ 4월 27일(17일)
- 연구분야 : 전 상임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개최의 추진배경 및 의의, 경과, 주요행사와 결과 등 기획 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
- 정책엑스포의 기획과 실행단계 평가하고 향후 정책정당 및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

☑ 연구내용

-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목적 및 행사개요, 기본 컨셉과 실행프로그램
- 정책토론회 : 목적 및 개요, 토론 분야별 프로그램, 주요 세션별 현장스케치, 핵심의 제안, 평가와 제언
- 정책부스 : 목적 및 운영사례, 정책제안과 반영방안, 평가 및 제언
- 이벤트(미래세대) : 목적 및 취지, 프로그램 및 실행결과, 향후 과제
- 홍보 : 정책엑스포 홍보방법, 홍보에 대한 대외적 효과와 반응
-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다함께 정책엑스포 : 성과와 과제

☑ 연구성과

- 당과 지도부에 보고하고 국회의원, 정책위원회 등에 배포

주제 :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정책보고서] 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말하다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0일 ~ 4월 27일(17일)
- 연구분야 : 전 상임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정치민주연합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토론회와 정책부스 등에서 제안한 정책과 입법의제를 당에 제안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로 반영
- 향후 정책 의제, 의제 공유과정, 대안 찾기, 정책검증(피드백) 등의 정책과정 구축 및 활용

☑ 연구내용

- 총 22개 토론회 세션별 정책보고서 작성 및 핵심의제 제안 (기획토론회 : 9, 특별토론회 : 13)
- 총 106개의 정책 부스 참여한 단체(직능단체, 을지로위원회, 청년대학생장애인, 광역단체, 기초단체 등) 중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약사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22개 단체 정책 제안
- [기조연설] 새정치민주연합, '빅4' 성장담론 경쟁 :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 안철수 전대표의 '공정성장론',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성장론',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순환복지성장론'
- 기획토론회(포용적 성장과 중산층 정책): 혁신경제와 신산업 전략(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사람중심경제등), 조세·복지(복지와 증세 방정식의 해법 등), 일자리노동(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과 의제 등) 분야 정책 제안
- 특별토론회(직능인·대학생·청년·여성·지방정책) : 직능인 정책(소비자생활 활성화정책 등), 대학생·청년정책(군대전역지원금 정책 등), 여성정책(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정책대안 등), 지방정책(복지국가 지방재정 구조 개선방안 등) 제안
- 정책부스(참여단체 제안정책) : 포괄간호서비스제공 제도화, 소공인 중심의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건설현자의 적정임금제도 도입,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방안 등

☑ 연구성과

- 당의 정책과 입법과제로 활용. 당과 지도부에 보고하고 국회의원, 정책위원회 등에 배포

주제 : 명목소득대체율 50% 거짓과 진실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1일 ~ 5월 7일(26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조건으로 제시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40%인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의 동시진행의 정당성을 제시

☑ 연구내용

-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정리
-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을 연결시킨 이유 및 필요성 제시

☑ 연구성과

-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둘러싼 오해 불식 및 공무원연금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내의 논쟁을 정리

주제 : 정책연구소 역할강화를 위한 실천적 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일 ~ 5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당정책연구소의 위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정당정책연구소의 오늘과 내일
 - * 정책개발 및 생산기로서 역할과 위상
 - *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 한계
 - *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상 마련
- 의원입법 개정안의 허와 실
 - * 국고보조금의 직접 수령의 문제
 - * 후원회 및 수익사업의 문제
 - *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 문제
 - * 운영 투명성 확보 문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발전기금법> 제정안에 대한 단상

☑ 연구성과

- 중앙선거관위 주최 정책정당연구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제안문으로 활용

주제 :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의 갈등과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일 ~ 5월 22일(22일)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29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우리 당 선거패배의 흑역사 극복을 위한 전략 연구

☑ 연구내용

- 4.29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본 선거연패의 흑역사
- 유권자 투표선택요인조사 및 분석을 통한 패배 요인
- 2016총선 인식과 지형 전망
 - * 유권자의 총선 인식과 지형변화 전망
 - * 총선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
- 갈등과 위기 극복을 위한 액션플랜
 - * 단결을 위한 내부 혁신방안 : 리더십 재건, 당 조직 현대화, 정책·전략적 스탠스 전환, 그리고 계파를 넘어선 당 운영 등
 - * 정치제도 개선안 : '중간선거제도' 도입방안

☑ 연구성과

- 지도부의 당 운영과 유권자 지지율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사회복지사의 임금결정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일 ~ 6월 30일(2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사회복지사의 임금결정 및 임금격차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제언

☑ 연구내용

- 노동시장 임금결정 및 임금격차 이론 검토
- 회귀분석 및 오아까 임금분해를 통한 정책제언 제시

☑ 연구성과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한국비영리연구」에 게재

주제 : 병립형 + 연동형 설계 검토

- 연구기간 : 2015년 5월 6일 ~ 5월 12일(7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교 검토

☑ 연구내용

-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고 선거 결과 영향을 분석함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게 제출

주제 : [교육자료]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과 정책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5일 ~ 6월 3일(19일)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신입당직자 및 대학생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당 강령과 정책 교육자료

☑ 연구내용

- 정치와 정당 그리고 강령
- 강령의 구성과 핵심내용 : 전문과 정책
 - * 역사인식과 현실진단 * 해결목표와 시대적 가치
 - * 지향국가상 * 13개 분야 56개 정책의제의 의미와 핵심내용
- 당의 정책기조와 방향 : 한국형 선진복지국가모델 / 성장-고용-복지 선순환모델
- 유권자 인식과 투표행태변화에의 대응방안

☑ 연구성과

- 지도부의 당 운영과 유권자 지지율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2015년 영국총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5일 ~ 6월 8일(24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5.7 영국 총선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구내용

- 5.7 영국 총선 결과와 민심, 노동당의 자기성찰과 혁신방향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소책자 발간

주제 : 선거여론조사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6일 ~ 5월 31일(7일)
- 연구분야 : 행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선거여론조사 방식의 개선점 검토
- ☑ 연구내용
 - 선거여론조사 방식을 비교 검토하고 안심번호제 등 개선 방안 제안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지역정당 - 정당분권화 방안과 효과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6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역정당 및 정당분권화에 대한 검토

☑ 연구내용

- 지역정당 도입과 정당분권화 추진의 장단점 비교 검토 및 제안

☑ 연구성과

- 경남도당, 부산시당위원장에게 제출

주제 : OECD, 2015 경제정책개혁 - 구조개혁평가보고서(요약문)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5월 17일(17일)
- 연구분야 : 기재위, 정무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각 국가의 정책개혁이 그들 국가의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연구

☑ 연구내용

- 2013년 이래의 구조개혁 진전
- 구조개혁의 우선순위
- 성장 친화형 개혁과 소득 분배
- 성장친화적 개혁과 환경정책
- 2015년의 개혁 흐름

☑ 연구성과

- 지도부 및 당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고 및 기초자료로의 활용

주제 : 스티글리츠, 미국경제규칙 새로쓰기 - 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젠다 [요약보고서]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6월 20일(20일)
- 연구분야 : 정무위, 기재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공황 이래 최악이 금융위기, 중산층의 후퇴, 부의 집중 등의 변화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

☑ 연구내용

- 상층을 다스린다
 - * 금융부분을 바로 잡는다
 - * 장기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든다
 - * 조세 및 소득이전제도의 균형을 다시 잡는다
- 중산층을 성장시킨다
 - * 완전고용을 목표로 삼는다
 - * 노동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발전의 기회를 확대한다
 - * 경제적 안전과 기회를 확대한다

☑ 연구성과

- 지도부 및 당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고 및 기초자료로의 활용

주제 :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6월 7일 ~ 6월 9일(3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소득과 건강불평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 연구내용

- 집중지수를 통해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관계 분석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김정은시대 북한의 시장화 동향 - 평가와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8일 ~ 6월 17일(9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문헌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에서 '시장'은 현단계 북한 경제개혁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를 읽는 키워드가 되고 있음
- 북한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북한 시장화에 대해 분석하고,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보다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 동향을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
- 시장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시장화의 진전으로 발생하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 제시

☑ 연구성과

- 당내 국회의원, 시도당 등에 배포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주제 :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0일 ~ 6월 15일(6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인빈곤대국, 노인자살률 1위국 탈피를 위한 효도장려세제 설계

☑ 연구내용

- 효도장려세제의 필요성
- 제도설계의 방향

☑ 연구성과

- 보고서 발간

주제 : 사무직당직자 공개채용 전형 시행세칙(안) 제안서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6월 22일(22일)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신입당직자 공개채용을 기점으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제1장 총칙
 - * 목적, 원칙과 실천방안,
- 제2장 주관기구
 - * 주관기구, 전형위원회,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관의 구성과 업무
- 제3장 전형과 평가방법
 - * 전형방법과 과목 및 방식, 출제방향과 난이도, 채점 및 평가
- 제4장 최종합격자 확정
 - * 합격자 선정 및 확정·공지, 합격 취소
- 제5장 보칙

☑ 연구성과

- 당 혁신의 출발점으로서의 공채 당규 제정 필요

[별첨 70]

연구·개발 실적 주요내용

주제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0일 ~ 6월 23일(14일)
- 연구분야 : 산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연구내용

- 국내 혁신형 창업의 문제점과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발간

주제 : 2015 유권자 지형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5일 ~ 8월 6일(2개월 20일)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와 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Meta Agenda) 파악
-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지향점 및 리더십 방향 설정

☑ 연구내용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접 조사
- 유권자 민생현안 조사 : 순세대 삶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가족', 불만족하는 이유는 '돈'
- 시대정신과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 : '공생공영의 시대로, 내 가족이 행복한 나라', 현재 국민에게 와 닿는 제안은 복지보다 일자리, '저녁이 있는 삶' 과 같은 구체적/체감도 높은 미래상 제시, 실생활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 내세워야
-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 성장과 분배 중 성장이 더 중요, 경제정책은 경제성장 만큼 소득분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함
 - *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 *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 해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 *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노사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 빈곤, 불평등, 차별 등의 사회문제와 재벌에 의한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 * 학생의 생활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 *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남북협력이 가능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방향 : 세대, 계층, 이념성향 지역별 중원확대

☑ 연구성과

- 당 지도부를 포함하는 고위전략 회의에 보고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한 언론 브리핑

주제 :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8일 ~ 6월 25일(8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병립형의 대표적 형태인 일본식 비례대표제 검토 및 적용
- ☑ 연구내용
 - 17대~19대 총선에 일본형 제도 도입 영향을 분석
-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게 제출

주제 :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포용경제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7일 ~ 12월 27일(6개월 10일)

□ 연구분야 : 기재위, 복지위, 정무위, 환노위 등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색으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진보적 정책흐름과 비전을 분석
- 2016년 총선과 2017 대선에 대비하여 정책적 비전과 정책담론, 정책프레임을 제시하여 새로운 국가이젠다 발굴

☑ 연구내용

- 산업화 시대 이후 '낙수효과' 없는 경제에서 경제성장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경제성장론을 대체하는 2016 총선 이젠다는 무엇인가? 총선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015년 10월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의 트뤼도는 정치의 변화가 '진짜 변화'임을 선거결과를 통해 보여줌. 핵심적 선거 이젠다인 '진짜 변화 : 90% 강한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플랜'의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최적 방식의 선거 캠페인으로 구현함
-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경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 보고서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음. 로렌스 서머스(L. Summers)의 '포용적 번영위원회 보고서', 스티글리츠(Stiglitz)가 주도한 루즈벨트 연구소의 제안서(미국경제의 재규정: 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이젠다), 영국 노동당 공공정책조사연구소(IPPR)의 '영국의 조건(The Condition of Britain)',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앳킨슨(A. Atkinson)의 조세와 그 관련 정책제안 등임
- 루즈벨트 보고서의 집필진과 미국 유명 진보 학자들의 정책 제안들 간에는 정책교집합으로 '가족의 부활'이 나타남. 전통적인 진보에서 가족은 계급과 사회구조 분석에서 다소 외면되어 온 영역이었으나 사회불안으로 유권자들은 '가족의 부활'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있음
-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불평등으로 진단하고 그 정책처방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선거 프레임워크로 차별화된 대응을 할 것인가? 불평등이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 담론과 프레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프레임과 의제 : 2016 총선 공약에서 차별화된 '90% 강한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플랜', '가족의 부활' 이 중요한 핵심의제로 도입되어야 할 것임. 2016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의 완화라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근본적 변화임(2016년 총선의 진짜 변화)

☑ 연구성과

- 2016 총선 정책비전과 프레임, 정책 공약으로 반영

주제 : 여권 파워게임 상황인식 및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1일 ~ 7월 1일(11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갈등을 둘러싼 정국 분석 및 대응 방향 제안

☑ 연구내용

- 여권 파워게임 상황 인식과 민생을 위한 정치 정상화의 구도와 의의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주제 :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5일 ~ 7월 15일(20일)
- 연구분야 : 기재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 방안
- 관련 재원의 활용방안

☑ 연구내용

-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필요경비 한도 설정 등
- 해외사례 검토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최근 최저임금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6월 30일 ~ 7월 7일(8일)
- 연구분야 : 환노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저임금관련 주요 쟁점 분석
- 최저임금의 합리적 논의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현황 분석
- 최저임금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양측 입장 분석
- 최저임금의 합리적 논의를 위한 중장기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전·현직 의원, 당원 및 전문가 그룹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당의 최저임금의 합리적 논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제고에 기여

주제 :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혁신위원회 - 성과와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일 ~ 7월 6일(6일)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혁신위원회 활동 연구

☑ 연구내용

- 혁신위 출범 목적과 방향
 - * 흔들리는 리더십 회복 및 당 위기 극복
 - * 집권 가능한 정당 만들기
- 구성 및 활동현황
 - * 혁신위 구성과정
 - * 혁신위의 혁신의제 및 혁신안
- 혁신위 평가 : 긍·부정적 평가

☑ 연구성과

- 혁신위원회 활동관련 지도부의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세제3법” 검토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일 ~ 7월 28일(28일)
- 연구분야 : 기재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세법 개정으로 기부가 위축되었기에 기부와 관련된 세법 개정을 통한 기부 활성화 방안제시

☑ 연구내용

- 용역기부세제
- 기부연금세제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로 제출

주제 : 정형데이터에 기반한 부산 정치지형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일 ~ 8월 25일(1개월 23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부산광역시 20대 총선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
- ☑ 연구내용
 - 선거·사회 통계를 활용한 선거구별 특성 분석
-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부산시당위원장 보고

주제 : 국제적 관점에서 본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 연구기간 : 2015년 7월 3일 ~ 7월 18일(16일)
- 연구분야 : 기재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외부 시각의 검토

☑ 연구내용

- IMF 전략연구부가 제출한 동명의 연구보고서를 요약하고 합의 제시

☑ 연구성과

- 경제보고서 summary로 발간

주제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직접판매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0일 ~ 7월 27일(18일)
- 연구분야 : 산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소기업 수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해외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정책 평가
-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발간

주제 : 새정치민주연합의 ‘新남북경협’ 추진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4일 ~ 7월 27일(14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전문가간담회 및 문헌연구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광복 70주년의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임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 복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 저성장기조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가 필요한 상황인 바,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신남북경협’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기존에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의 목표와 4대 정책기조를 제시
- 남북한 상생 발전과 통일 실현을 위한 7대 핵심과제 제시

☑ 연구성과

- 당대표 등 지도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와 혁신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5일 ~ 7월 23일(9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당 지지도 분석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 및 혁신방향 제안

☑ 연구내용

- 정부와 야당의 지지도 커플링 현상 분석
- 핵심 부동층인 '부동층 정권심판론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민생제일 정치 제안

☑ 연구성과

- 최고위 보고

주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6일 ~ 8월 15일(1개월)
- 연구분야 : 통일, 외교, 안보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남북 경제협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
- 경제 공동체 조성으로 성장률 상승과 일자리 확대

☑ 연구내용

-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 연구: 남북한 경제통합시 2050년 까지 연평균 0.8% 성장, 매년 5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 5.24 조치 해제 및 남북경제협력 강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등 남북 경협 지원

☑ 연구성과

- 8월 16일 '한반도 경제지도' 발표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16년 1월 15일, 당내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발족

주제 : 노동시장 개혁방안과 정책방향 검토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1일 ~ 7월 31일(11일)
- 연구분야 : 환노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우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정책방향 제시

☑ 연구내용

- 박근혜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추진의도 분석
- 우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략 및 정책방향 연구
- 우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주요 의제별 정책방향 제시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전략수립을 위한 원장님의 참고용 기초자료로써의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전략에 대한 문제점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 개혁정책의 선명성과 함께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제고에 기여

주제 : 오픈프라이머리의 명암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5일 ~ 8월 2일(9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오픈프라이머리의 검토

☑ 연구내용

- 오픈프라이머리의 내용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 제언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게 제출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청년희망보고서 - 절망의 청년 Zero Generation, 그들에게 권력은 있다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5일 ~ 8월 13일(20일)
- 연구분야 : 정무위, 기재위, 환노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청년 취업난과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정책대안 연구

☑ 연구내용

- 절망의 청년 : 청년의 실어보가 생활 위기
 - * 청년실업의 심각성
 - * 청년생활의 심각성
- 박근혜 정부의 대응 및 정책의 문제점
 - * 청년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정책
 - * 정부정책의 문제점
- 정책방향 및 정책대안 구상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초 및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동대문 도매시장 주5일제 시행에 관한 조사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7일 ~ 9월 25일(2개월)
- 연구분야 : 산자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동대문 도매시장의 주5일제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건강권 실현과 에너지 절약 실천에 관한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21개의 동대문 도매시장에 자리잡은 약 2만여 점포 중 참여시장 상인들이 생각하는 주 5일제 시행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

☑ 연구성과

- 보고서 발간

주제 : 노동시장 개혁의 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7월 31일 ~ 8월 1일(2일)
- 연구분야 : 환노
- 연구방법 : 자체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전략 분석
- 우리당의 노동시장 개혁의 전략과 구체적 정책 실행방안 제시

☑ 연구내용

- 박근혜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점과 추진전략 분석
- 우리당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전략 연구
- 우리당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전략 제시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전략기획회의의 논의를 위한 원장님 참고자료로써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전략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전략과 정책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 개혁정책의 선명성과 함께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제고에 기여

주제 :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수세확충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8월 7일(7일)
- 연구분야 : 기재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세법개정안 분석과 평가

☑ 연구내용

-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부자감세의 위험성과 법인에 대한 합리적 세부담이 미흡
-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 개정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 보고서(1) - 2015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전략과 의제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5일 ~ 3월 23일(2개월 8일)
- 연구분야 : 기재위, 환노위, 산자위, 복지위, 정무위 등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와 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에서 다룬 주요 경제사회정책분야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주요 정책과 입법의제로 제안하고 2016 총선의제로 활용

☑ 연구내용

- 2015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기본 컨셉 : 슬로건과 정책 및 전략적 목표(선택과 집중)
- 2015 정기국회 입법전략과 의제 : 양극화 완화, 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 혁신 등
- 2015 국정감사 전략과 의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파기사례 등
- 2015 정기국회 정책 및 입법의제 : 산업·경제·재정·금융·노동 분야 및 지방화 입법의제 등
 - * [경제]중소기업단체의 집단교섭력 강화
 - * [산업1]중소기업 중시의 산업구조 전환과 생태계 구축방안
 - * [산업2]서비스산업 육성책의 타당성과 대응방안
 - * [재정]지방재정제도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제도 개선방안
 - * [금융]가계부채 위기 :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 [노동1]임금피크제 강행추진 대응방안
 - * [노동2]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 [노동3]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방안
 - * [공통]행정의 지방화가 요구되는 의제 : 불공정거래감독행정, 업종별 특성을 살린 서비스산업 보호육성 행정,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연동형 채무조정제도 행정,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차원의 규제 행정, 주거 안정과 상가임대차 안정을 위한 행정 등

☑ 연구성과

-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의제로 활용(최고위원회 보고, 정책위원회 및 전체의원 배포)

주제 : 산토끼는 있다 - 집권을 위한 길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8월 26일(26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더미래연구소 토론회 집권전략 토론회

☑ 연구내용

- 중도부동층을 외면하는 진보노선 비판 및 중도노선의 타당성 정리

☑ 연구성과

- 토론회 토론회

주제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산후조리서비스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8월 29일(29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고가의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비해 신생아 감염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불안해 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 연구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수요분석 및 니즈분석과 공급자의 서비스내용간의 미스매치 분석
-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산후조리서비스 제공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민간산후조리서비스 VS 공공산후조리서비스 대립에 대한 '제3의 길'을 제시하여 저소득산모를 위한 즉각적인 산후조리서비스 제안

주제 : 2016 총선 국가비전과 발전모델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8월 30일(1개월)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총선 대비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국가비전과 발전모델 연구

☑ 연구내용

- 위기의 대한민국
 - * 저성장시대의 장기화 * 인구구조의 심각화 * 노동시장의 양극화
- 국가발전비전 : 미래 30년의 대한민국
 - * 균형국가 / 봉사국가 / 포용국가
- 국가발전방향 : 포용성장을 통한 선진복지국가
- 국가발전전략 : 성장-고용-복지 선순환모델
- 국가발전의제
 - * 양극화 해소정책 * 전달체계 혁신정책 * 사각지대 해소정책

☑ 연구성과

- 지도부 및 정책결정단위의 2016 총선 정책공약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보육시설 이용부모가 인식한 보육교사 이미지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9월 30일(2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보육교사 이미지 분석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담보 및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 제시

☑ 연구내용

- 질적연구(Q 방법론)를 활용하여 보육교사 이미지 분석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적 제언 제시

☑ 연구성과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에 게재

주제 :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0일 ~ 8월 21일(12일)
- 연구분야 : 기재, 복지, 산자, 환노
- 연구방법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경제지표만을 제시하며 서민경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당 차원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 연구내용

-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경제활성화
 - * 창업활성화를 위한 시장생태계 조성
 - * 공정경쟁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도모 및 중소기업 활성화
 -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연구성과

- 지도부에 보고

주제 :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7일 ~ 8월 19일(3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문헌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광복절을 맞이하여 문재인대표가 당 차원의 대북정책 비전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발표함
-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
- 신경제구상 이행을 위한 향후 추진전략과 구체적 추진과제 제시

☑ 연구성과

- 당대표의 신경제구상 정책 기조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정부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8일 ~ 8월 25일(8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환노
- 연구방법 : 자체공동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정년제 시행과 임금피크제 추진에 대한 평가
-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정책 제언

☑ 연구내용

- 정부의 정년제 시행과 임금피크제 추진에 대한 논의 분석
- 정부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문제점 연구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 등에 관한 정책 제언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전·현직 의원, 당원 및 전문가 그룹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정부의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우리당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제고에 기여

주제 :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9월 7일(19일)
- 연구분야 : 산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연구내용

-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환경 조성, 투자중심의 창업환경 조성, 중간회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발간

주제 : 당대표 4대 제안 구체화 방안 이산가족 상봉문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4일 ~ 8월 28일(5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문헌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대표가 이산가족 상봉 대규모화 및 정례화, 지자체 차원의 교류 재개, 남북 민간단체 차원의 행사 재추진, 역대 남북합의 상호 존중 및 실천의 4대 제안을 함
- 당 지도부의 메시지에 참고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살펴보고 이산가족 문제를 단기,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해법을 제시
- 이산가족 상봉문제 관련 당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추진과제 제시

☑ 연구성과

- 당대표의 4대제안 관련 정책 기초에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2016 총선 대비 당 전력 조사·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5일 ~ 11월 13일(3개월)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총선과 2017 대선 승리를 위한 당 전력 및 역량 조사·분석, 혁신방안 제시
- 새누리당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인터뷰를 통한 전반적 내용 진단: 조직체계 전반의 재정비, 정확한 역량평가에 기초한 인사 재배치, 역량강화 교육, 정책(공약)-전략-홍보의 통합 시스템 구축, 전략부서 강화, 각종 데이터 DB화-통합분석-공유 등이 요구됨
- 당 전략관리 시스템 수준 및 당 전력에 관한 구성원 인식: 조직체로서 정당이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인프라)의 구축. 당내·외 상황에 대하여 당직자간 문제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과 정보 및 지식,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정당 이미지 분석: 새누리당의 보수혁신, 수평적 당청관계, 당내 세력교체, 웰빙정당 탈피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는 보수혁신이 외양에 그치며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보수에 갇혀있는 웰빙 정당, 보수적 정당임을 부각하여 약화시켜야 함
- 정책과 공약 분석: 재정적 고려와 함께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약이면 다소 보수적인 공약이라도 과감하게 수용하여 실현가능성과 유권자 확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 2016 총선 대비 6가지 영역별(정책/공약, 전략, 홍보, 조직, 내부역량, 정보/여론조사) 대응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보고,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당 혁신방안으로 활용

주제 : 2016 정부예산안 평가와 국가재정 건전화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9월 9일(9일)
- 연구분야 : 기재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정부예산안 분석과 평가

☑ 연구내용

- 정부예산안을 평가한 결과 국가재정의 악화 위험
- 정부예산 건전화 방안과 국가부채 절감 방안제시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9월 22일(22일)
- 연구분야 : 산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평가
-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발간

주제 : 새정치민주연합 경제 4 + 민생 4대 개혁 제안서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10월 9일(1개월 8일)
- 연구분야 : 기재위, 환노위, 산자위, 복지위, 정무위 등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와 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4대 부문(노동, 공공, 교육, 금융) 구조개혁과 노동개혁 5대 입법 대한 대안 제시로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당의 경제와 민생개혁안 마련
- 경제를 재편하여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창출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경제와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4대 경제개혁과 4대 민생개혁안 제시

☑ 연구내용

- 산업생태계 개혁, 재벌개혁, 갑을개혁, 안전개혁의 4대 경제개혁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가계부담의 완화 등 4대 민생개혁 방안
- 산업생태계 개혁: 연대보증액 상한제(보증인특별법 개정), 중소기업의 신속한 화생철차 등
- 재벌개혁 : 상법상 지배구조 개선(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순환출자구조 해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강화 등
- 갑을개혁 : 중소기업인 단체의 집단교섭권 인정 및 강화, 육갑(6대 갑질)의 근절, 동반성장 관계 정립, 골목상권과 정합업종 보호와 육성,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의 개혁(독점행정, 낙장행정, 봐주기 행정, 나홀로 행정) 등
- 안전개혁 : 생명과 안전과연 규제완화통제(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파견) 제한, 안전감독 행정의 외주화 제한 등
- 주거비 개혁: 전월세난 대책(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등), 버블주택가격 안정 대책, 공공임대 공급확대
- 교육비 개혁 : 등록금상한제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부실 사립대학의 준공립대학(정부책임형 사립대학)화, 고교 등록금의 무상화, 학원수강료 인가제 강화 등
- 의료비 개혁 : 의원급 외래 경증질환자 정액제 유지(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비급여 신설 등록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의 지속적 추진
- 통신비 개혁 : 기본요금제 폐지 및 요금인가 심의제 도입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아플폰 등 다양한 통신요금 및 단발기 재판매 시장 활성화 등(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연구성과

- 문재인 대표가 민생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 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발표함 (2015.11.8)

주제 : 청년에 투자해야 모두가 산다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10월 11일(1개월 11일)

□ 연구분야 : 노동, 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세대갈등에서 세대통합으로
- 미래성장동력의 확보
- 청년들의 헌법적 권리 보장

☑ 연구내용

- 청년일자리 창출 - 정부가 투자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 * 신규 청년 일자리 71.8만개 창출(4년간 공공 34.8만개, 민간 37만개)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9만개 정규직으로 전환
 - * 청년고용특별법개정(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3년간 확대),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 * 청년창업: 한국형 펍랩(fab-lab) 창업제작소 설립, 공공특허활용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대학의 창업지원 활성화, 창업기금은 모태펀드 내 청년계정신설(8천억원)
- 청년복지 -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청년에게 희망을
 - * 주거대책: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15만명) 공급, 국민연금 10조 투자, 임대료조정제 시행
 - *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저소득층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 기발의)
- 제도개선 및 법개정 - 청년 권리장전 선포
 - * 청년경제기본법: 청년친화형기업인증제, 청년영향평가 및 세대인지예산제
 - *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 알바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고용창출세액공제 신설(중소기업에 한하여 신규고용 시 1천만원지원)
 - *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 제정 및 스펙초월 등 채용관행의 합리화
- 사회적 합의 - 청년을 위한 사회협약을 추진
 - *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 추진

☑ 연구성과

- 10월 11일, 당대표 청년정책 발표
- 입법 노력 중

주제 : 2016 총선공약(안)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11월 11일(2개월 11일)
- 연구분야 : 기재, 복지, 산자, 환노, 통외
- 연구방법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연구원 차원에서 2016 총선을 대비하여 총선공약의 방향과 분야별 핵심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

☑ 연구내용

- 분야별, 수혜자별 핵심공약(안) 제시
- 일자리 창출, 산업생태계 전환,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저출산 극복, 조세정책, 주거불안 해소, 임신·출산·육아 등 엄마정책, 50대 재기발판 지원, 어르신 정책, 국방정책 등

☑ 연구성과

- 원장단 회의에 보고

주제 : 진보 성장을 고민하다 - 소득주도 성장

- 연구기간 : 2015년 9월 5일 ~ 10월 4일(30일)
- 연구분야 : 기재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그동안 한국의 진보세력은 보수의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해 왔지만, 국민에게 호소할만한 대안적 성장담론이 부재했음
- '낙수효과'의 약화로 보수의 성장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진보의 대안적 성장전략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연구내용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과 정책대안 제시
 - * 근로소득/생활소득 증진 * 중산층 복원
 - * 노동개혁 * 재벌대기업으로부터 가계-중소기업으로의 소득 확산

☑ 연구성과

- 본 원고는 민주정책연구원장 외 연구원 8인 공저로 "새로운 진보정치"란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음(출판사: 메디치)

주제 : 미국의 새로운 진보도 근본을 바꾸었다

- 연구기간 : 2015년 9월 5일 ~ 10월 4일(30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단행본 '새로운 진보 정치'에서 해외사례 연구

☑ 연구내용

- 미국 민주당의 혁신 사례 벤치마킹
- 클린턴의 '제3의 길'과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분석

☑ 연구성과

- 단행본 발간

주제 : 경제통일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 연구기간 : 2015년 9월 5일 ~ 10월 4일(30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문헌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남북한 경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당대표가 제시한 경제통일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
- '경제통일'의 목표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경제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진보진영이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남북경협의 목표와 3대 원칙을 제시
- 경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협력사업 등 남북경협의 7대 실천과제를 제시

☑ 연구성과

- 도서로 발간하여 당의 정책자료로 활용

주제 : 백세사회론

- 연구기간 : 2015년 9월 5일 ~ 10월 4일(3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로운 진보정치 전략으로서 백세사회론 제시

☑ 연구내용

- 고령자 고용연장과 세대간 상생
- 백세사회 일자리
- 백세사회의 의료보장제도

☑ 연구성과

- 도서 발간

주제 : 노동과 복지의 전략적 조합

- 연구기간 : 2015년 9월 5일 ~ 10월 4일(3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복지관련공약을 대립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조합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다가올 총선에서의 복지공약의 기초 점검

☑ 연구내용

- 지난 총대선으로부터의 교훈 점검
- 다가올 총선에서 복지관련 공약의 기본 기초를 제안

☑ 연구성과

-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복지며 일을 통한 자립을 강조함으로써 퍼주기복지가 아닌 노력과 보상이 중심인 복지공약의 기본 기초 제안

주제 : 4대부문 개혁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0일 ~ 10월 2일(23일)
- 연구분야 : 기재, 복지, 산자
- 연구방법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4대 개혁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말고 주거개혁, 산업생태계 개혁, 갑을개혁, 안전개혁 등 4대 개혁을 당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

☑ 연구내용

-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중산층 주거개혁 방안 제시
- 기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개혁 방안 제시
- 경제민주화의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갑을개혁 방안 제시
- 세월호 참사, 메르스 등 사태에서 보듯이 안전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처방과 개혁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지도부 보고

주제 : 정형데이터에 기반한 경남 정치지형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0일 ~ 11월 6일(1개월 26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경상남도 20대 총선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

☑ 연구내용

- 선거·사회 통계를 활용한 선거구별 특성 분석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경남도당위원장 보고

주제 :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개편안에 대한 평가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3일 ~ 9월 15일(3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개편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
- ☑ 연구내용
 - 보편적 복지와 무상보육
 - 현 보육제도의 평가 및 정부 개편안의 평가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언론의 보도 논조 분석과 비판 기능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4일 ~ 10월 5일(1개월)
- 연구분야 : 언론
- 연구방법 : 외부용역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여의도 연구소에서 발간된 '포털 사이트' 뉴스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보고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함

☑ 연구내용

- 6개 언론사의 정치 보도 경향성을 분석
- 보도 내용 전체를 읽고 일정한 기준(프레임, 사실성, 균형성 등)에 따라 보도논조를 파악하여 비교분석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참고자료, 언론기사 보도

주제 : 정치적 대안과 정치학적 대안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5일 ~ 9월 21일(7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총선의 제도적 이슈 분석

☑ 연구내용

- 의원정수, 선거제도 개혁 등 이슈 들을 분석하고 현실과 이론적 시각을 비교함

☑ 연구성과

- 국가전략포럼 토론회에 발표

주제 : ‘보육전쟁’을 넘어 - ‘영유아보육보험’을 제안한다!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10월 29일(29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매년 반복되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정부 간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대립에서 오는 학부모와 유아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방안 제시

☑ 연구내용

- 현행 바우처방식의 보육서비스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시켜 다양한 공급주체의 보육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육성, 공급총량 확대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도모

☑ 연구성과

- 보육의 '보편vs선별'이란 해묵은 대립을 넘어 질 좋은 안심보육과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란 일거양득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급체제로의 전환이 필요

주제 : 2015 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보고서(2) - 위기의 대한민국 쟁점리포트 : 우리 사회 우선 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11월 18일(1개월 18일)
- 연구분야 : 기재위, 환노위, 산자위, 복지위, 정무위 등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에서 다룬 주요 경제사회정책분야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주요 정책과 입법 의제로 선정하고 2016 총선의제로 활용

☑ 연구내용

- [경제]중소기업단체의 집단교섭력 강화
- [산업1]중소기업 중시의 산업구조 전환과 생태계 구축방안
- [산업2]서비스산업 육성책의 타당성과 대응방안
- [재정]지방재정제도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제도 개선방안
- [금융]가계부채 위기 :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노동1]임금피크제 강행추진 대응방안
- [노동2]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노동3]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방안
- [연금]공적연금체계 재구조화방안
- [의료]메르사타와 진주의료원 폐원사태를 계기로 본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향
- [주거]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료 안정화제도 도입 방안
- [통통]행정의 지방화가 요구되는 의제: 불공정거래감독행정, 업종별 특성을 살린 서비스산업 보호육성 행정,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연동형 채무조정제도 행정,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차원의 규제 행정, 주거 안정과 상가임대차 안정을 위한 행정 등

☑ 연구성과

- 당의 주요 정책 및 2016 총선 공약 의제로 활용 (최고위원회 보고, 정책위원회 및 전체의원 배포)

주제 : 강한 군대, 보람찬 병영을 위한 7대 정책제안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일 ~ 10월 22일(21일)
- 연구분야 : 국방
- 연구방법 : 전문가간담회 및 문헌연구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차원에서 표방해 온 '유능한 안보정당'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총선을 대비하여 국방분야 공약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병영문화 혁신과 직업군인 지원정책 등을 통해 군의 사기를 제고하는 방안 제시
- 방산비리를 근절방안, 군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문사 문제 및 군복무 중 부상자에 대한 지원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

☑ 연구성과

- 2016 총선대비 국방분야 공약자료로 활용

주제 : 프레임과 2016 총선, 그리고 대응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5일 ~ 10월 25일(20일)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총선을 대비하여 새누리당 정부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정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대응전략 연구

☑ 연구내용

- 프레임이론과 한국정치
 - *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를 통해서 본 프레임전환
- 역대선거와 프레임 동원
 - * 프레임 동원의 일상화 * 선거국면과 이념프레임 * 선거와 이념 프레임 동원의 의도와 결과
- 다시 프레임 동원 : 국정교과서 프레임
- 2016 총선과 프레임 대응전략
 - * 기본방향과 주도전략

☑ 연구성과

- 2016 총선에서의 프레임 주도를 위한 전략단위의 전략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TPP 타결과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6일 ~ 10월 8일(3일)
- 연구분야 : 산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TPP 타결과 따른 대응방안 모색
- ☑ 연구내용
 - TPP 소개 및 TPP 타결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TPP 타결과 따른 대응방안 제시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발간

주제 : 2015 4대 재벌의 언론사 광고 지배력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6일 ~ 11월 10일(1개월 4일)
- 연구분야 : 정무위, 방송통신위 등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대 재벌의 광고 집행 내역을 조사하여 전체 광고시장에서 4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언론 영향력을 분석
- 4대 재벌이 우리나라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재벌이 광고를 매개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실증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언론과 광고주(재벌)의 건전한 관계 정립에 기여

☑ 연구내용

- 닐슨코리아의 광고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광고시장에서 4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과 추이, 주요 언론 사별로 광고매출에서 4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 4대 재벌의 언론 광고비 집행 특성 등을 분석
- 2014년 현재 4대 재벌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4매체 합산 18.31%임. 매체별로는 지상파TV 23.56%, 신문 15.02%, 라디오 14.47%, 잡지 5.88%, 종합편성채널 12.32%임. 그룹별로 보면 삼성(5.87%), 현대자동차(4.81%), LG(4.11%), SK(3.53%) 순임
- 언론사별로 4대 재벌의 광고 비중을 살펴보면, 지상파TV의 경우 3사 모두 삼성의 광고 비중이 가장 높고, 종합편성채널 4사는 JTBC만 제외하고 모두 현대자동차의 비중이 가장 높음. JTBC는 삼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각 신문별로 보면,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의 경우 2010~2014 전 기간에 걸쳐 삼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한겨레-경향한국은 특정 재벌이 일관되게 1위를 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매일경제의 경우 1위인 삼성과 다른 그룹의 비중 차이가 매우 커서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연구성과

- 재벌개혁의 방향과 정책과제 제시. 2016총선 공약 과제로 반영

주제 : 비정규직제도 개혁 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0일 ~ 10월 20일(11일)
- 연구분야 : 환노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비정규직제도 개혁 방향 검토
- ☑ 연구내용
 - 한국 비정규직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안
- ☑ 연구성과
 -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

주제 : 2016년 유권자 정책수요 조사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4일 ~ 11월 23일(1개월 9일)

□ 연구분야 : 행안위 등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 발굴과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 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에서 정책수요조사발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원하는 핵심정책과제 도출(진보 개혁진영의 5대 개혁과제 등)
-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판단한 정책과제를 상호 비교 점검함으로써 진보진영의 핵심 정책 과제로 제기

☑ 연구내용

-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게 꼽힌 가운데, '정치개혁'이 두 번째 높게 응답됨
-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한 분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공정',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로 인한 불공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순으로 나타남
- 개개인이 직면한 최우선 불안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노후 불안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고용 및 일자리 불안, 빚 등 가계 부채 불안이 뒤를 이었음
- 내년 총선 후보 선택 시 고려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정책으로 나타남(연령별 : 20대는 일자리, 30대는 주거, 40대는 일자리와 노후 자녀교육 등 복합적, 50대도 일자리와 노후, 60대 이상 일자리와 건강/지역별 : 서울 지역은 주거, 지방으로 갈수록 일자리)
- 유권자들의 정책지향은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이 성장 우선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정부 여당의 정책은 대북정책만이 긍정평가가 유일하게 과반을 상회하고, 그 외 안전정책(44.9%), 노동정책(35.8%), 부동산정책(28.1%)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타남

☑ 연구성과

- '2015사회경제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주제 발표 및 2016총선 공약개발에 반영

주제 :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 - 통계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5일 ~ 11월 2일(19일)
- 연구분야 : 기재, 복지, 산자, 환노
- 연구방법 : 자체(분야별 연구위원)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통계를 보면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가 크며, 특히 중산층·서민,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심각함
- 통계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

☑ 연구내용

- 경제전망, 체감경기, 경제적 양극화, 국가채무 및 가계부채, 노동소득분 배율,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청년고용률 등 경제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

☑ 연구성과

- 지도부에 보고

주제 : ‘최대고용’ 사회를 위한 일자리복지 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0일 ~ 11월 3일(15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동을 통한 복지란 수동적인 자립정책이 아닌 산업정책과 연동되어 전체적인 일자리를 늘려 노동을 통한 자립을 구현하는 경제성장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일자리정책 필요성 제시

☑ 연구내용

- 제조업의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산업정책)제시
-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최대고용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일자리 복지 제시

☑ 연구성과

- 경제성장정책 vs 복지정책이란 이항대립적 사고방식에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성장정책이고 재분배정책임으로 제시

주제 : 유족연금 선진화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6일 ~ 10월 28일(3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유족연금 문제점 검토 및 선진화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병급, 급여수준, 연금 분할권, 급여지급방식 등 검토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청년포퓰리즘’인가?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일 ~ 11월 9일(1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서울시 청년수당정책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포퓰리즘’비판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청년수당이 갖는 의미 및 가능성을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

☑ 연구내용

- 성남시와 청년배당정책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비교
- 지방정부 단독사업과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 간의 조정문제 검토

☑ 연구성과

- 청년수당의 사회참가활동지원 성격을 규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간의 조정문제에 대한 시사점 제시

주제 : 유권자지형조사를 통해서 본 유권자인식과 이념 그리고 정책지형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일 ~ 11월 13일(13일)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총선을 대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자료에 근거한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인식, 이념적 지형, 그리고 정책지향성 연구

☑ 연구내용

- 기본 여론조사자료
 - * 민주정책연구원과 R&R 조사자료(2015. 6. 22 ~ 7. 19, 개별면접조사)
 - * 더미래연구소 조사자료(2015. 7. 24 ~ 8. 7, 개별면접조사)
 - * 민주정책연구원과 한겨레 조사자료(2015. 11. 8 ~ 9, 전화면접조사)
- 유권자의 삶과 미래인식 : 만족도 및 그 이유, 시급한 해결과제
- 유권자의 이념과 인식 : 유권자 이념지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이념적 평가, 정당지지 이유 등
- 유권자의 정책분야별 지향성 : 정책방향과 의제(경제성장과 분배, 복지와 증세,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교육, 대북관계 및 안보 등)

☑ 연구성과

- 2016 총선정책기획단의 총선정책공약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일 ~ 12월 6일(1개월 6일)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제도'
- 한국인들은 비정규직이 가진 불공정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
- 비정규직 제도의 일대 전환은 정의를 위해서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광범위하고 절박한 요구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임

☑ 연구내용

-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
- 파견 및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사용주도 노무 관리의 공동책임
-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도입을 촉구
-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

☑ 연구성과

- 12월 6일, 당대표 비정규직대책 발표
- 입법 노력 중

주제 :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 대책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일 ~ 12월 23일(1개월 23일)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자유롭고 공정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영업자의 소득보장
- 다양한 자영업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연구내용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권을 10년 보장하고, 재건축시 우선임차권을 보장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이익공유제를 법제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담합금지 규정에서 자영업자를 예외로 인정’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을 법제화’
-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존 및 경제활동보장지역의 자율지정 실시 및 지원”과, “(가칭) 지역경제활동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 혁신형 자영업 육성을 위한 ‘세대융합형 소상공인 사업 모축 구축 및 추진지원’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

☑ 연구성과

- 12월 23일, 정세균 위원장 발표 / 입법 노력 중

주제 : 광주광역시 민간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태도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일 ~ 12월 30일(2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공동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른 복지태도(복지지위론)의 검토

☑ 연구내용

- 복지를 둘러싼 물질적 이해관계가 반영되는가를 검토
- 지역복지서비스의 주체이자 행위자인 민간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

☑ 연구성과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지역사회복지학」에 게재

주제 : 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일 ~ 11월 5일(4일)
- 연구분야 : 통일외교
- 연구방법 : 문헌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일관계의 냉각기가 지속되어 온 가운데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됨
-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
-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대일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

☑ 연구성과

- 당내 국회의원, 시도당 등에 배포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주제 :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3일 ~ 11월 20일(18일)
- 연구분야 : 환노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비정규직 제도 개혁안의 완성

☑ 연구내용

- 한국 비정규직 제도 개혁 과제중 가장 중요한 4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

☑ 연구성과

- 당대표 및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정책으로 발표

주제 :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0일 ~ 11월 23일(14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간의 중복문제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와 조정을 둘러싼 갈등, 청년수당과 고용대책 간의 혼동 등을 정리하고 청년수당의 과제 및 방향을 제시

☑ 연구내용

-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비교
-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와 조정에 대한 입법취지 검토 및 제언

☑ 연구성과

- 중앙정부사업과 지방정부 사업 간의 근본 취지의 재검토를 전제로 한 조정과 협의를 제시
- 청년수당정책에 필요한 종합적인 연계정책을 제시

주제 :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0일 ~ 11월 27일(18일)
- 연구분야 : 산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업부실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연구내용

- 한계기업의 문제점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정책 평가
-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 발간

주제 : 정형데이터에 기반한 충북 정치지형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5일 ~ 12월 17일(1개월 2일)
- 연구분야 : 정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충청북도 20대 총선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

☑ 연구내용

- 선거·사회 통계를 활용한 선거구별 특성 분석

☑ 연구성과

- 민주정책연구원장 및 충청북도당위원장 보고

주제 : 생명우선,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0일 ~ 12월 15일(26일)
- 연구분야 : 환노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총선을 대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핵심아젠다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의제 연구

☑ 연구내용

- 안전 대한민국 : 평생안전 5대 분야
 - * 사회안전 : 사회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일탈로부터의 안전
 - * 자연안전 : 자연재·재난으로부터의 안전
 - * 산업안전 : 산업재해로부터의 안전
 - * 생활안전 : 불량유해식품으로부터의 안전, 의료사고로부터의 안전
 - * 원전안전 : 수명 끝난 원전으로부터의 안전, 방사능으로부터의 먹을거리 안전
- 평생안전 실천 제도 및 프로그램 : 국민생활안전시스템화

☑ 연구성과

- 지도부의 대국민 정책발표 참고자료로 제공

주제 : 새누리당의 사회적 거래소 설립에 대한 평가 및 대안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일 ~ 12월 3일(3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선진국의 사회적 거래소 설립 방식을 검토하여 대안 제시
- ☑ 연구내용
 - BVS&A, SASIX, GREENSX, IIX의 사례 검토
 - 한국형 사회적 거래소(KSSE) 설립 방안 제시
-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

주제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신화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일 ~ 12월 17일(17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보건복지부의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행부과체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재산보험료 폐지를 검토

☑ 연구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신화를 5가지 제시
- 가렴주구 정책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개편방안으로 재산보험료 폐지, 지방정부의 건보료 지원사업 확대 제안, 50대를 위한 경과조치로서 '조기퇴직자 건보제도' 창설을 제안

☑ 연구성과

-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한계를 지적하여 불가능한 '대' 개혁과제보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의 필요성 제기

주제 : 거시경제정책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일 ~ 1월 15일(1개월 15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형 성장모델의 개발
- 성장모델에 적합한 구체적 정책개발

☑ 연구내용

- 불평등해소와 성장이 함께하는 성장모델구축
- 내수와 수출의 동시발전 및 지역간, 계층간 상생발전을 위한 성장모델 구축

☑ 연구성과

- 1월 19일 대표 '신년기자회견' 경제부분 자료로 활용

주제 : 제20대 총선 지형변화와 총선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5일 ~ 12월 29일(15일)
- 연구분야 : 행안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 총선을 대비하여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유권자의 지향과 경쟁구도, 그리고 그에 대응해 승리를 이끌어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전략 연구

☑ 연구내용

-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유권자의 지형 변화
- 안철수 신당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전략 예측
- 제20대 총선의 성격과 선거구도 그리고 기본방향
- 당 및 선거혁신 : 감동 있는 변화, 응당하는 유권자

☑ 연구성과

- 지도부의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전략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노사정위 ‘2대 지침’ 논의의 주요 쟁점과 제언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7일 ~ 12월 24일(8일)
- 연구분야 : 환노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사정위의 ‘2대 지침’ 논의 분석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현황 및 OECD 비교 연구

☑ 연구내용

- 노사정위의 ‘2대 지침’ 논의 과정 분석
- 노사정위의 ‘2대 지침’의 주요 쟁점과 OECD 비교 연구
- 노사정위의 ‘2대 지침’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연구성과

-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전·현직 의원, 당원 및 전문가 그룹에 이메일로 송부하여 노사정위의 ‘2대 지침’의 문제점과 우리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제고에 기여

주제 :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8일 ~ 12월 27일(10일)
- 연구분야 : 국방
- 연구방법 : 문헌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인구의 감소 등으로 우수한 국방인력 획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군 인력구조의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병역제도 개선에 국한하는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 등 군인력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군 인력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분석
- 국내외 여건과 안보환경 변화에 적합한 군 인력구조 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연구성과

- 당내 국회의원, 시도당 등에 배포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미래정치센터 연간 활동실적

201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미래정치센터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 소재지 | 설치형태 | | | | 비고 |
|------------------------------|--------|-----|----|----|----|
| | 연구소 소유 | 당소유 | 임차 | 기타 |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5층 | | | √ | | |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 연구원 수 | 직원 수 | 비고 |
|----------|----------|----|
| 박사급: 1명 | 자체고용: 1명 | |
| 석사급: 8명 | | |
| 기 타: 5명 | 외부파견: 0명 | |
| 합 계: 14명 | 합 계: 1명 | |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 수입 | | | | 지출 | 잔액 | 비고 |
|-------------|-----------|-------------|-------------|-------------|------------|----|
| 정당지원금 | 기타수입 | 전년도이월금 | 계 | | | |
| 637,086,686 | 4,533,425 | 102,854,273 | 744,474,384 | 658,901,285 | 85,573,099 | |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201건)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0210~0310 | 보건복지 | 보육종합대책 | 자체 | 20p | |
| 0410~0510 | 보건복지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당 대응방향 | 자체 | 10p | |
| 0910~1010 | 보건복지 |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방안 | 외부전문가 | 62p | |
| 1020~1210 | 보건복지 |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살펴본 보건의료비 지출실태 현황과 해결방안 | 외부전문가 | 55p | |
| 1014~1210 | 보건복지 | 복지예산 분석과 한국의 복지정책 과제 | 자체 | 102p | |
| 1021~1121 | 산업자원 |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동반성장 | 자체 | 33p | |
| 1005~1210 | 환경노동 | 최고 임금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외부전문가 | 33p | |
| 0424~0430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체 | 3p | |
| 0509~0515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체 | 4p | |
| 0523~0529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정부, 실효성 없는 R&D 혁신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 자체 | 3p | |
| 0606~0612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 불공정한 연구비 배분의 문제 및 개선대안 | 자체 | 4p | |
| 0620~0626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에 기업자금 유치... 과도한 기업특혜 및 편법상속 우려 | 자체 | 3p | |
| 0704~0710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정부 연구개발지원 중도해약 연구비 회수 저조... 전액환수 등 강한 처벌 필요 | 자체 | 3p | |
| 0704~0706 | 안전행정위원회 | 유능한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 자체 | 3p | |
| 0710~0722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2016년 정부 R&D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자체 | 3p | |
| 0725~0805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박근혜 정부,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 인적교체 보다 리더십-관료체계 이원화 전략 필요 | 자체 | 4p | |
| 0810~0818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정부 2015 세법개정안 발표 - 대기업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축소 빠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미진 - | 자체 | 4p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0822~0828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중소기업, 정부지원 활용미흡+창조경제센터 낮은 기대... R&D 강화 및 맞춤형 원스톱센터 필요 | 자체 | 3p | |
| 0828~0903 | 안전행정위원회 |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 자체 | 4p | |
| 0904~0910 | 안전행정위원회 | 돌고래호 침몰, 국민안전처 초동대처 또 실패... 반면 예산은 1년 만에 7천억 증가 | 자체 | 5p | |
| 0910~0917 | 안전행정위원회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개혁방향 | 자체 | 18p | |
| 0918~0924 | 안전행정위원회 | 정부, 누리과정예산 지방교육청에 전액전가... '뺑셔들' 다름없어 | 자체 | 5p | |
| 0925~1002 | 기획재정위원회 | 정부 담뱃값 인상의 금연정책 실패! 서민중세 입증! - 경제학적·재정적 접근 재검토를 중심으로 - | 자체 | 9p | |
| 1010~1016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노벨 과학상 왜 못받나.. R&D 투자·연구환경 등 구조문제, 파괴적 혁신 필요 | 자체 | 5p | |
| 1023~1029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정부 노벨상급 젊은연구자 1천명 양성... R&D투자·연구환경 혁신 없는 노벨상 조급증 | 자체 | 2p | |
| 1120~1104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막대한 R&D 투자에도 왜 노벨 과학상 한 명 배출하지 못할까 | 자체 | 3p | |
| 1118~1124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R&D부정비리신고센터 유명무실... 접근성, 홍보 강화 절실 | 자체 | 3p | |
| 1212~1217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KISTEP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지역격차와 자원의존성 대단히 심각 | 자체 | 3p | |
| 1224~1230 | 안전행정위원회 |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 속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 자체 | 9p | |
| 1101~1231 |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 20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개발 | 자체 | 24p | |
| 1101~1231 | 안전행정위원회 | 20대 총선 지방자치 분야 공약개발 | 자체 | 14p | |
| 0105~0116 | 금융 | 2015년 금융부문 동향 | 자체 | 6p. | |
| 0120~0130 | 금융 | 인터넷 전문은행 | 자체 | 3p | |
| 0201~0212 | 금융 | 박근혜정부 금융정책평가 | 자체 | 3p | |
| 0302~0310 | 금융 | 금융개혁과제 | 자체 | 3p | |
| 0510~0521 | 금융 | 안심전환대출 | 자체 | 3p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0521~0531 | 금융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자체 | 3p | |
| 0901~0910 | 금융 |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 자체 | 3p | |
| 0913~0924 | 금융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 자체 | 4p | |
| 1001~1005 | 경제 | 재벌개혁 5대과제 | 자체 | 28p | |
| 1210~1218 | 경제 | 미국중국의 경제불안 | 자체 | 3p | |
| 1001~1210 | 금융 | 금융기관지배구조입법방향 | 자체 | 53p | |
| 0101~0430 | 환경노동 | 청년비정규직현황과 대안 | 외부전문가 | 50p | |
| 0115~0130 | 환경노동 |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 자체 | 5p | |
| 0220~0305 | 환경노동 |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 고용문제 | 자체 | 10p | |
| 0307~0314 | 환경노동 | 청년실업, 대기업 청년고용의 무제 | 자체 | 6p | |
| 0320~0410 | 환경노동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방안 | 자체 | 7p | |
| 0416~0510 | 환경노동 | 비정규직 대책2 - 산별교섭확대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 자체 | 15p | |
| 0501~0522 | 환경노동 | 산재입증 책임의 전환 방안 | 자체 | 4p | |
| 0101~0109 | 외교통일 | 2015 북 신년사와 남북관계 전망과 주장 | 자체 | 3+3p | |
| 0127~0209 | 외교통일 | 난관에 처한 대화의 실제 해법과 경험피해 대안 촉구 | 자체 | 8p | |
| 0420~0430 | 외교통일 |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한 인식과 대안 | 자체 | 10p | |
| 0509~0513 | 외교통일/국방 | 북의 SLBM 실험, 파장과 올바른 대응 | 자체 | 4p | |
| 0601~0612 | 외교통일 | 남중국해 갈등 고조와 미군 탄저규 유입, 균형외교 등 자주적·적극적 정책 필요 | 자체 | 4p | |
| 0715~0807 | 외교통일 |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정의당의 메시지 기초 | 자체 | 11p | |
| 0815~0828 | 외교통일 | 남북 고위급접촉 타결과 전망, 주장 | 자체 | 4p | |
| 0901~0910 | 외교통일 | 중국 전승절 참석 적극 외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와 향후 과제 | 자체 | 4p | |
| 0912~1020 | 외교통일 | 미중 양강 시대, 한반도와 동아시아평화 달성의 비전 | 자체 | 20p | |
| 1116~1120 | 외교통일 | 중국-대만 정상외교의 분단 후 최초 만남과 남북관계 | 자체 | 4p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 량 | 비 고 |
|-----------|---------|--|-------|-----|-----|
| 1210~1218 | 외교통일 | 남북 당국회담 결렬,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철수 배경과 파장 | 자체 | 4p | |
| 0401~0106 | 외교통일/국방 | 진보의 외교·통일·국방 전략 | 공동 연구 | 70p | |
| 0105~0109 | 국토위 | 부동산3법 통과와 대안제시 | 자체 | 5p | |
| 0410~0416 | 국토위 |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4대과제 10대 정책 제시 | 자체 | 18p | |
| 0514~0529 | 국토위 | 고소득층 임대주택 '뉴스테이' 분석 | 자체 | 4p | |
| 0507~0512 | 국회운영위원회 | 2015년, 영국 총선 결과 분석 | 자체 | 4p | |
| 0507~0512 |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여론 분석 | 자체 | 2p | |
| 0521~0526 | 법제사법위원회 | 동성결혼 합법화 이슈 분석 | 자체 | 2p | |
| 0528~0602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분석 | 자체 | 2p | |
| 0603~0608 | 국회운영위원회 | 미국 대중 정치성향 분석 | 자체 | 2p | |
| 0611~0616 | 국회운영위원회 | 인사청문회 관련 여론 분석 | 자체 | 2p | |
| 0618~0623 | 외교통일위원회 | 국제사회 중국위상 여론 분석 | 자체 | 2p | |
| 0625~0630 | 안전행정위원회 | 메르스 사태 여론 분석 | 자체 | 4p | |
| 0709~0713 | 국회운영위원회 | 미국 대통령 지지율 분석 | 자체 | 2p | |
| 0629~0713 | 법제사법위원회 | 동성결혼 합법화 연구 | 자체 | 4p | |
| 0709~0714 | 안전행정위원회 | 글로벌위험 관련 여론 분석 | 자체 | 3p | |
| 0716~0721 | 외교통일위원회 | 아베 신조 '정권위기론' 여론 분석 | 자체 | 3p | |
| 0814~0820 | 국회운영위원회 | 미국과 한국의 여론조사 분석 비교 | 자체 | 5p | |
| 0820~0825 | 국회운영위원회 | 캐나다 총선 관련 여론 분석 | 자체 | 2p | |
| 0801~0915 | 국회운영위원회 | 해외 정당 강령 분석 | 자체 | 26p | |
| 0903~0908 | 환경노동위원회 | 정부 노동개혁 관련 여론 분석 | 자체 | 3p | |
| 0917~0922 | 국회운영위원회 | 미국 총선, 여론관련 전략 분석 | 자체 | 2p | |
| 1010~1015 | 외교통일위원회 | 한미관계 관련 미국여론 분석 | 자체 | 2p | |
| 1016~1021 | 국회운영위원회 | 19대 국회 활동평가 및 20대 총선관련 연구 | 자체 | 4p | |
| 1020~1029 | 국회운영위원회 | 2015년 캐나다 총선 결과 분석 | 자체 | 2p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1020~1130 | 국회운영위원회 | 정당 및 국회 공약 개발 - 선거제도 및 시민정치 분야 | 자체 | 18p | |
| 1102~1110 |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 자체 | 2p | |
| 1102~1123 | 국회운영위원회 | 청년층 투표율 분석 | 자체 | 3p | |
| 1114~1119 | 안전행정위원회 | 프랑스 연쇄테러 관련 여론 | 자체 | 3p | |
| 1120~1125 | 안전행정위원회 | 지자체 청년수당 관련 여론 | 자체 | 3p | |
| 1210~1215 | 국회운영위원회 | 미국 대선 여론조사 분석 | 자체 | 3p | |
| 1216~1221 | 국회운영위원회 | 안철수 신당 관련 여론 분석 | 자체 | 3p | |
| 0105~0108 | 여성가족위원회 | 저출산 극복에 실효성 없는 출산장려금 | 자체 | 2p | |
| 0211~0312 | 국회운영위 |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 자체 | 31p | |
| 0217~0227 | 안전행정 | 정부 국정운영 | 자체 | 3p | |
| 0301~0313 | 안전행정 | 공무원 부패방지 | 자체 | 5p | |
| 0314~0327 | 안전행정 | 공무원연금개혁 | 자체 | 5p | |
| 0401~0410 | 안전행정 | 국민안전처 개혁 | 자체 | 3p | |
| 0413~0430 | 안전행정 | 공공기관 개혁 | 자체 | 4p | |
| 0505~0820 | 보건복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상호관계분석 | 자체 | 22p | |
| 0518~0529 | 안전행정 | 공적연금체계 개편 | 자체 | 4p | |
| 0601~0612 | 안전행정 | 국가 위기관리 대응 | 자체 | 4p | |
| 0614~0626 | 안전행정 | 국민안전처 조직위상 | 자체 | 3p | |
| 0701~0904 | 보건복지 | 복지국가 개혁방안 | 자체 | 13p | |
| 0814~0828 | 안전행정 | 국민연금 기금운용 | 자체 | 3p | |
| 0901~0910 | 안전행정 | 위기관리 콘트롤 타워 | 자체 | 5p | |
| 1001~1016 | 안전행정 |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개혁 | 자체 | 5p | |
| 1018~1029 | 안전행정 |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조직분석 | 자체 | 2p | |
| 1108~1120 | 안전행정 | 중앙정부-지방정부 업무갈등 | 자체 | 3p | |
| 0130~0204 | 여성가족위원회 |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 정부 정책 프레임 전면 전환이 필요 | 자체 | 5p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 량 | 비 고 |
|-----------|------------|---|------|-----|-----|
| 0409~0410 | 여성가족위원회 | '성매매특별법' 위한 여부 공개변론 | 자체 | 3p | |
| 0510~0514 | 여성가족위원회 | 남성의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자체 | 3p | |
| 0608~0611 |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예정 | 자체 | 3p | |
| 0623~0625 | 여성가족위원회 |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 | 자체 | 3p | |
| 0102~0110 | 안전행정 | 대통령인사권 | 자체 | 3p | |
| 0115~0123 | 안정행정 | 공직윤리 | 자체 | 4p | |
| 0126~0205 | 안전행정 | 공무원 윤리 | 자체 | 3p | |
| 0201~0312 | 국회운영위 | 정부의 재벌정책 | 자체 | 31p | |
| 1205~1217 | 안전행정 | 대통령 시행령과 입법 사안 분석 | 자체 | 3p | |
| 0107~0109 | 국회운영위원회 | 1월 1~2주차 정세분석전망 : 신년 초 정세와 대응 | 자체 | 4p | |
| 0120~0122 | 국회운영위원회 | 1월 4~5주차 정치정세전망 : 연말정산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강타 | 자체 | 3p | |
| 0122~0129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양당제의 딜, 대통령의 추락과 존재감 없는 제1야당 부상 | 자체 | 3p | |
| 0203~0205 | 국회운영위원회 | 2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여전히 당청 관계에서 새누리당 무시 전략 일관 | 자체 | 4p | |
| 0310~0312 | 국회운영위원회 | 3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미대사 테러, 종북논란과 재보선 정국 | 자체 | 4p | |
| 0312~0319 | 외교통상위원회 | 사드 배치 논란과 기로에 선 한국 외교전략 | 자체 | 4p | |
| 0324~0326 | 국회운영위원회 | 3월 4~5주차 정치정세전망 : 무능한 정치가 불러온 국민불행시대 | 자체 | 3p | |
| 0325~0401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정의당 정치개혁 방안 | 자체 | 8p | |
| 0326~0724 | 안전행정위원회 | 기자가 본 정의당 | 자체 | 15p | |
| 0407~0409 | 국회운영위원회 | 4월 1~3주차 정치정세전망 : 4.29 재보궐 선거 | 자체 | 4p | |
| 0413~0422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국회의원 360명 확대 방안 | 자체 | 5p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 량 | 비 고 |
|-----------|------------|---|------|-----|-----|
| 0423~0430 | 국회운영위원회 | 대통령의 적반하장 대응 | 자체 | 4p | |
| 0428~0430 | 국회운영위원회 | 4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과 재보궐 선거 결과 | 자체 | 3p | |
| 0512~0514 | 국회운영위원회 | 5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재보궐 선거 후폭풍, 청와대 정국주도력 확대 | 자체 | 3p | |
| 0527~0529 | 국회운영위원회 | 6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정국주도력 강화 | 자체 | 2p | |
| 0608~0615 | 보건복지위원회 | 메르스 공포 넘어서기 | 자체 | 5p | |
| 0610~0612 | 국회운영위원회 | 6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메르스 전염 확산,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 자체 | 3p | |
| 0608~0625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예비내각제 현실 가능 방안 | 자체 | 8p | |
| 0624~0626 | 국회운영위원회 | 6월 4~5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경색 | 자체 | 3p | |
| 0722~0724 | 국회운영위원회 | 7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 자체 | 3p | |
| 0825~0901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지역선거구 확정 대응 | 자체 | 3p | |
| 0826~0828 | 국회운영위원회 | 2015년 8월 5주~9월 1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력 확대 | 자체 | 3p | |
| 0908~0910 | 국회운영위원회 | 9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력 강화 일로 | 자체 | 3p | |
| 0914~0921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가치와 의미 | 자체 | 6p | |
| 0916~0923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한국 비례대표제 변천과 의미 | 자체 | 3p | |
| 0922~0924 | 국회운영위원회 | 9월 4~5주차 정치정세전망 : 양당 모두 총선 주도권 둘러싼 내분 심화 | 자체 | 3p | |
| 1014~1016 | 국회운영위원회 | 10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 새누리당의 쟁법 | 자체 | 3p | |
| 1020~1120 | 국회운영위원회 | 정당 및 국회 개혁 공약 개발 | 자체 | 23p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 량 | 비 고 |
|-----------|--------------|---|------|-----|-----|
| 1027~1029 | 국회운영위원회 | 2015년 10월 5주차~11월 1주차 정치정세 : 역사교과서 전쟁 전망 | 자체 | 3p | |
| 1118~1120 | 국회운영위원회 | 11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쟁 여진 계속 | 자체 | 3p | |
| 1215~1217 | 국회운영위원회 | 12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탈당과 영향 | 자체 | 3p | |
| 1222~1229 | 국회운영위원회 | 무능한 정치 넘어서기 | 자체 | 5p | |
| 0102~0121 | 안전행정 |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자체 | 20p | |
| 0102~0108 | 안전행정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도입 현황과 전망 | 자체 | 3p | |
| 0122~0131 | 안전행정 | 정치인 출판기념회 규제 등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 자체 | 10p | |
| 0125~0205 | 안전행정 |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방안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자체 | 5p | |
| 0201~0210 | 안전행정 | 스웨덴 선거제도 연구 | 자체 | 10p | |
| 0221~0227 | 안전행정 | 박근혜 정부 2년 지방자치 정책 평가 | 자체 | 3p | |
| 0224~0225 | 안전행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 자체 | 2p | |
| 0225~0302 | 안전행정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실현방안 | 자체 | 10p | |
| 0302~0310 | 교육문화 체육관광 | 누리과정 땀질식 합办的 문제점과 보육대란 해결방안 | 자체 | 8p | |
| 0302~0312 | 안전행정 |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문제점과 대응방안 | 자체 | 3p | |
| 0303~0312 | 안전행정 | 석패율제 검토 | 자체 | 10p | |
| 0321~0326 | 안전행정 |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폐지 요구의 문제점 | 자체 | 3p | |
| 0420~0429 | 안전행정 |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제도 | 자체 | 10p | |
| 0421~0430 | 안전행정 | 2015년 지방재정 현황분석 | 자체 | 4p | |
| 0502~0514 | 안전행정 |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방안 | 자체 | 4p | |
| 0522~0526 | 안전행정 | 공직선거 후보자 사퇴시기 제한의 문제점 | 자체 | 5p | |
| 0601~0622 | 안전행정 |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 | 자체 | 15p | |
| 0702~0722 | 안전행정 | 긴급재정관리제도 문제점과 지방재정 위기 해법 | 자체 | 14p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0801~0830 | 안전행정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뮬레이션 | 자체 | 20p | |
| 0801~0824 | 안전행정 |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이해 | 자체 | 12p | |
| 0801~0831 | 안전행정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견 | 자체 | 15p | |
| 0803~0822 | 안전행정 | 일본식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 자체 | 11p | |
| 0902~0911 | 안전행정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문제점 | 자체 | 3p | |
| 0908~0910 | 안전행정 |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옥죄는 2016년 예산안 | 자체 | 3p | |
| 0921~0924 | 안전행정 |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문제점 | 자체 | 3p | |
| 0928~0930 | 안전행정 |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문제점 | 자체 | 2p | |
| 1223~1228 | 안정행정 | 정당후원회금지헌법 불합치결정 의미와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 자체 | 4p | |
| 1015~1214 | 안전행정 | 지방자치 분야 정책공약 개발 방향 | 자체 | 26p | |
| 1130~1209 | 안전행정 | 지방재정 악화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문제점 | 자체 | 6p | |
| 1201~1207 | 안전행정 | 석패율제 도입 논의 비판 | 자체 | 7p | |
| 0823~0828 | 환경노동 | 고용보험법 개정 전망과 실업안전망 확충을 위한 과제 | 자체 | 3p | |
| 0905~0910 | 환경노동 | 2016년 실업급여 제도 변화 | 자체 | 4p | |
| 1001~1005 | 환경노동 | 청년희망펀드와 임금피크제 | 자체 | 3p | |
| 0921~1021 | 환경노동 | 국회 인턴·입법보조원의 일자리 실태와 대안 | 자체 | 14p | |
| 1030~1114 | 환경노동 | 더 많은 더 좋은 청년일자리 위한 정책과제 | 자체 | 6p | |
| 1115~1130 | 환경노동 | 실업안전망 전면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 자체 | 6p | |
| 1201~1215 | 환경노동 | 청년노동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자체 | 6p | |
| 1008~1022 | 정치개혁특위 |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과 다음세대의 정치 | 자체 | 10p | |
| 1008~1022 | 정치개혁특위 | 민주적 정당정치론 | 외부전문가 | 19p | |
| 1008~1022 | 정치개혁특위 | 소명으로서의 정치 | 외부전문가 | 19p | |
| 1008~1022 | 정치개혁특위 | 선거의 이론과 실제 | 외부전문가 | 14p | |
| 1008~1022 | 정치개혁특위 | 정치적 말의 힘 | 외부전문가 | 30p | |
| 1008~1022 | 정치개혁특위 | 의회정치의 이해 | 외부전문가 | 15p | |

| 연구기간 | 연구분야 | 주 제 | 연구방법 | 분량 | 비고 |
|---------------------------|---------------|--|-------|------|----|
| 0817~0820 | 환경노동 |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 자체 | 2p | |
| 2014.10.01~ 2015.02.05 | 국회운영위원회 | 정의당의 정치적 선택 - 당 발전전략 수립 이전에 검토해야 할 것들 | 외부전문가 | 55p | |
| 0225~0424 | 국회운영위원회 | 한국 주류정당의 10대 약점 분석 | 외부전문가 | 149p | |
| 2014.11.03~ 2015.03.16 |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 외부전문가 | 53p | |
| 0413~0810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적 한국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 | 외부전문가 | 30p | |
| 0710~1028 | 정치개혁특위 | 정치자금법 6조, 45조1항의 위헌성 및 개정방안 | 외부전문가 | 107p | |

나. 토론회 등 개최(52회)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토론회 | 2015.01.08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비정규운동 현황과 새로운 전망찾기 |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에 대해 바로알고 비정규운동의 진단과 노동운동의 핵심과제,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1.22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정의당의 정치적 선택 | 정의당의 발전전략 수립 이전에 검토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2.06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민주노총의 현주소와 정의당의 전략포인트 | 노동 및 민주노총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정의당의 전략포인트에 대해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3.06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2015년도 한국정치 전망과 과제 | 2015년도 한국정치의 전망과 과제를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5.07 오후 4시30분~ 6시30분 | 중앙당 회의실 | 한국 주류정당의 약한 고리와 정의당의 지향 |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주류정당(양당)에 대한 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의당의 지향에 대해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5.27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영국 총선 결과와 의미, 정의당에 주는 함의 | 2015년 5월에 치러진 제56대 영국총선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 이것이 정의당에 주는 함의에 대해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6.25.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 |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해 알아보고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에 대해 토론함 | |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토론회 | 2015.07.02.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 모색의 전제조건 |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 모색의 전제조건들과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3.19.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차 한잔 합시다. - IS, 그리고 중동 | 분쟁전문저널리스트를 초청하여 현재 세계적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IS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중동의 변화에 대해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3.26.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야권혁신과 진보정당 | 진보정당의 역사에 대해 짚어보고 야권혁신의 과제와 이에 맞는 진보정당의 역할에 대해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4.02.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정의당은 무엇인가? | 정의당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4.09.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청년정당 정의당을 위하여 | 청년층에 대한 정의당의 정책 및 젊은 정의당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모색하고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4.15.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혁신 언론과 혁신 정당 | '혁신'에 대한 고민과 나아갈 바를 언론과 비교하며 토론함 | |
| 포럼 | 2015.04.06.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1) | 우리사회의 통일 외교 국방에 대한 논의 지형과 진보개혁 진영의 성찰에 대해 토론함 | |
| 포럼 | 2015.05.11.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2) | 군에 대한 민주적 문민통제(병영혁신과 무기 비리 포함)에 대해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5.15. 오후 4시~6시 | 국회 도서관 | 중앙선관위 정책선거토론회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 |
| 포럼 | 2015.06.08.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3) | 증강되는 북한의 핵에 대한 대처 등 앞으로 우리의 과제에 대해 토론함 | |
| 포럼 | 2015.07.14.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4) | 미중관계와 코리아의 선택 - 중국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토론함 | |
| 포럼 | 2015.08.25.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5) | 한국의 대 중국 경제의존 실상과 외교안보적 함의에 대해 토론함 | |
| 포럼 | 2015.09.14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6) | 8.25합의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과제에 대해 2013년 한반도 위기와 비교하여 토론함 | |
| 포럼 | 2015.10.12.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7) | 대북정책, 햇볕정책과 강경정책을 넘어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봄 | |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포럼 | 2015.11.11.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8) | 북풍과 선거에 대해 토론함 | |
| 포럼 | 2015.12.16.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9) | 통일론을 다시 생각해보며 올바른 통일론에 대해 모색해 봄 | |
| 포럼 | 2015.05.13.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생태사회전환포럼(9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네트워크 형성방안 - 중소기업 생태계의 실태 -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네트워크 현황 -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 |
| 포럼 | 2015.06.17. 오후 3시~6시 | 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 | 생태사회전환포럼(10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내시장 확대 필요성 - RPS의 퇴행적 운영실태와 개혁방안 - FIT제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검토 | |
| 여론 조사 | 2015.06.04.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심층면접조사(FGI) | 노동 및 청년들을 대상 정의당 에 대한 심층면접조사(FGI) 진행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 |
| 토론회 | 2015.06.05. 오후 5시~ 6시30분 | 중앙당 회의실 | 대안적 한국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조건 | 노동주도 사회적 경제성장 담론전략을 중심으로 대안적 한국 정치 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조건을 모색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 |
| 세미나 | 2015.06.08. 오후 4시~6시 | 연구소 소장실 | 행복지수 개발 | 정의당 행복지수 개발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가 살피야 할 사항들에 대해 토론함 | |
| 간담회 | 2015.09.02. 오전 10시~12시 | 의원회관 | 청년간담회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의당의 청년정책 구상에 대해 모색하고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9.08. 오후 4시~6시 | 민주정책 연구원 | 청년일자리 해법 | 청년의 일자리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 봄 | |
| 간담회 | 2015.09.15. 오후 2시~4시 | 중앙당 회의실 | 고용보험 개혁방안 | 현행 고용보험에 대한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함 | |
| 토론회 | 2015.09.23. 오전 10시~12시 | 의원회관 | 청년일자리 확대방안 | 노사정 합의 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나 | |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간담회 | 2015.10.08. 오후 2시~4시 | 중앙당 회의실 | 고용보험 개혁방안 | 고용보험 개혁방안을 위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안을 듣고 방법에 대해 모색해 봄 | |
| 세미나 | 2015.10.08. 오후 7시~9시 | 중앙당 회의실 | 저자특강 | 국회에서 본 한국정치와 그 속에서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 | |
| 간담회 | 2015.10.28. 오후 2시~4시 | 중앙당 회의실 | 고용보험 개혁방안 | 현재까지 진행된 고용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보충함 | |
| 토론회 | 2015.11.26. 오후 5시~7시 | 중앙당 회의실 | FGI 발표회 | 2016년 총선승리를 위한 정의당 지지층 프로파일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
| 토론회 | 2015.12.08. 오후 4시~6시 | 연구소장 실 | 경제민주화 |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개념, 과제,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
| 토론회 | 2015.12.23. 오후 4시~6시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송년기획토론회 | 2016년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정치적 선택과 도전 - 정치전략과 이슈, 아젠다 전망에 대해 토론헬 | |
| 집담회 | 2015.01.29 |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 연말정산 사태에 대응해 전면적 조세개혁 방향 제시 | |
| 간담회 | 2015.02.11 |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 복지확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 “복지없는 증세”가 되는 현실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입장 청취, 복지확대와 공평과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 모색 | |
| 토론회 | 2015.3.10 |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쟁점과 대안 토론회 | 건강보험료 개편안(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안을 평가하고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 | |
| 토론회 | 2015.8.24 | 국회 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 | 메르스 이후, 국가와 보건의료의 개혁 방향 | 국가방역체계와 함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 대안 제시 | |
| 세미나 | 2015.8.25 | 국회본청 217호 | 공적연금 개혁방향 관련 전략 세미나 |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형성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당 입장 마련을 위해 진보 개혁 진영의 관련 전문가 및 대중조직 초청 | |
| 간담회 | 2015.10.14 | 국회본청 216호 | 지역방송협의회 정책간담회 | 방송통신위원회(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방송 예산관련 및 지역방송 현안 논의 | |

| 개최명 | 일시 (기간) | 장 소 | 주 제 | 주요내용 | 비고 |
|-----|--------------|--------------------------|---|---|----|
| 토론회 | 2015.10.28 | 국회 의정관 105호 |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토론회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각계각층 입장을 듣는 자리 | |
| 토론회 | 2015.10.31 | 국회 의원회관 9간담 회의실 |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정의당의 과제 토론회 | 동물권(보호권 또는 복지권)에 대한 법안 재개정 방향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 및 실천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 | |
| 토론회 | 2015.11.16 |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CEO 등 대기업 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회 | 대기업 고위임원에 대해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 |
| 간담회 | 2015.12.22 | 국회 본청 216호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단체 간담회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해 논의 | |
| 토론회 | 2015. 8. 20 | 국회 의원회관 제2 회의실 | 재벌에 대한 개혁 방안 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국내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구조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 재벌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 | |
| 토론회 | 9.15. 10:00 |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 노사정합의 | 9.13 노사정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
| 토론회 | 9.23. 10:00 |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 노사정합의 | 노사정 합의 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나? | |
| 토론회 | 11.16. 10:30 |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최고 임금제도 입방안 | CEO 등 대기업고위임원, 최고임금제도입 | |

다. 교육·연수활동(50회)

| 교육·연수명 | 일시 (기간) | 장소 | 주요내용 | 비고 |
|----------|-----------------------------|-------------------|--|----|
| 연구소 집합교육 | 2015.07.24. | 우이동 대하정 | 상반기 진행사업 점검 및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 |
| 연구소 현지교육 | 2015.08.26. | 경기도 북한산성 | 2016년 총선의제 토론 및 공약 개발 | |
| 연구소 집합교육 | 2015.09.16.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 새로운 진보정당, 혁신·전략·비전에 대해 성찰과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함 | |
| 연구소 집합교육 | 2015.10.05.~ 2015.10.06. | 국립 생태원 | 하반기 사업 진행사항 점검 및 재수립 | |
| 연구소 현지교육 | 2015.10.30.~ 2015.10.31. | 단명리조트 | 중앙당 및 시도당, 연구소 합동연수 | |
| 연구소 현지교육 | 2015.11.12.~ 2015.11.13. | 썬크루즈 리조트 | 중앙선관위 2015년도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 |
| 연구소 집합교육 | 2015.12.01.~ 2015.12.02. | 제주도 가시리 유채꽃프라자 | 중앙당 및 연구소, 지역정책담당자 합동 워크숍 | |
| 정예당원교육 | 2015.12.03. 오후 2시~4시 | 중앙당 회의실 | 2015년 정의당 성평등 교육 - 성평등한 조직문화 | |
| 정예당원교육 | 2015.12.03. 오후 4시~6시 | 중앙당 회의실 | 2015년 정의당 장애평등 교육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05.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 차이와 이견은 과연 아쁘기만 한 것인가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06.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 부분(들)의 미학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07.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 본 강사의 정치관에 대한 비판과 간단한 답변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08.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 정당론의 두 축 : 정당체계와 정당조직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09.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 우리의 정당정치, 왜 나빠졌을까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12.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 정당체계의 패쇄성 : 보수독점의 정당체계에서 양극화된 과두체제로 | |

| 교육·연수명 | 일시 (기간) | 장소 | 주요내용 | 비고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13.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 '지역주의 망국론'은 왜 잘못된인가 I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14.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 '지역주의 망국론'은 왜 잘못된인가 II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15.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 정당에 대한 잘못된 이해 : 국민 포괄정당론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16.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 1부의 결론 : 민주적 정당정치를 위하여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19.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 정당활동가가 가져야 할 민주적 자부심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20.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챔피언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21.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 현대판 호민관으로서의 정당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22.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시민정치론)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23.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국민후보론)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26.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전문가주의)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27.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 정당정치의 역사: 입헌주의, 대의제와 선거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28.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 정당정치의 역사: 결사의 권리, 갈등과 싸움을 이해하는 방법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29.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 정당정치의 역사: 보통선거권과 대정당당, 파당적 참여와 사회통합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1.30.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 정당정치의 역사: 좌파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 |

| 교육·연수명 | 일시 (기간) | 장소 | 주요내용 | 비고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02.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최고의 발명품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03.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04.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 대의정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촛불지상주의론)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05.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 다른 무엇보다도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다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06.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 정당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09.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 정당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10.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 정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11.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4부. 정당조직과 체계의 변화 - 정당조직의 변화(정체성과 경쟁성)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13.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4부. 정당조직과 체계의 변화 - 정당조직의 변화(정체모를 선거정당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13.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4부. 정당조직과 체계의 변화 - 정당체계의 변화(사회균열과 정당체계)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16.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4부. 정당조직과 체계의 변화 - 정당체계의 변화(왜 계층적/이념적 기반이 넓은 정당체계를 강조하나)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23.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4부. 정당조직과 체계의 변화 - 2개의 정당체계와 제3시민론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24.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 민주주의와 정당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25.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 개헌론 비판 | |

| 교육·연수명 | 일시 (기간) | 장소 | 주요내용 | 비고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26.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 선거제도론 비판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2.27.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 네트워크 정당론 비판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3.02.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 전문가, 지식인 중심의 정치쇄신 국민운동론 비판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3.03.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 강한국가, 약한 사회, 무기력한 개인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3.04.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 세월호 사태가 남긴 것(정당이 바로서야 민주정치가 바로선다)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3.05. | 연구소 홈페이지 | [정당의 발견] 정치 양극화, 무엇이 왜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 |
| 연구소 통신교육 | 2015.03.06. | 연구소 홈페이지 | 모든 강의를 끝내고 나서 | |

라. 정책홍보(63회)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0224 | 정책브리핑 |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박근혜정부 2년 평가- 경제, 노동, 복지, 주거, 지방자치,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 |
| 0506 | 정책논평 | 상동 | 공무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 제대로 된 국민노후보장, 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 | |
| 0529 | 정책논평 | 상동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 |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1019 | 정책논평 | 상동 | 보험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
| 0112 | 정책논평 |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2015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경제정책방향 | |
| 0327 | 정책논평 |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안심전환대출 부작용 | |
| 0612 | 정책논평 |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 | |
| 0623 | 정책논평 |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서민금융지원방향 서민금융총괄기구 | |
| 0224 | 정책브리핑 | 홈페이지 게시 및 당원 이메일 발송 | 박근혜정부노동정책평가: 2년 만에 거의 실종 | |
| 0227 | 정책브리핑 | 상동 | 친기업 노동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2년 | |
| 0313 | 정책논평 | 상동 |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본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문제 | |
| 0319 | 정책논평 | 상동 | 청년실업문제, 대기업청년고용의무제로 해결해야 | |
| 0327 | 정책브리핑 | 상동 | 노사정위원회 합의 가능할까? | |
| 0406 | 정책논평 | 상동 | 노사정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에 묻지 말라 | |
| 0410 | 정책브리핑 | 상동 | 노사정위원회, 정부의 조정실패로 합의결렬 | |
| 0429 | 정책논평 | 상동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선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 | |
| 0430 | 정책브리핑 | 상동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심화 | |
| 0515 | 정책브리핑 | 상동 | 두 노동조합 활동가의 죽음과 여전히 참담한 노동현실 | |
| 0528 | 정책논평 | 상동 | 현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유감 | |
| 0529 | 정책브리핑 | 상동 |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인권위의 퇴행적인 의견 발표 | |
| 0610 | 정책브리핑 | 상동 | [정의당 비정규직 대책 1]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 |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0610 | 정책브리핑 | 상동 | [정의당 비정규직 대책 2] 산별교섭 확대 및 단체협약효력확장 | |
| 0612 | 정책브리핑 | 상동 |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될까? | |
| 0615 | 정책논평 | 상동 | 메르스대책에 노동자 휴업수당 지원 포함돼야 | |
| 0617 | 정책논평 | 상동 | 정부1차 노동시장개혁방안 유감 | |
| 0701 | 정책논평 | 상동 | 산재에 대한 노동자입증책임 전환해야 | |
| 0709 | 정책논평 | 상동 | 최저임금 6,300원,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하기엔 너무 낮아 | |
| 0710 | 정책브리핑 | 상동 |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하기엔 너무 낮아 | |
| 0714 | 정책논평 | 상동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자 넓혀야 | |
| 0728 | 정책논평 | 상동 | 핵심이 빠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 |
| 0805 | 정책논평 | 상동 | 최저임금준수 방안 마련해야(1) | |
| 0828 | 정책브리핑 | 상동 |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와 세 가지 제언 | |
| 0910 | 정책브리핑 | 상동 | 밀어붙이는 정부, 돌아서 웃는 경영계, 진퇴양난 한국노총 | |
| 0924 | 정책브리핑 | 상동 | 정부 여당, 노사정위 합의조차 무시하는 '5대 노동법안' 제출 | |
| 0102 | 정책브리핑 |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2015 북 신년사와 남북관계 전망, 주장 | |
| 0112 | 정책논평 |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2015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이룰 적극적, 구체적 제안이 부재하다 | |
| 0202 | 정책브리핑 |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5.24 조치 관련 피해 현황과 정의당의 입장 | |
| 0210 | 정책브리핑 | 상동 | 난관에 처한 대화의 실제 해법, 경험 피해 대안 촉구 | |
| 0213 | 정책논평 |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세계 10위 국방비 지출 대 안보의 총체적 난국, 안보달성 방법의 대전환 필요 | |
| 0310 | 정책논평 | 상동 | 정부여당의 '리퍼트 피습' 악용, 외교-안보-통일-민주주의 다 버린다 | |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0318 | 정책논평 | 상동 | 사드 배치,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 | |
| 0423 | 정책브리핑 |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아베의 폭주 지속, 방조·옹호하는 미국 정부, 투트랙 공식화한 박근혜 정부 | |
| 0428 | 정책논평 |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유감,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다 | |
| 0430 | 정책브리핑 |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한 인식과 대안 (일본 사민당-정의당 간담회 참조 자료) | |
| 0513 | 정책브리핑 |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북의 SLBM 실험, 파장과 올바른 대응 | |
| 0622 | 정책논평 |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평화로운 미래는 과거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 |
| 0701 | 정책논평 | 상동 | 병력감축 또 8년이나 미루려는 군, 약속을 지키고 강력한 국방개혁 실시해야 | |
| 0715 | 정책논평 | 상동 |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핵 문제 해결 | |
| 0807 | 정책브리핑 |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정의당의 메시지 기조 | |
| 0903 | 정책논평 |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 실현을 위한 후속 노력 이어가야 | |
| 0918 | 정책논평 | 상동 | 일본 안보법안의 참의원 강행통과 규탄, 한국은 평화와 협력 외교 택해야 | |
| 2015.1.12 | 정책논평 |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 의정부 화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부른 예고된 인재 | |
| 2015.1.13 | 정책논평 | 상동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대기업특혜에 불과하다 | |
| 2015.2.5 | 정세전망 | 주요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 정부의 어긋난 부동산대책, 전세대란 | |
| 2015.2.27 | 정세전망 | 상동 |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부동산정책 평가 | |
| 2015.3.13 | 정세전망 | 상동 |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권리금 보호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
| 2015.3.27 | 정세전망 | 상동 | 급속도로 진행되는 월세 전환, 시급한 세입자 보호 대책 | |
| 2015.4.7 | 정책논평 |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은 정부의 서민주거비 대책 | |

| 일시 (기간) | 홍보매체 | 홍보방법 | 주요내용 | 비고 |
|------------|-------|----------------|---|----|
| 2015.4.30 | 정세전망 | 상동 | 더욱 짝퉁해진 서민 살림 - 주거실태조사 결과로 확인된 주거 불안 | |
| 2015.5.15 | 정세전망 | 상동 | 난개발과 땅 투기, 지역 불균형을 불러올 '그린벨트 규제 완화' | |
| 2015.6.12 | 정세전망 | 상동 | 국회 서민주거특위 기한 연장, 제대로 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 |
| 2015.8.28 | 정세전망 | 상동 | '싱글족' 500만 시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 |
| 2015.9.8 | 정책브리핑 |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 <9.2 부동산대책>의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 제시 | |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17건)

| 발간일자 | 종류 | 제 목 | 발간방법 | 발간부수 및 활용 | 비고 |
|------|-------|-------------------------------------|------|------------------------------|----|
| 1118 | 도서 | 정의당 스토리 | 자체발간 | 500부, 지도부 및 당직자 배부 당원판매 | |
| 1022 | 도서 | 만화강령 | 자체발간 | 500부, 지도부 및 당직자 배부 | |
| 0922 | 도서 | 좋은기사쓰기 a~z | 자체발간 | 200부, 블로그기자단 및 당원배부 | |
| 1228 | 토론회자료 | 2016년 거대한 전환을 위한 도전 | 자체발간 | 10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 |
| 0211 | 도서 | 생태사회전환포럼 연차보고서 | 자체발간 | 300부, 지도부 및 당직자 배부 | |
| 0129 | 토론회자료 |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 자체발간 | 100부, 당 정책으로 반영 | |
| 0211 | 토론회자료 | 복지확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 자체발간 | 50부, 당 정책으로 반영 | |
| 0310 | 토론회자료 |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쟁점과 대안 토론회 | 자체발간 | 100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
| 0824 | 토론회자료 | 메르스 이후, 국가와 보건의료의 개혁 방향 | 자체발간 | 50부, 당 정책으로 반영 | |
| 0825 | 세미나자료 | 공적연금 개혁방향 관련 전략 세미나 | 자체발간 | 30부, 당 정책을 정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 |

| 발간일자 | 종류 | 제 목 | 발간방법 | 발간부수 및 활용 | 비 고 |
|------|-------|-----------------------------------|------|------------------------------|-----|
| 1028 | 토론회자료 |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토론회 | 자체발간 | 100부, 당 정책으로 반영 | |
| 1031 | 토론회자료 |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정의당의 과제 토론회 | 자체발간 | 50부, 당 정책을 정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 |
| 1116 | 토론회자료 | 〈CEO 등 대기업 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회 | 자체발간 | 100부, 당 정책으로 반영 | |
| 1222 | 간담회자료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단체 간담회 | 자체발간 | 30부, 당 정책으로 반영 | |
| 0914 | 토론회자료 | 9.13노사정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자체 | 100부, 관련기관배포 등 | |
| 0922 | 토론회자료 | 노사정 합의 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나? | 자체 | 100부, 관련기관배포 등 | |
| 1115 | 토론회자료 | CEO 등 대기업고위임원, 최고임금제도입 | 자체 | 100부, 관련기관배포 등 | |

바. 그 밖의 주요활동(14건)

| 일자 (기간) | 장 소 | 활동명 | 주요내용 | 비 고 |
|------------|--------------|---------------------------|--|-----|
| 2015-01-27 | 중앙당 회의실 | 제5차 연구소 이사회 | - 2014년 연구소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 2015년 연구소 사업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 2014년 결산안 및 2015년 예산안 승인의 건 - 기타 | |
| 2015-05-15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중앙선관위 정책선거토론회 |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 방안 | |
| 2015-06-23 | 중앙당 회의실 | 연구소 블로그기자단(1기) 출범식 | - 기자단교육: 새내기 기자들의 처음 기사쓰기 - 정의당 및 진보정의연구소 소개 - 기자단 운영계획 -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 | |
| 2015-07-15 | 중앙당 회의실 | 연구소 블로그기자단(1기) 기획회의 | - 기자단교육: 기사 코멘트 및 기사쓰기 재교육 - 월 우수 블로그기자 시상 및 의견수렴 | |
| 2015-07-20 | 중앙당 회의실 | 연구소 블로그기자단(1기) 간담회 | 기획회의 및 당내 유명작가와와의 간담회 | |

| 일자 (기간) | 장 소 | 활동명 | 주요내용 | 비 고 |
|------------|--------------------------|-----------------------------|---|-----|
| 2015-08-13 | 중앙당 회의실 | 제6차 연구소 이사회 | - 소장 선출 의결의 건 - 연구소 명칭 변경의 건 - 부소장 교체 선임의 건 | |
| 2015-08-25 | 중앙당 회의실 | 연구소 블로그기자단(1기) 해단식 | - 우수 블로거 선정 및 시상 - 운영성과 및 개선해야 할 사항 공유 | |
| 2015-10-17 | 대전 북카페 '이데' |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1강) | - 입학식 - 변화의 정치학 : 민주주의는 왜, 어떤 정치를 필요로 하는가 | |
| 2015-10-24 | 무중력시대 G밸리 | 미래리더십 스쿨 (수도권, 1강) | - 입학식 - 변화의 정치학 : 민주주의는 왜, 어떤 정치를 필요로 하는가 | |
| 2015-10-31 | 대전 북카페 '이데' 무중력시대 G밸리 |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수도권) 2강 | - 민주적 정당정치론 | |
| 2015-11-07 | 무중력시대 G밸리 |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수도권) 3강 | - 막스베버는 진보적 청년들에게 정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했나 | |
| 2015-11-14 | 대전 북카페 '이데' 무중력시대 G밸리 |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수도권) 4강 | - 정치적 말의 힘 - 의회정치 다시보기 - 선거의 이론과 실제 - 진보정치의 역사와 과제 | |
| 2015-11-21 | 대전 북카페 '이데' 무중력시대 G밸리 |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수도권) 5강 | - 선거의 이론과 실제 - 진보정치의 역사와 과제 - 정치적 말의 힘 - 의회정치 다시보기 | |
| 2015-11-28 | 의원회관 |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수도권) 6강 | - 정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의 작은 오솔길을 개척하는 미래리더십에게 - 졸업식 | |
| 2015-12-04 | 중앙당 회의실 | 제7차 연구소 이사회 | - 연구소 시행세칙 개정의 건 - 연구소 이사장 교체의 건 | |
| 2015-12-19 | 부산시당 광주 윤희봉 기념사업관 | 미래리더십 스쿨 (부산, 광주권) 1강 | - 입학식 - 연구소장 특강 ; 어찌 정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

주제 : 보육종합대책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0일 ~ 3월 10일(1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보육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연구내용

-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와 10대 정책' 마련
- 과제 1. '아이안전 무한책임제 실현'을 위한 3대 정책 마련
- 과제 2. '아이 만족 보육 실현'을 위한 3대 정책 마련
- 과제 3. '질높은 보육·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4대 정책 마련

☑ 연구성과

- 당 정책으로 채택, 심상정 (원내)대표가 대책 발표 기자회견 진행
- 이후 당 공약으로 반영

주제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당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0일 ~ 5월 10일(1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 입장 마련 및 향후 공적연금 개편방향 제시 필요

☑ 연구내용

1.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주요 경과 및 각계 입장 비교
2. 공무원연금 개혁안 분석 및 평가
3.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 입장 제안
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제언

☑ 연구성과

- 공무원연금 개혁안 평가에 대해서는 당 입장으로 채택
- 공적연금 강화 방향은 당 입장으로 일부 수정해 반영

주제 :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0일 ~ 10월 10일(1개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I. 연구개요
- II.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논란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변화된 조건
- III.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의 현황과 평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편안 검토와 평가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의 개편안과 평가
- IV. 형평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안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몇 가지 논쟁지점
 2. 공평한 건강보험료의 부과방안

☑ 연구성과

- 정진후 원내대표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대표발의 / 기자회견
- 당 정책으로 채택 및 당 민생대표정책으로 선정

주제 :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살펴본 보건의료 지출실태 현황과 해결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0일 ~ 12월 10일(1개월 2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 직접 지출 보건의료비 수준, 최근 10년간 변화, 연간 보건 의료비 지출 등을 살펴 보고, 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도출

☑ 연구내용

- I. 서론
- II.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및 결과
 1. 가계동향조사 개요
 2. 가계동향 주요 현황 분석
 3. 소득분위별 가계동향 분석
- III.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
 1. 우리나라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 특성
 2. 가계 지출 보건의료비 해결방안
- IV. 결론

☑ 연구성과

- 당 정책 생산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당 정책으로 채택

주제 : 복지예산 분석과 한국의 복지정책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4일 ~ 12월 10일(2개월 26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정부의 보건복지예산안을 평가하고, 한국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

☑ 연구내용

- I. 서론
- II. 한국사회 진단
 1. 현황
 2.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
- III. 복지예산 분석
 1. 2016년 정부예산안 및 복지예산의 특성
 2. 복지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전망
 3. 정부의 복지지출 관리 수단
- IV. 한국의 복지정책 과제
 1. 한국의 복지정책 방향 및 과제
 2. 지역 복지정책 과제
 3. 주요 입법 과제
- V. 결론

☑ 연구성과

- 당 정책으로 채택, 공약으로 반영

주제 :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동반성장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1일 ~ 11월 21일(1개월)
- 연구분야 : 산업자원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 시기 자영업의 위기에 대해서 특정 산업, 특정 계층의 고용과 소득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연구내용

I. 들어가며

II. 현황 및 대안

1.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설 곳을 잃은 구멍가게와 동네 슈퍼
2.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안 모색
 - 1)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 (정의당 입법발의안을 중심으로)
 - 2)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III. 나가며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입법안 제시 및 중장기적 대안 제언)

주제 :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5일 ~ 12월 10일(2개월 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의 임원의 보수 또한 일반 직원과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우선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대기업 임원보수제한을 통해 그 폐해를 완화시키려 함

☑ 연구내용

1. 들어가며
2. 현행 법 상 대기업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제도 현황
3. 각국의 동향
4. 그동안의 연구 요약 및 시사점
5. 보수제한의 필요성
6. 보수제한의 구체적 방식
7. 결론

※ 최고임금법 제정법률안 제시

☑ 연구성과

- 당 정책으로 채택, 공약으로 반영

주제 :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4일 ~ 4월 30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상위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지표의 개선대안 제시

☑ 연구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의 진행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족, 종합적 메타평가로써 기능 부족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 메타평가로 거듭나기 위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4가지의 구체적인 추가지표를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5월 9일 ~ 5월 15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우후죽순 설립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연구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설립과 초기 활동과정 상 혼선과 한계를 분석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한계 및 실질적 역할을 재검토함.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을 위해 센터 역할 및 중장기적 전략 등을 제시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실효성 없는 R&D 혁신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3일 ~ 5월 29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R&D 혁신방안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를 지적하고, 실효성 높은 R&D 혁신방안을 다시 제안함

☑ 연구내용

- 정부가 제시한 R&D 혁신방안이 실효성 없는 이유를 과학기술계 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과학기술 출연(연) 지배구조상 현실적 괴리감 등을 제시하는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기함. 향후 실효성 높은 R&D 혁신방안을 3가지 측면에서 제기하고, 틀이 아닌, 내용의 전환을 촉구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 불공정한 연구비 배분의 문제 및 개선대안

- 연구기간 : 2015년 6월 6일 ~ 6월 12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이 진단한 한국 과학기술의 연구비 배분 문제를 바탕으로 개선대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이 진단한 한국 과학기술의 문제는 예산배분 불공정성, 현장과 소통 부재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있었음. R&D 예산배분의 문제를 출연(연)과 과학기술인들의 돈줄과 연구방향을 틀어 쥔 정부에서 지적함. 향후 개선대안으로 출연(연) 재정지원 방식 전환, 과학기술 정책결정시 현장 과학기술계 인사 대폭 확대, 실질적 정부-현장 정기적·실질적 협의기구 조직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에 기업자금 유치, 과도한 기업특혜 및 편법상속 우려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0일 ~ 6월 26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누리당에서 입법발의 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고갈에 따라 기금자금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신탁 설치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기금고갈 문제의 해법을 제안함

☑ 연구내용

-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서상기의원 등이 기업자금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신탁 설치법안이 과도한 기업특혜 및 세금 탈루 및 편법상속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향후 해법으로 기금 정상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기금운용 부실 책임 인정, 복권수익금 전입문제 해결, 방만한 기금사업 효율화 및 불요불급 사업의 미래창조과학부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연구개발지원 중도해약 연구비 회수 저조, 전액환수 등 강한 처벌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7월 4일 ~ 7월 10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연구과제 중도해약에 따른 손실액 및 연구비 미환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연구비 사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 예산낭비 방지 대책 등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연구과제 중도해약의 사유가 크게 연구태만, 연구자 도덕적 해이 및 불성실 등 연구자의 명백한 과실로 정리함. 미환수 금액이 최근 3년간 2,200억원이며, 중도해약 및 미환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강력한 처벌조항 미비를 지적하고, 각종 부정적 영향을 분석함. 향후 개선대안으로 관련 처벌조항 신설, 연구재단 처벌규정 강화, 자체적 감사 및 내부 징계 절차 마련, 정부와 국회 보고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유능한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 연구기간 : 2015년 7월 4일 ~ 7월 6일(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가별 행복지수와 정부역량 수준 간 상관성을 보여주고, 행복과 욕구의 관계를 통해, 정부의 국민욕구 단계별 불충족을 지적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향한 요소를 제안함

☑ 연구내용

- 국가별 행복지수와 정부역량 수준 간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OECD 통계와 정부역량 지표를 활용하여 보여줌. 행복과 욕구의 관계를 토머스 모어의 주장을 빌어, 욕구는 행복의 필요조건임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머스로우의 욕구5단계설을 보여줌. 정부가 국민의 욕구 5단계별 불충족 하는 이유를 최근의 통계와 어려운 한국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용어들을 예로 들면 제시함. 결론적으로 향후 국민행복을 제고하는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정부역량 아그나포스라는 정치학자의 주장을 빌어 6가지로 제시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칼럼으로 제출함

주제 : 2016년 정부 R&D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0일 ~ 7월 22일(13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정부 R&D 예산 발표를 소개하고, 투자방향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2016년 정부 R&D 예산을 3천억원 감축한 것에 대해, 긴축재정 필요성은 공감하나, 과학기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성과 위주 투자, 바뀌지 않는 중점 투자방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향후 R&D 예산낭비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연구개발재원 효율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또한 혁신적 중점 투자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연계협력, 기초원천 연구 집중, 창조경제혁신센터 허구성 및 기존 중기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함. 아울러 현장 과학계 및 산업계 인사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결정 조직(위원회)에 제도적 참여 보장, 단계적·창의적 예산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함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박근혜 정부,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인적교체 보다 리더십-관료체계 이원화 전략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5일 ~ 8월 5일(11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며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국 주무장관의 책임보다 위기관리 리더십과 내부 관료체계가 중요함을 지적함

☑ 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복지재정 전문가인 주무부처 장관에게 물어 경질함. 주무 장관 한명을 문책하고 관련 전문가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지나친 단순한 발상을 지적함. 메르스 문제를 주무장관의 역량 보다 위기관리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내부에 감염병 관리 전문 관료체계가 부재한 것에서 문제를 찾음. 향후 전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 리더십과 내부 관료체계 구축이라는 이원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즉, 정치적 자원을 활용하는 리더십과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단계별 전문적 대응은 관료체계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임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2015 세법개정안 발표, 대기업 연구인력 개발세액공제 축소 빠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미진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0일 ~ 8월 18일(9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 세법개정안에 당초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R&D세액공제 축소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R&D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가장 큰 요인으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지적하고, 2015 세법개정안에 당초 박근혜 정부가 R&D세액공제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함을 지적함.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그대로 두거나 제고하되, 대기업 중견기업의 R&D세액공제는 각각 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함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중소기업, 정부지원 활용미흡 + 창조경제센터 낮은 기대... R&D 강화 및 맞춤형 원스톱센터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2일 ~ 8월 28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R&D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소기업 R&D 지원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정부 주도와 단기성과 위주 정책이 가장 큰 문제이며, 정부 지원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홍보가 부족하여 활용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기대가 낮고 R&D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았음. 향후,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홍보지원 담당 원스톱센터 설치·운영, 중소기업 R&D세액공제 재검토, 벤처·중소기업 R&D 투자 중기재정계획 하 계획적 증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재정립, 기술개발 실패 용인 구조 형성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8일 ~ 9월 3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2016년 지방세법 개정안 중 지방세 감면제도 부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정부가 발표한 2016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과 관련하여, 지자체 의견 반영없이 일방적으로 감면 확대,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심화 및 지방분권 약화, 감면혜택 편익이 취약계층 및 서민보다 소수 개발건설업자와 기업에 집중 등 문제점을 분석함. 향후 대응방향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상·기능 강화, 지방세 감면제도의 대대적 정비 및 통폐합, 예비타당성조사 민간 참여 확대, 성역없이 독립성 강화, 비용편익 구조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돌고래호 침몰, 국민안전처 초동대처 또 실패.. 반면, 예산은 1년 만에 7천억 증가

- 연구기간 : 2015년 9월 4일 ~ 9월 10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돌고래호 침몰 사건을 조직구조적 그리고 재난사고 시간대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처의 구조적 한계를 재난사고 단계별로 도출함. 향후, 돌고래 사고 등 해양안전 사고 대응체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의 출범 과정과 역할, 예산 등을 정리함.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돌고래호 침몰이 또 다시 초동대처가 미흡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과정을 재난사고 시간대별로 자세히 분석함. 이러한 해양안전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평시의 출항선박에 대한 안이한 관리체계, 사고발생 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사고접수 대응체계, 표류예측시스템의 문제,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보고체계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국민안전처 해안사고 대응과정에서 무능을 평시, 사고 발생 시, 사고 후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분석한다. 향후 개선방향으로 제대로 된 해양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평시에 해경본부 관리체계 정비(소형선박 출항통제 강화, 이상상황 상시 감지), 사고대응체계 개선(선조치 후보고 등 구조출동 시간 단축 노력), 거시적 국가재난대응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총체적 점검 및 개혁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개혁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0일 ~ 9월 17일(8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의당 차원의 지역발전 논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구상하고 구현시킬 초석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문제점 분석, 개혁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정의당과 기존 진보진영이 사회적 경제를 넘어서는 지역발전 의제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 그래서 정의당이 지역발전을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구상하고 구현시킬 초석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음. 지특회계는 2005년 균형발전특별회계(노무현정부)로 시작해,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명박정부), 2014년부터 현재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모되었으며, 각 변화과정별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였음. 지특회계의 문제점으로 균형발전 부재, 자원증가 담보, 국고보조사업 성격 잔존, 지자체별 재정여건 미감안 동일한 보조율 설정, 지역발전 추진역량 부재, 부지매입비 지방부담 등이 지적되었음. 향후 지특회계 개혁방향을 제시하면서, 거시적 목표는 '균형과 자율(발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균형적 지역발전 지향'으로 설정하고, 회계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계정명을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개발계정, 경제발전계정을 균형발전계정으로 전환한 것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인 개혁방향으로 재원규모의 점진적 확대, 진정한 포괄보조금화, 재정여건 감안 차등보조율 설정, 성장촉진지역 지역발전 추진역량 및 부지매입비 일부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누리과정예산 지방교육청에 전액 전가... ‘빵셔틀’ 다름없어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8일 ~ 9월 24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영유아보육 정책의 중앙-지방정부간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고,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액 전가시킨 것을 빵셔틀과 다름없다고 비판함. 향후, 누리과정 정부간 거버넌스 재설계 및 지방교육분권 강화 방안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영유아보육 사업 중앙-지방정부간 거버넌스는 정책결정은 국가이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분담은 국비-지방비매칭으로 영유아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상 무상보육,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음. 실제 2016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서 전액삭감 된 것을 보고, 누리과정 사업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비-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 임에도 지방에 재원을 전가시킨 것이기에 ‘빵셔틀’과 다름 없다고 비판함. 또한, 그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전가 폭탄맞은 시도 교육청별 반발 상황을 정리함. 향후 누리과정 정부간 거버넌스를 우선, 자원분담비율을 중앙-지방간 6.5:3.5 매칭으로, 정책결정은 지방·시민과 나누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여를 제도적 보장, 둘째, 자원종립 관점에서 '15년 교육부 누리과정 미편성액인 1.7조원만큼의 재원인 지방재정교부세율 0.88% 확대를 주장함.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청에 제한적 과세자주권 부여 부여, 단체장의 지방교육청 재원이전 방해 국가 규제 강화, 교부기준 상 학생수 비중 가중치 확대 철회 및 지방교육채자주권 강화 등을 통한 지방교육분권 강화를 주장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담뭍값 인상의 금연정책 실패! 서민증세 입증! - 경제학적·재정적 접근재검토를 중심으로 -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5일 ~ 10월 2일(8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 담뭍값 인상 제도변화 및 논란을 정리하고, 담뭍값 인상 금연정책을 경제학적·재정적 접근을 통해 재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함

☑ 연구내용

- 정부 담뭍값 인상은 담배소비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정리하고, 실효성 등 꿈수 증세 논란을 제기함. 정부 담뭍값 인상을 우선, 경제학적 재검토에서, 중장기적 담배의 가격탄력성 및 수요량 감소 예측 실패, 흡연율 감소 실패 등을 지적함. 둘째 재정적 재검토로 세수확충 효과가 크며 서민증세 꿈수가 입증되었으며, 특히 부담금이 최대 2.2조원 증가 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금 제도라는 특수성이 내재된 활용방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지방재정은 오히려 축소 혹은 세수효과가 크지 않고, 국세 및 부담금 등 중앙재정 확충에만 효과가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음. 향후, 담뭍값의 단계적 인상, 경고문구 표시 및 금연광고·홍보 강화, 레저활동 및 상담 지원, 담뭍값 세수 구성 중 지방세수분 기존 수준으로 확대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노벨 과학상 왜 못받나... R&D투자·연구환경 등 구조문제, 파괴적 혁신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0일 ~ 10월16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벨 과학상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기술 R&D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함. 선진국의 과학기술 R&D 지원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이상적 R&D 구축 방향을 제안함

☑ 연구내용

- 노벨 과학상 미배출 원인을 정부 기초과학 투자와 인력양성 문제를 제기함. 한국 과학기술 R&D 지원의 문제점을 정부주도 일방적 시혜적 지원, 추격형 및 단기 성과창출 지원 집중 등 도전적·창의적 연구의 부재를 지적함. 창의적·고위험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선진국 과학기술 R&D 지원체계를 소개함. 향후, 기초연구 중심 가치사슬 단계별 전방위 지원, 연구기관(연구자) 자율성 확대, 양질연구 판단·평가능력 향상 및 평가제도 개선,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 체계 내실화·다양화, 이상적 R&D 구축모형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노벨상급 젊은 연구자 1천명 양성... R&D투자·연구환경 혁신없는 노벨상 조급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3일 ~ 10월 29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 노벨상급 연구자 양성사업을 소개하고, 내재된 본질적 문제를 지적함. 노벨상 배출의 지름길과 R&D 투자지원의 원칙을 제시함

☑ 연구내용

- 정부의 노벨상급 연구자 양성 프로젝트 '넥스트 디케이드 100'을 소개하고, 이것을 노벨상을 올림픽 메달로 보는 정부의 지나친 정책개입주의를 지적하고 위험한 투기이자 도박으로 진단함. 향후 노벨상 배출의 지름길은 연구자의 자율성·독창성 확대, R&D 투자지원의 팔길이 원칙이 중요함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막대한 R&D 투자에도 왜 노벨 과학상 한 명 배출하지 못할까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일 ~ 11월 4일(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막대한 R&D 투자에도 노벨 과학상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고, 노벨 과학상 배출을 위해 과학기술 R&D에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주장함

☑ 연구내용

- GDP 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임에도, 노벨 과학상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함. 노벨 과학상 미배출의 원인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R&D의 구조적 문제를 들며, 창의적·고위험 연구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어 R&D 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줌. 향후, 과학기술 R&D의 파괴적 혁신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 및 R&D 우선순위 수립 구조의 혁신, 기초연구비 확대, 연구기관(연구자) 자율성 확대, 평가능력 향상,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 방향 및 체계의 내실화 및 다양화를 주장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칼럼으로 제출함

주제 : 미래창조과학부, R&D부정비리신고센터 유명무실... 접근성, 홍보 강화 절실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8일 ~ 11월 24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래창조과학부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연구내용

- R&D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패쇄 등 접근성·인지도 등이 낮아 유명무실함으로 지적함. 구체적으로 접근성 및 인지도 저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신고의 절차 및 내용 등 각종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함. 향후 R&D부정비리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신고접수 배너연결 원스톱화, 대학별 산학협력단 및 출연기관 및 그 연구진들에 의무적 홍보,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절차 폐지, 증거서류 제출 일부 간소화, 신고서 양식의 수정 등 접수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KISTEP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지역격차와 자원의존성 대단히 심각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2일 ~ 12월 17일(6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3가지로 정리함. 향후, 균형적 지역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3가지의 혁신노력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적 처방을 제시함

☑ 연구내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분석결과, 시사점으로 지역격차와 자원·환경 의존성이 대단히 큰 반면, 수도·대전권 자원대비 성과가 낮아, 지역과학기술혁신 효율성은 자원·환경 의존성보다 네트워크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현재 과학기술혁신이 지방 수준에서 지극히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남. 규현적 지역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간 격차해소에 중앙정부 차원 노력, 지역내 혁신주체(지자체, 지역출연기관, 산학)들의 네트워크 혹은 활동 역량 제고노력, 혁신노력 지역에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안했음.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적 처방으로 우선,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통한 지역혁신체제 허브이자 중간지원조직 역할 부여, 산하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둘째, 지역별 전략산업 연계 특화대학 지원 확대, 지역인재 육성 및 유출방지, 셋째, 서울·경기·대전과 타 지역 간 혹은 외국 지역과 실질적 협력 및 공동연구에 '과학기술 역량증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 속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24일 ~ 12월 30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누리과정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온 일련의 과정과 현황을 정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을 지적함. 또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시도교육처들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분석하고 향후 유아교육사업인 누리과정 재개를 위한 정의당식 중단·장기적, 근본적 해법을 제안함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지적하는 내국세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비판한다. 누리과정 시행이후,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잔액을 제시하며 지방교육채에 기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정부 이차지원 없는 지방교육채 승인규모 증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기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야권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국가책임론, 정부 전액부담론이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만 한 현실적 해법과 장기적·근본적 해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단기적 처방으로, 정부 이차 전액지원 전제 지방교육채 2.1조원 추가 설정,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2% 확대,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절반씩 부담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기적 해법은 정부 재정책임 확대와 지방 결정권 확대 등 누리과정 중앙·지방간 복지거버넌스의 재설계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간 매칭비율 6.5:3.5(서울 3.5:6.5),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서의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도적 참여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해법은 과세자주권·지방교육채자주권 등 세입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세의 부분적 과표조정권 및 탄력세율권 부여, 취득등록세·담배세·재산세 등에 연동 지방교육세율 증대, 지방교육채 총액제한 폐지 혹은 확대, 누리과정 지방교육채 정부 이차지원, 지자체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단체장 이전방해에 대한 강한 법적 책임 등이다.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20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 개발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일 ~ 12월 31일(61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개발함

☑ 연구내용

- 20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1. 기초연구 역량 및 과학기술 연구자(기관) 자율성 제고 방안으로 5개, 2.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확대 방안으로 3개, 3.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 방안으로 2개, 4. R&D 예산의 적재적소 투명한 집행 방안으로 3개, 대국민 과학기술 흥미 제고 방안으로 1개 등 총 14개 공약을 제안함

☑ 연구성과

- 20대 총선 정의당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제출함

주제 : 20대 총선 지방자치 분야 공약 개발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일 ~ 12월 31일(6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총선 지방자치 분야 공약을 개발함

☑ 연구내용

- 20대 총선 지방자치 분야 공약을 1.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실현 방안으로 1개, 2. 지방분권 확대 방안으로 3개, 3. 주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2개, 4. 균형발전 방안으로 1개 등 총 7개 공약을 제안함

☑ 연구성과

- 20대 총선 정의당 '지방자치' 분야 공약으로 제출함

주제 : 2015년 금융부문 동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5일 ~ 1월 16일(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금융부문 동향 전망 및 정책 대응과제를 연구함

☑ 연구내용

- ICT와 금융 융복합 추세를 전망
- 핀테크 즉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전망
- 금융규제 완화 및 건전성 감독 강화 필요성
-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 당의 대응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직자, 당원들에게 관련 내용 브리핑,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 외부 전문가 등에게도 당의 입장 등 내용 공유

주제 : 인터넷 전문은행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0일 ~ 1월 30일(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금융규제완화, 신용위험확대, 소비자피해 우려에 대한 전망 및 대책 연구

☑ 연구내용

-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인가기준과 업무범위
-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이슈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개인정보 및 소비자보호 관련
- 은행업의 비대면 채널 거래 증가에 따른 리스크
-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차명계좌 등 불법 거래에 대한
- 금융감독 당국의 리스크 관리 방안
- 당의 대응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직자, 당원들에게 관련 내용 브리핑,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 외부 전문가 등에게도 당의 입장 등 내용 공유

주제 : 박근혜정부 2년 금융정책 평가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일 ~ 2월 12일(11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금융부문에 대해 △ 기술금융인프라 구축 등 창조금융의 제도적 기틀마련, △ 보수적 금융문화의 혁신, △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 △ 금융시장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평가에 대한 진단과 대안 방향모색

☑ 연구내용

-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한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문제
- 과도한 고금리 및 약탈적 금융규제
-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및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 규제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피아로부터 벗어나 노조 및 이해당사자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금융기관 지배구조개혁 등을 입법 활동의 필요성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직자, 당원들에게 관련 내용 브리핑,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 외부 전문가 등에게도 당의 입장 등 내용 공유

주제 : 금융개혁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일 ~ 3월 10일(8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신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임기 중에 꼭 해야할 금융개혁 정책과제를 제시. 전임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수많은 정책적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촉구 주장

☑ 연구내용

- 한국경제 위기의 잠재적 폭탄으로 커져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정책 수립과 적극적 시행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 재벌그룹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
- 금산분리 원칙에서 벗어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중단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방안 폐지
- 론스타와의 ISD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당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적 상황 인식, 전향적 대책 촉구 등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그 내용이 지도부의 발언을 통해 외화

주제 : 안심전환대출 전수대출 결과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0일 ~ 5월 21일(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안심전환대출 전수조사결과로 확인된 가계부채대책의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 전수 조사 경로가 금융위의 주장과는 달리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
- 원금균등 상환방식의 경직된 제도에 의해 역설적으로 가계부채 압박을 더 받게 되는 결과
- 정부의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가 감축 효과 주장에 대한 분석
- 정부의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대출권장정책으로 문제점 분석
-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 제시
- DTI,LTV 등 부동산관련 금융규제를 강화
- 다주택자들과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용접근 제한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주제 :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1일 ~ 5월 31일(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높은 공공성과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모두 6개 업권별 개별법으로 규율해왔음.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 방향을 주장

☑ 연구내용

-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
-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에 대한 제제조치로 '의결권 제한'만을 명시하고 있음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 입법토론회에서 제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심사를 대폭 강화 주장

주제 :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9월 10일(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행 1.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연구

☑ 연구내용

- 미국의 금리인상의 1차 파급효과: 달러자산의 요구수익률이 높아져
- 달러화 강세, 국내에서 대미 수출은 증가
- 미국의 금리인상의 2차 파급효과: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
- 현재의 저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
-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정책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 당 지도부 및 대변인 등의 상임위 모두발언, 논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3일 ~ 9월 24일(12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4개의 컨소시엄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되기 위해 각축.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 은행업 규제 완화에 대응

☑ 연구내용

- 은산분리의 완화, 최저자본금 규제완화, 건전성 규제도 초기부담 완화
- 전산설비를 구축할 때 외부 위탁을 허용
- 계좌를 개설 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많은 쟁점과 부작용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 당 지도부 및 대변인 등의 상임위 모두발언, 논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재벌개혁 5대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10월 5일(5일)
- 연구분야 : 경제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재벌 경제력 집중의 폐해인 일감몰아주기, 기업간 양극화, 재벌의 경영권 세습 문제에 대한 입법 과제를 연구하고 개정추진

☑ 연구내용

- [황제경영 방지법] 순환출자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독립적인 감사선출, 다중대표 소송 도입
- [재벌독식 방지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복합쇼핑몰 규제, 대리점 상생협약 등
- [초과이익 환수법] 초과이익공유제, 초과사내유보금 공유 장려세제 등
- [사회연대법] 고위임금 최고임금제, 재벌과 부유층 과세
- [좋은 일자리법] 청년고용 촉진법(청년 의무고용 5%), 파견제 직접고용 및 일자리 창출 등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 정의당 소속 의원의 해당 상임위 활동 및 입법 자료로 활용

주제 : 미국 중국의 경제 불안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0일 ~ 12월 18일(9일)
- 연구분야 : 경제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중국의 경제 불안과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정책을 연구

☑ 연구내용

-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 중국의 급속한 경기둔화와 추가폭락
- 한국경제는 2014년 1사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성장율의 둔화
- 한국경제의 항방에서 중요한 수출부문 연구
-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금융완화 기조 전망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 정의당 소속 의원의 해당 상임위 활동 및 입법 자료로 활용

주제 : 금융기관지배구조 입법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12월 10일(2개월 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행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제도상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목적

☑ 연구내용

- 금융기관 지배구조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입법 방향
-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규율/임원자격제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
- 이사회 권한과 책임/감사위원회 경영진 감시기능강화
- 노동자 참여 및 소수주주권 행사/ 대주주 적격성 규율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 정의당 소속 의원의 해당 상임위 활동 및 입법 자료로 활용

주제 : 청년비정규직현황과 대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4월 30일(4개월)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

☑ 연구내용

1)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기간 : 2015.2.1~2.28
- 설문대상 : 20대~40대 (312명)
- 설문방법과 설문내용 : 온라인 오프라인병행, 내용은 인적사항, 고용관계, 사업장정보, 업무, 노동조건, 고용형태, 일자리만족도, 부채, 이직에 관한 의견 등

2) 공공부문과 대기업 근무 청년 비정규직 대상 심층면접

- 심층면접군 : 10명
- 면접내용: 1대1로 고용형태, 계약기간, 노동조건, 업무만족도, 부당대우 경험 여부, 정규직전환 가능성 등

3) 설문조사 결과 (1) 비정규직의 고착화, (2)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 (3)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중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에 관한 부정적 인식 등을 확인하였음. (3)에 관해서는 기간제사용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0.4%로 압도적으로 많아,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의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

☑ 연구성과

- 청년비정규직의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됨

주제 :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5일 ~ 1월 30일(1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2년째, 노동관련 대선공약의 이행사항과 평가를 통해, 미이행정책의 이행촉구 등을 위한 대안마련

☑ 연구내용

1)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 주요 노동공약 16개항목의 이행상황 및 평가

(1) 창업확대: 세부공약5개/ 3개 이행(이하 0/0으로 숫자만 표시함)

(2) 스펙초월 시스템마련(5/2), (3) 청년해외취업확대(3/3)

(4) 공공부문청년일자리 확대(2/2), 이 중 공공부문채용은 공공부문평가지표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청년고용의무제 시행(2016년까지한시) 등의 배경이 있음

(5)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나누기(4/1) 휴일근로초과근로시간 산입 등은 축소추진 중

(6) 정래해고요건 강화(취업규칙불이익변경 및 재량해고추진입법화)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제화

(7) 대규모집단해고시 고용재난지역선포(2014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8) 청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확대(2/2), (9) 노인 일자리 확대 (2/0)

(10) 여성일자리확대 및 모성보호(7/6) 여성훈련과정 및 "새로 일하기 센터" 30개소 확대는 2013년 20개소, 2014년 10개 확대

(11)-(16) 중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인상기준마련,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합리적 보안 등 노동계의 제도개혁의 쟁점사항에 관해서는 거의 미이행이 많음

2) 공약사항 중, 여성일자리 모성보호 등 출생율 향상을 위한 기반정비 등 사회복지관련 부문에서는 애초 제시 수준보다 미흡하나 공약이행 노력이 엇보이나, 노동시장의 양극화해소(정규/비정규직 격차해소), 건전 노사관계 형성(정리해고, 복수노조, 대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연구성과

-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 확인, 대선공약의 이행의지박약 오히려 공약는 반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사관계 분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선공약 이행촉구 및 당의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함

주제 :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문제

- 연구기간 : 2015년 2월 20일 ~ 3월 5일(13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근 대법원의 사내하청 노동자불법파견(현대자동차, KTX 여승무원) 관련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구분 판단기준을 확인,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해소에 관한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함

☑ 연구내용

- 1) 대법원의 직접고용에 관한 일반적 판단기준의 사안별 적용
 - ① 하도급(하청)기업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 ② 하도급(하청)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 2) 현대차 인용 / KTX 기각이유
 - 현대차 사례는 원/하청 노동자의 업무구분이 곤란하며, 원청사업내에 하청부문이 편입된 형태로 전체로 보아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함. 한편 KTX는 일부안전업무에서 원청의 관여가 있었으나, 전체로써 하청업무의 독립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함
- 3) 현대차 사안과 같은 유형의 판단기준은 판례로서 정착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KTX 사안은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판단 시, 내용과 정도에 따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판단이 유동적인 점을 확인함

☑ 연구성과

- 불법파견 해당성과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정책연구 및 개발 작업에 기여함

주제 : 청년실업,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 연구기간 : 2015년 3월 7일 ~ 3월 14일(8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청년실업률의 상승, 지난 10년간(2005년~2014년) 7%~8%대에서 2015년 9.1%로 상승, 전체실업률은 3%대 추이로 안정적이나 청년층에서만 변화폭이 커지고 있음. 청년의 구조적 실업 해결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청년실업의 구조적 해결방안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등 신규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의 청년의무제 도입 가능성검토
 - * 청년고용의무제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1999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일본의 예로 후생노동성 “인사노무관리연구회 ‘기업경영, 고용관행 워킹그룹’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식 일자리 나누기에 제도 설계 등을 검토, 진행 중)
 - * 우선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설계(인센티브제도 구상 등)

☑ 연구성과

- 현재 제외국 제도 비교를 진행 중이며, 이는 선거공약을 통한 구체화, 법제화를 전제로 연구 중

주제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0일 ~ 4월 10일(21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방안

- 전체 노동자인구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약 40%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고착화 우려(고용노동부의 '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
-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소방안 강구

- 비정규직증가 원인은 기업의 인건비억제를 통한 이익우선 사고
- 선성장 후분배논리, 격차해소(선분배)를 통한 경제성장효과 기대의 논리가 대립하고 있음. 논리 전개의 배경에는 고령화사회대책 및 여성경제활동 및 모성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회안정화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한 접근 필요
- 해결 방안으로서 낮은 노동분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인상 검토
- 인건비저감 내지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수정은 기업체질개선, 즉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도 하나의 선택지

☑ 연구성과

- 전체경제활동인구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이유는 인건비 저감 외에 달리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연구노력 미흡, 해결방안으로 최저임금인상 정책에 관하여 연구 진행 중(노동정책개발)

주제 : 비정규직대책2 산별교섭확대 및 단체협약효력확장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6일 ~ 5월 10일(24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노조 없는 비정규직에게도 단체협약 효력 확장방안 모색
 - 노동시장양극화(소득격차 확대)해소 방안 중 하나가 단체협약을 통한 격차시정
 - ILO “세계임금보고서”는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불평등률이 낮아지는 상관관계 있다고 보고함
- ☑ 연구내용
 - ILO의 조사보고를 통해 단체협약의 확대적용률이 높은 국가의 임금 불평등은 낮다(영국40%, 프랑스,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 80%)
 -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지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기업울타리를 넘어 같은 업종 지역 등에 단체협약의 적용 확대 방안(독일형 등의 제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를 토대로)
 - 1) 산별교섭의제: 산별노조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업종별, 지역별 기준임금을 적용(지역적구속력에 유사)하고 여기에 기업별지급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
 - 2) 기업별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구속력의 적극 활용)
- ☑ 연구성과
 - 산별교섭 제도화(정규,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토대로)를 제안

주제 : 산재입증책임의 전환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일 ~ 5월 22일(23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법원의 업무상 재해(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재해인정기준) 관련 입증책임론 관련 헌법소원사건을 계기로 인권의 산재보험제도개선권고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안 등의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및 하급심의 판결경향

- 산재보상보험법은 일본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일본의 노동재해(우리나라 산재에 해당)소송에서는 업무상재해에 기인하였음을 노동자가 증명하기에 앞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입증책임전환)
 - * 안전배려의무(일본최고재판소 제2소재판부 1983.5.27 판결 - 육상자위대 331회계대사건)의 범위와 정도, 특히 산재사고 발생예방이 사용자의 책임임 명확히 함, 이는 현재 학설, 판례상으로 확립됨
 - * 도요타근로기준감독서 과로자살 사건(행정소송)에서 대량관찰법에서 본인 중심설로 전환한 점과, 노동자의 건강안전배려의무 이행 등의 판단기준으로 노동자측의 입증책임을 전환 혹은 대폭경감시킴

☑ 연구성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심상정의원 공동발의의 “입증책임 분담”론을 정치(精緻)에 기여함

주제 : 2015 북 신년사와 남북관계 전망과 주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1월 9일(9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의 주요 내용, 그에 대한 국내외 반응을 분석해 추후 남북관계를 전망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과 대책 정립 모색

☑ 연구내용

- 북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주요 내용 분석
- 한국 정부와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반응
-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 당의 대응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직자, 당원들에게 관련 내용 브리핑,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 외부 전문가 등에게도 당의 입장 등 내용 공유

주제 : 2015 북 신년사와 남북관계 전망과 주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1월 9일(9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의 주요 내용, 그에 대한 국내외 반응을 분석해 추후 남북관계를 전망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과 대책 정립 모색

☑ 연구내용

- 북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주요 내용 분석
- 한국 정부와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반응
-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 당의 대응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직자, 당원들에게 관련 내용 브리핑,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 외부 전문가 등에게도 당의 입장 등 내용 공유

주제 :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한 인식과 대안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0일 ~ 4월 30일(11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집단적자위권 행사가 동전의 양면인데 비해 한국 정부가 과거사-안보협력 분리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일본 아베 정부 및 그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 정책의 문제점 분석, 비판
-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의 원칙과 과제
- 동아시아 평화 정착의 미래를 위한 대안적 접근법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당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5월 6일 진행된 일본 사민당-정의당 간담회의 자료로 활용

주제 : 북의 SLBM 실험, 파장과 올바른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5월 9일 ~ 5월 13일(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국방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5월 9일 북이 SLBM 실험에 성공했다는 주장 이후 언론은 물론 여야당 등 우리 사회가 즉자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황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인식, 종합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

☑ 연구내용

- 북의 SLBM 실험 성공 주장과 한국 언론 및 여야당 등의 반응, 그 문제점
- SLBM 전력화에는 아직 시간 남았고, '게임 체인저' 되기에는 미약
- 즉자적 대응과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 정책과 실천 필요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당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적 상황 인식, 전향적 대책 촉구 등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그 내용이 지도부의 발언을 통해 외화

주제 : 남중국해 갈등 고조와 미군 탄저균 유입, 균형외교 등 자주적·적극적 정책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6월 12일(12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인공섬 건설 추진과 미국이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압박 동참 촉구,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발표 및 비밀 실험 진행 의혹 등이 불거지는 상황에 즈음해 강대국 사이 균형외교 등 자주적 정책의 전개 필요성 주장

☑ 연구내용

-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고조와 미국의 한국 압박
-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와 비밀 실험 진행 의혹
- 강대국 사이 균형외교, SOFA 개정, 생화학무기와 물질 반입 금지 필요

☑ 연구성과

- 6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주제 :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정의당의 메시지 기초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5일 ~ 8월 7일(23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8.15를 맞아 진행되는 일련의 행사 및 주요 이슈들과 관련해 당의 주요 지도부 및 당원들, 상황 인식 및 대내외 발신 메시지 등 대응에 기여. 나아가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 및 한반도 평화에 기여

☑ 연구내용

- 전반적 상황과 대응 기초
- 광복 70년, 과거사 청산 및 평화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 분단 70년 정전체제 62년,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언

☑ 연구성과

-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및 당원들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발언 등 메시지의 기초 자료로 활용

주제 : 남북 고위급접촉 타결과 전망, 주장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5일 ~ 8월 28일(14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8.25 합의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 전개의 필요성 주장

☑ 연구내용

- 남북 고위급접촉 타결과 엇갈리는 전망, 이에 대한 분석
- 변화하는 국제정치 질서 속 조속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 정부 당국이 취해야 하는 정책: 금강산관광 재재, 5.24 조치 해제, 당국 간 회담의 수시 개최 노력

☑ 연구성과

- 8월 4~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주제 : 중국 전승절 참석 적극 외교, 남북이산가족 상봉 합의와 향후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9월 10일(10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의 중국 항일 전승절 참석, 남북 당국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예상되는 상황을 전망하며 향후의 과제에 대해 주장

☑ 연구내용

- 중국 전승절 참석 적극 외교와 미국, 일본 등의 반응, 향후의 과제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와 성사 관련 전망
-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상시화할 필요, 그 현실화를 위한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전향적, 적극적 정책의 필요성

☑ 연구성과

- 8월 4~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 당 지도부 및 대변인 등의 상임위 모두발언, 논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미중 양강 시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달성의 비전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10월 20일(1개월 20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대한 종합적 진단 및 이런 질서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의 제고와 그에 입각한 대응책 등을 정립

☑ 연구내용

-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대한 진단
- 미중 양강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상관관계 등 보충
- 3차원 평화 실현의 비전과 정책(일부 수정 보완)

☑ 연구성과

- 해당 문서는 줄고 “평화로운 한반도 달성의 기초와 비전(2013.12)”에 현 시기 미중 관계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의 상관관계 등을 보충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기존 문서는 당의 국가비전위에 보고, 당의 국가비전 정립 및 신강령 작성 등에 참조자료로 활용된 바 있음

주제 : 중국-대만 정상회담 후 최초 만남과 남북관계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6일 ~ 11월 20일(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1월 7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대만 마잉주 총통의 분단 후 최초 만남의 배경, 의의 등에 대해 분석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설 등과 맞물려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정부의 역할 등 주문

☑ 연구내용

- 중국-대만 정상, 분단 후 최초 만남의 상황과 양안관계의 현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협의,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등 남북관계 관련 현안
- 양안관계가 남북관계에 주는 정책적 함의, 반기문 방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 연구성과

- 11월 3~4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주제 : 남북 당국회담 결렬, 모란봉악단 철수 배경과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0일 ~ 12월 18일(9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12월 11~12일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의 결렬, 12일 북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철수의 배경과 그 파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분석하고, 당의 입장 및 대응의 기초 제언

☑ 연구내용

-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의 결렬과 그 원인
-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철수의 배경과 향후 북중관계와 북한의 정책 향방에 대한 함의 분석
- 남한 당국 및 북한 당국에 대한 주문

☑ 연구성과

- 12월 3~4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주제 : 진보의 외교·통일·국방 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일 ~ 12월 31일(9개월)
- 연구분야 : 외교통일/국방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외교, 통일, 국방 분야 주요 논점 및 대안에 대한 정립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한 일종의 포럼을 구성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군에 대한 문민통제
- 북핵의 객관적 실태 및 대응책
- 미중관계, 한중관계 등 국제질서와 외교안보 정책
- 8.25 합의 등 남북관계 현안 진단 및 통일과 평화의 관계 등

☑ 연구성과

-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소통을 통해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당의 정책의 정립에 큰 도움. 전문가들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진행되어 해당 분야 내용을 당원 등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총선 공약 준비 등에 도움이 됨

주제 :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5일 ~ 1월 9일(5일)
- 연구분야 : 국토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부동산 3법 통과로 예상되는 집값상승, 전월세가격 상승 등에 의한 세입자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및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등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조치에 따른 재건축 시장의 고분양가 조장, 집값·전월세가격 상승에 의한 세입자 불안 심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시행, 공정임대료제 도입,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등의 대안을 제시함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주제 :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4대 과제 10대정책 제시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0일 ~ 4월 16일(7일)
- 연구분야 : 국토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4대 과제 10대 정책 제시

☑ 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로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세입자들의 '집 걱정 없는 봄날'을 목표로 1) 계약갱신 1회 보장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2) 공정임대료제 도입, 3)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4)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임대 소득 과세 정상화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및 기자회견 개최

주제 : 고소득층 임대주택 ‘뉴스테이’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4일 ~ 5월 29일(15일)
- 연구분야 : 국토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발표한 뉴스테이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

☑ 연구내용

-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의 지역별 임대료 현황을 조사하고, 중산층 소득별 뉴스테이 RIR 지수 산출, 뉴스테이 사업자 지원책 조사, 뉴스테이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뉴스테이가 고소득층의 임대주택사업임을 드러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임대료 인하, 재벌건설사가 아닌 사회적 기업으로의 사업자 전환 등 정책대안을 제시함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주제 : 5월 1~3주차 정세전망 - 영국 총선 결과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7일 ~ 5월 12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5월 1~3주차 영국 총선 결과 분석

☑ 연구내용

- 5월 9일 영국 총선 결과, 영국 보수당은 의회에서 12개 의석수 차이로 승리, 노동당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스코틀랜드독립당에 50석을 내어주며, 지난 총선 대비 40석을 잃음. 주요 실패원인으로 선거 전략에서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즉, 노동당은 선거 기간 동안 노동당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호감도 보다는 정책에 대한 지지층에 반응에 보다 집중하여, 선거를 소극적으로 치룬 것이 이번 선거의 실패요인으로 지목됨. 결국 일반 대중을 겨냥하지 않고 정책에만 집중한 노동당의 선거전략은 실제적인 대중의 호감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향후 정의당도 영국노동당의 총선 결과 분석에 대해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5월 1~3주차 정세전망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7일 ~ 5월 12일(6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5월 1~3주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여론 분석

☑ 연구내용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과반이 넘게 나타남. 지지정당별로도 '현행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세대별 특징으로 20대는 상당수가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지 않으며, 60세 이상에서는 국민연금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더 많은 추세임. 특히,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이 가장 긴 30대에서 현 개정안에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남. 이는 젊은 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 및 공적 연금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음

☑ 연구성과

-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5월 5주차 정세전망 - 동성결혼 합법화 이슈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1일 ~ 5월 26일(6일)
- 연구분야 : 법제사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5월 5주차 동성결혼 합법화 이슈 관련 국제사회 분석

☑ 연구내용

- 아일랜드에서 5월 23일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해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 됨. 가톨릭교회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서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인식되어온 나라지만 이번 투표결과에 대해 아일랜드 여론은 반기는 분위기임. 이번 동성 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대부분의 젊은 층이 가톨릭 학교 시스템에서 12년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가톨릭교회로선 추락한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현재,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한 국가는 20개국에 이룸. 한국은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결혼 등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성소수자 인권보호 관련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임. 향후, 한국에서도 동성 간 결혼 합법화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에 대한 정의당의 정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1주차 정세전망 -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8일 ~ 6월 2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1주차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에 대한 여론 분석

☑ 연구내용

-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국회법을 재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이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함.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한 점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 '날치기'와 이를 막기 위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음. 이미 통과되었던 선진화법의 선진화가 향후 국회 운영의 개혁방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됨

☑ 연구성과

-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2주차 정세전망 - 미국 대중 정치성향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3일 ~ 6월 8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미국 대중 정치성향 분석

☑ 연구내용

- 미국에서 스스로를 진보성향이라고 평가하는 국민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미국 갤럽이 매해 조사하는 가치와 신념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1%로 나타나며, 자신의 정치성향에 대한 미국 국민의 평가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향후, 미국인들의 진보주의 성향 증가는 동성결혼이나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특히,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회 이슈는 전 세계적인 문화충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점점 더 부각되는 상황임. 따라서 사회 이슈에 관한 전반적인 진보성향의 증가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3주차 정세전망 - 인사청문회 관련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1일 ~ 6월 16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3주차 인사청문회 관련 여론 분석

☑ 연구내용

- 인사청문회가 끝난 6월 10일 긴급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 황교안 총리 후보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증가함. 황교안 총리 후보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국민 통합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황교안 총리 후보의 '도덕적 흠결'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또한, '국정동력 회복과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한 책임총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뒤따랐음. 이 같은 결과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여러 의혹이 무성함에도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이 같은 여론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여야간 공방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연구성과

-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4주차 정세전망 - 국제사회 중국위상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8일 ~ 6월 23일(6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4주차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위상과 관련된 여론 분석

☑ 연구내용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인들의 48%는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41%는 긍정적으로 응답함. 이에 반해, 중국인들의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남. 또한, 유럽 국가들은 모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함. 이 같은 국제사회의 여론 속에 6월 22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의 순항을 위해 중국의 부상 등 동북아시아 환경변화에 대응해야한다고 제언함. 향후, 국제사회에서 차지할 중국의 위상과 성장이 한일관계 뿐 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5주차 정세전망 - 메르스 사태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5일 ~ 6월 30일(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5주차 메르스 사태 여론 분석

☑ 연구내용

- 메르스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도, 메르스 본인 감염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를 차지함. 또한,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을 삼가거나 모임을 취소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73%로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정부신뢰가 상당히 부정적이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여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하지만, 감염우려에 따른 불안 심리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대응은 불안 심리에 대해 크게 부정적이지 않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여론 인식이 정부와 대통령의 대응을 나누어 평가한다고 볼 수 있음

☑ 연구성과

-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7월 2주차 정세전망 - 미국 대통령 지지율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7월 9일 ~ 7월 13일(5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7월 2주차 미국 대통령 지지율 분석

☑ 연구내용

-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0%까지 상승함. 오바마 대통령의 참담했던 지지율은 2014년 11월 4일, 미국 의회 중간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완패와 야당인 공화당의 상원, 하원 석권을 통해 심각한 레임덕이 지적된 바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 선거 참패 이후 워싱턴 정치와 적극적인 차별과로 위기를 돌파하였음.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웨이'라는 보통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내세워 이슈를 재구성하고 정치권의 이해가 엇갈려도 과감히 밀어붙인 것이 지지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레임덕을 모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는 국민의 목소리는 오간데 없이 '친박', '비박' 혹은 '배신정치'로 정쟁을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임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동성 결혼 합법화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9일 ~ 7월 13일(15일)
- 연구분야 : 법제사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3일부터 시작된 퀴어축제 이후 최근 3주 동안 이른바 '동성애' 논란이 전개됨.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회 이슈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논란의 추이는 국제사회 여론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모색

☑ 연구내용

- 동성결혼 합법화의 대중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동성애자와의 사회적 접촉이 동성결혼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되어옴. 미국 여론의 동성결혼 지지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동성결혼 지지에 교육과 사회적 접촉이라는 두 변수가 '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성과

- 한국 내 점점 더 확대되는 고학력시대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해지는 개인의 네트워크 경로까지 고려한다면,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는 미국 내 독특한 현상으로만 남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임. 향후, 한국 사회에서 대두될 사회이슈 중 하나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함

주제 : 7월 3주차 정세전망 - 글로벌 위협 여론 조사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7월 9일 ~ 7월 14일(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7월 3주차 국제사회 위협 여론조사 분석

☑ 연구내용

- 기후변화, 세계경제 불안, 사이버공격, IS 등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목된 7가지 주요 현안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장 큰 글로벌 위협 요인으로 지목됨. 흥미로운 점은 IS를 위협요인으로 지목한 한국인 응답자의 비율은 40개국 가운데, 레바논과 스페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더불어, 사이버 공격을 위협요인으로 지목한 한국인의 비율도 높게 나타남. 한국인이 사이버테러를 IS위협 다음으로 큰 글로벌 위협으로 응답한 것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미명 아래, 사이버테러라는 위협이 공존함을 여론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7월 4주차 정세전망 - 아베 신조 '정권위기론'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6일 ~ 7월 21일(6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7월 4주차 아베 신조 '정권위기론' 여론 분석

☑ 연구내용

-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7월 18일, '안보법안'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이후, 아베 정권의 거침없는 폭주에 등 돌리는 여론은 앞으로 아베 정권이 당면한 숙제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심판대가 될 참의원 선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여론의 지지율이 아베 정권을 위협하는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임. 따라서 아베 총리는 권력 기반의 안정성을 수시로 점검해야할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어갈 아베 총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됨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미국과 한국의 여론조사 분석 비교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4일 ~ 8월 20일(7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과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 비교

☑ 연구내용

- 여론조사에서 정확도와 신뢰도 문제는 늘 논쟁적인 부분임. 한국에서는 여론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음. 이는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라도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하여 보도할 시 벌금형을 받는데, 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셈임.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여론조사 정확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극복방안을 고민하는 것에 집중함. 전화조사가 가지는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 상황. 따라서 향후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화 여론조사와 소셜 미디어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이 요구됨

☑ 연구성과

- 국내외 정세분석 및 선거 전략 자료로 활용

주제 : 캐나다 총선 관련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8월 25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캐나다 총선 관련 여론 분석

☑ 연구내용

- 10월 19일에 총선을 앞둔 캐나다는 주요 3당의 팽팽한 3파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각 당에 대한 지지율은 고유 강세 지역에서 우세를 유지하며,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냄. 하지만, 캐나다 국민의 과반수가 보수당 집권 이후, '생활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론의 절반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캐나다 국민의 생활문제에 대해 스티븐 하퍼 총리는 '저유가와 그리스 사태 등 대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보수당에게 유리할 것만 같지 않아 보임.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선부르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앞으로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지지율 변화에 주목해야함. 이에 선거운동의 캠페인이나, 정당 내 소속의원들의 스캔들이 향수 선거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으로 분석됨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및 선거 전략 자료로 활용

주제 : 해외 정당 강령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9월 15일(1달 15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해외정당 강령을 분석하여, 정의당 강령 영문강령 설립

☑ 연구내용

- 해외 정당의 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들을 연구하여, 정의당 강령의 내용을 영문으로 설립

☑ 연구성과

- 국제사회에 정의당을 소개할 수 있는 당 홍보 자료로 활용

주제 : 9월 2주차 정세전망 - 정부 노동개혁 관련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9월 3일 ~ 9월 8일(6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9월 2주차 정부 노동개혁 관련 여론 분석

☑ 연구내용

- 임금피크제와 채용 및 고용의 유연화를 주요 방안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특히,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만이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2,3,40대에서는 적게는 60% 많게는 70%의 응답자가 노동개혁안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응답함. 이는 실제 정부가 노동개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채용 촉진에 대해 실제 청년층의 기대는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년이 중심이라고는 보기 힘든 개혁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연구성과

-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9월 4주차 정세전망 - 미국 총선, 여론관련 전략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7일 ~ 9월 22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9월 4주차 미국 총선, 여론관련 전략 분석

☑ 연구내용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지지율은 2014년 여름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로 대선 풍향계로 여겨지는 뉴햄프셔주와 아이오와주에서 샌더스 의원에게 밀렸음.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문제에 대해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받지 않고, 신속하게 사과하는 등 이메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정하였음. 또한, 대중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사이에서 다시 반전의 지지를 받고 있음.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은 향후, 선거에서 후보의원이 스캔들에 개입될 경우, 신속한 사과와 이미지 개선이 적정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0월 3주차 정세전망 - 한미관계 관련 미국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0일 ~ 10월 15일(6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0월 3주차 한미관계 여론 분석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발표된 미국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8명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조사에서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 국가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66%로 나타남. 또한, 62%는 한국이 국제문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함. 특히,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 국가로 꼽은 미국인을 상대로 이유를 묻자 양국 간 안보동맹을 언급한 사람이 약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경제관계, 한국문화와 인적교류 등으로 이유를 꼽았음. 이는 한반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0월 4주차 정세전망 - 19대 국회 활동평가 및 20대 총선관련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6일 ~ 10월 21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0월 4주차 19대 국회 활동평가 및 20대 총선관련 연구

☑ 연구내용

- 19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의 대다수 신뢰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대 총선에서는 다른 의원이 당선되길 기대하며, 지역구의 현 의원이 교체에 대한 의향이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선거과정에서 현직자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보다 일정정도 유리하다는 '현직자 효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임. 대중이 현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한 불신이 2016년에 이루어진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2015년 캐나다 총선 결과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0일 ~ 10월 29일(10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캐나다 총선 결과 분석

☑ 연구내용

- 10월 19일 캐나다 총선 결과, 자유당이 총선에서 집권 10년차 집권 보수당을 누르고 압승함. 자유당을 승리로 이끈 트뤼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 경력이 짧은 미숙한 후보라는 보수당의 비난을 이기고 선거 막판 과감한 공약으로 판세를 뒤집고 승리함. 보수당 하퍼 정권은 '균형재정' 정책을 고수하면서 캐나다 경제에 비중이 높은 에너지 산업 발전에 집중한 반면, 트뤼도 자유당 대표는 '균형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선언하며, 향후 10년간 200억 캐나다달러(약 17조원)를 주택, 보육시설, 복지시설 건설 등 사회복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음. 트뤼도는 특히,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세금 감면으로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번 캐나다 총선은 보수당 장기집권의 피로도 와 중산층 공약에 승부수를 띄운 젊은 리더십이 주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참신한 이미지가 결과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 및 선거전략 자료로 활용

주제 : 정당 및 국회 공약 개발 - 선거제도 및 시민정치 분야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0일 ~ 11월 30일(1개월 12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총선 대비 공약 개발 - 선거제도, 시민정치 분야

☑ 연구내용

-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의 참정권 강화,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사전투표제 확대시행,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제도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여성 정치의 활성화, 장애인 참정권 보장

☑ 연구성과

- 총선 대응 당 공약으로 활용

주제 : 한국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일 ~ 11월 10일(9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연구

☑ 연구내용

- 10월 18일 정부는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년~2020년) 시안을 발표하고 19일 공청회, 21일에는 당정 협의회를 열었음. 이번 안에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장려와 함께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되었음. 특히, 노후 생활과 관련하여 본인의 노후 생계를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60%정도 나타났으며,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은 26%, 마지막 자녀들이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은 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이는 고령사회에 정부나 사회가 노후 생활을 책임 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여전히 낮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정부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안정망에 대한 기대도 높지 않음을 나타냄.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라 각종 노후 관련 시책을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연구성과

-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청년층 투표율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일 ~ 11월 23일(22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청년층 투표율 분석

☑ 연구내용

-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년세대의 늦어지는 '사회진출'시기와 정치효능감을 꼽을 수 있음. 특히, 2,30대 청년들은 낮은 정치효능감을 넘어 삶에 대해 무기력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청년층에 나타나는 저조한 투표율은 청년세대의 무관심으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청년들의 삶에서 가중되는 불안정성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처방이 부재하다고 진단 할 수 있음

☑ 연구성과

-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1월 3주차 정세전망 - 프랑스 연쇄테러 관련 여론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4일 ~ 11월 19일(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11월 3주차 프랑스 연쇄테러 관련 여론

☑ 연구내용

-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연쇄테러와 관련하여, 프랑스인의 84%가 테러 방지 위해 검문검색 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프랑스 좌파정부는 전통적으로 안보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가 안전이 보장된다면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 이와 관련하여, 미국인 대다수도 IS격퇴에 미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에서도 테러 우려 집단으로는 북한보다 IS를 더 많이 지목하며, 국제사회가 테러 조직에 군사공격을 할 경우 우리나라가 동참해야한다는데 '찬성' 의견이 64%로 높게 나타났음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1월 4주차 정세전망 - 지자체 청년수당 관련 여론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0일 ~ 11월 25일(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1월 4주차 지자체 청년수당 관련 여론

☑ 연구내용

- 청년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을 보조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 금액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이른 바 '청년수당제' 정책을 두고 지자체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응답은 청년수당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하지만, 청년수당제 정책의 중점 대상인 20대에서는 과반이상이 찬성함. 반면에, 60대에서는 반대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청년수당제 정책이 또 다른 세대갈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2월 3주차 정세전망 - 미국 대선 여론조사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0일 ~ 12월 15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2월 3주차 미국 대선 여론조사 분석

☑ 연구내용

- 미국 대선 여론조사서 이민자 출신 테드 크루즈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여론조사의 선호도 부분에 있어서 크루즈는 트럼프를 크게 앞지름. 이 같이 크루즈의 지지율이 급등한 이유로 크루즈 의원이 쿠바계 이민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 테러리즘 격퇴,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등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 및 선거 전략 자료로 활용

주제 : 12월 4주차 정세전망 - 안철수 신당 관련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6일 ~ 12월 21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2월 4주차 안철수 신당 관련 여론 분석

☑ 연구내용

-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의 반응, 특히 호남지역에서의 민심의 향배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를 분석함. 안철수 신당에 대한 팽팽한 찬반여론과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선불리 '일시적 거품'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향후 2016년 총선에서 야권 다자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은 아직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 국제 정세분석 자료 및 선거 전략 자료로 활용

주제 : 저출산 극복에 실효성 없는 출산장려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5일 ~ 1월 8일(3일)
- 연구분야 : 저출산 극복에 실효성 없는 출산장려금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검토 및 제언

☑ 연구내용

-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의 증가에도 출산률과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감소 등의 정책 방향 검토
-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제언(기존의 가족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및 정책 결정자들과 일선 관리자, 기업의 고위직 간부들의 인식개선 등)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주제 :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 정부 정책 프레임 전면 전환이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1월 30일 ~ 2월 4일(6일)
- 연구분야 :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 정부 정책 프레임 전면 전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 정부 정책 프레임 전면 전환을 위한 검토

☑ 연구내용

- 아동폭력 사건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내용 검토
- 보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상황에서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신뢰회복, CCTV 설치에 있어 설치가이드 마련이 선행, 전담 지원체계 필요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 연구기간 : 2015년 4월 9일 ~ 4월 10일(2일)
- 연구분야 :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이후 내용검토와 법적 과제 마련

☑ 연구내용

-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성노동을 주장하는 성매매 당사자들과 페미니스트의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상반된 입장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대응 마련
- 국가가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던 역사적 과정,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성매매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처지, 성매매가 급증하게 된 환경적 요인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것은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지원과 성매매 예방프로그램의 미비, 알선업자에 처벌 등이 논의 되어야 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남성의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0일 ~ 5월 14일(5일)
- 연구분야 : 남성의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남성의 육아휴직 현황과 실질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 연구내용

- 2015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개정안 내용 검토 및 현 육아보장제도 검토
- 한국에서는 실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용기간과 대상 확대 및 이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자원 마련을 위한 대안이 필요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주제 : 여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예정

- 연구기간 : 2015년 6월 8일 ~ 6월 11일(4일)
- 연구분야 : 여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예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검토 및 정책개선 과제 도출

☑ 연구내용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후, 10여년이 지난 2014년 4월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내용 검토 및 정책개선 과제 도출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정책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의의가 있으나 이 법의 한계로 성평등을 양성의 문제로만 인식한다는 점,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성역할을 고착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주요 정책과제가 사회적 소수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 건강권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계임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주제 :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3일 ~ 6월 25일(3일)
- 연구분야 :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와 이후 법제도 정비를 위한 내용 검토

☑ 연구내용

-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로 난항을 겪던 퀴어퍼레이드가 법원 결정으로 서울광장에서 예정대로 개최되었고, 당 차원에서 파트너십과 동성혼에 대한 각국의 제도적 상황과 입장, 제도화 과정에서의 쟁점과 전략을 다룬바 있음
- 가족제도에서 남녀의 혼인만을 인정하는 것과 동성혼의 중간단계로서 동성결합 파트너십이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 동성혼이 최종목적지가 아닌 만큼 기존의 혼인제도에서 벗어난 형태의 가족제도가 필요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대통령인사권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일 ~ 1월 10일(9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초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검찰수사가 있었음. 이에 문제가 됐던 대통령 인사권 및 비서실 권한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제언을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그리고 대통령의 법적 인사권 및 대통령 비서실의 법적 존재이유를 바탕으로 현안을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재점검하고, 구체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① 비서실 권한 축소, ②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③ 각 부처에 분산된 장관의 인사권을 중앙인사기구가 담당토록 함

☑ 연구성과

- 대통령의 인사권 및 비서실 체계에 관련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공직윤리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5일 ~ 1월 23일(9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법'이 약 3년간의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정무위 안'으로 1월 12일 정무위를 통과했음. 이에 그동안 당이 추진했던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 법'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김영란 법'의 입법쟁점을 분석함. 나아가 당의 기존입장이었던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분석함. 이를 위해 고위직 및 기득권에 대한 철저한 적용이 전제될 것, 또한 일반국민들도 본 법에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동 법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상담센터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법' 개정에 관한 당의 입장 정립을 위해 이론적 관점에서 제언하고 이를 활용토록 함

주제 : 공무원 윤리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6일 ~ 2월 5일(1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 법'이 제정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 골프금지령을 해제하는 등 역방향을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이른바 '김영란 법'의 제정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공직 및 공무원 윤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검토함. 나아가 관련 이해관계 단체 및 시민단체의 입장을 검토하고 법적 쟁점이 무엇 인지를 분석함. 무엇보다 향후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어야 함을 제언

☑ 연구성과

- 공직 윤리 및 김영란법 제정에 관련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정부의 재벌정책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일 ~ 3월 12일(1개월 12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정부 재벌정책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요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이것이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함. 그 결과 2013년 3월 이후 2015년 2월 말까지 전경련이 건의한 정책과제수가 약 882개였으며, 그 중 상당수가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규제개혁의 방향이 전경련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성과

- 박근혜 정부의 재벌 정책을 친재벌 정책이라는 비판의 방식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전경련이 무엇을 요구했고 이 중 분야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됐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당의 정책 대응이 보다 구체적일 수 있도록 제언

주제 :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1일 ~ 3월 12일(1개월 2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비정규직 문제가 급속하게 악화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돼 왔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실 수행함

☑ 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4년을 기점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 더욱이 임금격차 역시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 정부정책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고용보험 개혁 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및 인적투자 정책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

☑ 연구성과

- 향후 당의 비정규직 대책을 위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 제시

주제 : 정부 국정운영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7일 ~ 2월 27일(1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향후 당의 대응방향에 제언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2년간의 업적을 평가함. 먼저 인사정책의 경우 인사청문회, 김영란 법 제정, 공무원 연금개혁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함. 다음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을 분석함. 끝으로 규제개혁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이것이 개혁보다는 사실상 완화정책이었음을 보여줌

☑ 연구성과

- 박근혜 정부 지난 2년은 인사, 조직, 규제정책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관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공무원 부패방지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일 ~ 3월 13일(1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직사회의 청렴과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고자 제정하고자 한 '김영란 법'이 통과됨. 그러나 이해충돌방지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법적 완결성이 떨어짐. 이에 향후 당의 입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이른바 '김영란 법' 통과 이후 정치권 및 각계 반응을 분석함. 이후 김영란 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함. 무엇보다 이해충돌방지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

☑ 연구성과

- '김영란 법'을 둘러싼 개정 의견에 대한 대응 및 향후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위한 당의 입장에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공무원 연금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4일 ~ 3월 27일(1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정부 공식안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당의 입장에 반영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설치된 국민대타협 기구의 연금 개혁안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분석함. 한편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적이고 공직 내 경쟁을 심화시키는 제도의 추진방향을 분석함

☑ 연구성과

- 공무원연금 개혁 및 인사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국민안전처 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일 ~ 4월 10일(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당의 입장과 국민안전처 인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분석하고, 관련 참가 부처 및 재원을 분석함.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세부예산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국민안전처 내부의 인사문제를 살펴봄. 이를 위해 개방직 임용직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민안전처 내부의 전문직 고위관료양성 방안을 제언함

☑ 연구성과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국민안전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공공기관 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3일 ~ 4월 30일(18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의 입장에 제언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정부의 '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실제로 일부사업 민영화 및 고용유연화 정책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실제 세부내용을 분석함.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쟁점을 분석함.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민영화 및 민간위탁을 위해 업무의 공공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 이해관계집단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함

☑ 연구성과

-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의 입장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상호관계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5일 ~ 8월 20일(3개월 16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야권은 대체로 공적연금 강화의 측면에서 국민연금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음. 하지만 국민연금 강화가 노동시장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인, 즉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연금체계로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감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국민들이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음을 분석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장이력과 상관없이 제공되는 보편복지적 기초연금이 대안임을 강조

☑ 연구성과

- 향후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추상적인 지지를 넘어서, 같은 공적연금이라도 그 제도적 특성이 다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구분하고 이에 대해 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당에 보고함

주제 : 공적연금체계개편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8일 ~ 5월 29일(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국회 내 사회적 기구 구성으로 합의되면서 국민연금까지 확장되어 논의됨에 따라, 직역연금 전반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연금체계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기존 공무원연금 논의가 공적연금 강화논의로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 각 이해집단의 입장을 분석함. 무엇보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노동시장 양극화 및 직업 불안전성, 청년 실업 등에 대안이 되지 못함을 분석하고 이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함

☑ 연구성과

- 공무원 연금에 대한 논쟁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 연금을 넘어 포괄적 다층체계 공적연금으로 전환 제시

주제 : 국가 위기관리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6월 12일(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이 다시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전체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메르스 사태 과정에서 대통령의 병원공개 지시를 둘러싸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까지의 명령체계에 대한 혼선과정 및 원인을 분석함. 무엇보다 대통령의 병원공개 지시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관료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강조함. 이를 위해 향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체 도입 및 인사제도 전면개편을 제안함

☑ 연구성과

- 국가의 위기관리 대응체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관료 전문성 및 컨트롤 타워를 통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방안을 당에 제시함

주제 : 국민안전처 조직위상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4일 ~ 6월 26일(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국가위기관리 핵심 정 부조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위기관리 대응에서 국민안전처의 모호한 역할 및 권한을 분석함. 무엇보다 국민안전처가 핵심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부여받지 못함에 따 라 위기에 따른 관할부처 및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TF 중심으로 대응체계가 구성되어 위기관리 의 혼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을 분석함. 사실상 소방과 해경만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재함을 지적함

☑ 연구성과

- 위기관리에서 국민안전처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재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의 개혁방안을 모색하여 당에 제출함

주제 : 복지국가 개혁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일 ~ 9월 4일(2개월 4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향후 당의 복지국가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체계의 성격과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기존 복지체계를 기업중심 복지체계로 명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 나아가 이러한 기존의 제도가 변화하는 국제경제 및 노동시장에 상호조응하지 못함을 밝히고, 향후 국가 중심의 복지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을 논증함. 또한 이것이 곧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인적투자방안 나아가 경제성장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함

☑ 연구성과

- 기존의 경제성장론을 뛰어넘어, 국가중심으로의 복지체계의 개혁이 국민 삶의 안정성과 인적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당에 보고하여 향후 장기적인 당의 입장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함

주제 : 국민연금 기금운용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4일 ~ 8월 28일(15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을 추진함에 따라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본 공사화 정책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현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사실상 전면적 금융조직화로의 개편을 의미할 수 있음을 강조함.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연구성과

-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단순히 수익을 위해 금융 차원에서만 다룰수 없음을,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금융투자자와 다른 방식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함을 당에 제언함

주제 :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9월 11일(1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세월호, 메르스 사태에 이어 돌고래호 침몰 참사가 발생하였지만, 사고 대응과정에서 다시금 국민안전처의 초동대응이 실패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메르스, 돌고래 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함. 무엇보다 돌고래호 사건은 메르스 사태와 달리 해양사고로서 해경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 소관 사건이었음. 문제의 원인을 평시, 사고 발생시, 사고 후로 나누어 분석함

☑ 연구성과

- 메르스 사태와 달리 해양사고에서 다시금 무능을 드러낸 국민안전처의 위기관리 대응을 분석하고, 특히 해양사고 대응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개혁방안을 모색하여 당의 입장에 반영토록 함

주제 :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10월 16일(1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무원 연금 개혁을 계기로 설치된 공적연금강화특위가 뚜렷한 결과 없이 종료를 앞둔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개혁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국회 내 공적연금강화 특위의 쟁점을 분석하고 공적연금 논의와 별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및 사보험 개혁방안을 분석함. 무엇보다 공적연금 강화논의는 뒤로 한 채 사보험 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전반 연금제도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함

☑ 연구성과

- 공적연금 특위 및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 퇴직연금 및 사보험 시장에서의 정부 정책을 같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방안을 당에 제언함

주제 : 정부 내 테스크포스(TF) 조직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8일 ~ 10월 29일(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테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하고 국정화 대 국민 선전전을 펼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연구내용

- 정부 내 TF 설치는 기본적으로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TF 참여자들은 각기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이해를 회의에서 대변하거나 피드백하는 역할임. 하지만, 이번 교육부가 설치한 TF는 그 설치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할지라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을 비밀리에 설치하고 대국민 홍보를 수행 한 것의 문제를 지적함

☑ 연구성과

- 교육부 TF설치가 TF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에 보고함

주제 : 중앙정부-지방정부 업무 갈등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8일 ~ 11월 20일(1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강력하게 항의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간 업무갈등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청년수당 예산을 책정함에 따라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복지정책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사항임을, 고용노동부는 중앙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된 사업임을 주장함.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사업성격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업무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함을 강조함

☑ 연구성과

-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중앙부처의 문제제기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방해가 아니라 타당한 이익제기의 측면이 있음을 당에 보고함

주제 : 대통령 시행령과 입법사안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5일 ~ 12월 17일(1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기존에 시행령으로 존재했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입법사안으로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논쟁이 불거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 국제적으로 테러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존에 시행령으로 존재했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입법사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함.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콘트롤 타워를 사실상 국정원으로 설정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적절함을 역설함

☑ 연구성과

- 정부의 대테러입법에 결함은 있지만 대통령 시행령으로 대테러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콘트롤타워에서의 대안이 중요함을 당에 보고함

주제 : 1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정치메세지와 개헌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1월 7일 ~ 1월 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월 1~2주차 정치현황 및 정치대응

☑ 연구내용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이뤄졌음. 합의안은 세월호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 1월 12일(월) 본회의에서 처리가 이뤄지면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됨. 박근혜 대통령, 1월 12일(월) 신년 기자회견 예정.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원장, 원외위원장 놓고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갈등, 비박-친박 갈등 고조.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전 치뤄진 1월 7일(수) 컷오프에서 문재인 의원, 박지원 의원, 이인영 의원이 통과하였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월 4~5주차 정치정세전망 - 연말정산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강타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0일 ~ 1월 22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월 4~5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국회 임시회 2월 2일 개회 예정. 2월 3일(화) 교섭단체 대표연설(양당 원내대표), 2월 10일(화)~13일(금)까지 대정부질문(4일간), 2월 26일(목), 3월 3일(화) 본회의 예정. 연말정산 후폭풍 정국 강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궁지로 몰아넣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취임 이래 최저인 30%대 초반대로 폭락. 박근혜 대통령, 지난 13일(화)부터 22일(목)까지 17부5처5위원회1청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신년 업무보고 받았음. 새누리당, 당청 갈등, 친박-비박 갈등 격화.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앞두고 순회토론회 진행. 문재인 의원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앞서고 있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양당제의 뒷, 대통령의 추락과 존재감 없는 제10야당의 부상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2일 ~ 1월 29일(3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정세 및 이슈 분석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존재감 없는 제10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혁신의 정치과정 없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정치적 결과 이면에 양당제가 자리함. 지난 60년 동안 한국정치에서 양당제는 정치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문화시킨 주범. 또한 별 다른 사회적 대안없이 사소한 문제를 격렬한 정쟁의 대상으로 부상시키며 '허약한 아젠다와 이슈'를 양산한 주범임. 나아가 양당제는 다양한 사람들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가로막아 대의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질식시키는 주범임. 양당제를 극복하지 않고 좋은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2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여전히 당청 관계에서 새누리당 무시 전략 일관

- 연구기간 : 2015년 2월 3일 ~ 2월 5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월 1~2주차 정치정세 현황 및 대응

☑ 연구내용

- 국회 임시회 2월 2일(월) 개회. 2월 25일(수)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25일(수)~27일(금)까지 대정부질문(3일간), 3월 3일(화) 안건 처리 본회의 예정.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불능의 통치 위기 직면, 이를 돌파 위해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비박계 유승민 의원 선출. 김무성-유승민 지도부 체제로 본격적인 청와대 견제.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앞두고 갈등 격화.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없이 기존 정치행태인 계파 투쟁으로 '동네 축구' 보다 못한 전당대회 진행 중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3월 2~3주차 정치 정세전망 - 미대사 테러, 중복논란과 재보선 정국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0일 ~ 3월 12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3월 2~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국회 4월 임시회를 앞두고 휴회. 지난 3일 10일(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4월 국회에서 ▲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보완 우선 처리,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3월 중 실질적인 협의 진행 및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도 협력, ▲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동시 처리,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 중에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 지속 등을 협의. 리퍼트 주한 미대사에 대한 테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공세적 국면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권에게는 수세적 국면으로 작용. 새누리당은 테러 사건을 재보선까지 끌고 갈 전망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사드 배치 논란과 기로에 선 한국 외교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2일 ~ 3월 19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세분석, 사드 배치 찬성론 비판 및 대안 모색

☑ 연구내용

-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입장을 넘어 세밀한 정세파악과 전략적 판단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상황.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선택과 관련하여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외교적 선택이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고 국익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무지와 무능으로 포장한 재앙일 뿐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3월 4~5주차 정치 정세전망 - 무능한정치가 불러온 국민불행시대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4일 ~ 3월 26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3월 4~5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세계 최악의 자살율, 노인빈곤율, 극단적인 양극화, 희망없는 청년세대 등 세기말을 보는 듯한 한국사회의 모습은 이를 해결할 정치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자, 보수독점 정치의 사회경제적 폐해를 보여주는 것임. 현재 한국정치는 정치가 국민의 삶과 괴리되어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논란에 골몰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재앙 상태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정의당 정치개혁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5일 ~ 4월 1일(7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선거구 확정 대응 정치개혁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정의당의 정치개혁안 - 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② 국회의 총 비용 동결 속에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 ③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④ 중앙선거관리위원 산하에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확정위원회' 설치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주제 : 기자가 본 정의당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6일 ~ 7월 24일(12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자들의 정의당에 대한 제언을 통해 당 발전 방향 모색

☑ 연구내용

- 진보정의연구소는 정의당의 정치전략 수립과 전략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략 구상세미나를 진행. <기자가 본 정의당>은 이러한 전략구상세미나의 세부기획으로 준비되었음. 특히 대한민국의 이슈와 의제를 현장에서 다루는 기자라는 특수한 위상과 관점에서 정의당이 어떻게 보여지고 평가받는지를 아는 것은 정의당이 현재 직면한 당의 현실과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함. 전략 세미나 발표 내용을 취합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당원 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4월 1~3주차 정치 정세전망 - 4.29 재보궐 선거

- 연구기간 : 2015년 4월 7일 ~ 4월 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월 1~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4.29 재보궐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곳의 재보궐 지역구의 대진표가 확정되었으며 정당 및 출마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표밭 다지기에 돌입. 일여다야의 재보궐 선거 구도상 4개 지역구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로 보면, 새누리당이 수도권 3곳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광주 서울을 포함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임. 특히 문재인 대표의 경우, 재보궐 성패 여부에 따라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차이로 1위로 달리고 있는 현재 위상을 지속하느냐의 여부도 판가름 날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국회의원 360명 확대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3일 ~ 4월 22일(9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의원 정수 360명 확대 방안

☑ 연구내용

-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새누리당 극렬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방지, 사회적 대표성 확보, 소수자 발언권 확보를 위해, 대의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필수. 현재 국회의원 세비 절감 삭감, 의원실 보좌진 축소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의원 정수 확대 재원으로 사용. 또한 입법지원 체계 강화하는데도 사용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주제 : 대통령의 적반하장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3일 ~ 4월 30일(7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정세 분석 및 대응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임기 후반 국정을 이끌어 갈 두 개의 카드 중 하나는 정권마다 활용했던 사정정국이 정권 실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귀결되는 자살골로 이어지며 무력화. 다른 하나 남은 대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색 될대로 경색된 대북관계가 정부여당의 계산대로 단기간에 풀릴지 의문. 최근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후과는 자명.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이 잠시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of 장마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몇 번 국민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4월 3~4주차 정치 정세전망 - 성완중 리스트 후폭풍과 재보궐 선거 결과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8일 ~ 4월 30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성완중 리스트 파문과 4.29 재보궐 선거로 4월 임시국회는 여야대치 속에 별무소득없이 진행되었음. 세월호 시행령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공방 진행.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4.29 재보궐 선거 결과 새누리당 압승. 야권 전패, 천정배 당선. 새누리당은 서울관악을 오신환 후보, 경기성남중원에서 신석진 후보, 인천서강화을에서 안상수 후보가 각각 당선, 광주서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후보가 당선하였음. 성완중 리스트라는 여당에게는 악재, 야당에게는 호재의 변수가 나왔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및 선거 대응 전략 실패로 전패. 새누리당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완중 리스트에 대한 전방위적 물타기와 박근혜 대통령의 병상 중 호소가 지지결집과 선거 승리로 이어졌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5월 3~4주차 정치 정세전망 - 재보궐 선거 후폭풍, 청와대 정국주도력 확대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2일 ~ 5월 14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5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압승을 기반으로 한 집권여당의 정국주도력이 탄력을 받고 있음. 특히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며, 여야를 떠나 국회 전체를 압박하는 상황.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연금 공포 마케팅이 국민여론에 호응을 받으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국면. 리얼미터 5월 1주차 국정 운영지지도 조사에서 2015년 들어 최고치인 44.2%를 기록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정국주도력 강화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7일 ~ 5월 2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1~2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주도력이 재보궐 이후 한층 강화되었음. 당에 대한 청와대 우위 지속. 황교안 총리후보 지명은 사정 정국을 지속하며 당분간 정부의 정치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정드라이브'를 집권 중반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궐 완패로 친노와 반대 진영의 대립 격화되었다가 소강 상태.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원장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임명. 김상곤 위원장은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난마처럼 얽힌 계파의 이해관계를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 진보세력은 재보궐 선거로 중단되었던 진보재편 재추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메르스 공포 넘어서기

- 연구기간 : 2015년 6월 8일 ~ 6월 15일(7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정세 분석 및 대응

☑ 연구내용

- 메르스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지금은 경제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 해야 할 국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메르스에 따른 경기 위축을 '경제 살리기'의 대국민 심리전으로 어설픈 대체하여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게 아니라, 메르스의 완전한 종식만이 진정 경제에 도움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메르스 종식에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 해야 할 것임. 또한 메르스 사태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극빈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메르스 차단. 정부는 메르스 확진자와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지역별 대규모 의료 격리시설을 확보하여 메르스의 지역전파를 막아야 함. 또한 메르스 발병 병원과 감염 경로, 발생 지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메르스 공포를 낮추고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메르스 전염 확산,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0일 ~ 6월 12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2~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중동호흡기 질환인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전염되면서 사회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가 메르스 공포에 빠졌음. 메르스 내습은 박근혜 정부의 비밀주의와 재벌 병원의 월권, 초동 대응의 실패로 확산일로에 있음. 11일(목) 현재, 메르스 사망자 11명, 13명 위중, 확진자가 이미 100명을 넘어섰고 격리대상자가 4000명에 육박.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황후보자의 심각한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공포'로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예비내각제 현실 가능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6월 8일 ~ 8월 25일(78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예비내각제의 한국적 적용 사례, 예비내각제 현실 가능 방안 탐색

☑ 연구내용

- 예비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해외사례에서 드러난 차별성 점검, 한국정치에서 각 정당의 예비내각제 경험에 대해 살펴봄. 이를 통해 한국 사례에서 예비내각제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예비내각제 현실적 활용 방안을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예비내각제 이해 확대를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

주제: 6월4~5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경색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4일 ~ 6월 26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4~5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본회의가 6월 25일(목), 7월 1일(수)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법, 정치관계법, 메르스 대책 등 주요 쟁점. 국회법은 정의화 의장이 중재하여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파행으로 이어짐.이것은 국회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자, 국회의 입법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임. 야당들 강하게 반발.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함.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국회 정치 개혁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의제 자체를 회피하고 있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7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2일 ~ 7월 24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7월 2~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에 따른 후폭풍이 새누리당을 강타하였음. 7월 8일(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결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여 사퇴하였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은 단순한 법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이를 넘어 대통령의 정치 수단으로서 새누리당 갈라치기, 비박계에 대한 공세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라는 결과로 나타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의 치욕'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는 친박-비박의 내년 총선 공천권 확보를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지역선거구 획정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5일 ~ 9월 1일(7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술 자료,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방향

☑ 연구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 지역위원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 진술 자료. 현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놓여준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기준 하에 '지역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인 사표 방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실상의 선거제도 개악일 뿐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주제 : 2015년 8월 5주~9월 1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력 확대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6일 ~ 8월 28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8월 5주~9월 1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DMZ 내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과 이에 따른 철책 순찰 중이던 우리 국군 2명 중상,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계, 이후 남북한의 포격 주고 받기로 지난 몇 일간 남북관계는 촌각을 다투며 악화일로, 전면전의 위기에 직면. 그러다가 지난 8월 22일(토) 북한의 전격적인 고위급 회담 제의로 무박 4일의 회담을 진행하고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합의문은 남북경색 국면 해소를 위한 자극 행위 금지, 당국자 회담, 이산가족상봉, 교류 등이 망라되었음. 이번 급격한 남북경색 및 화해 국면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임. 박근혜 대통령은 7월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국정지지도 30% 초반대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번 남북대치 국면을 맞으면서 40% 초반대 국정지지도로 상승. 또 다시 급속한 남북대치 국면 후 급격한 남북화해 국면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을 확대, 강화하고 날개를 달아준 상황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9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력 강화 일로

- 연구기간 : 2015년 9월 8일 ~ 9월 10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9월 2~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은 냉탕과 온탕을 오간 남북의 대치 국면의 급격한 완화, 이어서 중국 항일 전승절 참석, DMZ 지뢰 피해 장병 방문, 지역 박람회 참석 등 민생 행보를 통해 국정지지율을 50% 이상 끌어올렸음. 올해 들어 최고의 국정지지율을 기록.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의 강세는 별 이변이 없는 한 계속될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주도력이 강화될 수록 반대로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의 상대적 우위 속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축소되고 있음. 당장 새누리당 분위기는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에 대한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리라는 예상 이 부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가치와 의미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4일 ~ 9월 21일(7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정세 분석 및 대응

☑ 연구내용

- 각 당에서 지도부의 공천 기득권을 내려 놓으면, 국회의원 공천을 투명하게 진행할 방법은 존재. 그것은 민주주의 선거의 상식을 따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 즉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물론 여기에 지역구 유권자의 의사를 일정부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임.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지도부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가 가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임. 비례대표 순위 명부를 당원과 유권자에게 개방하여 당선자 결정을 당원의 직접선거 50%와 유권자의 비례명부 후보에 대한 투표 50%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혼합형 비례명부를 작성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밀실 공천은 크게 개선될 것.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우리 정치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대양당의 기득권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다양한 요구에 친화적인 다원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한국 비례대표제 변천과 의미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6일 ~ 9월 23일(7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 비례대표제의 변천과정과 정치적 효과 분석

☑ 연구내용

- 비례대표제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어 몇 번의 축소 확대 과정을 거친 제도. 비례대표제가 한국정치에서 갖는 장점은 ①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를 방지하고 보완하여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투표에 반영, 투표 가치의 등가성 문제를 보완, ② 계층, 직능 대표성의 반영으로 의회 전문성 향상, ③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회세력의 이해와 요구 대표, ④ 고질적인 지역주의 완화, ⑤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활성화로 정당 간 정치경쟁을 확대하여 정치의 질을 높임.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 ⑥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 ⑦ 국민의 정치 무관심과 불신을 넘어 정치 효능감과 신뢰 강화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주제 : 9월 4~5주차 정치 정세전망 - 양당 모두 총선 주도권 둘러싼 내분 심화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2일 ~ 9월 24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9월 4~5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 둘러싸고 친박-비박 정면충돌. 김무성 고립심화, 9월 30일(수) 의총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시행 여부 최종 정리될 듯. 새정치민주연합 천정배 신당 창당 선언, 박주선 탈당으로 어수선한 상황. 더구나 혁신위에서 마지막으로 부패연루자 공천 배제, 당 전현직 지도부 혐지 출마 요구. 이는 안철수 의원, 박지원 의원 등 비주류의 반발을 초래하며 당의 원심력을 확대하고 있음. 분열 가능성도 상승 중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0월 3~4주차 정치 정세전망 - 역사 교과서 국정화 쟁점, 새누리당의 선행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4일 ~ 10월 16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0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집권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뺏다방'은 몇 가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음.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대표, 친박-비박 사이의 20대 총선 공천률을 둘러싼 대립 격화와 이에 따른 새누리당 내분의 위기 증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갈등'으로 전환하여 내분을 완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경제지표 악화,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개혁 이슈 등 쟁점 이슈의 부각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정국주도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이를 넘어서는 '국정화' 문제를 부각시켜 이슈를 재배열하고 집권여당의 정국주도력을 4월까지 지속시키는 것임. 마지막으로 극단적 이념 균열을 동원한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새누리당 지지 세력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양분하는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정당 및 국회 개혁 공약 개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0일 ~ 11월 20일(30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총선 대비 정당, 국회 개혁 공약 개발

☑ 연구내용

- 국회 교섭단체 제도 폐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 강화,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 신설, 지구당 복원,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당 허용,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전환, 정당 후원회 설치 허용,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 인터넷 상시 공개

☑ 연구성과

- 총선 대응 당 공약으로 활용

주제 : 2015년 10월 5주차~11월 1주차 정치정세 - 역사교과서 전쟁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7일 ~ 10월 2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0월 5주차~11월 1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향후 전망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하나는 반대여론이 점증하는 상황의 경우로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새누리당에게는 국정화 이슈가 악재로 작용하여 수도권 중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 가시화 될 수 있음. 다른 하나는 찬성여론의 점증이나 반대여론이 하향 정체될 경우, 야권은 국정화 이슈의 희생물이 되어 더욱 약화되거나 내부 분열이 촉진될 가능성이 큼.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불러온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를 다시 이념, 가치, 세대, 지역으로 분열을 촉진하는 기재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 또한 국정화 이슈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국민들의 삶의 문제, 민생문제를 정치로 부터 배제시키고 있음.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문제를 반대세력과 정면대결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 자체가 정쟁의 근원이 되고 있음. 비루한 정치, 협소한 정치논쟁이 일상화 되고 있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1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쟁 여진 계속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8일 ~ 11월 20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1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문제의 이념대립 구도의 강화는 한편으로 정국을 대통령이 주도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새누리당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지향은 정당정치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해악이 되고 있음. 대의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정당이 무력화 된다는 것은 정당이 대의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언론이 막힌다는 것임. 이는 정당정치를 식물정치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소수의 사람이 정치를 지배하는 폐쇄적 과두정치의 일상화로 그 폐해는 그대로 국민들의 삶과 생활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2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탈당과 영향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5일 ~ 12월 17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2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안철수 의원이 12월 13일(일) 전격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였음. 일부 여론조사에서 제3당으로 올라서고 수도권에서 3자 경쟁구도 형성의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분열로 인해 20대 총선에서 야권은 '3자 필패'의 부정적 결과만 예상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무능한 정치 넘어서기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22일 ~ 12월 29일(7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정세 분석 및 대응

☑ 연구내용

- 통치자와 정당, 정치인은 모름지기 국민들의 '자기 살길 찾기'를 귀담아 듣고 조정과 타협을 통해 '살길'을 마련해 주는 가장 조직된 집단. 그러나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자기 살길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정치 상황은 정치가 아닌 투기판에 지나지 않음. 이런 무능한 정치가 불러온 국민의 살림살이의 위기와 붕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정자들이 내세우는 창조경제니, 통일대박이니, 포용적 성장이니 하는 말만 그럴듯한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저 비루하고 의미없는 말들의 나열일 뿐. 그러나 정치가 국민들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고 해법임. 2016년 4월 13일 개인적, 정치적, 사회적 선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변화의 원천인 '정치의 변화'를 위한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임. 투표율 재고를 위한 방안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일 ~ 1월 21일(2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평등선거, 공정선거를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고 개정방향을 마련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구체화

☑ 연구내용

- 선거구 획정제도의 개선방안(외국사례, 획정기구의 독립기구화 및 위원 구성 방안 등)
- 선거권, 피선거권의 확대방안(투표시간, 후보자 기탁금 제도, 선거권 연령 등)
- 비례대표제도 개선방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설계 등)

☑ 연구성과

- 정의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도입 현황과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일 ~ 1월 8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행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

☑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제 현황 분석
- 외국의 생활임금제 사례
- 생활임금제도의 개선방안

☑ 연구성과

- 생활임금제 관련 당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정치인 출판기념회 규제 등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2일 ~ 1월 31일(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의 문제점
- 출판기념회 수입에 대한 선관위 보고 법제화 방안

☑ 연구성과

- 정의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방안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5일 ~ 2월 5일(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방안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마련

☑ 연구내용

- 지방교부세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지방재정에 대한 진보적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스웨덴 선거제도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일 ~ 2월 10일(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비례대표제를 실시중인 스웨덴의 선거제도와 의석배정방식 연구를 통해 한국의 도입 가능성 분석

☑ 연구내용

- 스웨덴의 개방형 완전비례대표제 연구
- 보정의석 제도 등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 연구

☑ 연구성과

- 정의당 선거제도 개정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박근혜 정부 2년 지방자치 정책 평가

- 연구기간 : 2015년 2월 21일 ~ 2월 27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2년을 맞아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재정 악화 등 지방자치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

☑ 연구내용

- 수도권 규제완화 현황
- 지방재정 확충 공약 후퇴 사례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문제점

☑ 연구성과

-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정책브리핑에 반영

주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 연구기간 : 2015년 2월 24일 ~ 2월 25일(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제시

☑ 연구내용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실현방안
- 지역구-비례대표 동시입후보제(석패율제)의 문제점
-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방안

☑ 연구성과

- 정의당 정치특별위원회 발표
- 정의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실현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2월 25일 ~ 3월 2일(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마련

☑ 연구내용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
- 석패율제의 문제점
- 의원정수의 확대방안

☑ 연구성과

- 중앙선거관위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토론문으로 활용
- 정의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누리과정 땀질식 합의 문제점과 보육대란 해결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일 ~ 3월 10일(9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갈등 해결방안 마련

☑ 연구내용

-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땀질식 합의 이후 여야간 논의양상
-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 문제점
- 누리과정 국고책임제 실시방안

☑ 연구성과

- 정책논평 등을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정의당의 기본입장으로 제출

주제 :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문제점과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일 ~ 3월 12일(1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

☑ 연구내용

- 경상남도, 경남교육청, 경남도의회, 경남 시민사회의 무상급식 관련 논의 경과
- 무상급식 중단의 문제점
- 정의당의 대응방안

☑ 연구성과

-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에 반영

주제 : 석패율제 검토

- 연구기간 : 2015년 3월 3일 ~ 3월 12일(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석패율제 도입 주장의 문제점 분석과 정의당의 석패율제에 대한 입장 도출

☑ 연구내용

- 석패율제 도입 관련 기간 논의 경과 연구
-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석패율제의 당선인 결정방식과 문제점 분석
- 정의당이 검토해야 할 지점 제시

☑ 연구성과

- 석패율제 관련 당의 입장 정리

주제 :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자치 법규 폐지 요구의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1일 ~ 3월 26일(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폐지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공정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의 문제점
- 해당 조례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반응
- 정의당의 대안 모색

☑ 연구성과

- 공정위의 부당한 조례 폐지 요구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 정리

주제 :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제도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0일 ~ 4월 29일(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현역 의원과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현행 선거구 획정제도의 문제점 분석
- 외국의 선거구 획정제도 비교
- 선거구 획정기구 독립화 및 공정한 위원 구성방안 마련

☑ 연구성과

- 정의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2015년도 지방재정 현황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1일 ~ 4월 30일(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통해 나타난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해 당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 연구내용

- 통합재정개요에 나타난 지방재정 주요 지표 분석(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인건비 비율, 지방세 수 등)
-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문제점
- 정의당의 대안 모색

☑ 연구성과

- 지방재정 관련 당원용 기초자료로 제공

주제 :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일 ~ 5월 14일(1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국회 논의상황을 정리하고 정의당의 대안을 마련

☑ 연구내용

- 지방자치법 관련 논의 현황
-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논의 경과
-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
- 정책보좌인력 확대 방안

☑ 연구성과

- 지방의회 보좌인력 관련 당의 기본입장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판단근거 마련

주제 :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퇴시기 제한의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2일 ~ 5월 26일(5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퇴시기를 법을 제한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

☑ 연구내용

- 후보자 사퇴시기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
- 후보자 사퇴 제한 관련 외국 사례 분석
- 선거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 사퇴시기 제한의 대안 모색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6월 22일(2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 연구내용

- 현행 지방선거제도 문제점
- 지방선거제도 개선방향
-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 연구성과

- 지방선거제도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당의 기본입장 정리

주제 : 긴급재정관리제도 문제점과 지방재정 위기 해법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일 ~ 7월 22일(2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지방재정 위기 해법 모색

☑ 연구내용

- 긴급재정관리제도 주요 내용 및 기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의 차이점
- 지방재정 위기 원인 분석
-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책

☑ 연구성과

- 정책논평 등을 통해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정의당의 기본입장으로 제출

주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뮬레이션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8월 30일(3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 분석

☑ 연구내용

- 19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전국단위/권역별, 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석분포 모형 도출
- 중앙선관위안, 정의당안 등 각 선거제도 개혁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 현 정당지지도를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 연구성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이해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8월 24일(2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다수제와의 차이, 병립형과 연동형의 의미 등 비례대표제의 본래 의미를 분석

☑ 연구내용

- 비례제와 다수제의 차이
- 연동형과 병립형의 차이
- 권역별 병립제의 문제점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
- 당내 교육자료 및 국회 출입기자 대상 설명자료로 제공

주제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견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8월 31일(3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의당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입장 정리

☑ 연구내용

- 적정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 선거구 획정 원칙과 기준
-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완책

☑ 연구성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정의당 의견진술 자료로 활용

주제 : 일본식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8월 3일 ~ 8월 22일(2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일본식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분석
- 권역별 병립형 도입시 시뮬레이션 분석
- 소수정당이 배분 받는 비례의석수 변화 분석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일 ~ 9월 11일(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려는 정부 입장의 문제점 지적

☑ 연구내용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논의 경과
- 정부의 지방세 관련 법 개정 움직임
- 정의당의 대안 모색

☑ 연구성과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관련 당의 기본입장 정리 및 당 소속 국회의원의 판단근거 마련

주제 :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옥죄는 2016 예산안

- 연구기간 : 2015년 9월 8일 ~ 9월 10일(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예산안에 나타난 지방재정 전망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안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 연구내용

- 지방재정 관련 2016년 예산안 분석
-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계획 문제점
- 누리과정 관련 전망
- 정의당의 대안 모색

☑ 연구성과

- 2016년 예산안 관련 기본입장 정리

주제 :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1일 ~ 9월 24일(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업 정비지침의 문제점 및 지방자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업 정비지침 주요 내용
- 지역 사회복지사업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미치는 영향
- 정의당의 대응방안

☑ 연구성과

-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과 관련한 당의 기본입장 정리

주제 :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8일 ~ 9월 30일(0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경선 및 선거여론조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제점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측면 및 정치제도 측면 문제점
- 당의 대응방안 제시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정당 후원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의미와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23일 ~ 12월 28일(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3헌바168)에 따른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마련

☑ 연구내용

-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 정당 후원회 금지의 문제점
-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 연구성과

- 정의당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지방자치 분야 정책공약 개발 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5일 ~ 12월 14일(2개월)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자치 분야 총선공약 개발 방향 마련

☑ 연구내용

- 지방재정 분야 정책공약 개발 방향
- 지방분권 관련 정책공약 개발 방향
- 지방자치 활성화 관련 정책공약 개발 방향
- 주민참여 확대 관련 정책공약 개발 방향

☑ 연구성과

- 지방자치 총선공약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지방재정 악화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30일 ~ 12월 9일(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지방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진보적, 주민참여적 해법 마련

☑ 연구내용

-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지방자치 침해, 다른 제도와 중복,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주민자치 확대 측면)
-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대안 모색

☑ 연구성과

- 정책논평 및 본회의 반대발언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석패율제 도입 논의 비판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일 ~ 12월 7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일본식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 석패율제의 정의
- 석패율제 논의경과
- 석패율제 도입주장 근거
- 석패율제의 유형
- 중앙선관위의 지역구 결합 비례제
- 석패율제의 문제점 및 정의당의 검토지점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및 당내 입장정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고용보험법 개정 전망과 실업안전망 확충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3일 ~ 8월 28일(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실업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안 모색

☑ 연구내용

-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일자리 이동간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수 청년세대에게 교섭권을 주기 위해 고용보험재정을 확대를 피해 가야함.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자발적 실업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까다로운 수급조건을 완화해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경과 후(호주 8~12주, 핀란드 90일, 독일 1분기, 일본 3개월)에는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아예 고용보험가입 사실이 없는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

☑ 연구성과

- 정부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반대근거 수립과 정의당 노동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2016년 실업급여 제도 변화

- 연구기간 : 2015년 9월 5일 ~ 9월 10일(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수급액 인상, 수급기간 30일 확대 등 골자로 한 2016년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

☑ 연구내용

- 보장성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현재 문제 많은 고용보험을 개혁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을 크게 손보는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함. 이는 법률적·실질적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것은 물론, 가입 대상을 취업자만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개혁해 가자는 것. 이러한 고용보험개혁에는 당연히 고용보험 운영의 민주화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 이번처럼 돈은 노-사가 마련하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부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고용보험기금의 각종 전용 등 문제점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

☑ 연구성과

- 정의당 노동정책 기초자료와 총선 기본공약 준비자료로 활용

주제 : 청년희망펀드와 임금피크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10월 5일(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도입한 청년희망펀드가 청년일자리 문제에 유효한 대책인지 검토하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여론 동향이 향후 노동개혁에 미칠 영향 연구

☑ 연구내용

- 임금피크제 도입 통한 13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생긴다는 정부 주장은 55~59세 고령 노동자가 모두 정년까지 직장에 다니고, 기업이 인건비 절감비용 전액을 청년 신규고용에 쓴다는 식의 불가능한 전제로 만들어진 전망치. 하지만 8월 18일 발표한 '청년 의식 조사'에서 20~34세 청년 층의 70.3%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찬성. 같은 조사에서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지 묻는 질문에는 75.3%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답. 정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 청년은 소수다. 하지만 다수는 어떤 식으로건 앞 세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

☑ 연구성과

- 정의당 총선 공약 작성 기본 자료로 활용

주제 : 국회 인턴·입법보조원의 일자리 실태와 대안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1일 ~ 10월 21일(30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 내 청년일자리인 의원실 인턴들의 노동실태와 대안마련

☑ 연구내용

- 국회 인턴들은 주당 평균 58.8시간 일하는 반면 임금은 134만원(기본급 120만원, 정액 연장근로수당 14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1개월 쯤 개기 계약으로 고용안정성이 불안정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 마련이 필요함

☑ 연구성과

- 국회인턴유니온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의 청년노동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더 많은 더 좋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30일 ~ 11월 14일(16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 실업자)을 고려한 청년 실질실업률은 2015년 상반기 22.4%를 기록 중

☑ 연구내용

- 청년고용활당제 민간기업 확대 :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미취업청년 신규고용으로 3년간 청년 일자리 46만 5천개 창출
- 상시·지속업무 수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10대 재벌 사내하청 등 즉시 정규직 전환
- 안전,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탈법적 장시간 근로 퇴출.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지켜 62만개 일자리 창출

☑ 연구성과

- 정의당 20대 총선 기본자료로 사용되며, 시도당 등 각급 당부의 기초공약 작성 자료로 활용

주제 : 실업안전망 전면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5일 ~ 11월 30일(1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보장성 약한 고용보험 제도의 개혁 및 고용보험 밖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안전망 구축 과제 연구

☑ 연구내용

-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제공과 30세 미만에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차별 폐지 등 고용보험 전면개혁
-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무가입 확대 및 고용보험 자율가입 제도 확대, 자율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두루누리사업 개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장기실업자 및 급여소진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실업부조 제도 도입

☑ 연구성과

- 정의당 20대 총선 기본자료로 사용되며, 시도당 등 각급 당부의 기초공약 작성 자료로 활용

주제 : 청년노동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열정페이 등으로 저하된 청년노동권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인턴제도 폐지, 기존 인턴은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계약직으로 일원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현장실습시 교육목적 명확화, 현장실습 위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실시, 수습사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가능하게 한 최저임금법 조항 폐지
- 사진, 키와 체중, 출신대학, 출신지역, 부모 소득과 학력, 나이와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요소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및 면접시 해당 질문 금지, 기업의 면접 남발을 막기 위한 면접비법 제화
- 노동부 근로감독관 2배 증원으로 근로감독 철저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위반 악성사업장 인터넷 검색제도 도입

☑ 연구성과

- 국회인턴유니온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의 청년노동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과 다음세대의 정치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알린스키의 정치철학으로 본 한국정치 변화의 가능성 탐구

☑ 연구내용

- 알린스키의 정치 철학, '비관론에 근거하되 그 안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 '세대의 자기기억에서 출발하되 더 큰 변화를 위해 더 많이 대표'의 원리를 통해 진보나 보수 이데올로기 자체에 집착하지 않은 변화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음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민주적 정당정치론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로와 현대 정당민주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현대적 이해도모

☑ 연구내용

- 그리스의 민주적은 제한된 역사적 지리적 조건에서 가능했던 모델.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였던 선거가 민주주의적 제도로 발전한 정당들의 역할 때문.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음. 정당의 강화는 그런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필수적 과제임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소명으로서의 정치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표적 정치철학자인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독해를 통해 막스베버 정치철학의 주요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 이해

☑ 연구내용

-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를 통해 서구 합리주의와 자본주의 연원 탐구.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이를 현대 대의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활동하는 직업정치인에게 적용됨. 베버는 이 저작에서 자본주의적 합리화에 조응하는 협소한 선택이 있을 뿐이며 이는 키리σμα적 자질을 갖춘 직업적 정치리더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고 분석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선거의 이론과 실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선거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 선거제도의 비민주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를 해명

☑ 연구내용

- 선거는 그리스 민주정 당시에는 귀족정의 원리였으나, 근대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와 결합했다. 근대 이후에도 선거는 투표권 자체가 모든 시민에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귀족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보통투표권과 대중정당의 출현으로 민주주의적 성격을 띌 수 있게 되었다.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정치적 말의 힘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와 재임시기 주요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지도자의 언어가 주는 정치적 역량의 중요성을 탐구

☑ 연구내용

- 2002년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 연설,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등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연설은 담론의 틀을 다르게 짜면서도 인종과 계층 종교적 이슈에서 통합적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제출한다.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의회정치의 이해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의회의 특징을 선거와 정당, 행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다시 돌아보며 민주적 정치에서 의회의 중요성을 연구

☑ 연구내용

- 한국 정치에서 의회는 불성실과 비효율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한국 의회는 1988년 민주화 이후 첫선거에서 비교해 보자면 22배의 예산, 15배의 법률안 제출 등 크기에 비해 너무 커다란 임무를 맡고 있다. 의회 정치에서 기본 유닛은 정당이며, 정당을 통한 팀플레이를 통해 정치가 이뤄진다. 비대한 행정부에 비해 작은 의회는 결국 행정권력 위주의 통치를 불러온다.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임금피크제가 청년시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

☑ 연구내용

-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으며 필요한 것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비단 노동계만의 주장도 아니다. 그러나 주장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년세대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여럿. 세대 간 상생과 주변부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결과는 아닌지,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깊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함

☑ 연구성과

- 노동개혁 관련 당론 수립에 기여

주제 : 정의당의 정치적 선택

- 당 발전전략 수립 이전에 검토해야 할 것들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일 ~ 2015년 2월 5일(4개월 5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야권 전체가 안팎으로 재편의 압박에 처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인가
- 왜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를 말하나
- 당원들의 절망과 기대
-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정의당의 현재와 미래

☑ 연구성과

- 제2창당을 앞둔 시점에서 당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주제 : 한국 주류 양대 정당의 약한 고리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2월 25일 ~ 4월 24일(2개월)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재 한국의 주류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약한 고리를 다루고, 이를 통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생존조건을 탐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주류 정당 공통의 약한고리
- 보수정당의 약한 고리
-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의 약한 고리

☑ 연구성과

- 진보정당의 생존조건을 탐색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체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주제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네트워크 형성 방안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3일 ~ 3월 16일(4개월 13일)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탈핵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동맹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함

☑ 연구내용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생태계의 실태조사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유관 네트워크 현황조사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제안

☑ 연구성과

- 당의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주제 : 대안적 한국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3일 ~ 8월 10일(3개월 27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진보정치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적 성장 담론이 제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 연구내용

- 한국 정치경제와 담론 : 이론과 역사
- 대안적 정치경제 담론의 본격화
- 진보정치 세력의 비전과 성장담론
- 노동주도 사회적 경제 성장론을 위해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됨

주제 :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 제1항의 위헌성 및 개정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0일 ~ 10월 28일(3개월 18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 제1항의 위헌성 및 개정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정치자금법 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당 후원회 제도를 금지하고, 동법 45조 1항은 정당에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정치적 참여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
- 이 연구는 정당 후원회 제도의 폐지가 자유로운 정당 경쟁을 제약하고 있으며, 또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결론 도출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2015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집

인쇄일 2016년 07월 일
발행일 2016년 07월 일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02) 523-6482~3
편집/인쇄 이호문화사
(02) 2274-1491~2



소중안권리 공정안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